

생활SOC정책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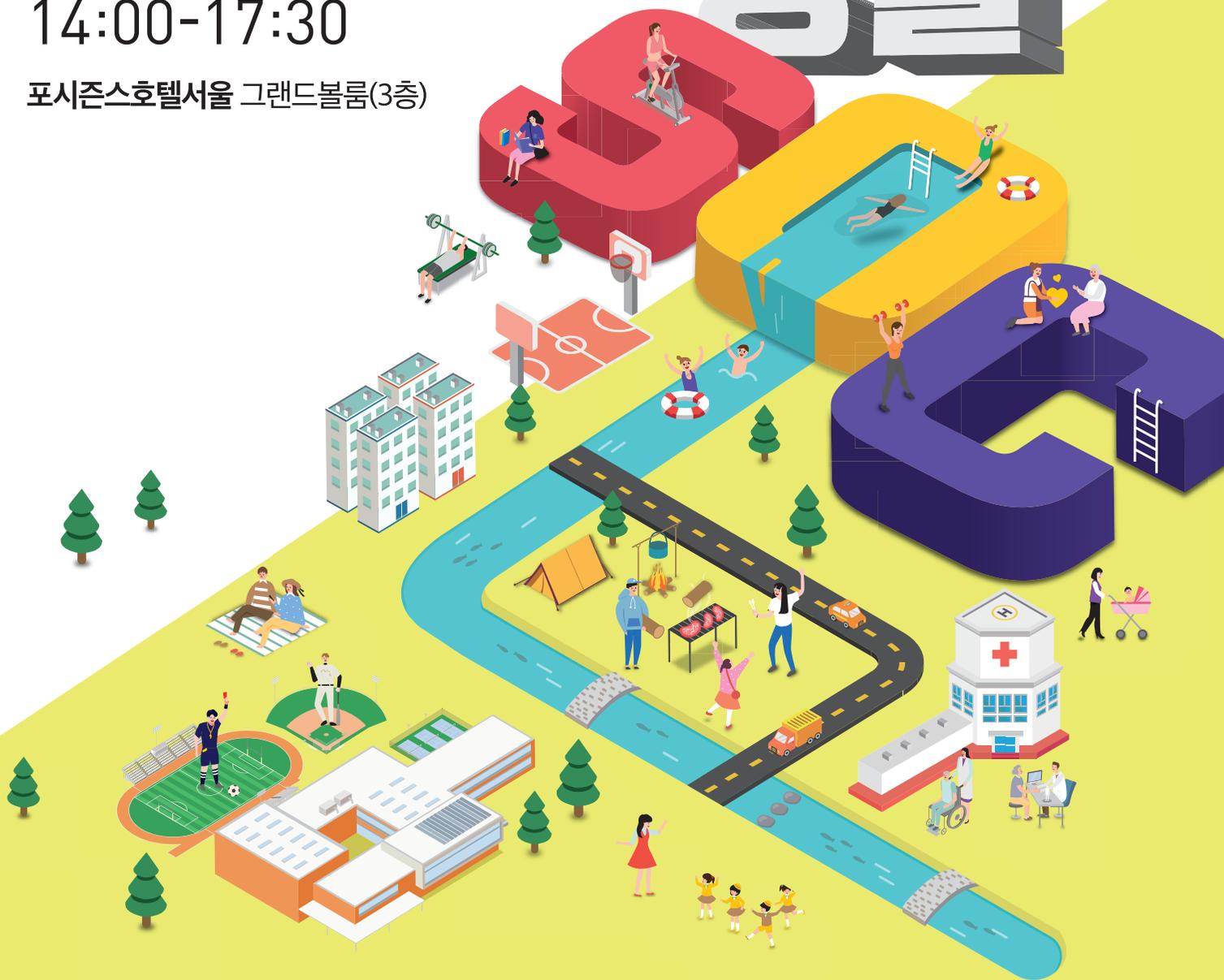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019.12.17 (화)

14:00-17:30

포시즌스호텔서울 그랜드볼룸(3층)

생활SOC



주최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협조



KRIHS
국도연구원



C · O · N · T · E · N · T · S

Chapter 1. 생활SOC 정책컨퍼런스 축사

[축사 1] 인사글 국무조정실장님	1
[축사 2] 국토연구원 원장님	5

Chapter 2. 생활SOC 정책컨퍼런스 공모전

[공모전] 아이디어 부문	11
[공모전] 우수사례 부문	45
[공모전] 홍보영상 부문	127

Chapter 3. 생활SOC 정책컨퍼런스 주제 발표

[발표 1] 생활SOC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131
[발표 2]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159
[발표 3]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179
[발표 4]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211
[발표 5]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239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과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님 등 토론자 여러분,
그 외 오늘 「생활SOC 정책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열린 「생활SOC 공모전」에 적극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과 훌륭한 작품으로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SOC는‘기본권’이다.

공모전 기간 중 온라인에서 실시한 생활 SOC를 한 단어로 말하기
이벤트에서 제시된 의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생활SOC정책의 지향점을 한마디로 잘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가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생활SOC가 양적·질적으로
여전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말 생활SOC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추었고 정부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활SOC 수준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년부터 3년간 국비기준 30조원을 생활SOC사업에 투입키로 하였고 전국에 걸쳐 289개의 복합화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국유지에 지자체가 생활SOC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 지역의 수요를 균형있게 담아내는 것 등 보완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제언이 꼭 필요합니다.

생활SOC 대국민 공모전과 오늘의 컨퍼런스 행사는 이러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처음으로 개최되었음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개인, 지자체, 기관들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영상물, 다수의 우수사례들을 출품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과 함께 생활SOC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서는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란 주제로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생활SOC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기탄없는 제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생활SOC 정책 추진 2년 차가 되는 내년에 양과 질 측면에서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생활SOC 예산은 금년(8조원)보다 약 29%나 늘어난 10.4조원의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화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탁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시설 복합화를 본격 추진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생활SOC가 단순한 주민 편의시설을 넘어 생활혁신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참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지자체, 각부처,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생활SOC정책이 늘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아울러, 한 해 동안 생활SOC 업무를 맡아 수고해 주신 중앙 및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원장 강현수입니다.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국무조정실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생활SOC 추진단은 지난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SOC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는 생활SOC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 생활SOC 우수사례 정보공유 활성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날 우리가 경험한 생활SOC 정책의 한계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정부에서도 생활SOC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로 규정하여 향후 공공 투자도 지역 밀착형 SOC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생활SOC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연구원은 생활SOC를 포함한 국토와 도시계획,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과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는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생활SOC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생활SOC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 지역주민 등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생활SOC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국토연구원도 컨퍼런스에서 논의되는 심도 있는 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그간의 생활SOC 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 행사내용

1 행사흐름

개 회	1부<시 상 식>	2부<컨퍼런스>
14:00~14:10	14:10~15:00	15:20~17:30
○ 개 회 - 인사말 : 국무조정실장 - 축 사 : 국토연구원장	○ 공모전 시상식 - 심사총평(심사위원장) - 시상 : 장관님 친수 ○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아이디어 → 우수사례	○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 주제발표 - 전문가 제언 및 종합토론

2 행사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비고
등록	13:00~ 14:00	60'	□ 등록 및 환담	주요내빈 안내 * VIP룸
개회	14:00~ 14:10	10'	□ 인사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 축 사 :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사회 : 전문MC
1부	14:10~ 15:00	50'	□ 생활SOC 공모전 시상식 및 우수작 발표 ① 공모전 심사총평 : 심사위원장 ② 시상 및 사진촬영 : 장관님 친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 아이디어 부문 시상 → 사진촬영 ■ 우수사례 부문 시상 → 사진촬영 ■ 홍보영상 부문 시상 → 사진촬영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전체 수상자 단체 촬영 </div> ③ 수상작 발표(아이디어·우수사례) : 아이디어 → 우수사례 * 최우수 및 우수작	시상식 세부계획 별도 수립

구분	시 간	내 용	비고
휴식	20'	커피 브레이크 (1부 행사종료 및 행사장 정리)	
2부	15:20~ 17:30	<p>□ 생활SOC 정책컨퍼런스</p> <p>“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p> <p>주제발표</p> <p>발표 1 : 생활SOC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김용수 부단장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p> <p>발표 2 :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정영린 교육시설과장 / 교육부)</p> <p>발표 3 :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구형수 책임연구원 / 국토연구원)</p> <p>발표 4 :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김상봉 교수 / 고려대학교)</p> <p>발표 5 :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김미옥 선임연구원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p> <p>전문가 제언 및 종합토론</p> <p>(좌 장) 강현수 원장(국토연구원) (토론1) 김은희 센터장(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론2) 이병민 교수(건국대) (토론3) 오용준 선임연구원(충남연구원) (토론4) 이소영 과장(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토론5) 김종훈 논설위원(경향신문) (토론6) 윤영건 대표(푸름인건축사사무소)</p> <p>질의응답 / 폐회</p>	생활SOC추진단,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공모전

01. 아이디어 부문

1. 설치에서 운영까지 생활형 SOC 관공서 주차장
2. Happy Mom House
3. 치안센터 등 재건축시 생활SOC 복합화
4. 생활SOC와 연계한 특수학교 신규설립 사업제안
5. 생활SOC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측정 방법
6. 의료복합시설 중심의 생활SOC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

02. 우수사례 부문

1.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상생, '김영수 도서관'
2. 도시재생으로 재탄생된 역사하부 공동체 문화 공간-교육.문화.복지기능의 생활SOC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
3.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조성 및 운영
4. 생활속(SOC) 행복속속(SOC) 도서관, 활용도는 UP, 예산은 DOWN하다.!
5. "낮에는 경로당 밤에는 청소년 돌봄시설" 강동형 생활SOC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6.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조성

03. 홍보영상 부문

1. 수상자 명단

최우수	설치에서 운영까지 생활형 SOC 관공서 주차장
수 상 자	안전한 대한민국 / 서승현, 박혜정, 전영택
아이디어 개요	
주간에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사용이 힘들고, 야간에는 개방하지 않는 관공서 주차장을 증축하여 설치하고, 주차장 증설 후 운영인원은 3교대로 기존 인원과 신규 인원 투입해 주차장 주변 4대 주차금지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과태료는 주차장 운영비로 활용	
아이디어 제안 배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간에는 지자체별로 불법주차 단속방법 상이, 신고하여도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2. 지자체 관공서는 대부분 도심지에 있으며, 주차면 부족으로 주차장 사용이 힘든 실정 3. 공영주차장 신축 후에도 운영비가 부족하여, 유료화, 사용자 감소, 불법주차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영주차장 부지는 단기간에 확보하기 힘들 	
아이디어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 단층 주차장을 사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지하, 복층 이상의 주차장으로 증설 설치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주민) 우선으로 주차를 허용 2. 주차장을 증설, 신축 후에도 사용하지 않고 불법주차(4대 중대사항)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야간, 공휴일에도 수시 단속을 통한 집중관리 3. 주간·야간 주차장 관리, 주간·야간 불법주차 단속 등 4가지 사이클의 업무로 신규 인력을 투입하여 주차장 관리, 주변 사고방지를 위한 상시 불법주차 단속 실시 4. 주차장은 증설, 신축 시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시설로 만들고, 입출입 시스템은(안면, 지문인식 등) 4차 산업 관련 우수 기업의 제품을 사용 5. 지자체별로 야간, 공휴일 불법주차 단속, 관리방안이 상이한 점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일되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관리 	
아이디어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부지 마련의 편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 주차장 부지 확보가 힘든 지자체의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되거나 고비용이 투입될 수 있고, 민원도 다수 발생 될 수 있음. * 이후 : 현재 단층 지상주차장을 사용하는 관공서의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복층, 지상주차장 확보가 편리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도 일반부지에 비해 적음. 2. 운영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 단순 철골, 골조 주차장의 설치로 전기료, 관리비 등 운영비용 감당하기 힘들 * 이후 : 설치 단계부터 지열, 태양광 등 설치로 전기료 절감, 입·출입 시스템의 사물 인터넷 적용으로 운영비용 절감 3. 신규일자리 창출, 불법주차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 야간, 공휴일 불법주차 인원의 부족으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후 : 관공서 주차장 관리 요원을 3교대로 투입할 수 있어 신규일자리가 생기고, 야간, 공휴일에도 4대 중대 불법주차 상시단속 가능. 단속으로 인한 세수는 주차장 운영, 증설,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학교,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의 불법주차 상시단속이 가능해져 이로 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는 2차 효과 유발 	

발표자료 ('19. 11. 26.)

설치에서 운영까지 생활형 SOC 관공서 주차장

- 최 우수 -

「2019년 생활 SOC 아이디어 공모전」

[설치에서 운영까지 생활형 SOC 관공서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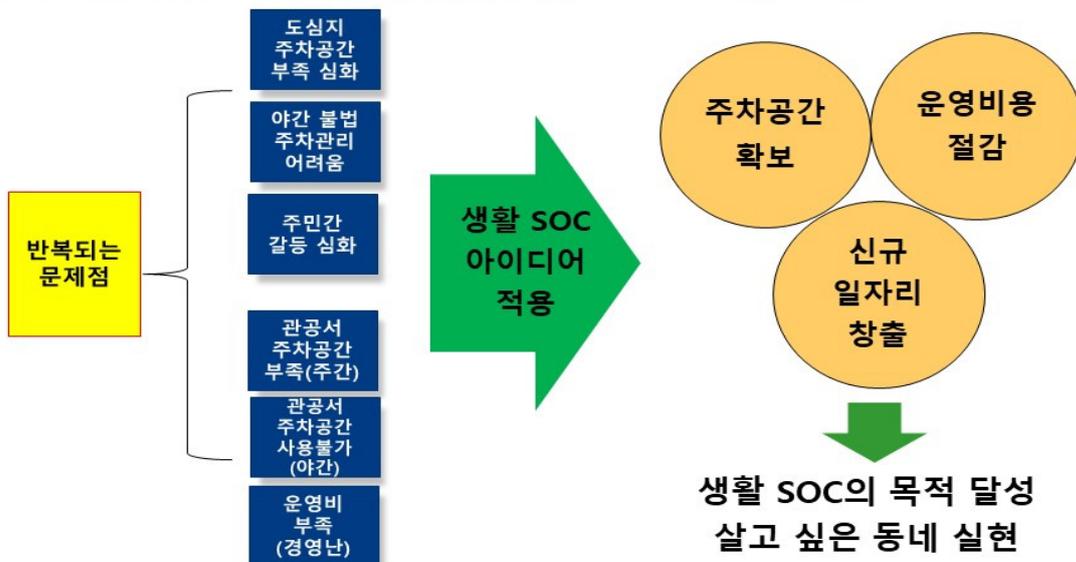
2019. 11. 26

□ 서승현, 박혜정, 전영택



아이디어 개요

✓ 관공서 주차장에 생활 SOC를 적용하여 전국적인 주차문제 해결



주간에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사용이 힘들고, 야간에는 개방하지 않는 관공서 주차장을 증축하여 설치하고, 주차장 증설후 부족한 운영비는 운영 인원을 3교대로 기존 인원, 신규 인원 투입으로 주차장 주변 4대 주차금지 사항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는 주차장 운영비로 활용 함.

목 차

I. 제안 배경

II. 제안내용

III. 기대효과

I. 제안 배경

✓ 전국적으로 관공서 주차장의 주차시설 제공 열악, 주차공간 부족

일요서울 2019.11.20 목요일

HOME > 지역본부 > 서울본부

서울시민, 年평균 관공서 민원 주차보장시간 138분

이재원 기자 | 입력 2019-10-15 09:57 | 업데이트 2019.10.15 11:55 | 댓글 0 | 연재 선택

주차면당 연구수와 주민당 할당시간 분석

광주전남 관공서 주차장 부족 주민 불만
 시도당 1당당 1시간 미만 13시간도 못 13시간 이하 그쳐

광주전남지역 관공서 주차장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광주·전남도로부터 받은 국정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당 1당당 1시간 미만, 구청,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된 주차시간은 평균 83시간에 불과했다.

이는 광주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의 주차 면수를 시민 수에 나눠 분석한 것이다.

시청의 주차면 당 연구수는 1당당으로 시민 1명이 이용할 시간은 59시간에 불과했다.

시청 주차 면수는 가장 83개, 지역 54개 등 1천392대에, 이후 평균 민원인 차량 1천511대가 차량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구청의 주차면 당 연구수는 630명 시민 1명당 2시간 32시간이었다. 행정복지센터의 주차면 당 연구수는 1천392명당 32시간 41의 주차 시간이 주어졌다.

구정별로는 남구청은 주차면 당 495명당 412분으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동구 605명당 31시간, 서구 660명당 3시간, 북구 739명당 22시간, 중산구 2천562명당 69시간 순이었다.

경기일보 [경기도 국감소병훈, "경기도민 1년 평균 관공서 민원 주차보장시간은 88시간"]

▶ "할복" 몰려온 남한! 대체 될까니... (중략)

경기도청이 연간 보장하는 주차장 사용시간은 0.2시간이며, 관내 시·군별 및 동별 민사 주차확보 상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차장이 없는 행정복지센터도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간)의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차면당 연구수와 주민당 할당시간을 차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1인당 평균적으로 도심·사군청·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제공된 연간 주차보장시간은 88시간에 불과했다.

사회일반

인천시, 연간 시민에게 주차장 사용시간 불과 0.4(27분) 시간 할당... 열악한 주차시설 제공

인천시당 1당 당 평균, 관공서 민원 주차보장시간은 10.4시간
 인천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의 주차 면수를 시민 수에 나눠 분석한 결과

이재원 기자 | 입력 2019-10-17 16:43

다들 주 로도 4 등 '6차리 산골계'... 당... 그릴요 익 절대 먹지하세요! ...
 차기전 "이것" 한달 -18kg 뿔자랑 죽... 뿔 뿔뿔로 애네니 -20kg 내장지방...
 [내일도 관공서(민원)이어서 기차(민원)역사가 연간 시민에게 불과 0.4(27)분시간 할당으로 삼
 가하게 불만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문제점

- 주간 업무시간에는 관공서 주차장의 주차면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됨.
- 관공서 업무시간 외에는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있음.
- 도심지의 경우 보상, 공사소음 민원 등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I. 제안 배경

✓ 지역별 주차공간 부족, 불법주차 등으로 주민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



반복되는 문제점

-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되고, 이로 인한 주민간 다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됨.
- 야간 불법주차의 경우 지자체마다 관리기준이 다르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처벌 유예하는 경우가 많음.
- 주차장 완공후 운영비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거나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음.

II. 제안내용

✓ 친환경 에너지, 제로에너지 하우스 방식으로 지자체 주차장 증설로 시민에 개방

1. 지상 단층 주차장을 사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지하, 복층 이상의 주차장으로 증설하여 설치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주민)우선으로 주차를 허용 하도록 함.
2. 주차장을 증설, 신축후에도 사용하지 않고 불법주차(4대 불법주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야간, 공휴일 에도 수시 단속을 통한 집중관리를 함.
3. 주간 주차장관리, 야간 주차장 관리, 주간 불법주차 단속, 야간 불법주차 단속 4가지 사이클의 업무로 신규 일자리를 편성하여, 인원을 투입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주변 사고방지를 위한 상시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 하도록 함.

취약지역 기초생활시설 개선 (목표: '22년 착공)

- LPG배관망: 5,5만여세대 구축
- 주거지 주차장: 1,1만여면 공급 (110여개소)
- 신생시점 주차장: 100% 보급 (1,200여개)

주차장

- (현황) 주민안전 확보하고, 교통 혼잡 및 주민 간 갈등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거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충 시급
-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고령화 지역 주민 불편한 주차공간 공급 추진
- (공급목표) '22년까지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를 70% 이상까지 감축을 위해 총 11만면 조성(192개 수요조사 결과)인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고, 50면 이하 소규모 주차장은 주차 밀당화 등 리모델링 추진

구분	현재(19년 기준)	'22년 목표
주차장	-	11만면 주차장
주거지역	74.6%	100%
주거지역외	-	-

* 전체 전통시장 1,441개소를 주차장 설치 대상 : 1,291곳(100%)

○ 기존 공공시설 및 신규 생활SOC와 연계한 다양한 유형의 복합 개발을 통해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및 시너지효과 도모

여기에 주차하면 즉시 과태료

- 소형차 5면 500원 (소형차 5면 500원)
- 중형차 5면 500원 (중형차 5면 500원)
- 대형차 5면 500원 (대형차 5면 500원)
- 버스 10면 1000원 (버스 10면 1000원)
- 이륜차 5면 500원 (이륜차 5면 500원)

II. 제안내용

✓ 친환경 에너지, 제로에너지 하우스 방식으로 지자체 주차장 증설로 시민에 개방

4. 주차장은 증설, 신속 시 태양열, 지열, 입출입 시스템(안면, 지문인식 등) 4차 산업 우수 기업의 제품을 사용함.
5. 지자체별로 야간, 공휴일 불법주차 단속, 관리방안이 상이한 점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일되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관리 하도록 함.
6. 향후 모든 생활 SOC 시설(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도서관 등)에도 적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미래차(수소, 전기)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고려하여 적용.



III. 기대효과

설치에서 운영까지 생활형 SOC 관공서 주차장

1. 전국적인 문제인 주차공간 확보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적용 가능

지역별 주차장의 부족, 관공서 주차공간 활용도 저하

관공서 주차장 증축 및 활용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2. 야간 불법주차 단속으로 사고 및 주민간 갈등 예방으로 일반 민원 처리 건수 감소

야간, 공휴일 불법주차 인원의 부족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횡단보도, 소화전 등 4대 불법주차 단속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간 고소, 고발 등의 갈등을 예방 할 수 있음.

3.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

주간에만 주차관리 인원을 투입하여 관리 함.

관공서 주차장 관리 요원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단속으로 인한 추가 세금은 주차장 운영 비용으로 사용가능.

4. 운영비용 절감으로 지속적인 운영 가능

단순 철골, 골조 주차장의 설치로 전기료, 관리비 등 운영비용 감당 하기 힘들.

설치 단계부터 지열, 태양광 등 설치로 전기료 절감, 입출입 시스템의 사물인터넷의 적용으로 운영 비용 절감.

5. 주차공간 확보의 편리함, 공사중 민원발생 저하

생활SOC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힘든 지자체의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되거나 고비용이 투입 될 수 있고, 민원도 다수 발생 될 수 있음.

현재 단층 지상주차장을 사용하는 관공서의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복층, 지상주차장 확보가 편리하고,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도 일반부지에 비해 적음.

우 수	Happy Mom House
수 상 자	김환희
아이디어 개요	
출산 후 어린이집 보육 전까지의 모자에게 식사, 휴식공간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후 우울증을 감소하는 공유의 집 시설을 만드는 사업	
아이디어 제안 배경	
<p>출산 후 90%의 여성이 우울증을 느꼈고 그중 여성 2%가 자살을 시도했으며, 31.7%는 자살 충동을 느꼈지만 시도하지는 않음. (인구보건협회 설문조사)</p> <p>미디어에서는 남편의 육아 참여와 가사분담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우울증 치료는 남편의 도움만으로 해결되지 않음</p> <p>저는 아이 돌인 워킹맘으로 출산 후 3개월의 출산휴가 동안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으며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잠도 못 자고 아이 키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더 힘든 것은 혼자 견디는 시간이었음. 산후 우울증은 실제로 대단하며 아이를 베란다에 던지거나 죽이는 행위도 이해가 갈 정도임. 제 경험으로 산후 우울증의 대표적인 이유가 수면부족, 육아에 대한 두려움과 외부와의 단절임</p> <p>산모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에 대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고 육아 정보는 인터넷으로 혼자 접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상품 광고홍보이기 때문에 육아고통은 치유되지 않음. 출산 우울증으로 검색하면 한약을 먹으라고 하고, 아이가 운다고 하면 아기 띠, 흔들침대, 흔들의자, 배앓이 용품, 이불, 라벤더 향, 로션 등을 사라고 함.</p> <p>육아 도우미를 부르기에는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비싸고 그마저도 고집이 강하신 분들이 많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신뢰가 가지 않고 불편하며, 월 200만 원씩의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채 견뎌야 함.</p> <p>이에 산후도우미를 공유화하고 전문화된 인원이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Happy Mom House'를 제안함.</p>	
아이디어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대상: 산후 여성 전체 ▪ 주요기능: 산후 육아 교육 및 아이돌봄, 점심식사 및 커뮤니티 형성. 우울증 상담. ▪ 일자리 확충 : 출산 경험이 있는 경력 단절 주부 적극 활용 (음식준비 1명, 관리 및 아이 케어 2명, 전문 상담사 1명) ▪ 요금: 한 달 10~20만 원의 요금 부과 및 정부 지원, 음료 및 음식 판매 (급식업체 활용) ▪ 장소: 편안한 가정집 분위기의 휴식처(엄마 수면방, 아기방, 수유실) <p>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육아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산후 우울증에 대하여 다루지지는 않고 있음. 주위를 보면 아이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못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학대를 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는 육아를 배우지도 않았고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함.</p> <p>무방비상태로 인터넷에 노출되어 잘못된 교육을 스스로 받고 있는데 육아는 시간과 마음가짐이 해결방안이므로 이 시간을 도와주는 멘토들을 구성하여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후 우울증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출산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줄여 주어 출산 장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p>	
아이디어 기대효과	
산모케어 및 육아 교육과 산후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멘토와의 접촉과 도움으로 인한 우울증 감소 및 출산을 증가. 가정의 근본은 엄마에게서 비롯되므로 엄마가 행복한 사회, 엄마가 현명한 사회가 되어야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음	

발표자료 ('19. 11. 26.)

Happy Mom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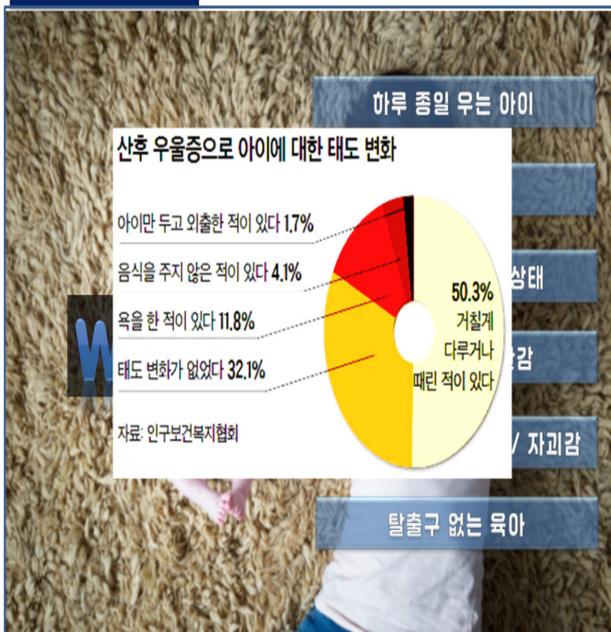
- 우 수 -

제목 : Happy Mom House

2019.11.26

발표자: 김환희

산후/육아 우울증



출산율 / 영아 살인

저 출산에 아이를 낳았지만 살해하는 부모들 과연 그들은 악마일까? 그들만의 잘못된 일까??

성남 영아시신 유기 욕의자 30대 치무 건거

원룸 쓰레기더미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女 긴급체포(종합)

자료: 경찰청

주변 반응

니가 낳았잖아 남았으면 책임져야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지?

유난 떨어~

너 이제 엄마야!

하루 종일 우는 아이, 왜 울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요?

다들 그렇게 살아

나... 우울증 같아 힘들어... 죽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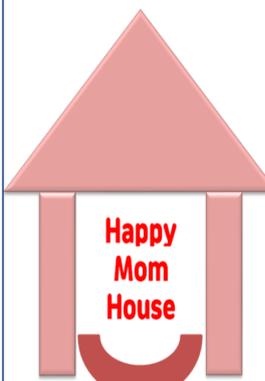
Abby Krake ©

엄마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 많이 먹어라. 기저귀 꼭인 애라. 아기 배고르면 보라. 여자의 인생은 살았다. 엄마가 모성애가 있어야지. 얼마나 아이에게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 아이는 안아서 키워야 되. 분유를 먹어야지 머리가 좋아지지. 제왕절개를 한다고? 남편이 회사서 일... 핏병은 다 씻어 놔야지! 집에만 있으면서 왜 힘들다고 하니? 출산유가... 유익 좋겠다. 3개월 할 수 있겠네? 아이는 혼자 크는 거야. 애 보는 게 뭐가 힘들어? 옛날에는 10명씩 낳았다. 난 낳 매다가 애 낳았는데 임신부가 머가 힘... 하면서 이것도 안 해놔? 우리 아들 돈으로 살고 있으면서 뭐가 힘들다... 잘 키워. 맘 충돌 아이 기저귀를 어디서 가는 거야? 화장실에서 갈... 어떻게 되니? 엄마가 회식을 간다고? 정신 없는 여자네! 잠 좀 자게... 잘 재워! 애... 잘 먹이고 있지? 내 새끼 잘 키우고 있지? 애가 웃을 때네 밤... 으면서 애를 어린이 집 보낸다 고? 니가 엄마니? 독박육아 좋아하... 더 심했어. 너네 시아버지는 기저귀도 안 갈아줬어! 우리... 엄마가 무슨 술이야. 애기 엄마가 무슨 약속... 니?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둘째는 아들... 말했니? 애 딸꼭질 한다. 보리차 좀 먹여라... 믿는가 보네. 신랑 아침밥은 챙겨주니? 또... 하루 종일 자는데 머가 힘들어? 엄마가 애... 애 놓고 어딜 가려고? 니가 낳았으니깐... 찾 잘나온다. 즉발이 젓 나오는데 좋다고... ?? 어딜 또 나가?

HELP

Happy Mom House



- 목적** 초보 맘의 공유 육아 시설
- 대상** 영아 자녀와 부모
- 서비스**
 - 아이 돌봄
 - 점심 식사
 - 수면 교육
 - 우울증 상담
 - 육아 정보 및 취미 공유
- 효과**
 -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 완화
 - 영아 학대 방지
 -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

필요 장소



- 아이 놀이 공간
- 수면 공간
- 소통 공간
- 식사 공간

필요인원

아이 돌봄 + 엄마의 정서 치료
공유 육아 경제 실현 (1:1 보다 효율적)
전 계층 지원 가능 (Open 서비스)
실력 있는 경단녀의 사회 재 진출에 도움

심리
요리사

마침

Happy Mom House

함께 하면 육아도 편하고 엄마의 정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우 수	치안센터 등 재건축 시 생활SOC 복합화
수 상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디어 개요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의 경우 매우 노후한 실정으로 재건축 시 해당 지자체의 필요 시설과 복합화하여 부족한 생활SOC 확보 가능	
아이디어 제안 배경	
'경찰관서 노후청사 현황(2018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서 10개 중 6개는 20년 이상 노후청사로 (뉴스웨이. '18.9.6.) 노후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의 개보수와 신축이 시급한 실정 서울 지구대 3곳 중 1곳은 경찰관서가 아닌 외부기관 소유인 것으로 나타남. (헤럴드경제. '19.9.6.) 이처럼 경찰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부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에서 생활SOC 복합화 추진 필요	
아이디어 제안 내용	
<p>서울시에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450여 개소('19년 5월 기준), 전국에는 치안센터를 제외한 경찰관서가 2,263개소('18년 6월 기준)가 있음.</p> <p>금천구에는 지구대 2개소, 파출소 3개소, 치안센터 7개소가 있으며, 치안센터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되었으며 대부분 치안센터는 저층 주거지에 입지, 재건축 시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부족한 생활SOC를 분석, 확보방안을 마련코자 연구 중임</p> <p>1986년 지어진 2층짜리 성수동 주민센터의 경우, 캠프를 통해 2018년 12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성수1가 제2동 공공복합청사'로 계획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복지,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성수보건지소,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센터, 치안센터가 한 곳에 있음. 1~2층 일부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해 임대수입을 상환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캠프 위탁관리 기간 후에도 임대수입으로 세외수입이 발생해 장기적인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 (건설경제, 2019.6.17.)</p> <p>'산본치안센터'는 1980년대에 지어진 2층 건물로 노후화되었고, 공간 활용도가 낮아 2016년 문화파출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단순히 유휴 공간을 예술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치안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복합적 공간으로 운영 중임. (행복한 동네 문화이야기 103호, 2018.5.2.)</p> <p>위 사례들은 치안센터가 다른 생활SOC와 복합화되어 이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음</p>	
아이디어 기대효과	
<p>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는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경찰청, 지자체 등 공공기관 소유임. 60%가 20년 이상 노후하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현시점에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생활SOC 복합화는 매우 필요한 생활SOC 사업임</p> <p>서울시 저층 주거지는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된 단독·다가구가 밀집, 커뮤니티시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 기존 생활SOC 사업은 부지 확보에 시간적·비용적 어려움이 따르나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부지를 마중물 사업이나 앵커시설 확보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p>향후 다른 시설들과 복합화할 때에는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해야 이용하는 주민입장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경찰관서에 대한 친밀감도 상승할 것임</p>	

발표자료 ('19. 11. 26.)

치안센터 등 재건축 시 생활SOC 복합화

- 우수 -

2019년 생활SOC아이디어 공모전

치안센터 등 재건축 시 생활SOC 복합화

(* 경찰관서 :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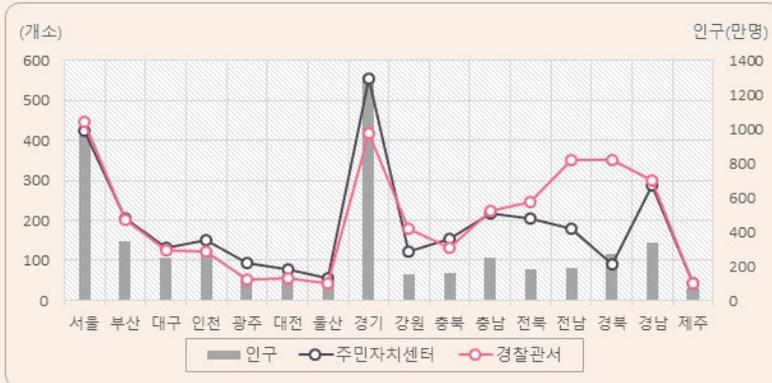
“경찰서”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전국 경찰관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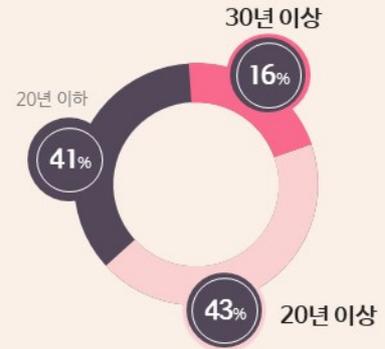


전국 경찰관서 및 주민자치센터 현황 (2018년 12월 기준)



* 경찰관서 통계에 세종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인구 및 주민자치센터 통계의 세종시는 충남에 합산
출처 : 인구 (국가통계포털), 경찰관서 (경찰청), 주민자치센터 (행정안전부)

경찰관서 노후 현황 (2018년 6월 기준)



* 출처 : 2018 국감 자료, 뉴스웨이 (2018.9.6)

주민자치센터만큼 전국에 촘촘하게 분포, 경찰관서의 약 60%, 20년 이상 노후
(경찰관서 3,285개소, 주민자치센터 2,994개소 / 2018년 12월 기준)

국민 안전을 위한 노후청사 개선사업 시급!

생활SOC사업 추진 동향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생활SOC사업에
적합한 부지 확보
어려움 예상

정부보조금으로
생활SOC사업 추진

유지, 관리
지자체 재정력 부족으로
운영 어려움 예상

소요 예산 문제 해결 위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캠코에서 추진

지방비 예산 확보 없이도
캠코 자원 조달 사업 추진 가능
민간임대시설 복합개발로
임대수익 창출

지자체 재정부담 줄이고자 캠코 위탁개발 활성화 전망
캠코의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토지 매입부터 관여 못하는 한계점 발생

경찰관서 대부분 국공유지로 부지 매입 비용 절감!

치안센터 복합화 유사 사례

★ 성수1가 제2동 공공복합청사

- 1986년 → 2018년(지하2층, 지상6층)
-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 어린이집, **치안센터 등 생활SOC시설**
+ 주민센터 복합화

★ 산본치안센터

- 1980년대 → 2016년 리모델링(지상2층)
- **치안과 문화가 결합된 문화공간**
→ 문화파출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유희 공간 개선



노후한 치안센터를 재건축하여 다른 시설들과 복합화한 사례는 아니나
치안센터가 다른 생활SOC와 복합화되어 이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

치안센터 등 생활SOC복합화 특징점

★ 전국에 균등하게 공급 가능

- 전국에 그물망처럼 고르고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균등하게 공급 가능

★ 운영·관리비용 보전 가능

- 초기 부지 매입 비용 절감으로
향후 생활SOC 운영·관리 비용으로 보전

★ 부지 매입 초기 비용 절감

- 생활SOC 공급 부지 확보 어려우나 경찰관서 대부분 국공유지로 부지 매입비용 절감

★ 경찰관서 & 주민 WIN-WIN

- 경찰관서는 주민으로부터 친밀감 상승,
주민은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

★ 생활SOC 공급 시기 단축

- 초기 부지 매입 소요기간 단축으로
생활SOC 공급 시기 단축 가능

치안센터 부지를 **마중물 사업이나 앵커 시설 확보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서울시_경찰서
서울시_지구대
서울시_파출소
서울시_치안센터
경기도_행경동
서울시_자치구

0 2.5 5 km

장 려	생활SOC와 연계한 특수학교 신규설립 사업제안													
수 상 자	이승용													
아이디어 개요														
지역 혐오시설로 간주 반대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을 생활SOC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특수학교로 지역주민 반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아동의 학습권과 치료권을 보장하여 교육의 희망사다리복원에 앞장서는 사업으로 확장 운영														
아이디어 제안 배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학교의 설립 반대 여론의 심각 * 대표사례 :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반대사건 2. 청주혜원학교 과밀 과포화 상태로 해소요구가 높으나 학교설립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지연되고 있음(타지역도 동일) 3. 특수학교는 재산상 피해가 없으나 '있을 것이다' 하는 가정으로 반대격화 - 관련 연구보고서 : 특수학교 설립환경을 고려한 학교설립 매뉴얼 개발(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16 4. 교육부 2022년까지 「5차 특수교육 발전 계획」 시행 : 최소 22개의 특수학교 설립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 : 주민반대와 예산문제 5. 특수학교 설립 시 교육청 등에서는 추가 예산을 활용해 지역주민 복지시설의 운영 어려움 - 설립 및 운영 예산 운영 어려움 6.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업을 통한 합동 설계 및 건축허가 운영허가의 일관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별 허가사항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지역민의 반대여론 대두 시 건축인허가 승인 부담 등으로 인허가 반려, 보류 가능 * 용적률 등의 허가사항 특례조항 적용은 지자체장 권한 7. 생활형 SOC사업과 연계한 협업 시설물 구축을 통해 특수장애아동의 학습권과 치료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필요 														
아이디어 제안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 사업 시행(업무 역할 가상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교육청(주관) : 특수학교 설립 업무총괄 ② 지방자치단체 : 생활SOC 사업 신청, 시설 운영, 건축 인허가 담당 지역 고층 민원 상담 및 지역주민 통합 프로그램 운영 ③ 행정안전부 : 생활SOC 사업 평가 및 선정, 예산 배정 ④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및 업무조정 ⑤ 산림청 등 유관기관 : 특수장애 아동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제공 2. 특수학교 설립용지 내 설치 공공시설(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학교 용지 내 용적률 등 완화를 통한 멀티플렉스 시설용지 확보 2) 연계사업 시행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설 : 설치시설(특수공공도서관, 체육센터, 문화강좌시설), 리모델링시설(장애 없는 공원, 간이승마장, 숲 치료 교육장) - 프로그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운영시설</th> <th>학기 중 프로그램</th> <th>방과 후 프로그램</th> </tr> </thead> <tbody> <tr> <td>특수공공도서관</td> <td>특수아동 독서치료 등</td> <td>지역주민 도서대출 등</td> </tr> <tr> <td>체육센터</td> <td>아동물리, 운동치료 프로그램</td> <td>보건소건강교실</td> </tr> <tr> <td>문화강좌시설</td> <td>미술치료, 산림치료 등</td> <td>지역공동체문화프로그램</td> </tr> </tbody> </table> 3. 학교보안, 학생안전 문제 해결방안 : 학교운영시간은 학교보안관 등 운영으로 철저한 접근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봉사단 등과 연계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운영시설	학기 중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특수공공도서관	특수아동 독서치료 등	지역주민 도서대출 등	체육센터	아동물리, 운동치료 프로그램	보건소건강교실	문화강좌시설	미술치료, 산림치료 등	지역공동체문화프로그램
운영시설	학기 중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특수공공도서관	특수아동 독서치료 등	지역주민 도서대출 등												
체육센터	아동물리, 운동치료 프로그램	보건소건강교실												
문화강좌시설	미술치료, 산림치료 등	지역공동체문화프로그램												

4. 지역주민을 운영 자문단 등으로 위촉하여 상생하는 특수학교 및 SOC 시설로 발전
 - 지방자치단체 운영 마을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아이디어 기대효과

1. 특수학교 설립과정의 지역주민과의 대립 해결
2. 특수학교 설립의 안정적 기반 조성 및 우수사례 육성
3. 업무기관별 협업을 통한 협력적 행정업무 구현
4.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로 학습권 및 치료권 보호를 통한 올바른 사회구성원 양성
5. 생활SOC 사업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역의 상생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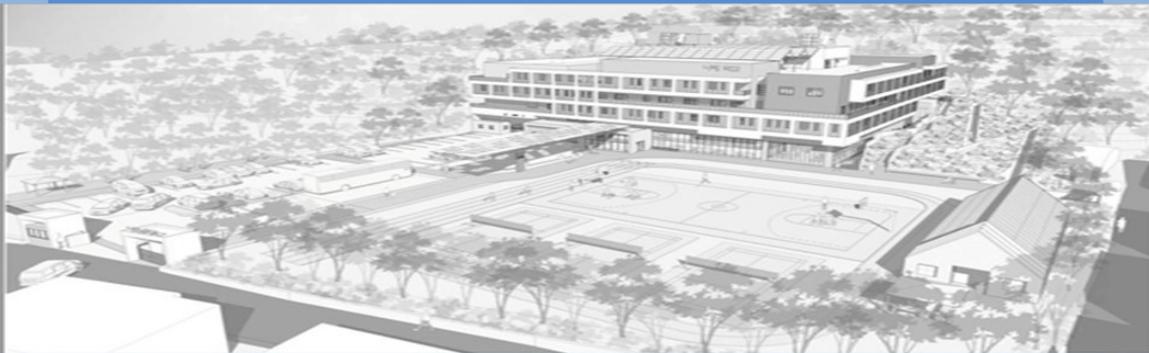
발표자료 ('19. 11. 26.)

생활SOC와 연계한 특수학교 신규설립 사업제안

- 장 려 -

-2019 생활SOC 아이디어공모전-

생활SOC 와 연계한 특수학교 신규설립



11. 26.(화)

2019 생활SOC
아이디어공모전

INDEX

- 1. 기억나시나요?
- 2. 왜 연계사업인가?
- 3. 충북 특수학교 예정지역 현황도
- 4. 연계사업시행(안)
- 5. 기대효과

1. 기억나시나요?

2019 생활SOC
아이디어공모전



특수학교 반대이유
1. 집값이 하락
2. 치안문제

2. 왜 연계사업인가?

2019 생활SOC
아이디어공모전

집값은 특수학교와 아무 영향이 없다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 2016)

최소 22개의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5차 특수학교 발전 계획(교육부)

법적 권한의 한계
도교육청(학교), 건축인허가 및 복지, 생활SOC 신청(지자체)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학습권과 치료권의 보장(희망사다리복원)



4. 연계사업 시행안(역할)

2019 생활SOC
아이디어공모전

도교육청

- 특수학교설립 업무총괄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의견반영 업무조정

행정안전부, 균형위

- 생활SOC사업평가선정, 예산반영

지방자치단체

- SOC사업신청, 건축인허가, 주민통합프로그램등운영

농림부, 산림청, 보건복지부등

- 특수장애아동맞춤형프로그램제공

4. 연계사업 시행안(시설)

2019 생활SOC
아이디어공모전

설치시설



특수공공도서관



체육센터



문화강좌시설

리모델링시설



장애없는공원



간이승마장



술치료교육장

4. 연계사업 시행안(프로그램)

2019 생활SOC
아이디어공모전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설	학기중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특수공공도서관	특수아동 독서치료등	지역주민 도서대출등
체육센터	아동물리,운동 치료프로그램	보건소건강교실
문화강좌시설	미술치료,산림 치료등	지역공동체문화 프로그램

4. 연계사업 시행안(기타)



운영어려움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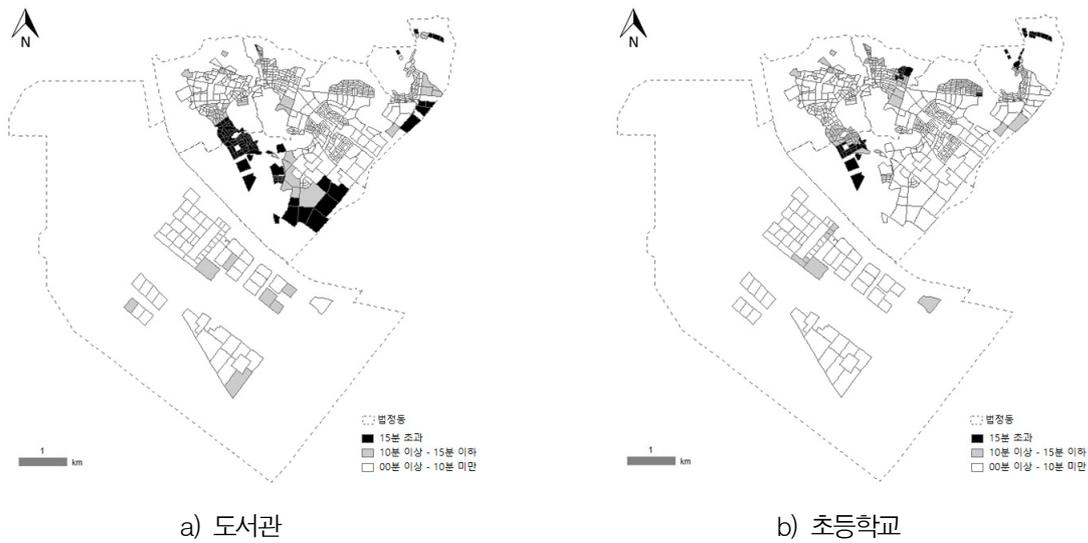
1. 보안, 안전문제
 - 학교보안관, 자율봉사단의 운영(노인일자리창출연계)
2. 지역민 통합 문제
 - 지역주민 운영자문단 위촉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

5. 기대효과



1. 지역주민과의 대립해결 (사업연계의 상생모델)
2. 특수학교설립의 안정적 기반조성 및 우수사례육성
3. 협업을 통한 협력적 행정업무 구현
4. 장애아동의 교육지원 확대를 통한 학습권, 치료권보호

장 려	생활SOC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측정 방법
수 상 자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건설관리연구실 / 이하연, 김성표, 강상혁, 임지선
아이디어 개요	
<p>경로안내 API를 이용하여 거주지에서 실제 생활SOC까지 걸리는 현실적인 시간을 산출하여 각 지역에 대한 접근성 분석을 실시. 거주지별 접근성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과 비교하여 생활SOC시설의 이용범위나 소외지역을 파악하여 생활SOC 공급, 계획 등 정책자료로 활용</p>	
아이디어 제안 배경	
<p>■ 생활SOC 지역 불균형 심화로 생활SOC는 삶에 필요한 시설로써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시 주민들은 비교적 편하게 생활SOC를 이용할 수 있으나 구도심은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형성된 경우가 대다수로 생활SOC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발생 <p>■ 생활SOC 불균형 해소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거주지에서 생활SOC 시설까지의 정확한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시간에 따라 범례를 정하여 지도상에 표현한다면 생활SOC의 공급수준이나 불균형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또한 거주지의 인구정보와 소요시간을 이용해 지역별 생활SOC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며 그 결과를 생활SOC의 적절한 공급 및 불균형 해소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아이디어 제안 내용	
<p>■ 아이디어의 적용성 평가 :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p> <p>■ 공간데이터 생성 : GIS 환경에서 거주지와 생활SOC 시설의 공간데이터 생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 Polygon 데이터로 생성, 생활SOC시설 : 도서관, 초등학교 <p>■ 수요자 중심의 지리적 접근성 측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접근성 분석을 위해 경로안내 API를 이용하여 각 거주지에서 도서관, 거주지에서 초등학교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을 산출. * 현실적인 시간 산출위해 경로안내 API를 사용. - 거주지 수와 생활SOC 시설물의 개수가 많아서 소요시간 산출을 자동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Java8.1, Javascript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Tmap API의 구동을 자동화함 - 출발지인 거주지역과 거주지역의 좌표, 도착지인 생활SOC 시설과 생활SOC 시설의 좌표 정보를 Tmap API에 전달하면 Tmap API에서 경로탐색 결과로 이동거리(단위 : m)와 소요시간 값(단위 : 초)을 수신하여 출발지, 이동거리, 소요시간, 도착지 형식으로 파일에 저장되며 이를 통해 각 거주지는 생활SOC 시설까지의 소요시간 데이터를 갖게 됨. <p>■ 수요자 중심의 생활SOC 시설 접근성 현황 지도 생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시간 데이터를 폴리곤 형식으로 형성된 거주지 공간데이터에 입력 후, 시간범위에 따라 범례 구분 	



- 지도의 범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도서관과 초등학교의 최저기준 10~15분 기준을 적용하여 **최저기준을 만족시키는 거주지는 흰색(10분 미만) 또는 회색(10~15분)으로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구역은 검은색으로 나타남.**
- * 도서관과 초등학교로 이동 소요시간이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지역별 생활SOC 접근성 지수(평균값) 산정

-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기반으로 접근성 지수 산출 : $A_i = \frac{\sum p_{ij} \times t_{min}}{P_i}$
- A_i 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i 동의 시간적 접근성, P_i 는 i 동의 상주인구, p_{ij} 는 i 동에 속한 거주지 j 의 상주인구, t_{min} 은 거주지 j 에서 생활SOC 시설까지의 이동시간이며 위 식을 통하여 인구가 가중치로 반영된 이동시간 평균을 산출할 수 있음.

행정동	도서관	초등학교	행정동	도서관	초등학교
동춘1동	6.6분	4.1분	선학동	10.7분	9.3분
동춘2동	18.1분	5.6분	송도1동	7.2분	6.5분
동춘3동	10.5분	5.3분	송도2동	6.8분	8.1분
이하 8개동 생략					

- 생활SOC 시설물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 지도를 활용한다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 소외지역을 정확하게 판단 가능

아이디어 기대효과

- 정책적 활용 : 생활SOC 공급현황과 소외지역을 명확히 나타내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공급자의 관점(인구기준)이 아닌 수요자의 관점(접근성)에서 생활SOC 시설 현황과 접근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생활SOC 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
- 국민 복지에 대한 기대효과
 - 사전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SOC 필요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됨

발표자료 ('19. 11. 26.)

생활SOC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측정 방법 - 장 려 -



**생활SOC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 중심의 접근성 측정 방법**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건설사업관리아이디어실
생활 SOC 공모전 아이디어 부문



목차

1. 아이디어의 배경 및 목적
2. 공간 데이터 생성
3. 소요시간 산출
4. 인프라 시설물 접근성 지수
5. 지리적 접근성 분석
6. 결론



아이디어 배경 및 목적

배경

- ✓ 생활인프라 공급 지역간 불균형 심화
- ✓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심 재정투자 점점 증가
- ✓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제시
- ✓ 수요자 중심형 주민 체감형 기준으로써 접근시간 기반

목적

- ✓ 수요자의 관점에서 생활인프라 시설물의 접근성 파악
 - ✓ 인프라시설물까지의 현실적인 소요시간을 파악
 - ✓ 실제 거주지역과 인프라시설물 간 소요시간 산출
- 경로안내 API (Tmap-API)를 활용하여 산출한 소요시간을 이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인 접근성 도출

↓

'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공급의 새로운 기준

↓

산출된 소요시간을 활용하여
인프라 시설물 접근성 지수 산출
지리적 접근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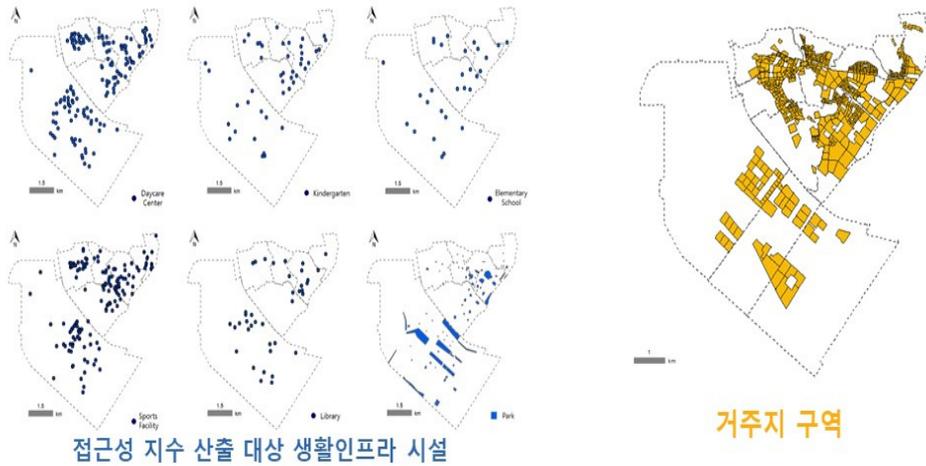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국토교통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마을 (도보)	교육	유치원	국공립 민간	5~10분
		초등학교	-	10~15분
	학습	도서관	공공, 사립, 작은도서관	10~15분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놀이터	5분
	돌봄	마을 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의료	기초의료시설	의원, 약국
	건강생활 지원센터			10분
	체육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휴식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
	생활편의	주거편의시설	무인택배함, 껌/물/주거시설 등	5분
소매점		-	10분	
교통	마을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 노외, 사설 주차장	주거지역내 주차장확보를 70%이상	
지역 거점 (차량)	학습	공공 도서관	국공립도서관(국립도립시립, 교육청 설립)	10분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보건소	-	20분
	의료	응급의료기관	-	30분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휴식	지역거점공원 (1만㎡이상)	-	10분



공간 데이터 생성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거주지역(616)을 GIS환경에 맵핑
2. 도서관(44), 유치원(45), 초등학교(28), 보육시설(260), 체육시설(185)의 주소를 좌표로 변환하여 GIS환경에 맵핑
3. 공원 (85)를 GIS환경에 맵핑, 폴리건데이터 생성



소요시간 산출

경로안내 API를 활용한 소요시간 산출

- ✓ T-map API를 활용한 소요시간 산출
- ✓ 거주지역(616개)과 조사대상 시설 간의 소요시간 산출
- ✓ 도서관,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공원, 체육시설, 지하철입구, 고속도로 IC
- ✓ 프로그래밍을 통한 T-map API 구동 자동화

프로그램 입출력 데이터

YSA0001,	126.683182,	37.410028,	126.686354,	37.412850,	SUB036
거주지역	거주지역 경도	거주지역 위도	인프라 시설 경도	인프라 시설 위도	인프라 시설
		↓			
YSA0001,	660,	158,	SUB036		
거주지역	이동거리 (단위 : M)	소요시간 (단위 : 초)	인프라 시설		



인프라 시설물 접근성 지수 산출

접근성 지수 산출

- 시간 기반의 접근성 산출
- 행정동 별 접근성 지수 산정
-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성 평가 기준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최저기준과 비교

$$A_i = \frac{\sum P_{ij} \times t_{min}}{P_i}$$

A_i = 인천광역시 연수구 i 동의 공간적 접근성

P_i = i 동의 상주인구

P_{ij} = i 동에속한 거주지 j 의 상주인구

t_{min} = 거주지 j 의 인프라 시설물 이동시간



결과

(단위 : 분)

행정동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지하철	행정동	IC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최저기준 (도보)	10~15	10~15	10	5	5~10	10~15	-	최저기준 (차량)	-	10	10	15~30
동춘1동	6.6	3.2	3.2	4.3	2.9	4.1	11.6	동춘1동	5.5	4.9	2.3	1.8
동춘2동	18.1	3.1	6.1	3.1	5.7	5.6	9.8	동춘2동	11.3	7.6	5.4	6.2
동춘3동	10.5	3.2	4.4	1.8	3.5	5.3	9.2	동춘3동	9.1	4.0	4.8	4.9
선학동	10.7	4.2	5.4	4.7	9.6	9.3	6.4	선학동	6.3	7.6	2.6	6.8
송도1동	7.2	3.8	4.4	2.6	6.6	6.5	11.0	송도1동	12.3	2.5	4.6	5.1
송도2동	6.8	6.2	8.7	3.2	8.4	8.1	22.3	송도2동	11.0	5.8	7.7	12.9
송도3동	6.7	4.7	8.5	2.7	7.8	8.4	16.6	송도3동	15.8	7.6	14.1	10.1
연수1동	6.1	3.8	3.9	4.7	5.4	8.4	12.6	연수1동	7.2	4.9	6.3	4.0
연수2동	5.5	3.7	5.2	3.6	4.1	6.2	6.3	연수2동	9.3	4.8	3.9	3.1
연수3동	5.4	4.3	5.3	3.5	5.4	6.3	7.3	연수3동	10.7	2.9	3.1	4.1
옥련1동	6.6	4.0	2.9	2.6	5.4	5.6	14.5	옥련1동	5.6	14.8	4.7	10.1
옥련2동	6.0	6.6	4.2	3.0	7.9	8.0	18.0	옥련2동	5.2	18.0	8.1	12.5
청학동	6.9	3.5	4.9	3.5	7.6	9.4	15.1	청학동	5.9	9.0	4.1	6.3

지리적 접근성 분석

지리적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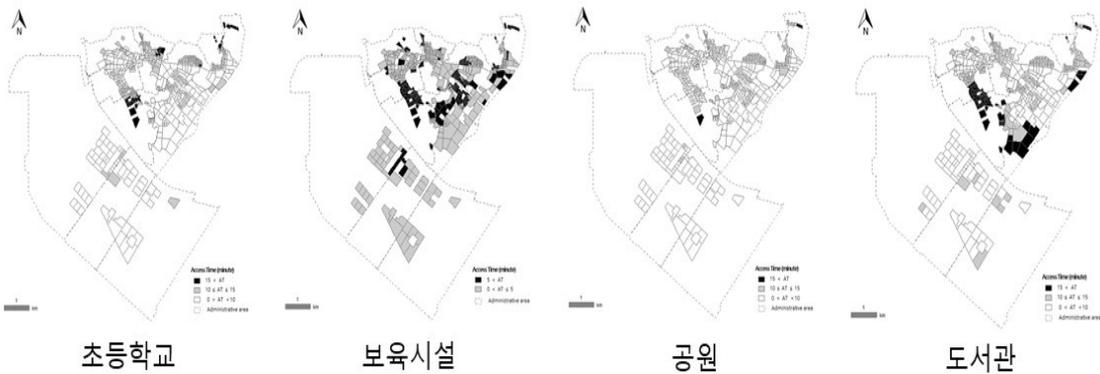
- 접근성 지수는 행정동의 인구 가중 평균 시간
- 각 거주지에 소요시간 정보를 입력하여 GIS환경에서 가시화
-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성이 미흡한 구역을 도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거주지 별 지리적** 분석 수행



지리적 접근성 분석을 통한
인프라 시설물 소외지역 도출

지리적 접근성

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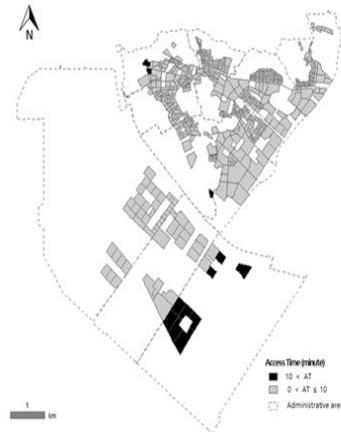


지리적 접근성

차량



공원



도서관

결론

-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접근시간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 ✓ 경로안내 API를 활용하여 이동시간을 산출하여 한층 현실적인 접근성을 산출할 수 있음
- ✓ 행정동을 경계로 하여 접근성을 파악하는 거시적인 분석 방법 - 접근성 지수 산출
-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접근 소외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미시적인 분석 방법 - 지리적 접근성
- ✓ 수요자의 관점에서 생활인프라 시설물로부터의 소외된 지역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음
- ✓ 인프라 입지 선정과 같은 인프라 및 도시재생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접근성 측면

장 려	의료복합시설 중심의 생활SOC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
수 상 자	신용보증기금
아이디어 개요	
<p>□ 의료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생활SOC플랫폼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 복합화 및 Bundling을 바탕으로 관리기관 설립,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교·시민 등과 연계하여 생활SOC플랫폼 형성 <p>□ 생활SOC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관, 지자체, 시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SOC 관련 복지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아이디어 제안 배경	
<p>□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의료시설 제공으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위주의 공급으로 인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되어있으며, 수익성이 낮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시장공급 한계 * 공공보건의료기관 5.4%, 공공병상 비율 10.3%(OECD 최하위) - 가구원 수 축소, 맞벌이 가족, 1인 가구 등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대비하여 상담, 교육, 심리 치료 서비스 등 제반 시설을 마련할 필요성 증가 -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 대책'*에 따라 지방 사람들의 수도권 대형 병원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균형 있는 지방 의료서비스 구축 시급 *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나, 지방환자의 수도권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동네 병의원 질적수준 제고는 후순위로 밀려난 점 등으로 지방환자 차별 논란이 있음. <p>□ 생활SOC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고용 창출 방안에 대한 필요성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0~2022]」에 따르면 건설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세금을 바탕으로 한 일시적인 고용이라는 비판점도 있어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 	
아이디어 제안 내용	
<p>I 의료복합시설 확충</p> <p>□ 복합화 사업대상 시설 범위 확장 : 현재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 이외에도 재활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지역 내 병원 임대를 위한 시설 등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범위 확대</p> <p>□ 병원, 주차장, 유치원 등을 갖춘 복합센터 계획 및 Bundling을 바탕으로 관리기관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시범적으로 혁신도시 및 주변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 ○ (방법) 지자체, 지역 내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고, 금융기관·지역기업·시민이 편당한 자금을 바탕으로 의료복합시설 건설·운영을 위한 지자체 산하 일원화된 조직* 설립 * 의료복합시설 건설 자금 마련 및 운영 단계 시, 운영비 조달 ex) 현재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계획 ** 지자체·이전기관 공동 출연 설립조직(재단법인) 	

II 생활SOC플랫폼 구축

□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생활SOC플랫폼 형성

- (시 민) 각종 펀딩 및 시설 관련된 개선방안 등 의견 제시
- (지역기업) 생활SOC내 필요 재화 및 서비스 우선제공 및 운영의견 제안
- (지역 공공기관) 관리기관 출연 및 각종 기부,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참여
- (관리기관) 간병인, 간호조무사,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등 복합시설 필요인력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 내 대학생·경력단절 여성·은퇴한 고령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마련
- (지 자 체) 관리기관에 대한 출연뿐 아니라, 기관 관리·감독을 통해 평가등급별 보조금 차등 지급방안 마련 등 성과체제 도입을 통해 플랫폼 운영 효율화

III 상생형 일자리 마련

□ 의료복합시설 중심 생활SOC플랫폼 활용 및 지역 상생형 일자리 마련*

- * 보건의료 분야는 고용유발계수가 크며(16.7명, 전 산업 평균 8.7명), 고령화 등으로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됨
- 일자리 대상 : 지역인재 등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 지역사회 시민
- 지 자 체 : 생활SOC플랫폼 연계망을 신속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대한 출연 및 일자리 창출지표를 바탕으로 한 보조금 지급제도 마련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
- 관리기관 : 근로자에게 제공할 복지혜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생활SOC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 * 직계 가족의 복합화시설 등 플랫폼 내 기관에 대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주거 지원, 근로자 우선권 부여 등
- ** 지역 내 대학교와 연계하여 전문인력 인턴십 제공 및 정규직 채용, 정기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관련 분야 필요인력(호스피스, 간병인 등) 양성 및 채용
- 시 민 : 생활SOC플랫폼과 연관된 복지혜택 제공을 바탕으로 임금 수준을 합의함으로써 안정된 고용과 삶의 질 향상 가능

아이디어 기대효과

- (균형발전) 양질의 의료자원을 고루 분포시킴으로써 의료시설 편중화 현상 완화에 기여
- (편익증진) 서비스 소외지역까지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누구나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이 향상됨
- (비용절감) 공공기관 출자, 시민·지역기업의 펀딩 등을 바탕으로 재정절감 가능, 생활SOC 시설 기반으로 복지를 제공하여 인건비 감축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운영비 운용 가능
- (고용창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경제효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증가, 주민 증가 등 선순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발표자료 ('19. 11. 26.)

의료복합시설 중심의 생활SOC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

- 장 려 -



의료복합시설 중심의 생활SOC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

2019년 생활SOC 아이디어 공모전
2019.11.26.(화)
신용보증기금

K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1. 개요

K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공공성

- 균형발전
- 편익증진
- 고용창출

효율성

- 비용절감
- 소득증가
- 경제효과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자체, 관리기관, 시민 등 참여 주체간 협력을 통한 고용 창출

+

의료 생활SOC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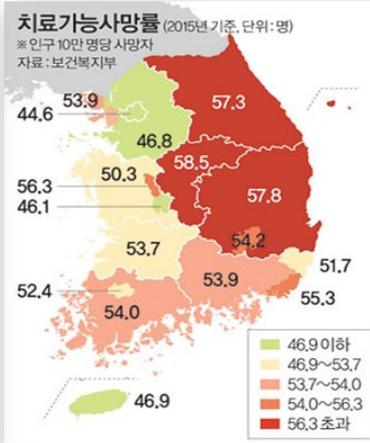
- (관리기관 설립) 양질의 지역 의료서비스 복합시설(병원, 주차장, 유치원 등) 확충을 위한 조직 마련
- (플랫폼 구축) 관리기관, 지역 공공기관, 지역사회 시민 등과 지역 내 연계망 형성

II. 배경

배경. ① 의료서비스 불균형

민간 위주의 수도권, 대도시 의료 집중화로

지역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존재



수도권 병원 이용 제한... "지방 살면 서울 병원 못 가나 - 브런치
<https://brunch.co.kr> ...
2019. 9. 4. ·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뭐냐 | <https://in.news.naver.com/article/0150004203943> 수도권 병원 이용 제한... "지방 살면 서울 병원 못 가나" 불만 ...

'지방 사람들은 수도권 병원 이용 제한' 정책 발표 ... - WIKITREE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
지방 사람들은 수도권 병원 이용 제한' 정책 발표 일파만파, 2019-09-05 11:38. ·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논란... *서울로 가려면 죽음도 안한?' 병원, 글과 관련이 ...

수도권 병원 이용제한[한경]: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PostView>
2019. 9. 7. · 지방 환자의 수도권 대학병원 이용을 어렵게 해 지방 환자들의 진료권면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방 사람들은 수도권 병원 이용 제한 ...
<www.ohfun.net> ...
2019. 9. 5. · 정부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내놓은 대책에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

수도권 병원 이용 제한... "지방 살면 서울 병원 못 가나" 불만 터질 ...
<https://news.v.daum.net> ...
2019. 9. 4. · 내년부터 경증 환자의 대학병원 진료비가 더 싸게 된다. 사천은 세브란스병원 진료실 전경. 한경DB.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

II. 배경

배경. ② 효율적인 고용창출 방안의 필요성

생활SOC 시설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회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 필요성 대두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생활SOC 3개년계획(안)
(2020~2022)

2019. 4. 15

관계부처합동

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 기대효과

- (삶의 질 향상) 주 도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 촉진
 - 체육관,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10분 내 접근 가능
 - 자녀,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생활문화공간에서 취미·관심사 공유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 (일자리 창출) 생활SOC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 지역인구·소득증가 선순환
 - 건설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예) 1개소당 평균 고용인력: 국민체육센터 16명, 도서관 8명, 어린이집 12명 등

[사실] "48兆 들여 생활SOC 일자리 20만개" 돈은 어디서 나오나

입력 2019-04-16 17:41 수정 2019-04-17 00:02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8조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놔. 체육관 문화센터 도서관부터 휴양림과 요양시설까지 사업 내용이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적인 자치 사업을 중앙정부가 세세한 내용까지 정해 나눠줄겠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더구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예산실)를 두고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맡고 일요일도 계속 청진다는 것도 정부조직법의 업무관정과는 어긋나 보인다.

시군 지역까지 문화체육시설과 환경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취지는 좋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도 전통적 대응 정책의 하나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을 투자하는 데는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재원마련도 예상일이 아니다. 가뜰이나 자가증식하는 복지예산에 고통받고 무상교육 등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속속 뒷모시고 있는 이에 만약 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경기대책이려면 기업 육성과 산업 지원에 우선해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이 된다. 박병철 한국경제총협회 명예회장이 역설했듯이 세금 쓰는 일자리나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될 수가 없다.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생긴다는 20만 개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고용이고, 계속관료화권을 지킬 2만~3만 개 일자리도 세금 쓰는 일자리일 뿐이다.

III. 대안제시

의료 생활SOC 플랫폼 구축

① 의료시설 중심의 생활SOC 관리기관 설립

의료시설 복합화 및 연계시설 집합화를 통한 지자체 산하 기관 마련

② 플랫폼 구축

지자체 관리감독 하 참여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통합 플랫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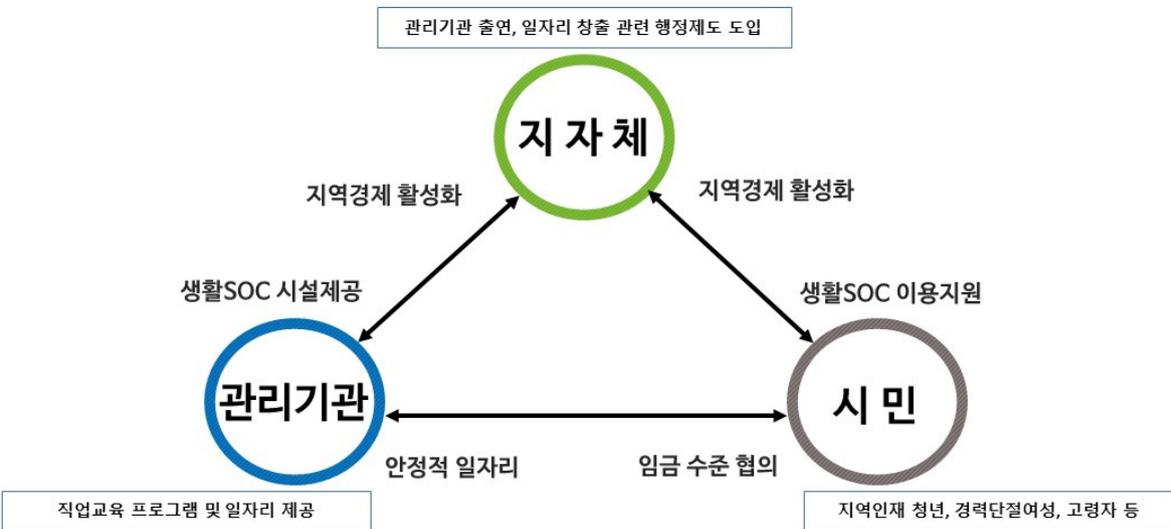


III. 대안제시

상생형 일자리 마련

○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의료 생활SOC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자체, 관리기관, 시민간 상생형 일자리 구조 마련



IV. 기대 효과

균형발전

- 의료시설 편중화 현상 완화

편익증진

- 고른 의료서비스 분포로 삶의 질 향상

고용창출

-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

공공성 효율성

비용절감

- 펀딩,플랫폼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

소득증가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고용 효과

경제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제 발전

최우수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상생, '김영수 도서관' '생활SOC 지역참여 우수사례'
수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심 개발과 관공서 이전 등으로 원도심 쇠퇴 및 공동화 가속으로 정주환경 낙후 ○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 부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 원도심 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교육환경 악화로 방한 마련 시급 ○ 제주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선정 및 추진(2016년~2020년)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4. ~ 8. :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 활용 협의(도(센터)↔북초(교육청)) ○ 2017. 7. ~ 9. : 마을도서관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용공간 조성계획 수립 ○ 2018. 4. ~ 5.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워크숍 운영(총 4회) ○ 2018. 4. ~ 5. : 김영수 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사용자 참여 설계) ○ 2018. 5. ~ 8.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학부모 5인 및 전문가) 워크숍 운영(총 6회) ○ 2018. 5. ~11. : 김영수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지역건축가 총괄) ○ 2018. 9. 21. : 김영수 도서관 상량식 개최(전교생 및 사업관계자 참석) ○ 2018.12. 7. : 김영수 도서관 준공식 및 제북페스티벌 개최 ○ 2019. 5. 31. : 김영수 도서관 재개관 및 기념행사 ○ 2019. 9. 25. : 도서관 운영 활동가 조직 '김영수도서관친구들(비영리단체)' 설립 	
지역(주민)참여 특징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주구의 중심공간인 학교와 연계, 쇠퇴한 원도심의 생활SOC 확충 및 학교와 지역 동반 성장 모델 : 행정과 학교, 교육청, 사업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하며 해결책을 마련한 전국 최초로 학교·행정·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 사업 전 과정에 주민, 학부모,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획(주민주도) : 설문조사, 관계자 TF(전문가 참여) 운영 등 기본계획 수립 - 설계(주민참여) :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공간 설계 - 시공(정보공유) : 현장 설명회 개최 및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설계 변경 - 운영(사용자 주도) :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연계 공동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획-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 지역의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축의 사전 기획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 ○ 주민참여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19.3.11.) ○ 주민주도 도서관 운영을 위한 비영리단체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 설립(2019.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000원 정기후원하는 후원자 50명(마을도서관 활동가 10인 포함)으로 구성 	
추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간을 만들고 협력하는 모델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 등 제도화 기반 마련, 비영리단체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 설립 ○ 도서관 이용객 및 유동인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방(평일 17~21시, 주말 10~18시) 이후 매월 약 1,500명 이상 이용객 방문(평일 약 30명/일, 주말 약 180명/일) ○ 제주북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 및 활성화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생 65%↑('18년 26명 → '19년 43명) / 신입생 23%↑('18년 30명 → '19년 43명) ○ 도시재생 및 학교 공간혁신 우수사례로 자리매김 : 지자체 공무원 등 약 60여개 팀 벤치마킹 ○ 제주관광 10선 '김영수 도서관과 책 축제' 선정 	

향후계획

- 김영수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TF 운영
 - 도(도시계획재생과, 문화정책과), 교육청, 제주북초등학교,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 도 도서관활동가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 운영조직 안정화
-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 주도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후원자 모집
 - 목표 : 2019년 후원자(2,000원/월) 200명, 2020년 후원자 2,000명 모집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상생, '김영수 도서관'

기관명 (단체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작성자	직위(직급) : 기획·교육팀장 성명 : 양민구 (전화 : 064-727-0612)
---------------------	---------------------	------------	---

I 사업개요

- 사업명(시설명)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김영수 도서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양로8길 18(삼도이동 17-3)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2020년
- 사 업 비 : 약 900백만원(국 450, 도 450) ※ 기자재구입 등 운영비용 별도
- 도시재생 사업(국비+지방비), 학교/교육청(기자재 구입 등), 민간(도서구입 등)
- 시설규모 및 주요시설
 - 면적(연면적) : 대지면적 16,148㎡(연면적 365.03㎡), 총 3동
 - 주요시설

구 분		면 적	주 요 시 설
도 서 관	지상1층	154.80㎡	안내데스크, 북카페 '참새방앗간', 한옥방(총 5실), 층층다리, 도채비방, 화장실(남자)
	지상2층	150.16㎡	주제별 책방, 열람실 '목관아가 보이는 책뜰', 옥상산책로 '하늘다리', 화장실(여자)
아이쉼터	지상1층	26.77㎡	사랑방(총 2실/예약제)
아이돌봄	지상1층	33.00㎡	온기나눔방(사이돌봄 공간)



< 사업 시행 전 외관 >



< 사업 시행 후 외관 >



< 계단서가 '층층다리' >



< 테마 열람실 '한옥방' >



< '한옥방' 테라스 >



< '도채비방' >



< 북카페 '참새방앗간' >



< 열람실 '목관아가 보이는 책들' >

○ 운영 프로그램

- 상시 운영 프로그램

구분	일시	프로그램	대상	인원	장소	비고
상시	월/수/목/금 19:30~20:00	그림책 읽어주기	유아&초등저학년	10명	한옥방	활동가
정기	10월20일~주말 11:00~12:00	책 보따리	초등 3학년 이상	10명 (2팀)	사랑방	요일관장

- 특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

구분	일시	프로그램	대상	인원	장소	비고
특강	7월29일(월) 19:00~21:00	책 읽어주는 아빠 교육	학부모 (아빠 참석 必)	10팀 (20명)	계단 서가	이권우 교수
문화 체험	7월31일(수) 17:00~18:00	업사이클링 천연염색 교육	유아/초등 가족	30팀 (50명)	잔디 마당	한짓골 생활협동 조합
특강	8월21일(수) 19:00~21:00	도서관과 친구하기	유아/초등 학부모	20명	100주년 기념관	여희숙 대표
특강	9월16일(월) 19:00~21:00	책 깊이 읽기	유아/초등 학부모	20명	카페	강정아 대표
문화 체험	10월16일(수) 18:00~20:00	‘숨비소리’ 그림책 콘서트	유아/초등 학부모	20명	온기 나눔	박은혜 작가

【 활동사진 】



그림책 읽어주기



김영수도서관 재개관 기념 공연



업사이클링 천연염색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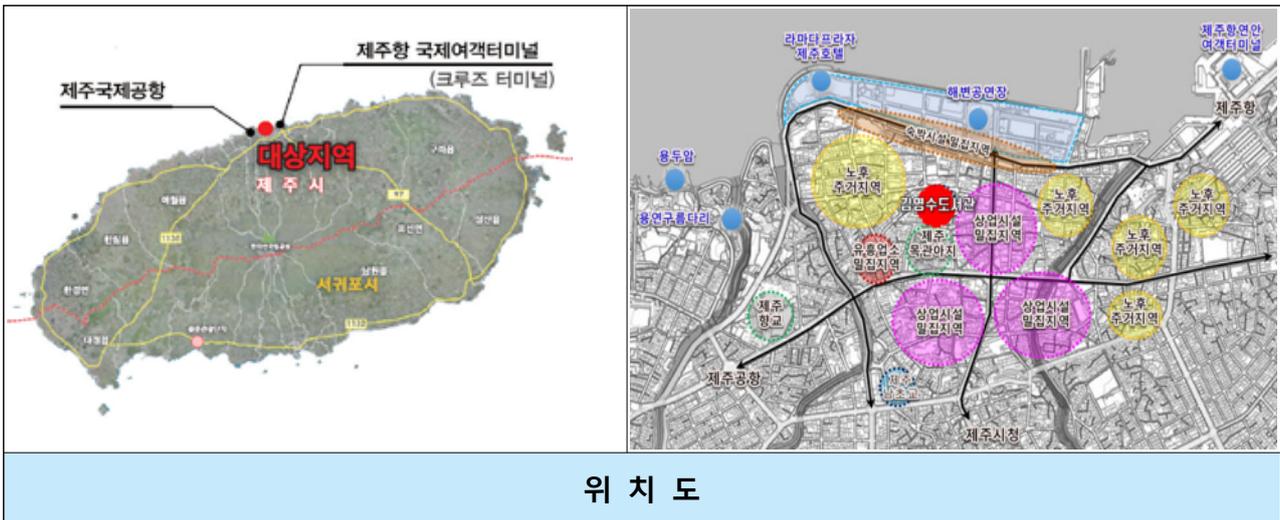


‘숨비소리’ 그림책 콘서트

○ 시설운영 현황

《 시설운영 현황 》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운영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김영수도서관친구들’ 협업)
 -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원, ‘김영수도서관친구들’은 운영 참여
- 운영시간 : 평일 17:00~21:00 / 주말 10:00~18:00 / 매주 화요일 휴관
- 운영인력 : 3명(사서 1명, 마을도서관활동가 1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1명)
 - ※ 마을도서관활동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무급 자원봉사 중
- 연간 운영비 : 60백만원
 - ※ 운영비 조달방법 : 도시재생사업 등 * 시설관리비 등 학교와 협의 후 공동 부담
- 시설이용 : 평균 약 1,500명/월 이상 * 1일 평균 : 평일 약 30명, 주말 약 180명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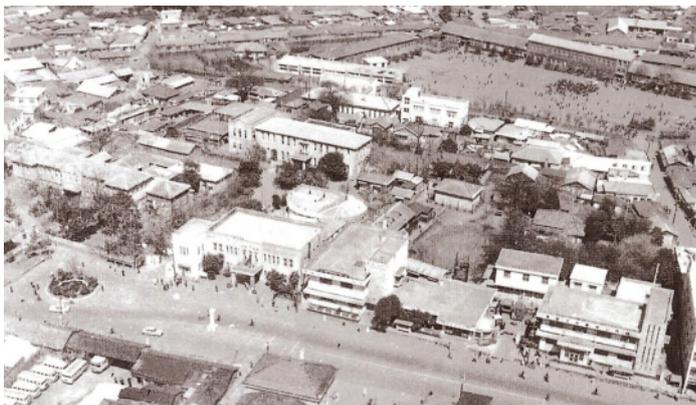
《 지역 일반현황 》

- ◆ 행정구역 및 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830,000㎡) 일원
- ◆ 인 구 수 : 4,098세대, 8,214명(남 4,268명, 여 3,946명)
- ◆ 특성 및 여건
 - (지역특성) : 제주시의 중심지이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제주의 근간이 되는 곳으로 선사시대 이래 사람들이 거주한 유서깊은 탐라의 발상지이며, 삼국시대부터 정치·행정·경제·상업·금융의 중심지였음.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현대식 상점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뒤섞인 복합지역임.
 - (지역여건) : 시내의 중심가를 이루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부의 탐동로 주변을 매립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음.

I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쇠퇴한 원도심, 도서관 없는 마을
 - 신제주 개발 및 관공서 등 이전으로 원도심 쇠퇴 및 공동화
 - *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2008년) 및 해제(2011년)로 인한 행정 신뢰 저하
 - 원도심은 제주도립도서관 이전(1996년) 등 생활SOC 부족으로 주민 삶의 질 저하 및 마을도서관 조성은 20년 동안 마을의 숙원사업이 됨
 - 제주북초등학교는 11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 초등교육의 발상지로, 한때 학생수가 3,000여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원도심의 쇠퇴와 함께 학생수가 감소하여 2018년에는 12학급 전체 학생수가 203명이 재학 중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선정 및 추진(2016년~2020년)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2016년~2020년, 마중물 182억)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간 연장 등 주민참여 확대 노력
- 지역과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성 대두
 -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간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지역과 학교의 협업 필요
 -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시도



< 1963년 제주 원도심 항공사진 >



<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 >

□ 추진경과

- 학교는 마을의 중요한 거점으로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미래의 주민이 됨. 주민들은 학교 동문 또는 학부모이거나 관계자이고,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 큼. 따라서 학교는 도시재생사업과 마을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고,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이 됨

- 김영수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아니라 도 행정과 교육행정이 같이 고민하여 학교 내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에 개방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데 그 의미가 큼

<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화 사업 추진경과 >

- 2017. 3. ~ 8. 김영수도서관 활용 마을도서관 조성방안 협의(도(센터)↔북초(교육청))
- 2017. 7. ~ 9. 마을도서관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용공간 조성계획 수립
- 2017. 9. ~ 12. ‘마을도서관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용공간 조성계획’ 의견수렴 및 보완
- 2018. 1. ~ 4. 도서관 운영 및 활용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협의(도-센터-학교-학부모)
- 2018. 4. 9. 제주북초등학교 학부모총회 사업설명회 개최
- 2018. 4. 13.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사용 승인(도↔북초)
- 2018. 4. ~ 5.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워크숍 운영(총 4회)
- 2018. 5. 2. 제주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산하 도서관소위원회 협의
- 2018. 4. ~ 5.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 2018. 5. 28.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18. 5. ~ 8. 주민참여 프로젝트팀(학부모 5인 및 전문가) 워크숍 운영(5.31~8.16, 총 6회)
- 2018. 6. 5. 김영수도서관 공사 현장설명회 개최(학부모 및 관계자 대상)
- 2018. 8. 9. 도서관 선진지 답사(학부모 대표 및 사업 관계자 총 12명)
- 2018. 9. 21.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상량식 개최(전교생 및 사업관계자 참석)
- 2018. 10.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 변경(전문가/주민 의견 반영)
- 2018. 11. 25.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018. 11. ~ 12. 2018년 마을도서관 활동가 교육 운영(25명 수료)
- 2018. 12. 7. 김영수도서관 준공식 및 제북페스티벌 공동 개최(제주북초등학교, 도시재생지원센터)
- 2019. 4. 2019년 마을도서관 활동가 교육 운영(22명 수료)
- 2019. 5.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 시범운영(5.17(금)~5.18(토)) 및 의견수렴
- 2019. 5. 3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영수도서관 지역개방 운영’ 위탁 김영수도서관 재개관 및 기념행사 공동 개최(제주북초등학교, 도시재생지원센터)
- 2019. 9. 25. 도서관 운영 활동가 조직 ‘김영수도서관친구들(비영리단체)’ 설립



< 관계자 업무협의 >



< 공사 현장 설명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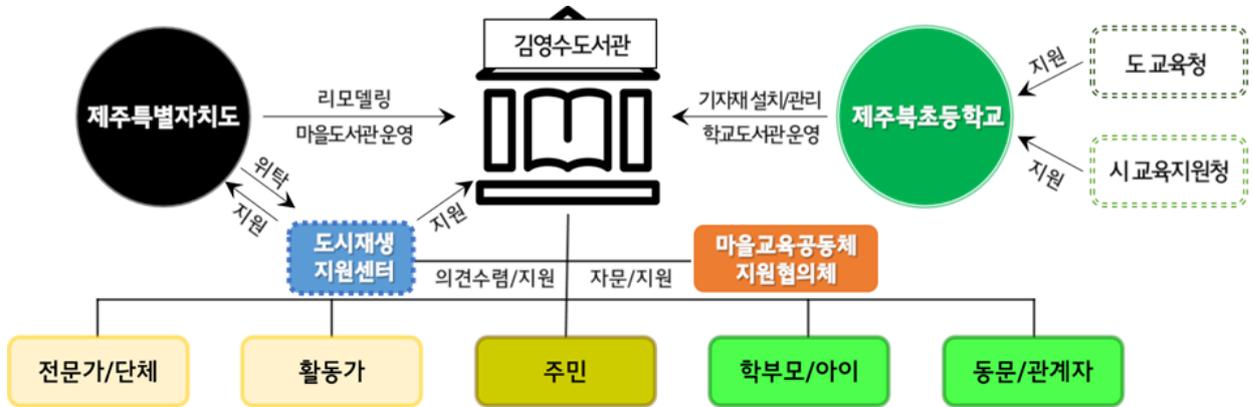


<도서관 선진지 답사>

III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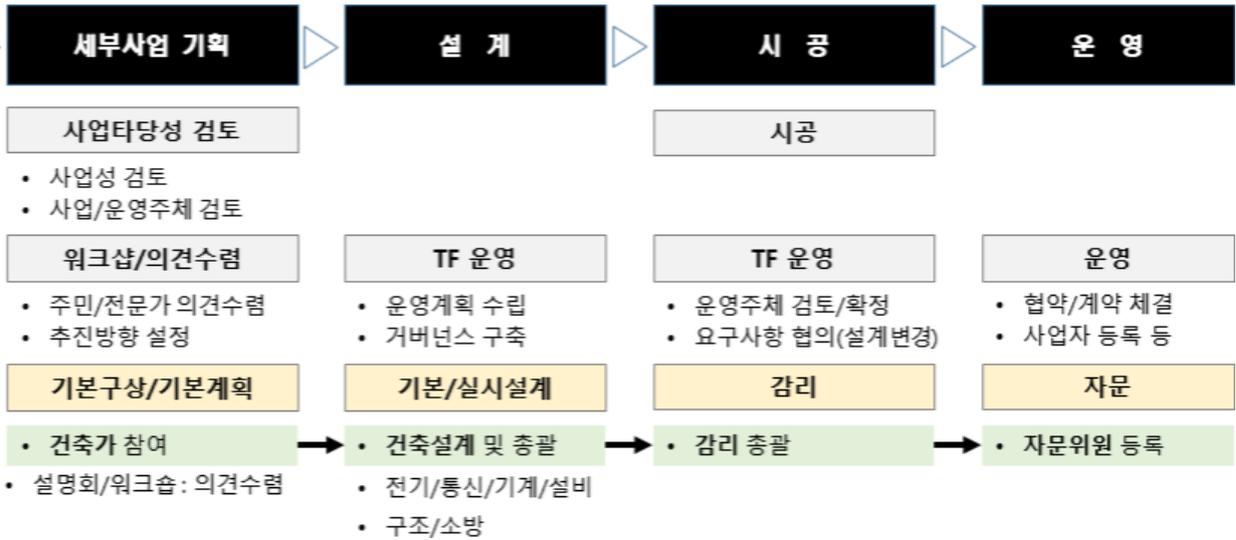
□ 학교시설 복합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및 협업체계 구축

○ 도 행정과 학교, 교육청, 마을공동체, 전문가 등 협업체계 마련



< 김영수도서관 프로젝트 추진 거버넌스 >

-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마을도서관으로 '함께' 사용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 김영수도서관은 도 최초의 학교도서관으로, 제주북초등학교 20회 동문인 故 김영수씨가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기업인으로 성공한 뒤 후배들을 위해 1968년 어머니의 90회 탄신을 기리기 위해 지어서 학교에 기증.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간의 정체성 확보
 - * 평일 17시까지 학교도서관으로 사용. 평일 17시~21시/주말 10시~18시 마을도서관으로 지역에 개방(전국 최초 학교·행정·주민 공동운영 사례)
- 김영수도서관과 인근에 옛 관사와 창고를 같이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365.03m²의 지상 2층의 건물로 조성('18.12.07. 준공)
 - * 관급공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규정을 맞추기 위해 행정과 학교, 교육청, 사업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하며 해결책 마련
- 도, 교육청, 학교,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등), 전문가 등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협의체' 구성('18.03.28.) 및 도서관 운영 지원 협의
- 학교와 아이들, 학부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 수립
 - 설명회, 워크숍, 주민참여 회의 등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 및 주민협의체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 사용자 참여 설계 도입 및 사업의 '기획-설계-시공-운영'까지 지역의 건축가가 참여하여 의견이 계획이 되고 현실화 가능한 프로세스 구현



<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화 사업 추진 프로세스 >

- 마을교육공동체 출범, 하나의 도서관에 두 개의 운영체계 운영
- 학교도서관의 지역개방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 국토부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선정 및 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마을도서관 운영계획 수립(2018.5.31~8.16, 총 6회)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개요 >



< 제주시 원도심 마을교육공동체/주민참여 프로젝트팀 회의 >

-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상생 : 학교도서관-마을도서관 연계 강화를 위한 행정-학교-활동가 간 정기적 협의 추진(월 1회)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19.03.11.)



< 기본구상 수립 >



< 학부모총회 설명회 >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

○ '사용자 참여 설계'를 넘어 '사용자 주도 운영' 시도

-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조성된 공간을,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용자 주도 운영' 추진



< 김영수도서관 상량식 >



< 김영수도서관 준공기념 제북페스티벌 >



< 김영수도서관 재개관식 >

- 주민과 활동가, 자원봉사자에 의한 운영되는, 자생적 마을도서관 운영 추진
- 도내 도서관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마을도서관활동가 교육을 통해 마을도서관활동가 47명 양성 및 제주대학교 교육봉사동아리와 연계하여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영모델' 시도

* 마을도서관 활동가 교육을 통한 마을도서관 활동가 47명 양성

* 대학생 자원봉사자 12명, 주민 자원봉사자 2명 활동 중

- 도서관 운영을 위해 활동가를 중심으로 '김영수도서관친구들(비영리단체)' 설립('19.09.25.) 및 도서관 운영 참여(요일관장, 활동가로 참여 중)



< 마을도서관 활동가 교육 >



< '김영수도서관친구들' 설립 >



<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동 >

IV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추진성과

-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간을 만들고 협력하는 모델 발굴
 -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을 하나의 공간에서 운영하면서 공동체 회복 및 사회적안전망 조성 도모
 - 근린주구의 중심공간인 학교와 연계한 지역의 생활SOC 확충 및 학교와 지역 동반성장 모델 구축
- 도서관 이용객 및 유동인구 증대
 - 19년 5월 31일 김영수도서관 지역개방(평일 17시~21시, 주말 10시~18시) 이후 매월 약 1,500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방문(평일 약 30명/일, 주말 약 180명/일)
- 제주북초등학교 학생수 증가 및 활성화 기여
 - 병설유치원 학생수 65% 증가(18년 26명→19년 43명)
 - 1학년 신입생수 23% 증가(18년 30명→19년 37명)
- 도시재생 및 학교 공간혁신 우수사례로 자리매김
 - 행정과 교육청이 지원하고, 주민과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제주형 주민참여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
 - 준공(2018.12.7.)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전남 등지에서 지자체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등 약 60여개 팀 김영수도서관 벤치마킹
- 제주관광공사 추천 10월 제주관광 10선 '김영수도서관과 책축제' 선정

□ 향후계획

- 김영수도서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 도(도시계획재생과, 문화정책과), 교육청, 제주북초등학교, 도시재생지원센터
 - 학교부지 활용 및 학교공간 혁신에 대한 제도 마련 및 개선 논의
- 도 도서관활동가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 운영조직 안정화
- '김영수도서관친구들' 주도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후원자(2,000원/월) 모집
 - 목표 : 2019년 후원자 200명, 2020년 후원자 2,000명 모집

□ 애로 사항 및 정책적 지원 과제

- 학교도서관의 방과 후 복합사용으로 인해 마을도서관의 법적 정체성 모호 :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기준 미해당
- 공공도서관의 위탁, 임대(대부), 허가 등의 법적 운영방식을 벗어나 민관협력형 도서관 운영방안 모색 : 공공이 최소한의 지원으로 주민주도 운영이 가능한 민관협력(PPP) 모델 연구 및 제도 개선

《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여 협조한 각 기관 담당자 목록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직책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주무관	김희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교육과	주무관	이창석
제주북초등학교	행정실	행정실장	김진미
	김영수도서관	사서교사	김은희
제주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회장	김지연
무근성마을회	-	회장	고정언
탐라지에건축사사무소	-	소장	권정우
한국도서관친구들	-	회장	여희숙
제주도서관친구들	-	회장	허순영
김영수도서관친구들	-	대표관장	신인기
제주대학교 교육봉사동아리	-	회장	김민정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인회

□ 참고자료

- 김영수도서관 블로그(https://blog.naver.com/soo_library) 운영



- 김영수도서관 월별 이용자 현황('19.05.31. 지역개방 이후)

구분	이용자수			비고
	주중	주말	소계	
6월	593	964	1,557	
7월	669	765	1,434	7.19.~7.20. 태풍휴관
8월	772	874	1,646	
9월	364	583	947	9.6~9.7. / 9.22. 태풍휴관 9.12.~9.15. 추석휴관
합계	2,398	3,186	5,584	

○ 주요 보도자료

- 김영수도서관 준공

<p>Jeju Yeongso Library Opening Ceremony Jeju Yeongso Library Officially Opened</p>	<p>주인·학교·행정 '한 돛'... 제주시 원도심 '영영수도서관' 준공</p>	<p>50년만에 재탄생 김영수도서관, 원도심에 활기 불어넣는다</p>
<p>준공 관련 기사</p>	<p>파이낸셜 뉴스 기사</p>	<p>뉴스원 기사</p>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p>Jeju City Village Education Community Support Meeting Jeju City Village Education Community Support Meeting</p>	<p>제주 최초 마을교육공동체 지원협의회 구성...북초 도서관 리모델링</p>	<p>제주 첫 주민주도형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첫 발'</p>
<p>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기사</p>	<p>헤드라인 제주 기사</p>	<p>뉴스원 기사</p>

- 김영수도서관 재개관

<p>Jeju Yeongso Library Reopening Jeju Yeongso Library Reopening</p>	<p>제주북초, 김영수도서관 재개관...다들로는 행사 열려</p>	<p>마을도서관 열려, 제주북초 김영수 도서관 재개관 행사 열려</p>
<p>재개관 관련 기사</p>	<p>국제뉴스 보도자료</p>	<p>JIBS 보도자료</p>

- 김영수도서관 관련

김영수도서관에 말한다 '마을도서관은 이런 곳이야' 미디어제주 2019.05.31. [\[C\]](#)

그런 언어를 내놓았던 건축물로는 건축물로는 제주 최초의 영인 **김영수도서관**을 볼 수 있다. 한때 무너져 놓쳐 버려진 **김영수도서관** 재조성 작업을 가졌다. 거기엔 있는 건축물을 잘라내고, 새로운 단상, 그 공정에...

마을 도서관 운영, 제주북소 김영수 - 뉴스1 2019.05.31.
*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의 터 김영수** - 제주일보 2019.05.31.

김영수 박사 시간, 최영미 시간 '함께 읽는 세계의 역사' 읽기
한겨레신문 2019.06.01. [\[C\]](#)

김영수 교수의 사색을 역사 공간 <사상-운동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한국경제신문] 대
다수 기자... 앞으로 '고전문화과 최영미' 공간은 **김영수** 박사의 사기, 연극의 세계

마을, 사람답게 기동지 못 반세기 전에, 제주북소 김영수 도서관
뉴스1 2019.05.31. [\[C\]](#)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은 고한을 사랑할 줄 모르고, 고한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 지난날 31일 재건한 **제주북소등학교 김영수 도서관**에는 도서관 기동지(고) **김영수** 박사...

제주북소 김영수도서관 새 단상 제주신문 2019.06.02.
* **북소들 김영수도서관이 지역사랑** - 제주일보 2019.06.02.

'북소들 마을도서관' 제주북소 김영수도서관 특집 제주신문 2019.05.05. [\[C\]](#)
제주북소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이 다시 재탄생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사 북소들 도서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주북소등학교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화'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31일 개관식을 갖는다고 5

북소들학교 김영수도서관 단상 - 제주신문 2019.05.05.
* **제주북소등학교 김영수도서관 단상** - 제주일보 2019.05.05.
* **새 옷 입은 제주북소 '김영수도서관'** - 뉴스제주 2019.05.05.
* **제주북소 김영수도서관, 5년만에** - 뉴스1 2019.05.05. [\[C\]](#) [\[D\]](#)
관련뉴스 6건 [검색 보기](#)

마을에 도서관 되돌려준 학교... 김영수 정신 지켰다
제주신문 2019.05.28. [\[C\]](#)

김영수도서관 관련 기사

마을에 도서관 되돌려준 학교... 김영수 정신 지켰다
© 한문영 기자 (moonsyjo@jason.net) | © 승인 2019.05.28 08:00 | 0 댓글

연속기획-제주형 도서관, 길을 묻다 ②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으로 재탄생... 중간지원조직-행정-학교-주민 협업 빛나



제주북소 단상에서 이어진 김영수도서관의 일구 도서관 건축과 과거 관세로 2019년 말도 건축을 완료해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한 건물은 재가구 400평정도로 작은 면적이지만, 단상에서 이어

제주의 소리 기사

김영수도서관이 말한다 '마을도서관은 이런 곳이야'
© 김영준 기자 | © 승인 2019.05.31 19:51 | 0 댓글

제주북소 김영수도서관, 31일 재개관하며 새로운 두루 갖춰 제주도시재정비사업으로 노후 시설 이후 사용민가 받아 운영 학교도서관이 마을도서관으로 거듭나는 좋은 사례로 평가

[미디어제주 김영준 기자] 건축가와 건축주의 협력을 통해, 건축이 제대로 된 모습을 띠기 위한 이런 일을 한다. 그런 언어에 어울리는 건축물로 제주북소에 있는 '김영수도서관'을 들 수 있다.

한겨레의 눈에 비치는 김영수도서관은 재탄생 거렸다. 가까이 있는 건축물을 잘라내고, 새로운 단상을 더했다. 그 과정에 일러스트 건축사 권정우 건축가가 있고, 제주북소 박희순 교장과 학생들의 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 작품에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빛을 줄 수 있을까. 도서관이기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도서관이려면 더 좋기 않을까. 새로 탄생한 김영수도서관 이런 고민을 해왔다. 드디어 그런 고민은 해소됐다. 31일 재개관식을 가진 김영수도서관이 진정한 의미의 마을도서관으로 태어난다.



미디어 제주 기사

우 수	- 도시재생으로 재탄생된 역사하부 공동체 문화 공간 - 교육·문화·복지기능의 생활SOC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 '생활SOC 운영비 절감 우수사례'
수상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방치되어 있는 가능역사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삶터로서 공간적 가치를 마련하고자 도시재생으로 재탄생된 교육·학습 생활SOC 공동체 문화공간인 오픈형 공공도서관 조성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명 : 가재울도서관 * 위치 : 평화로 633, 가능역사 하부공간 사업기간 : 2016. 1. ~ 2017. 11. 규모 : 연면적 1,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공간 : 1,556㎡ (1.2층 복층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시설기준 충족 및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복층구조 필요 ▶ 복지공간 : 348㎡(1층) 이용권역 : 가능동, 흥선동, 의정부1·2동, 녹양동(58,369세대 / 121,573명) 개관일 : 2017. 12. 22. 주요내용 : 교육·문화·복지기능의 생활SOC 오픈형 공공도서관 조성 소요예산 : 1,900백만 원(특별교부세 1,000, 도비4 50, 시비 450) 	
추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으로 재탄생된 역사하부 공간을 활용한 교육·문화·복지기능의 오픈형 공공 "가재울도서관" 전국최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 도서관 리모델링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약 30여 개 지자체 방문 ▶ 국회도서관, 도서관관련 간행물에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 우수사례로 소개 상기 규모(1,904㎡)의 공공도서관 신축 시 토지 및 건축비 약 88억 원이 소요되나 <u>역사 하부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건축물로 19억 원의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조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69억 원(약 78%) 예산절감 효과로 생활SOC 공공청사 확보방안 제시 우수사례임 	
시사점(성공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과 연계한 기초생활SOC 사업(공공도서관)을 진행하여 도시를 변화시키고 살기 좋은 삶터를 조성한 우수한 사례로 공공청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를 선보임 철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철도시설공사에서도 역사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기초생활SOC 사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음 	

**- 도시재생으로 재탄생된 역사하부 공동체 문화 공간 -
교육 · 문화 · 복지기능의 생활SOC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

기관명 (단체명)	경기도 의정부시	작성자	직위(직급) : 가재울도서관팀장(행정6급) 성명 : 이선희 (031-828-8661)
--------------	----------	-----	--

I 사업개요

- 사업명 : 도시재생으로 재탄생된 역사하부 공동체 문화 공간
교육·문화·복지기능의 생활SOC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
- 시설명 : 가재울도서관
- 위치 : 평화로 633 (가능역 하부공간)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1.
- 사업비 : 1,900백만 원(특별교부세 1,000 · 시비 450 · 도비 450)
- 시설규모 및 주요시설
 - 면적(연면적) : 1,904㎡
 - 주요시설
 - ▶ 공공도서관 : 1,556㎡ (1·2층 - 복층 구조)
 - ▶ 복지시설 : 348㎡(1층)

《 시설운영 현황 》

- 개관일 : 2017. 12. 22. (운영 : 월 ~ 금 / 08:00 ~ 20:00)
- 운영방식 : 직영 / 운영주체 : 의정부시
- 운영인력 : 6명
- 연간 운영비 : 477,054천원 ※ 운영비 조달방법 : 시비 100%
- 시설이용 : 75,563명 (1일 평균 : 290명)



위 치 도 (1호선 가능역 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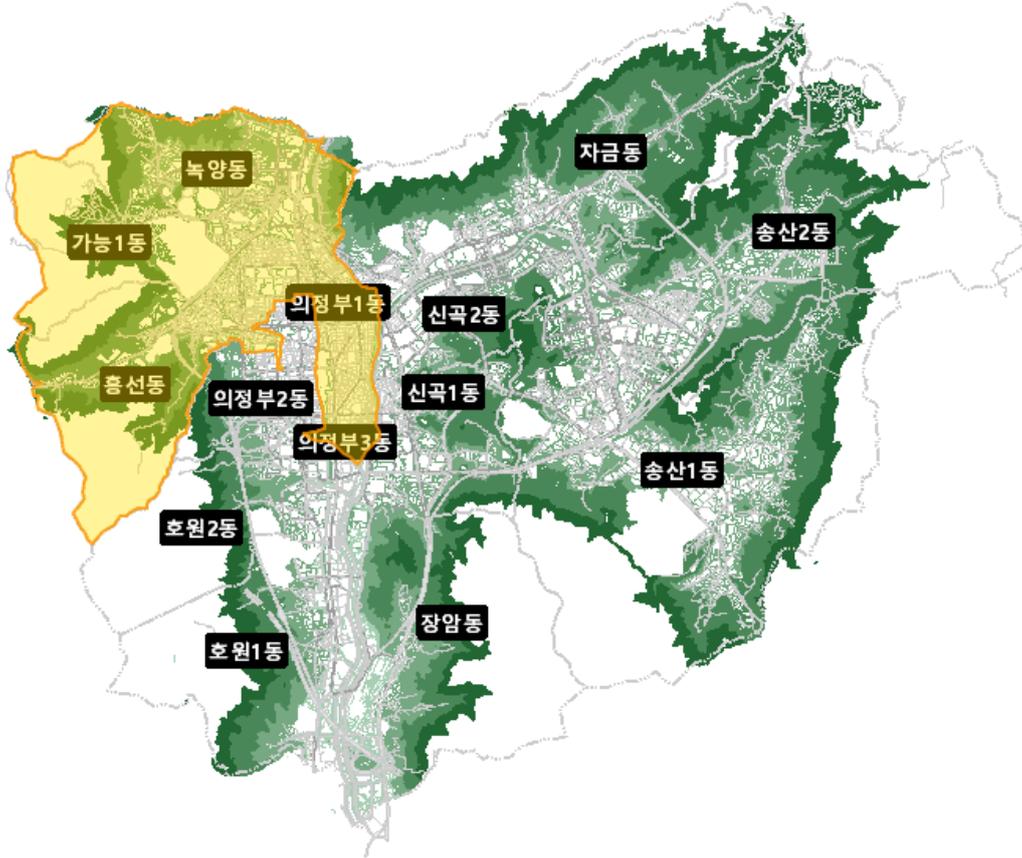


시설사진

《 지역 일반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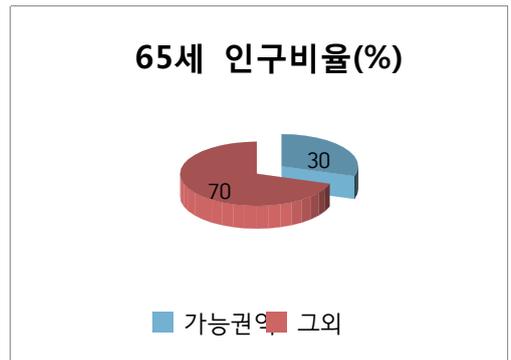
◇ 행정구역 및 면적 : 가능권역 (17.23km² /전체 81.54km²의 21%)

※ 가능1동 / 흥선동 / 의정부1동 · 의정부2동 / 녹양동



◇ 인 구 수 : 58,369세대, 121,573명(남 61,054 여 60,519)

구분	세대수	인구수 (명)	인구수 대비	
			65세이상	복지수혜자
계	189,958	451,846	64,388	17,413
가 능 동	12,300	26,450	4,283	1,637
흥 선 동	9,312	19,861	3,390	1,592
의정부1동	11,604	20,223	3,478	1,197
의정부2동	15,734	32,266	4,505	1,608
녹 양 동	9,419	22,773	3,173	1,077
의정부3동	5,970	9,894	1,523	438
호 원 1 동	15,206	36,490	6,724	518
호 원 2 동	13,361	35,988	6,004	565
장 암 동	7,971	19,589	3,438	1,277
신 곡 1 동	17,987	45,406	6,234	1,072
신 곡 2 동	16,876	44,698	5,808	1,579
송 산 1 동	12,259	29,196	4,313	796
송 산 2 동	30,008	80,624	7,371	2,247
자 금 동	11,951	28,421	4,144	1,067



◇ 특성 및 여건

가. 가능지역의 과거와 현재

- 가능지역은 경기북부와 서울, 인천 및 수원까지 연결하는 전철 1호선과 국도 3호선으로 인해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난 한수이북 교통 요충지임
 - ➔ 그러나 전철1호선이 소요산까지 연장됨에 따라 가능역이 종착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인이었던 정주 공간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가능지역(가능동, 흥선동/의정부1,2동/녹양동)은 의정부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 건축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거주비용이 저렴하여 저소득층 거주자 비율이 높음
 - ➔ 의정부시 14개동 중 각 동의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복지 수혜자가 가장 많아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한 실정임

나. 가능지역의 특성

- 저소득층 대상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가능역사 철로 하부공간에서 무료급식소(2009년~현재)를 정기적(주 2회)으로 운영하고 있음
 - ➔ 특정 계층(노숙인, 어르신 등) 대상의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인해 가능역 주변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열악한 환경의 무료급식소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랑의 119한술나눔」 무료급식 운영현황

- 위 치 : 가능역사 3번 출구 방면(하부 공간)
- 규 모 : 648㎡(196평)
- 주 관 : (사)119한술나눔(2009년 설립)
- 운영방법 : 주 2회(월요일, 금요일), 배식시간 11:30 ~
- 재 원 : 도비지원 50%, 자부담 50%
- 이용현황 : 일일 평균 20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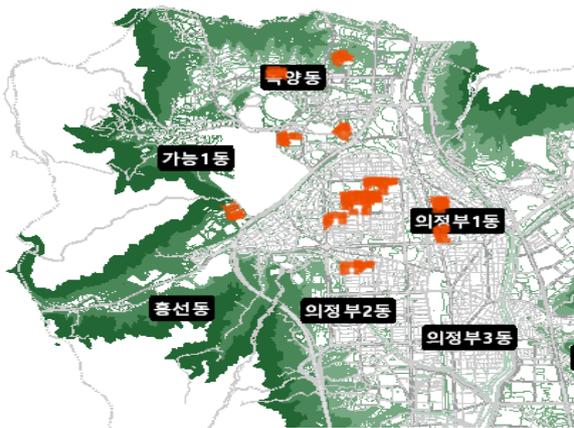
- 가능역 주변에는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의정부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 7개교 및 중학교 5개교 등 의정부시에서 가장 많은 15개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 밀집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 가능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머물 수 있는 공공 문화시설이 전무하여 타 지역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등 정주 공간 기능에 필요한 기본 시설 부족으로 지역 내 최소한의 복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가능역 주변 환경



가능역 하부 “무료급식소” 운영



가능권역 교육기관 현황 (붉은색 표시)

II 추진배경

가. 가능동 지역사회 침체

- 가능역이 종착역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을 이어주는 관문역할을 통해 역 주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전철 1호선이 연장됨에 따라 가능역 기능이 축소되어 주변 상권 및 지역사회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필요함
- 가능역사 철로 하부에서 특정 계층(노숙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열악한 환경의 무료급식소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노숙자, 무단투기, 주취자 등)으로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복지공간이 필요함

나. 교육 중심지, 저소득층 밀집, 문화 기반시설 전무

- 가능역사 주변인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및 의정부동(1.2)에는 총 15개의 교육기관(초 3, 중 5, 고 7)이 밀집해 있는 교육 중심지이나, 지역 주변 슬럼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안전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 주변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가능역사 주변 지역의 저렴한 거주비용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아젠다가 필요함

→ 가능권역 주변 기초생활SOC 분포현황

(2016. 12. 기준/개소)

구분	보육시설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공원
시전체	424	4	4	4	107
가능권역	85	1	-	3	32

※ 가능권역 기초생활SOC 문화시설(공공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임

다. 지역주민의 「살기 좋은 삶」 확장을 위한 기초생활SOC 문화공간 조성필요

- 지역 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생활SOC를 확충하고자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간 기초생활SOC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교-지역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¹⁾ 기능의 공공도서관 조성 필요
-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주민 행복 구현을 위하여 '작지만 가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공간이 필요함

⇒ 공공도서관은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문화의 발전과 소통에 기여하고 있음으로, 공공 문화시설이 전무한 가능 지역에 기초생활soc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 발전 도모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공간임

III 추진내용

- 「시민입장에서의 접근성」을 반영한 생활SOC 「가재울 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

「가재울 공동체 문화 공간」이란?

시민의 출퇴근 이용으로 접근성이 높은 역사 내 방치되어 있는 교각하부를 도시 재생사업으로 재해석하여 평생학습기관 및 복합 문화 공간 역할과 함께 저소득 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등 교육·문화·복지 기능의 포용적 혁신공간을 품은 기초생활SOC 공동체 문화 공간임

1) 전 생애(life-long) 또는 통 생애(life-wide)에 걸쳐 배우는 모든 학습(학교교육, 사회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여가 활동, 자원봉사활동, 취미 활동 등)

- 조성기간: 2016. 1. ~ 2017. 11.
- ※ 2017. 12. 22. 개관 (운영 : 월 ~ 금 / 08:00 ~ 20:00)
- 위 치: 가능역 3번 출구방면 철로 하부 공간
- 규 모: 연면적 1,904m²
· 공공도서관 : 1,556m² (1.2층 - 복층 구조) / 복지시설 : 348m²(1층)
- 소요예산: 1,900백만 원 (특별교부세 1000, 도비 450, 시비 450)
- 이용권역: 가능동, 흥선동, 의정부1.2동, 녹양동 (58,369세대 / 121,573명)

○ 살기 좋은 삶터로서의 기초생활SOC 「공동체 문화 공간」 주요기능

1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도서관 조성 사례

■ 지하철역 교각하부 도시재생 + 도서관의 콜라보레이션 사례

-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역사 하부공간을 도시재
생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한 공공도서관 건립의 최초사례

■ 주변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15개교)과 연계

-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 놀이공간, 문화
센터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활동

2 교육 + 문화 + 복지서비스 융합형 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

■ 평생학습기관, 복합 문화 공간,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제공

- 다양한 공연(야외공연, 저자와의 만남 등)과 전시활동을 정기적(월1회)
으로 진행하여 가능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역할 수행
- 다양한 주제의 도서 21,000여권을 비치하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관 역할 수행
- 오전·오후·저녁 시간대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공동체 문화 공간 역할 수행

☐ 건강백세도시 특성에 맞는 어르신 특화 서비스 제공

- 타 지역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전체 30%) 특성상 어르신을 위한 분야별(자활프로그램+여가활용) 특화서비스 제공

[어르신 여가 활용 프로그램]

- 어르신 전용공간 건강백세 ZONE 운영

- 어르신 전용 구역을 지정하여 건강특화도서 서가 운영
- 보건소와 협조하여 무료급식행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혈압, 체온, 혈당 등 정기적인 바이탈 체크 및 치매예방 서비스 제공

-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르신특화강좌 운영

- 특화 프로그램 내용
 - 자서전 쓰기 : 한사람의 일생을 기록하여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출판기념회 행사로 연계)
 - 독서테라피 : 책을 매개로 하여 노년기 우울감 해소 및 인지능력 향상을 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 치매예방 글쓰기 : 정기적인 글쓰기를 통해 뇌기능을 촉진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독서 프로그램

[어르신 자활 프로그램]

- 어르신들이 자립할 수 있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제공

- 「의정부시니어클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연계
 - 노인장애인과 협조를 통한 노인의 공익활동 서비스를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
 - ⇒ 노숙자 급식행사 질서유지, 이용자 계도, 도서정리 등

☐ 교육기관 밀집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문화공간 역할수행

- 의정부시에서 가장 많은 15개 교육기관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청소년들이 방과 후 머물 수 있는 문화시설 제공

[청소년 프로그램]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마련
 - 도서관 사서직업체험, 진로토크콘서트, 진로코칭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유학기 기간 동안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초 마련
- 인문학을 기본으로 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책 읽기 동아리, 글쓰기 동아리, 고전탐구 동아리 등 도서관과 인문학을 기본으로 한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② 안전플러스 생활밀착형 도서관

☐ 출·퇴근 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 가능역 출·퇴근 직장인 편의를 위한 1시간 일찍 열고, 2시간 늦게 닫는 탄력적인 도서관 운영

* 가능역 1일 평균 이용 시민 수 : 16,000여명 (2019년 9월 기준)

- 도서관 운영시간외 무인도서 반납시스템 및 스마트 도서관을 통한 편의제공

☐ 가능역사 주변 치안강화로 슬럼화 해소

- 가재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가능동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협의회,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등의 협조를 통한 상시 순찰활동 강화
 - * 취약시간대 집중순찰 : 무료급식 제공시간, 야간시간(19~20시) 등

③ 상생하는 복지 공동체 공간 창출

☐ 「사랑의 119 한술나눔」 무료급식 행사시 북 카페 개방

- 기존 가능역사 하부공간(야외)에서 진행하던 **무료급식행사**에 북카페를 개방하여 **쾌적한 환경의 급식공간 제공**
 - * 사랑의 119 한술나눔 행사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11:00~14:00

☐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무료강좌 운영

- 문화·교육비용의 지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위하여 양질의 무료강좌(어학, 여가, 건강 등) 를 운영**하여 차별받지 않을 배움의 권리 제공

④ 도서관 자료의 공동 보존서고 역할 수행

☐ 3개 공공도서관 · 15개 공립 작은도서관 서고 공간 확보

- 도서관 자료중 발행년이 10년 이상 지나고 이용 빈도가 적은 도서 일부를 보존서고로 이관하여 소장 공간 부족문제 해결
 - * 2019년 9월 현재 도서관 소장도서 : 754,017권(비도서 35,259점 포함)

☐ 공동 보존서고 소장 공간 극대화를 위한 폐가제 운영

-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는 이동 공간 최소화를 통한 밀집배가 구성으로 소장 공간 극대화(장서 15만여권 보관가능)
- 홈페이지 도서검색을 통해 보존도서 대출을 원하는 이용자는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한 도서대출 서비스 제공
- 가재울도서관 2층을 보존서고로 활용, 방음 공간 확보로 소음문제 해소

IV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역사 하부공간 부지(국유재산) 임차로 토지매입비용 절감

- ▶ 가능권역 주변 토지매입비(대지) 3.3㎡당 1,200만원
⇒ 가재울도서관 규모(1,094㎡) 토지 매입시 **약 39억원 예상**
- ▶ 가재울도서관 부지(철도 하부) 국유재산(토지) 임차로 시설비 절감
⇒ **임차비 연 1,200만원 소요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예산 99% 절감**

○ 기초생활SOC 공동도서관 시설 확충비용 절감

- ▶ 공공도서관 신축비용 3.3㎡당 850만원
⇒ 가재울도서관 규모 연면적 **1,904㎡ (1·2층)** 신축시 **약 49억원 예상**
- ▶ 역사하부 활용한 가재울도서관 건축 및 가구 등 **총 19억원 소요**
⇒ **신축비용 대비 약 60% (30억원) 시설비 예산절감**

【 도서관 조성관련 사진 : 붙임 】

○ 주요 추진성과

① 가능 지역(5개동)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률 증가**

기존 가능권역 (2017년)			현재 가능권역(2018 ~ 현재)			증가율
작은도서관 5개소			가재울도서관			
인구수	회원수	인구수대비 가입률	인구수	회원수	인구수 대비 가입률	
117,912	276	0.23%	121,573	1,630	1.34%	590%

※ 가능지역 최초 공공도서관 조성으로 신규 회원 가입율 **590%** 증가

② 「가재울 공동체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

☞ 보조인력 2명 무기계약 채용

③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경제적 혜택 제공 및 이용가치 발생

-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도서, 신문, 잡지, 디지털 자료 등)의 무료 이용에 따라 가능지역 1가구당 평균 75,000원의 경제적 혜택을 통한 지출 절약

☞ 도서구입 비용 절약 산출근거(2019년 기준)

1. 가능지역(5개동) 세대수 : 58,369세대
2. 가능지역(5개동) 세대 당 평균 인구수 : 2명
3. 연간 도서 이용 권수 : 1,117,466권
4. 시민 1인당 도서 이용권수 : 2.5권 (시 전체 인구수 : 451,846명)
5. 시민 1인당 도서구입 지출 비용 : 2.5권 × 15,000원(1권당 평균 가격) = 37,500원
6. 가능지역 세대 당 평균 도서 이용 권수 : 2명 × 2.5권 = 5권
7. 세대 당 평균 도서구입 지출 비용 : 5권 × 15,000원(1권당 평균 가격) = 75,000원
8. 가능지역(5개동) 전체 세대의 도서구입 지출 비용 : 4,377,675천원

- 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기관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연령별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가능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이용가치가 연간 156,586천원 발생

☞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을 위한 경제적 이용가치 산출근거(2019년 기준)

1. 가능지역(5개동) 세대수 및 인구수 : 58,369세대 / 121,573명
2. 1 강좌당 평균 수강금액(주민자치센터) : 30,000원
3. 연간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자 수 : 19,400명
4. 연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출 비용 : 582,000천원(30,000원 × 19,400명)
5. 시민 1인당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출 비용 : 1,288원(인구수 : 451,846명)
6. 가능지역(5개동)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가치 : 156,586천원

○ 향후 추진목표

- 가능 지역(5개동)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률 증가

현재 가입률			향후 목표 가입률		
가능 지역(5개동) / 2019.9월 기준			연차별 인구수 대비 회원 가입률		
인구수	회원 수	인구수 대비 가입률	2020년	2021년	2022년
121,573명	1,630명	1.34%	2%(2,431명)	5%(6,078명)	7%(8,510명)

- 지역주민 1인당 연간 평균 도서 이용 증가

현재 이용권수			향후 목표 이용권수		
가능 지역(5개동) / 2015년 기준			연차별 1인당 평균 도서 이용 권수		
인구수	도서 이용 권수	연간 1인당 평균 도서 이용 권수	2020년	2021년	2022년
121,573명	93,028권	0.76권	2권	3권	5권

○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내용

- 각 지자체별 역사 하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재생과 연계한 기초생활SOC 사업을 진행하여 도시를 변화시키고 살기 좋은 삶을 최초로 조성한 사례임

⇒ 기초생활SOC 사업 추진을 위한 청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에 접근성이 용이한 역사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사례로 파급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됨

※ 벤치마킹 시군 : 안산 고잔역 하부 청년창업공간 station-G 조성(2019.7.30.개소)

- 철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철도시설공사에서도 역사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기초생활SOC 사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음

< 가재울도서관 대표 소개 사례 >

블로그 소개 <https://blog.naver.com/dahalife/221178653210>

국립중앙도서관 소개 <https://blog.naver.com/todayslibrary/221505241636>

도시재생으로 재해석된 기초생활SOC 가재울도서관 조성사례

구분	사진	사진
공사 전 ^ 가 능 역 환 경 v		

구분	사진	사진
기 초 공 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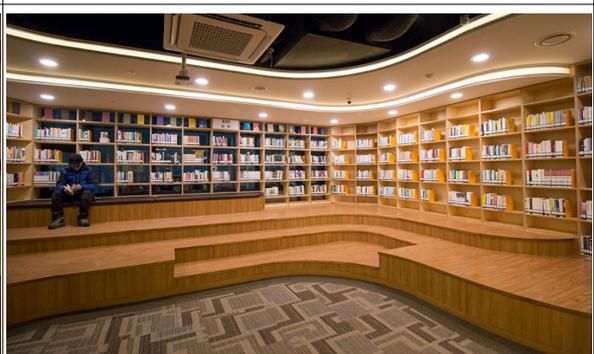
구분	사진	사진
1층 및 2층 내 부 서 가 및 가 구 제 작		

구분

사진

사진

교육장
조성
도서배가



우 수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조성 및 운영 '생활SOC 지역참여 우수사례'
수상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승주군청을 리모델링하여 역사성, 상징성을 가미하고 지역민의 소통과 다양한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욕구 충족 ○ 문화재생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원도심 활성화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주민 합동워크숍 개최 : `16. 11. 4. ○ 지역 예술인(문화도시협의체) 회의 : `17. 2. 21. ○ 공간 활용 주민 설문조사(190명) : `17. 3. 14 ~ 3. 16. ○ 공간 구성 설계 및 내외부 리모델링 : `17. 3 ~ `18. 5. ○ 명칭 공모 및 선정 : `17. 5. 16 ~ 7. 7. ○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개관 : `18. 6. 5. 	
지역(주민)참여 특징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구성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및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16~'17년간 6차례 주민.전문가.단체(시민,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도시협의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등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시민 및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190명) 대상 공간 활용 의견 수렴 반영 ○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한 공간 구성으로 조성사업 시행 	
추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및 이용객 현황 : 총 누계 67,131명('18.6~'19.9월 현재) ○ 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 58개 강좌 / 672회 / 12,254명('18.6~'19.9월 현재) ○ 생활문화센터 세입수입 실적 : 26,472천원('19.3월~'19.10월 현재) ○ 도시재생선도구역에 위치하여 문화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기여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시 생태생활문화 거점 플랫폼 조성 ○ 창작예술촌과 통합 관리 운영 ○ 주민주도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조성 및 운영

기관명 (단체명)	전라남도 순천시	작성자	직위(직급) : 지방행정7급 성명 : 서 상 범 (전화 : 061-749-3039)
--------------	----------	-----	--

I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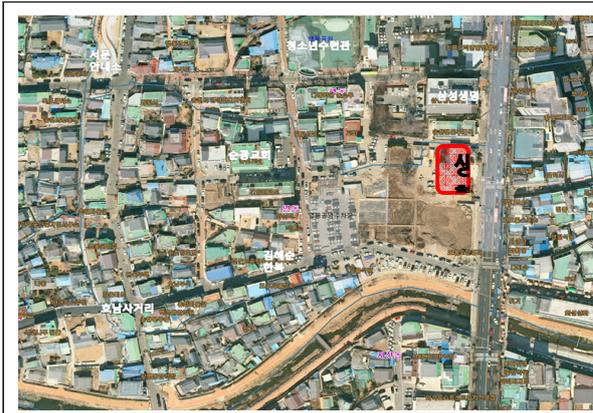
- 사업명(시설명) :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 위 치 : 순천시 중앙로 95 (영동1번지)
- 사업기간 : 2017. 1. ~ 2018. 5.
- 사 업 비 : 2,800백만원(국 840 / 시군구 1,960) * 재원구분 표시
- 시설규모 및 주요시설
 - 면적(연면적) : 1,473㎡
 - 주요시설

층 별	공간 구성	면 적	비고
합 계		1,473.3㎡	
지하	음악연습실(3)	149.78㎡	
1층	전시실, 소규모 공연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469.65㎡	
2층	청년센터(방송실, 창업공간, 문화공연장, 세미나실 등)	469.65㎡	
3층	녹음실, 학습실, 동아리실, 다목적 연습실	384.22㎡	

- 운영 프로그램
 - 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 ‘만날강좌’ : 15개 강좌, 분기별 운영
 - 공간 대관 : 정기·수시 대관(프로그램 운영 외 시간) / 유료 운영('19)

《 시설운영 현황 》

- 운영방식 : 민간위탁(1년)
- 운영주체 : (주)엘리스 / 디투문화공동체
- 운영인력 : 5명
- 연간 운영비 : 3억원
 - ※ 운영비 조달방법 : 시예산 부담
- 시설이용 : 46,593명(2019.9월말 현재) * 1일 평균 : 173명



위 치 도



시설사진

《 지역 일반현황 》

- ◆ 행정구역 및 면적 : 순천시 향동
- ◆ 인 구 수 : 1,923세대, 3,849명(남 1,904 / 여 1,945)
- ◆ 지역특성 및 여건
 - 순천 중심시가지(중앙로)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며 과거 순천부읍성의 문화광장에 위치하고 있음
 - 문화의거리(기존예술인)⇔패션거리(학생, 청년예술인)의 세대간 교류 거점 지역임
 - 대로(30m)와 접해 있는 일반상업지역이며 문화시설 지구임

I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지역문화예술인 및 청년 등 전시, 연출, 연습 공간 확보 요구
 -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여가 인프라 취약
-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대상지로 순천 원도심 재생의 중심이 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로 중앙동에서 향동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공간으로 조성
- 구)승주군청 존치 시 역사성, 상징성 활용(시민 공감)
 -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 지하상가, 중앙시장 연계 활용 용이
 - 오래된 공공청사로 보존 및 활용시 도시재생 상징 건물 활용
 - 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 내부 공간 협소 문제에 대한 해결

□ 추진경과

- 활용방안 결정(구, 승주군청 존치 리모델링) : ' 14. 4. 4
 - ↳ 순천 역사기록관, 복합문화공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원화 등
 - ↳ ' 13. 6.14(집중검토회의) / ' 14. 1.14, ' 14. 2. 7 (시민토론회)
- 구, 승주군청 부지 및 건물 매입(교보생명→순천시) : ' 13. 4.23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제2014-43호 / 철거 및 역사관 신축) : ' 14.11.12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제2052호 / 철거 후 2층 한옥역사관 신축)
 - ↳ (권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
-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 ' 15. 3.16 ~ ' 16.11. 4
 - 외부 전문가 등 자문(' 15. 3.16) / 구,승주군청 존치
 - 대학생 건축설계 아이디어 발표회(' 15. 4.30) / 모던 건축물, 청년문화
 - 설문조사(' 15. 4.10 ~ 30 / 7,463명) / 한옥보다 현대적 건축물
 - 역사문화자원 시민포럼(' 15.12.18 / 100명) / 국제공모(상징 건축물)
 - 향동 원주민, 전문가 건물 존치 이의 제기(' 16. 7월)
 - 구, 승주군청 존치여부 내부 토론 및 주민 회의(' 16. 8월 ~ 9.24)
 - 부읍성 공간 활용 전문가 및 주민 공청회(' 16.11. 4)
 - ↳ (의견) 구, 승주군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본 건물 일부 보존
- 2017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응모 : ' 16. 5.22.
- 제2차 주민 합동워크숍 개최 : ' 16.11. 4.
- 지역 예술인(문화도시협의체) 회의 : ' 17. 2.21.
- 시설물 통합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 : ' 17. 2.22~ 8.20.
- 공간 활용 주민 설문조사(190명) : ' 17. 3.14~ 3.16
- 공간 구성 설계 및 내·외부 리모델링 : ' 17. 3 ~ 18. 5월
- 명칭 공모 : ' 17. 5.16 ~ 6.21
- 명칭 선정(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 : ' 17. 7. 7.
- 창작예술촌(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용역 공모·선정 : ' 18. 1 ~ 3월
- 생활문화센터 공간 및 시설·장비 관련 전문가 자문 : ' 18. 4월
-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관리운영 계획 수립 : ' 18. 5. 9.
- 생활문화센터 열림식 개최 : ' 18. 6. 5.

Ⅲ 추진내용

○ 시민과 함께 계획 수립

- 계획부터 조성, 운영까지 시민, 전문가, 행정이 결합하여 함께 추진
- 창작예술촌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획해요’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역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수행
- 오픈테이블 23개, 제안 126개, 참여인원 169명

○ 소통의 결과(주민간 갈등 해결 및 협력)

- 조선시대 순천도호부 관아 자리로 일제강점기에는 순천군청사, 70~80년대에는 승주군청으로 활용되었던 현 영동1번지 건물을 존치 또는 철거하자는 의견을 두고 주민 간 갈등대립
- 시민토론회(2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6회), 주민합동워크숍 등의 과정을 2014년부터 3년간 총11회의 토론 및 대화 진행, 역사성·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건물 일부 보전 결정

○ 리모델링

- 전문가 컨설팅(’ 18. 4월 / 2회) : 이용자 입장에서의 공간 활용 및 시설, 장비, 운영물품 등에 관한 현장자문 실시(음악, 댄스무용, 음향, 예술감독 등)

○ 시민이 지어준 이름으로 재탄생

- 건물 명칭은 시민공모를 통해 순천의 중심기능을 수행했던 건물의 역사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동1번지’ 로 결정

○ 공간 구성

- 지역예술인 회의(’ 17. 2월), 주민 의견수렴(’ 17.3월), 분야별 전문가 자문(’ 17. 4월)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 구성 및 활용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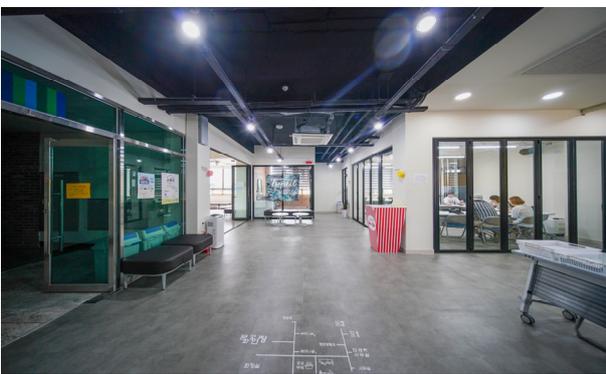
【 활동사진 】



소규모공연장(1층)



전 시 실(1층)



청년센터(2층)



음악연습실 3개실(지하)



다목적연습실(3층)



학습실(3층)



동아리실(3층)



녹음실(3층)

IV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추진성과

○ 방문객 및 이용객 현황 : 총 누계 67,131명 ('18. 6월~'19.9월말 현재)

년도	계	전시실	소규모 공연장	음악 연습실	동아리실	학습실	녹음실	다목적 연습실
계	2,621회 67,131명	45회 31,839명	531회 15,624명	972회 5,099명	246회 3,126	421회 5,697명	186회 1,035명	859회 14,679명
2018.	844회 20,538명	22회 15,250명	206회 4,722명	442회 1,612명	133회 1,279명	221회 2,577명	86회 224명	373회 4,842명
2019.9	1,777회 46,593명	23회 16,589명	325회 10,902명	530회 3,487명	113회 1,847명	200회 3,120명	100회 811명	486회 9,837명

○ 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18. 6월 ~ '19. 9월말 현재)

- 2018년 : 28개 강좌 / 총312회 / 5,894명
- 2019년 : 30개 강좌 / 총360회 / 6,360명

○ 생활문화센터 세외수입 현황('19. 3월 ~ '19. 10월 현재)

합 계	만날강좌 수강료	공간 대관료	비 고
26,472,000원	17,920,000원	8,552,000원	

○ 문화재생 플랫폼 영동1번지

- 시민,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며, 원도심의 창작예술촌 5개소, 문화의 거리 100여개의 공방작업실과 연계 문화종합센터 역할 수행

○ 원도심 축제 메인 거점

- 순천시 대표축제 + 문화의거리 축제 + 전남 레지던시 페스티벌
⇒ 문화예술 + 시민소통 창구 <원도심 축제 메인 거점 역할>

○ 공모사업을 통한 자생적 지속가능성 : 6건 247,500천원

□ 향후계획

○ 순천시 생태생활문화 거점 플랫폼 조성

-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참여형 생태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 프로슈머 지속 양성

○ 창작예술촌과 통합 관리 운영

- 순천 창작예술촌(거점 창작스튜디오, 장안창작마당)과 연계, 공간별 기능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통합 관리·운영 실행

○ 주민주도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 순천시 문화재단의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주민역량강화
- 지역 전문가와 주민 협업시스템 구축
- 궁극적으로 주민을 문화매개자로 양성하여 주민주도 자율운영 실현

장 려 생활속(SOC) 행복속속(SOC) 도서관, 활용도는 UP, 예산은 DOWN하다!
'생활SOC 운영비 절감 우수사례'

수상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추진 배경

- 증평군의 특징과 약점
 - (특징) 전국 최소인 1읍·1면의 농촌으로 인구의 94%가 읍 중심지에 집중된 콤팩트 시티의 전형
 - (여건) 증평읍을 중심으로 괴산군 청안·사면, 청주시 북이면, 진천군 초평면, 음성군 원남면이 동일생활권 형성
 - (최대약점) 다른 단체보다 10년 늦은 출범으로 교육·문화인프라 부족 및 낙후도 심화
- 생활SOC복합화 시설인 증평군립도서관 건립 추진배경
 - 교육·문화 인프라 낙후의 약점 극복 필요성 제기에 따라 증평군립도서관 건립 추진
 - 도서관 건립 시 콤팩트시티, 생활권 특징, 시설운영 및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3대 Key-Word로 부서·지역 협치를 통한 ①복합화(수직복합화) ②타운화(수평복합화) ③연계화(지역복합화) 설정
- 단기적이고 미시적 전략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시설의 복합화 추진

추진 내용(또는 추진경과)

- 증평군립도서관 건립 토지매입(2012년) : 도서관 부지(3,020㎡) + 복합시설용지(16,523㎡)
- 생활 SOC 수직복합화 시설인 증평군립도서관 개관 ('증평' 지명 탄생 100주년) : 2014. 4. 1.

증평읍 광장로 37 / 연면적 : 2,917㎡ / 103억원 (국비 18, 도비 35, 군비 50)

- 도서관, 북카페, 전시공간, 평생학습실, 영화관, 공연장, 천문대, 돌봄기능을 가진 수직 복합화 시설
- 태양광 발전 및 빗물 재활용 에너지 절감형 건축(친환경 녹색도서관 인증) : 56KW / 50톤
- 증평군립도서관 부지 내 생활SOC 수평복합화 시설인 문학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건립 중) : 2018. 2. ~ 2019. 11. / 45억원 (국비 18, 도비 13.5, 군비13.5)
 - 청소년문화의 집(실시설계 중) : 2018. 10. ~ 2020. 12. / 37.5억원 (국30, 군7.5)



점 - 도서관의 복합공간화	선 - 문화시설의 타운화	면 - 시설 활용의 연계화
수직복합화로 행복 Up	타운화(수평복합화)로 예산 Down	인근 시·군 개방(지역복합화) 활용도 UP
농촌형 도서관 하나로 영화관(다목적 홀), 평생학습관(3층 공간), 천문대(옥상공간), 돌봄교실(어린이자료실), 전시관(복도)으로 활용하는 등 생활SOC 수직형 복합문화 공간화	도서관 건립 당시 나와 협약을 통해 도서관 부지 외에 송산택지개발 복합 시설 용지 (16,523㎡) 전체를 5년 분할 매입하고 김득신 문학관·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타운화(수평복합화)로 예산절감	2014.4.1. 건립한 도서관을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인근 사군에 개방하고 농촌5촌-이웃5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설 공동활용으로 시설활용도 및 주민 행복도 향상

추진 성과

① 정량적 성과 I ----- 복합화를 통한 예산절감

구분		규모	절감액
부지	부지매입	- 부지매입 : 16,523㎡ × 659,590원 = 109,000백만원 - 현재가격 : 개별지가 상승율 14.4% 적용시 = 125,000백만원	1,600백만원
	부지 공동 활용	- 주차장 공동조성 활용 : 1,000㎡ × 659,590원 = 659백만원	659백만원
시설 조성	다목적실 공동 조성 (공연장+영화관)	- 공사비 : 238㎡ × 3,300,000원 = 785,000백만원 ※ 작은영화관 평균 공사원가(원/㎡) ≒ 3,300,000원	785백만원
	프로그램실 공동 조성 (도서관+평생학습)	- 공사비 : 348㎡ × 3,520,000원 = 1,225백만원 ※ 증평군립도서관 조성 원가(원/㎡) ≒ 3,520,000원	1,225백만원
	공용면적 공동 조성 (휴게실+전시실)	- 공사비 : 300㎡ × 3,520,000원 = 1,056백만원	1,056백만원
	전기시설 공동 활용 (도서관+문학관)	- 공사비 : 87㎡ × 3,520,000원 = 306백만원 - 변전설비(400kw) = 150백만원	456백만원
시설 운영	복합시설 운영 인건비	- 시설운영인력 : 40,000,000원 × 4명 × 5년 = 800백만원 - 청소인력 : 24,000,000원 × 3명 × 5년 = 360백만원 - 방호인력 : 34,000,000원 × 2명 × 5년 = 340백만원	1,500백만원
	통합안내 데스크 운영	- 어린이/유아자료실 : 40,000,000원 × 1명 × 5년 = 200백만원 - 종합/디지털자료실 : 40,000,000원 × 1명 × 5년 = 200백만원	400백만원
	시설관리 운영비	- 공공운영비(전기상하수도) : 118백만원 × 5년 = 590백만원 - 사무관리비(행정 소모품비) : 57백만원 × 5년 = 285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비 : 62백만원 × 5년 = 310백만원	1,185백만원
	기타비용	- 태양광 : 56kWh × 4시간 × 30일 × 12개월 × 966원 × 5년 = 38백만원 - 빗물재활용 : 50ton × 3회 × 1,350원 × 5년 = 1백만원	39백만원
계			8,905백만원

② 정량적 성과 II

○ 지역의 대표적 생활SOC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 : 1,484,948명 방문(5년 누적 방문객 수) / 군민 1인당 38.9명

③ 정성적 성과

- 복합화를 통한 방문객 만족도 향상 : 200부 배부 → 회수 88부(46.5%) → 만족(88%)
- 생활 SOC 접근성 획기적 개선 : 기초생활 SOC접근성 전국 군 단위 1위(국토연구원)
- 벤치마킹 및 다양한 매체 소개 : 76회 1,175명 견학 / 방송 및 청와대 홈페이지 소개
- 생활SOC 복합화 모델 사례발표 : 발표(2회), 중앙가이드라인 소개, 책자 소개(3회)
- 생활SOC 복합화로 정주여건 개선 : 행복도 및 발전도 개선, 합계 출산율 및 젊은 도시로의 변화

시사점(성공요인 분석)

-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화 : 도서관+평생학습관+영화관+전시관+천문대+돌봄교실+카페 기능
- 사업간 연계와 추진 주체 간 협업 : 중앙(문체부,농식품부,균형위)+충북도+증평군(다부처 협업)
- 장기적 관점의 접근 : 수평복합화 종합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단계별 사업 추진(2012~현재)
- 설득의 과정 : 의회 등의 시설 분산배치에 대한 유혹과 저항을 주민의견 반영으로 극복

향후계획

- 수평복합화의 지속화(문화타운) : 증평군립도서관 + (독서왕 김득신문학관) + (청소년 문화의 집)
- 생활SOC 복합화 시즌II(보건복지타운) : (기존) 청소년수련관 + 노인전문요양원 +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 보건소 → (추가) 생활SOC 복합화 가족센터+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2020년 확정)

생활속(SOC), 행복속속(SOC) 도서관, 활용도는 UP, 예산은 DOWN 하다!

기관명 (단체명)	충청북도 증평군	작성자	직위(직급) : 행정7급
			성명 : 박혜경(043-835-4682)

I 지역현황과 특징

□ 증평군의 일반현황

- 행정구역 및 면적 : 충청북도 증평군(1읍·1면), 면적(81.84km²)
- 인구수 및 세대수 : 37,469명 / 17,176세대, (남 19,375명, 여 18,094명)

□ 증평군의 특징과 여건

- 증평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울릉군 다음으로 작은 면적(81.84km²), 군 단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 밀도(458명), 후발 자치단체(2003년 출범)의 특징
 - 특히 전국 최소인 1읍1면의 행정체제와 인구의 94%가 읍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의 전형적 형태 인근 4개 시군 5개 읍면이 증평읍을 중심으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여건
 - 증평군은 작은 면적, 높은 인구밀도, 자원이 전무했지만 세계 최고의 국가 경쟁력과 혁신성장을 이룩한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를 지향하는 증가포르(증평+싱가포르) 시책 추진으로 지역 혁신 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음

증가포르(Jeunggapore) 실현

[증평 + 싱가포르]



JeungPyong

- 면 적 : 군 단위 81위
- 인구밀도 : 군 단위 3위
- 녹색공원의도시, **학습강군**
- 높은 자치경쟁력
- 청렴도 우수단체
- 2003년 과산군에서분리(8.30일)
- 군기가 3번 바뀐 곳
- **지역안전** 지수(2위~5위)



Singapore

- 면 적 : 세계 192위
- 인구밀도 : 세계 두 번째
- 녹색공원의 도시, 교육 강국
- 국가경쟁력 : 1~3위
- 세계 최고의 청렴도, 친절도
-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8.9일)
- 국가가 3번 바뀐 나라
- 가장안전한나라5년연속1위

- 특히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인 증평군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확충함으로써 평균연령이 40.9세인 전국 82개 군 단위에서 5번째로 젊은 군, 합계 출산율은 1.669명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멸우려가 경고 되는 시점에 농촌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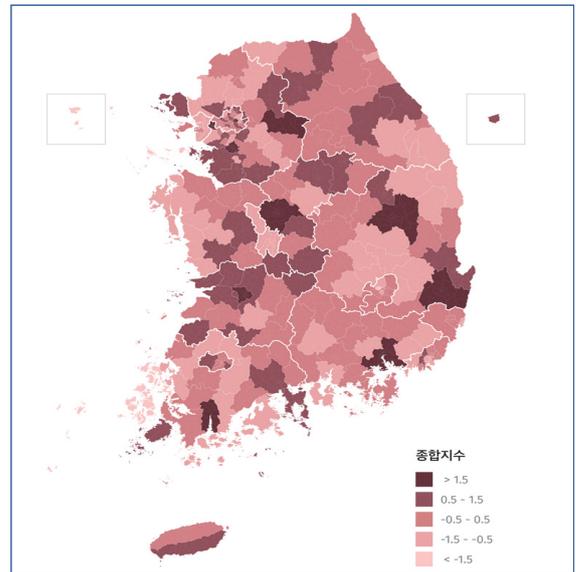
II 추진배경-----생활SOC형 도서관 건립 배경

- 2010년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0학년도 수능 분석결과 증평군은 2009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 최하위 기록
 - 지역의 교육 관련 SOC 등 정주여건 취약으로 인구 유출 심화 및 지역 학생들의 외지 유출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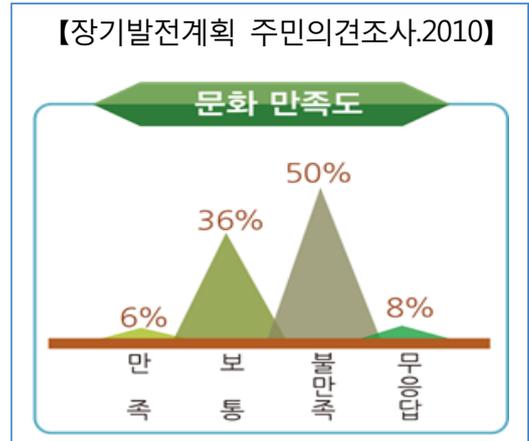
순위	시도	시군구	지역평균	학교	점수
226	전북	완주군	250.51	세인	300.17
227	경북	영덕군	249.21	영덕여	259.06
228	경남	하동군	247.35	하동여	260.50
229	전남	무안군	246.39	백제	272.92
230	충남	청양군	234.90	청양정산	239.58
231	인천	옹진군	226.42	백령종합	228.94
232	충북	증평군	225.51	형석	230.61

○ 또한 다른 자치단체보다 10년이 늦은 2003년 출범한 후발 자치 단체의 태생적 한계로 행정 인프라 확충 중심의 지역개발로 생활SOC 문화 인프라 및 문화 프로그램 부족 심화로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화 불만족 팽배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라 22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 정책,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 향유 등 4대 분야 27개의 세부지표를 적용하여 2016년 6월 28일 발표한 '지역문화실태 조사' 결과, 증평균은 종합지수에서 전국 평균이하인 -0.5~-1.5단체에 속하는 등 문화 낙후성 및 문화 향유 소외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요구 및 필요성 제기



구분	지역문화지수 상위 10개 지역<문체부 발표>
시	전주시, 수원시, 창원시, 부천시, 안동시, 청주시, 경주시, 익산시, 고양시, 구리시
군	강진군, 양평군, 진도군, 무주군, 완주군, 보은군, 울릉군, 양구군, 순창군, 영동군
구	성동구, 사상구, 서울 중구, 노원구, 동작구, 부산 서구, 종로구, 서울 강동구, 부산 북구, 광주 동구



○ 이러한 지역의 문화 낙후성 탈피를 위해 2012년부터 증평균립도서관 건립을 계획하면서, LH와 협약을 통해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3,020㎡)와 함께 송산리 816번지 일원 복합시설용지 전체(16,523㎡)를 매입해 연차적으로 수평적 문화타운으로 조성 추진



- 이를 통해 증평균립도서관 건립·개관(수직적 생활 SOC 복합화 시설) →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 건립(2019. 11월 개관 예정)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2020. 12월 준공예정) 등 시설 집중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수평적 생활 SOC 타운으로 조성 중

III 사업개요-----생활SOC복합화 도서관 건립 개요

- 생활SOC복합화 시설명 : 증평군립도서관
- 위 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
- 개 관 일 : 2014년 4월 1일 ('증평' 지명탄생 100년이 되는 날)
- 사 업 비 : 103백만원 (국비 18, 도비 35, 군비 50) / 2013. 3. 29. ~ 2014. 3. 24.
- 시설규모 및 주요시설 : 연면적 3,032.560㎡(옥상면적 제외)

층별	자료실 및 열람실명	면적(㎡)	소장 자료 및 운영 내역
지하	자원 봉사자 휴게실	31.50	자원 봉사자 휴게실
	보존서고	114.4	비개가식
1층	유아,어린이,다문화 자료실	395.42	영·유아, 어린이, 다문화 자료실, 돌봄기능
	북카페	95.98	커뮤니티 공간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시홀	101.09	전시공간 및 자율 책 교환 책책빵빵 서가
2층	종합자료실,디지털자료실	511.69	- 종합자료실 : 개가식 대출 자료실 - 디지털 자료실 : 정보검색 및 DVD룸
	사무실	141.04	창의 공작실 및 사무실
3층	다목적홀	238.42	영화 상영 및 행사 진행
	평생학습실(5개실)	261.41	교양 강좌 및 문화 행사
	일반열람실	195.06	일반 69석(장애우석 2석 포함)
옥상	옥상하늘정원	866.10	옥상 영화 상영 및 공연, 한옥 문해교실
기타		946.55	복도, 화장실 등

《 시설운영 현황 》

-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 지자체 직접운영 / 증평군
- 운영인력 : 15명 (정규직 10명, 비정규직 5명)
- 연간 운영비 : 743,376천원 *운영비 조달방법 : 국·도비 + 군비
- 시설이용 : 1,484,948명 (2014 .4. 1. 개관이후 ~ 2019. 9월말 누적 이용객 수)
- 1일 평균 : 975명, 군민 1인당 방문횟수 : 38.9명



IV 추진경과-----생활SOC 복합화 도서관 건립 과정

① 도서관 수직복합화 - 타운화(수평복합화) - 연계화(지역복합화) 추진 배경

○ 2014년 4월 1일 '증평'지명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관한 증평군립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증평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재정 절감을 위해 부서·지역 간 협치를 통한 ①복합화 ②타운화 ③연계화를 3대 키워드(Key-Word)로 설정

- 도서관 건립·운영만을 생각하는 단기적(2013년~2014년)전략이 아니라 타 시설과의 타운화 및 생활권이 동일한 타 시·군 지역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중·장기적(2012년 ~ 2019년)이고 거시적 접근을 통해 도서관의 수직복합화, 도서관과 연결된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연차별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p>점 - 도서관의 복합공간화</p>	<p>선 - 문화시설의 타운화</p>	<p>면 - 시설 활용의 연계화</p>
<p>수직복합화로 행복 Up</p>	<p>타운화(수평복합화)로 예산 Down</p>	<p>인근 시·군 개방(지역복합화) 활용도 UP</p>
<p>농촌형 도서관 하나로 영화관(다목적홀), 평생학습관(3층 공간), 천문대(옥상공간), 돌봄교실(어린이자료실), 전시관(복도)으로 활용하는 등 생활SOC 수직형 복합문화 공간화</p>	<p>도서관 건립 당시 LH와 협약을 통해 도서관 부지 외에 송산택지개발 복합 시설 용지 (16,523㎡) 전체를 5년 분할 매입하고 김득신 문학관·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타운화(수평복합화)로 예산절감</p>	<p>2014.4.1. 건립한 도서관을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인근 사군에 개방하고 농촌5-이웃5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설 공동활용으로 시설활용도 및 주민 행복도 향상</p>

② 타운화(수평복합화) 계획과 부지매입 단계

○ 증평군은 2012년 증평군립도서관 건립을 계획하면서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서관 부지(2,618㎡)를 지적 분할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라 택지 개발 주체인 LH와 협약을 통해 109억원을 투자해 복합시설용지 전체(16,523㎡)를 5년(2012년~2016년) 9회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입

- 이를 통해 2014년 증평군립도서관 건립·개관 →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 건립 (2019. 11. 개관 예정)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2020년 준공예정) 등 연차적 수평 SOC시설 확충 도모를 통해 회의실, 주차장, 휴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공동 활용으로 예산은 절감하고 주민편의는 증대하는 성과 토대 구축

V 추진내용

① 생활SOC 도서관의 수직복합형 설계 및 운영-----점(點)

- 증평군립도서관 공간배치에 있어 1층에는 유아·어린이 자료실(돌봄 교실형 기능), 카페 및 넓은 복도(전시기능), 2층에는 디지털자료실 및 종합자료실(도서관 기능), 3층에는 5개실의 평생학습실(평생학습관 기능), 다목적홀(영화관 기능), 열람실(도서관 기능), 옥상은 하늘 정원(야외공연 및 야외영화관 등 문화기능) 등 복합 문화형 공간으로 배치하는 등 수직복합화 생활SOC모델로 설계

1층		2층		3층		옥상(하늘정원)
전시공간 북카페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평생학습실 열람실	영화관 공연장		전망대, 천문대, 공연장, 포토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도공간을 넓게 설계해 전시공간 활용 •커뮤니티 공간인 북카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도서관과 달리 자료실 운용시간을 20시까지 운용함으로써 돌봄 기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 개가식(開架式) 도서 열람과 정보 검색 기능 및 DVD 대여를 통한 가족 영화 감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별 5개 평생학습실, 유아교육실 및 총 71석 규모의 자유 열람실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7석 규모의 좌석을 갖춘 다목적홀로 영화관공연장 강연장학습실 공간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용지물의 옥상공간에 잔디광장, 공연무대, 태양광 패널 및 한옥서당 공간 조성
						
<p>대형신문 2019년 11월 14일</p> <p>증가포의 꿈, 도서관에서 답을 찾다 대한민국 100년일 맞은 북카페 문화공간</p> <p>증평군립도서관은 지난 11월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증평군립도서관 북카페'를 개관했다. 북카페는 도서관의 또 다른 공간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카페에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와 잡지를 비치했으며, 편안한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북카페는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p>		<p>충북월보 2019년 11월 14일</p> <p>증평군립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자리매김 개관 3년 10개월 만에 이용객수 100만명 돌파</p> <p>증평군립도서관이 지난 11월 개관 3년 10개월 만에 이용객수 100만명 돌파를 기록했다. 이는 개관 이래로 가장 빠른 기록이다. 증평군립도서관은 2016년 개관 이래로 꾸준한 성장을 이뤘다. 특히, 디지털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의 인기가 높으며,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p>		<p>충청신문 2019년 09월 27일 (금) 12면 지역</p> <p>증평군립도서관 복합화 우수성 재입증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서 '운영사례' 소개 큰 호응</p> <p>증평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25-27일)에서 증평군립도서관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밝혔다. 증평군립도서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운영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복합화 운영 사례와 디지털자료실 운영 노하우가 주목받았다. 증평군립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p>		

② 수평복합화로 문화 타운화-----선(線)

-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시 연접 부지를 통합 매입 후 1단계로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향후 연접부지(동북방향) 내 타 시설물 신축 및 건물간의 연결성을 감안(김득신 문학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타운화)한 설계 및 건축

토지매입단계	설계단계	시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산리 816 / 16,523㎡ 매입금액 : 10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 2016. / 9회 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층 통로 연결 (브리지)을 예측한 도서관 외관 설계 - 도서관(통로)→브리지→문학관 (예비통로)→청소년 문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접한 농협주차장과 도서관 주차장간 통로 연결 공동 활용(협약) 및 인근 공사장 연계 사토처리
		

③ 인근 지역과 공동활용, 생활SOC 지역복합화-----면(面)

○ 2014년 4월 1일 증평군립도서관을 개관하자 증평읍 인근 진천군 초평면 주민이 '새울행정민원'을 통해 <우측>과 같이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도서관 이용 불편해소 건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증평군립도서관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신청일자 : 2014.4.11. / 신청인 : 진천군 초평면 산촌길 41 윤 * 원 / 010 - **** - 1080



저는 주소지가 진천군 초평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황은 증평읍입니다. 실제로 진천보다 증평이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구요.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중학교도 증평여중을 다녔고, 생활용품 구입 등등 모든 생활을 증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학>
저의 집은 증평 IC가 전이고 저희 집에서 증평군립도서관까지는 아성교통 버스를 이용하면 1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소지인 진천군도서관을 가려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야합니다. 진천으로 가는 버스도 하루에 3대에밖에 없구요 그래서 증평군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자체가 되지 않아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중학>
그리고 제가 사는 곳 뿐 아니라 괴산군 청안면이나 사리면, 청원군 북이면 거주자들도 생활권에 증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분	세대수	인구수(명)
계	26,514	55,738
증평군	16,117	35,523
- 도	1,020	1,971
진천군	1,668	3,486
괴산군	1,886	3,376
- 사	1,501	2,767
음성군	1,782	3,328
청주시	2,540	5,287

○ 2019년 7월말 현재 10,174명의 도서관 회원 중 증평 지역 외 주민 721명(7.1%)에게도 회원증을 발급하고, 기타 영화 관람, 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결성, 북 페스티벌 협력 등 도서관 공동 활용 및 공유로 지역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인근 지역 도서관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간접적 예산 절감 효과 거양

구분	계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청주시	기타
2016년	7,065	6,657	67	8	26	175	132
2017년	8,128	7,799	76	11	30	212	178
2018년	9,222	8,834	93	12	37	246	234
2019년	10,174	9,453	105	18	43	291	264
비율	100%	92.9%			7.1%		

○ 특히 증평군립도서관은 '농촌5촌(村)의 이웃5촌(寸) 되기' 거점센터로, 5개 지역(청주시 북이면, 진천군 초평면, 괴산군 청안면·사리면, 음성군 원남면) 주민이 참여하는 농촌5촌(村)-이웃5촌(寸) 평생학습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간 생활권 공동체 의식이 공유되고, 경계를 초월한 협력으로 상생발전 및 지역 복합화 생활 SOC의 모델로 자리매김

구분	프로그램	등록인원(명)			연인원	비고
		계	증평주민	인근 지역 주민		
2015년	47개	522	482	40	4,414	행복생활권선도사업
2016년	41개	880	791	89	6,034	
2017년	31개	646	538	108	7,630	
2018년	18개	355	319	36	3,190	충북도 균형발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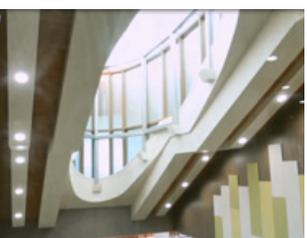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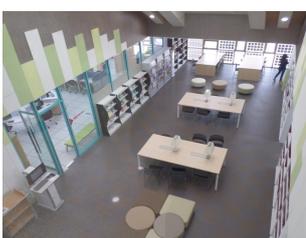
④ 태양광, 빗물 재활용 등 에너지 절감형 건축

○ 에너지 절감 운영을 위해 옥상에는 45kw, 전면 유리창에는 11kw규모의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40%내외의 전기를 충당하고, 지하공간에 50톤 규모의 빗물저장시설 설치(연간 3회 × 50톤 = 150톤)로 옥상 잔디, 분수대 등에 빗물을 재활용

구분	절감액(천원)	산출근거
태양광 발전	38,949	56kW/h × 4시간 × 30일 × 12개월 × 5년 = 403,200kw 403,200kw × 96.6원(kw당 단가) = 38,949,120원
빗물 재활용	810	50ton × 3회 × 4년 × 1,350원(수도요금) = 810,000원

		
		
유리창 태양광(45Kw)	옥상 태양광(11Kw)	지하 빗물 재활용(50톤)

- 이와 함께 2층 종합자료실 공간은 천정을 옥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자연 채광형 설계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녹색 도서관으로 인증

			<p>괴산증평자치신문</p> <p>자연친화적인 건물 이 도서관은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광특회계 예산 등 총사업비 100여억 원용 들어 3020㎡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17㎡ 규모로 신축됐다. 건물의 특징은 태양광 랜드마크, 외관을 특이하게 건축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자연친화적으로 건립됐다. 옥상과 건물 외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기를 충당하도록 했다. 도서관 외곽에 설치한 분수조차도 햇빛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물을 뿜어내는 태양광 분수다. 이곳의 물도 건물 내 빗물 저장시설에서 공급되도록 했다. 이번엔 채광설계도 잘 돼 있어 자연채광이 우수하다. 내부 분위기도 밝고 공간도 넓어 시각적인 효과도 영호하다.</p>
---	---	--	---

VI 추진성과

① 도서관 시설 복합화를 통한 예산의 획기적 절감-----정량적 성과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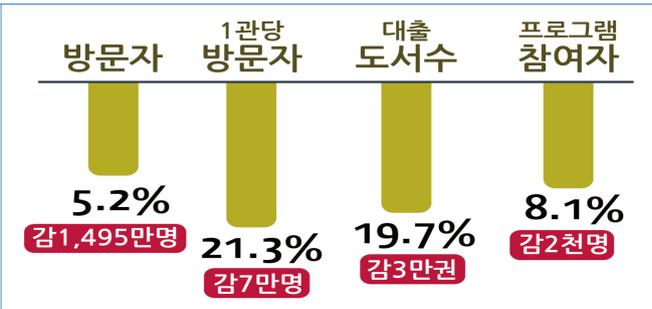
○ 증평군립도서관은 시설 복합화를 통해 시설 활용도를 크게 상승시켰을 뿐 아니라 직접적 예산 절감 66억 원, 토지매입비 등 간접적 예산절감 23억 원 등 총 89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와 함께 인근 지역과의 공동 활용으로 인근 지역의 도서관 건립 비용을 절감하는 간접적인 효과 거양

-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기능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고, 특히 시설 타운화와 운영의 연계화를 통해 예산 절감과 이용 효율성의 극대화

구 분		규 모	절감액
부지	부지매입	- 부지매입 : 16,523m ² × 659,590원 = 109,000백만원 - 현재가격 : 개별지가 상승율 14.4% 적용시 = 125,000백만원	1,600백만원
	부지 공동 활용	- 주차장 공동조성 활용 : 1,000m ² × 659,590원 = 659백만원	659백만원
시설 조성	다목적실 공동 조성 (공연장+영화관)	- 공사비 : 238m ² × 3,300,000원 = 785,000백만원 ※ 작은영화관 평균 공사원가(원/m ²) ≒ 3,300,000원	785백만원
	프로그램실 공동 조성 (도서관+평생학습)	- 공사비 : 348m ² × 3,520,000원 = 1,225백만원 ※ 증평군립도서관 조성 원가(원/m ²) ≒ 3,520,000원	1,225백만원
	공용면적 공동 조성 (휴게실+전시실)	- 공사비 : 300m ² × 3,520,000원 = 1,056백만원	1,056백만원
	전기시설 공동 활용 (도서관+문학관)	- 공사비 : 87m ² × 3,520,000원 = 306백만원 - 변전설비(400kw) = 150백만원	456백만원
시설 운영	복합시설 운영 인건비	- 시설운영인력 : 40,000,000원 × 4명 × 5년 = 800백만원 - 청소인력 : 24,000,000원 × 3명 × 5년 = 360백만원 - 방호인력 : 34,000,000원 × 2명 × 5년 = 340백만원	1,500백만원
	통합안내 데스크 운영	- 어린이/유아자료실 : 40,000,000원 × 1명 × 5년 = 200백만원 - 종합/디지털자료실 : 40,000,000원 × 1명 × 5년 = 200백만원	400백만원
	시설관리 운영비	- 공공운영비(전기상하수도) : 118백만원 × 5년 = 590백만원 - 사무관리비(행정 소모품비) : 57백만원 × 5년 = 285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비 : 62백만원 × 5년 = 310백만원	1,185백만원
	기타비용	- 태양광 : 56kWh × 4시간 × 30일 × 12개월 × 96.6원 × 5년 = 38백만원 - 빗물재활용 : 50ton × 3회 × 1,350원 × 5년 = 1백만원	39백만원
계			8,905백만원

② 지역의 대표적 생활SOC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 -----정량적 성과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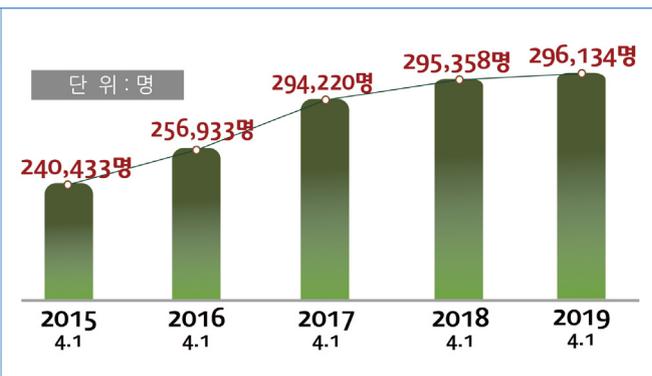
○ 2018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경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865관에서 1,042관으로 20%(177관) 증가한 반면, 공공도서관의 방문자 수는 1,495만 명, 1관당 방문자 수는 7만여 명, 대출 도서 수는 3만여 권,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천여 명이 각각 감소하는 등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이용횟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이에 반해 생활 SOC 복합형 공간으로 조성한 증평 군립도서관은 2019년 9월말 현재 방문객이 1,484,948명 (군민 1인당 약 39회 방문, 1일 평균 약 975명 이상 이용)이며, 연간 방문객 수는 개관 이후 1년간은 240,433명이던 것이, 최근 1년간은 296,134명으로 오히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회원수는 10,174명으로 전체 군민의 27.1%가 등록했으며, 206,858권 (군민 1인당 5.5권)의 자료가 대출되는 등 지역 생활 SOC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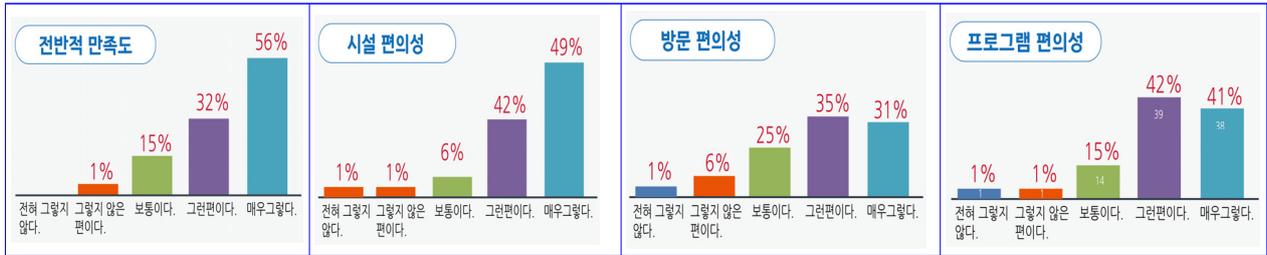


- 이는 증평군립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평생학습관, 전시관, 영화관, 천문대, 카페, 어린자료실 연장 운영을 통한 돌봄교실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 SOC 복합화 공간으로 조성 및 활용함으로써 도출된 성과이며, 도서관의 활성화로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여성 인턴, 문해학습 강사 등 연간 45명의 학습형 일자리 또한 창출



③ 복합화를 통한 방문객 만족도 향상 -----정성적 성과 I

- 2018년 기간 중 도서관 내에 설문서 200부를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그 결과 93명(응답율 46.5%)이 응답하여, 응답자의 88%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시설 편의성 91%, 방문 편의성 66%, 프로그램 편의성 83%의 만족도를 나타냄



④ 생활 SOC 접근성 향상 및 지역의 활력화 도모-----정성적 성과II

- 증평군은 증평군립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생활 SOC형 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2018년 10월 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생활 SOC 10분 내 이용 가능한가?' 연구 보고서에서, 종합점수 '6점 이상 ~ 8점 미만'으로 평가되어, 청주시 서원구·청원구·흥덕구와 함께 충청도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충청도에서 생활 SOC 접근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국 82개 군 단위에서도 부산시 기장군과 함께 생활 SOC 접근성 전국 군 단위 1위로 조사

국토이슈리포트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KRIHS ISSUE REPORT 2018년 10월 12일(제2호)

8대분야 : 보육, 교육, 응급의료, 복지, 문화, 교통

8점 이상~10점(79곳)

서울(25개구 전체), 부산(강서구·기장군 제외 14개구), 대구(남·달서·북·서·수성·중구), 인천(계양·남·남동·동·부평·서·연수구), 광주(남·서구), 대전(유성구), 울산(동·중구), 경기(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구리시, 부천시 소사·오정·원미구,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권선·영동·정안·팔달구, 안산시 상록구, 안양시 만안·동안구, 오산시, 용인시 기흥·수지구), 전남(목포시),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

6점 이상~8점 미만(27곳)

부산(강서구·기장군), 광주(광산·동·북구), 대전(대덕·서구), 울산(남·북구), 경기(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용인시 처인구, 의왕시, 의정부시), 충남(천안시 서북구), 충북(충청, 청주시 서원·청원·흥덕구), 전북(전주시 덕진·완산구), 경남(창원시 성산·의창·진해구)

충청신문

2018년 10월 19일 (금) 11A면 종합

증평군, 충북서 가장 살기 편한 도시

국토연구원 발표... 생활 SOC 접근성 종합점수 도내 1위

증평군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기초 생활 시설(생활 SOC) 접근성이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 교육, 응급의료, 복지, 문화, 교통 등의 시설을 말한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 '국토 이슈 리포트 제2호 기초 생활 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군이 청주시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와 함께 기초 생활 SOC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번 연구에서 접근성 종합 점수가 6점 이상·8점 미만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에서는 부산시 기장군과 함께 살기 좋은 삶의 조건을 모두 갖춘 가장 살기 편한 곳으로 평가됐다. 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 생활 SOC가 잘 갖춰진 곳을 살기 좋은 삶이라고 정의하고 전국 226개 지역에서는 군이 청주시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와 함께 기초 생활 SOC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500m 격자단위 인구분포도 ▲도로 이동거리 등을 분석해 거주지로부터 10분 내에 기초 생활 SOC 10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기초 생활 SOC 10가지 시설에는 ▲보육 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병원 ▲보건시설 ▲공공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교통시설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행복지수 도내 1·2위와 함께, 이번 생활 SOC 접근성 도내 1위 평가로 군이 살기 좋은 지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기초 생활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김경기 기자 jay004@dailycn.net

⑤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정성적 성과III

- 증평군립도서관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76회(기관)에 걸쳐 1,175명의 전국 도서관 관계자, 마을 만들기 관계자, 연수원 프로그램 관계자, 외국(말레이시아) 공무원 등이 도서관 프로그램 및 건축 설계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갈 만큼 전국 단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구분	주요 외부 벤치마킹 현황
충북도내	음성군(감곡도서관), 영동군(레인보우도서관), 옥천군(옥천군민도서관), 진천군(혁신도시), 청주시(금천도서관), 음성교육지원청(음성도서관), 제천교육지원청(제천도서관),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음성군(시설관리사업소), 보은군의회, 제천시 봉양읍(주민)
충북도외	여주시(세종도서관), 횡성군(횡성군립도서관), 성남시청,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의정부지식정보센터, 천안아산생활권, 하남시립도서관, 공주시, 세종시 장군면(주민), 계룡시, 당진시 면천면(주민), 봉화군수 외 봉화군 관계자, 동해시립도서관 등
외 국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수과정)

○ 또한 증평군립도서관의 생활 SOC형 복합문화공간화 사례는 2016. 09. 25. KBS-1TV '미래기획 2030(지역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2016. 11. 15. K-TV국민방송 '맞춤형서비스 정부 3.0(행복학습거점센터 도서관)' 및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도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2019. 04. 29.에는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이 도서관을 방문



6 생활SOC 복합화 모델로 전국에 사례발표

- 생활 SOC에 대한 개념 정립 단계였던 2019년 1월 10일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등 분야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한 '농촌형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이 증평군립도서관에서 개최
 -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생활 밀착형 SOC 추진 방향, 농촌건축학회의 생활 SOC 모델연구,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촌서비스 기준과 농촌 생활 SOC 확충 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농촌 생활 SOC와 스마트 빌리지 등에 대한 주제 발표
 - 이와 함께 완주군 비비정 마을의 신문화 공간 조성 및 농촌 웨딩 문화공간 조성 사례, 무주군의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내 목욕탕 설치 및 만나 작은 도서관 운영 사례와 증평군의 점·선·면 생활 SOC형 도서관! 삶의 질과 활용도 UP, 예산은 DOWN 사례 발표 이후 도서관 시설 견학 후 생활 SOC 특성화 사업의 하나로 생활 SOC 복합화 방안 중점토론



○ 이와 함께 중앙관계부처 합동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한 돌봄 플랫폼, 체육 플랫폼, 문화 플랫폼, 복합 플랫폼 등 4개 유형별 사례 중 문화 플랫폼 생활 SOC복합형 모델의 대표 사례로 증평군립도서관이 소개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19. 6. 12

관계부처합동

< 유형별 사례(참고) >

사 업 내 용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0	규모
돌봄 플랫폼		· 연면적 13,069㎡(지하3, 지상7)
	· 내용	· 김소희달나눔복지재단, 공달래어르신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달래 도서관, 강달, 공명주자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조성
체육 플랫폼		· 연면적 18,950㎡(지하1, 지상3)
	· 내용	·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자활센터,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된 복합시설 조성
문화 플랫폼		· 연면적 2,917㎡(지하1, 지상 3)
	· 내용	· 도서관(자활실, 열람실), 전시공부방, 다목적홀(작은 영화관, 평생학습실, 멀티극장(육상))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조성
복합 플랫폼		· 연면적 21,203㎡(지하1, 지상3)
	· 내용	· 생활의 집(공연장), 건물의 집(보건소, 만남의 집(사무실), 문화의 집(문화원, 장애인/청소년의 집,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아외공연장, 스포츠센터, 청산아트홀, 안상고물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 재원	· 총사업비 281억 원 (국비 5. 시비 94. 국비 222)
	· 재원	· 총사업비 430억 원 (국비 118. 토비 35. 국비 277)
	· 재원	· 총사업비 103억 원 (국비 18. 토비 86. 국비 49)
	· 재원	· 총사업비 310억 원 (국비 97. 토비 17. 국비 175. 기타 21)

○ 2019. 09. 25. ~ 09. 27.일 기간 전남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의 정책박람회의 '생활 SOC 복합화 추진방향-주민참여 활성화와 복합화시설 운영 개선방안' 특별세션II에서도 증평군립도서관 복합화 운영사례 발제 - 설계단계부터 복합문화공간형으로 구성돼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영화관, 학습관, 천문대, 전시관 등의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및 수직복합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연결되는 수평 복합화를 추진 사례 소개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선-면 생활SOC복합화 도서관! 활용도 UP, 예산 Down(증평군 최창영) ② 생활 SOC 운영이 더 중요하다.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재민) ③ 생활 SOC 사례를 통한 생활혁신 공간 조성방안(원광대 이창섭)
토론	좌장 : 이기원(한림대), 토론 : 김홍목(균형발전위원회),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진영호(두리공간연구소), 인은선(국토연구원), 원광희(충북연구원)

중요메일
증평군립도서관, 생활SOC 우수사례 전국에 소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사례발표



사건은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특별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증평군립도서관이 주최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9.25.-27.)에서 증평군립도서관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방향
- 주민참여 활성화와 복합화시설 운영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참여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충북연구원

시간	내용
주제: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방향 및 제도 개선방안 사회 및 좌장: 이기원 (한림대학교)	
· 황인영 (생활SOC 복합화 도서관): 활용도는 UP, 예산은 Down하다 (최창섭, 충청권립도서관)	
· 생활SOC 운영이 더 중요하다: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황재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생활SOC 사례를 통한 생활혁신공간 조성 방안 (이창섭, 원광대학교)	
토론: 김홍목(균형발전위원회), 김현호(국토연구원), 진영호(충북연구원),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인영(충북연구원)	

○ 증평군립도서관의 생활SOC 성공사례는 문체부 『통계로 보는 도서관 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10월호』, 충북연구원 『균형발전 가을호』 등에도 소개

 <p>증평군립도서관</p> <p>충청북도 증평군은 1읍 1면으로 전국 최초의 행정체제, 도한 미래전략과 내외 도서관을 조직하여 지속적인 도서관 연구의 90%이상이 증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도농복합 도시이다. 최근 증평군 주민들의 교육·문화 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증평군립도서관을 소개한다.</p> <p>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도서관 2014년 4월 1일에 개관한 증평군립도서관은 군민들의 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시키고 도서관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나감으로써 균형발전 전담사업으로 건립 추진되었다. 도서관건립사업의 군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도서관을 지역의 중심,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가는 군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지자체(증평군)와 관리자들이 복수형 선진 도서관 건축을 통해 국외 도서관 벤치마킹을 하여 도서관 건립을 전두지휘하였다.</p>	  <p>지방재정 LOCAL FINANCE ASSOCIATION MAGAZINE Chungcheong nam-do</p> <p>통계로 보는 도서관 2호 장성현 혁신도서관 황송준 (내선) DOWN</p>	<p>생활SOC(SOC) 생활복합(SOC)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사례와 시사점</p> <p>증평군청 미래전략과장 최창영</p> <p>1. 생활 SOC의 개념과 목적 생활SOC란 사회기반시설 및 생활 SOC는 대규모 복합시설이 집중하는 기존 사업과 달리 생활SOC가 되고, 차고, 주차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SOC의 인프라 및 삶의 기본 단계가 안전시설을 의미하고 있으며, 「국유유치권법」에서는 「복합의 복합」이라는 복합문화공공시설을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 시키는 「복합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 <p>2018년 8월 8일 문화인 이종현이 과거 방식의 복합 SOC라는 말의 도서관과 체육시설, 복합 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 중심의 생활 복합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일차적 집중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p> <p>한마디로 지역 투자에 확대하여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일차적 생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생활 복합 SOC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p>  <p>이러한 생활SOC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생활SOC정책협의회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행정조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3차례의 생활SOC협의회, 11차례의 자문회의, 5차례에 달한 자치단체와의 회의, 대규모 정책회의 등 다양한 논의와 정보교류를 거쳐 4월, 총 48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p> <p>2. 생활 SOC 복합화의 도입 배경 생활 SOC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여건, 모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또</p>
<p>문체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2017.12) 『통계로 보는 도서관 2호』</p>	<p>한국지방재정 공제회(2019) 『지방재정 10월호』</p>	<p>충북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 『균형발전 가을호』</p>

○ 이밖에도 각종 칼럼 등을 통해서도 증평군립도서관의 생활SOC 성공사례가 소개되는 등 생활 SOC복합 성공사례로 각종 언론 수차례 소개

忠淸日報 2019년 10월 02일 (수) 15면 오피니언

‘뭉쳐야 산다’ 증평군 복합SOC 성공비결

충청의 창



변광섭
청주대 겸임교수·로컬콘텐츠 큐레이터

증평군은 1읍1면의 아주 작은 지자체다. 청주시와 인접해 있고, 도시 한 가운데로 청주~충주간 국도가 지나며, 군부대 등이 위치해 있어 정주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다.

내세울만한 자원도 없다. 주민들과 학생들은 대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진학하는 일이 빈번했다. 도서관, 영화관, 문화센터 등도 변변치 않았다.

전국적 모델로 거듭나

그렇지만 요즘 증평군은 지역균형발전의 전국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줄어들기만 했던 인구도 꾸준히 늘면서 3만7000명에 달한다. 전국의 농촌형 지자체가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으로 고전하고 있는 면과는 다른 풍경이다. 학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살기좋은 도시라며 입소문 자자하다. 관광자원 하나 없는 곳이었던 이곳이 좌구산휴양림, 김득신테마공원, 삼기저수지, 민속체험박물관 등 힐링콘텐츠 고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증평군의 이같은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하다.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증평군립도서관 일원에서 열린 북페스티벌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증평군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에 충실하면서 증평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복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역주민 등과의 연대 및 협력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결과가 나오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면 면이 된다.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면 공간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은 이렇게 점과 선과 면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을도 그렇고 도시 또한 그러하다. 증평군은 점·선·면의 생활SOC형 복합화 정책을 추진했다.

작은 것이 단점이 아니라 꼼꼼한 행정과 특화된 콘텐츠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그 중심에 증평군립도서관이 있다. 2014년 증평읍 광장로 37번지 일원에 도서관을 설계할 때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했다. 도서관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영화관, 평생학습, 천문대, 전시관 등의 생활복합 공간으로 특화시킨 것이다. 도서관 등 문화공간 하나 없다면 불행 소리를 하던 주민들에게 이같은 소식은 매우 기쁜 일이었다. 책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생 2도작도 가능했다. 자신들이 배우고 만든 창작물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생길 수 있었다. 천문대와 주민의 생태공간은 아이들에게 인기였다. 도서관 옆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조선 후기의 독서왕 김득신을 테마로 한 김득신문학관을 짓고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미 증평군은 이 지역 교육신 김득신을 대표 콘텐츠로 삼고 교육문화특화사업에 발 벗고 나서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을 따올 수 있었다.

머물지 말고 나아가길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증평군은 2014년 이후 매년 국가균형발전 우수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생활복합 SOC 사례가 주목받았다.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받았다. 장외적인 행정과 열린 문화운동, 촘촘한 복지와 민관 거버넌스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100년 가는 문화콘텐츠, 100년 가는 생활SOC를 펼쳐나가길 바란다.

20.5 X 16.0 cm

7 생활SOC 복합화 도서관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발전 도모

○ 증평군의 인구는 군립도서관 개관 당시 34,580명이던 것이 2019년 9월말 현재 37,469명으로 증가했고, 전국 82개 군 단위에서는 7번째로 높은 인구증가율과 함께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평균 연령이 40.9세로 전국 82개 군 단위에서 5번째로 젊은 군, 합계출산율은 1.669명(전국 1.052명, 충북 1.235명)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6번째로 높은 자치단체로 체질 개선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구수(명)	34,580	34,938	36,738	37,417	37,787	37,469
세대수(가구)	14,397	14,799	15,822	16,305	16,703	17,176

-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는 전국 229개 지자체 중 57개 시·군·구를 2040년까지 소멸 우려 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내에 85개 단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증평군만이 인구감소 안정지역에 포함
- 「충청북도균형발전지원조례」 제6조(불균형실태조사)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가 5년마다 각 시·군 별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는 지역발전도에서 증평군은 2007년 충북 12개 시·군 중 10위였던 것이, 2012년 7위로 개선되고, 2017년에는 11개 시·군 중 5번째로 조사되는 등 증평군립도서관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이 지역 낙후도 개선의 성과로 나타남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조사연구소가 2016. 06. 01. ~ 07. 31.까지 만 20세 이상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충북 도내 11개 시·군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에 있어서도 증평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내일신문 뉴스 | 오피니언 | 내일스페셜 | 자료실

"작은 지자체가 만족도 더 높아"

충북참여연대, 시·군 대상 행복지수 분석결과 발표
"자치, 적정 규모가 효율적"
2016-10-20 11:08:57 게재

충북도 11개 시·군 가운데 주민들의 행복지수와 지방자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증평군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도시지역보다 작은 규모의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A bar chart showing happiness index scores for 11 cities in Chungcheongbuk-do. The scores are: 청주시 (57.8), 송주 (58.7), 제천시 (58.9), 괴산군 (59.1), 단양군 (60.3), 보은군 (59.1), 옥천군 (56.4), 영동군 (58.0), 음성군 (60.5), 진천군 (61.1), 증평군 (64.6). The average score is 59.4.

VII

향후계획

- 생활SOC 수직복합화 모델인 증평군립도서관을 거점으로 2019. 11. 개관 예정인 독서왕 김득신문학관, 2020. 10. 개관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연결되는 수평 복합화를 통해 생활SOC 문화타운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2019년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생활 SOC 작은도서관 2개관(늘푸른작은도서관 꿈나무작은도서관) 조성
- 이와같이 신도심에는 증평군립도서관 중심의 생활 SOC 복합화 문화타운을 조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도심에는 기 조성된 보건복지타운 내에 2020년 ~ 2021년 총 5,070백만원(충북도 균형발전사업 3,000백만원+생활SOC 복합화 2,070백만원)을 투자하여 생활SOC복합화 시즌II 사업인 가족센터 건립 추진
 - 수직복합화 : 가족센터(여성가족부) + 다함께 돌봄센터(보건복지부)
 - 수평복합화 :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기존)

대한민국 **지척브리핑**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지역신청에 따라 '20년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 선정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 부처간 복합협업 강화

국토교통부 | 2019.10.03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등 지역주민 45명이 학습강사, 도서관 운영, 편의시설 등 일자리에 고용(18. 기준)

생활 SOC 복합화 시설 10종

중점시설명	관련사업명	부처명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문체부
도서관(공공, 작은)	공공도서관 건립	문체부
	작은도서관 조성	
생활문화센터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문체부
주거지주차장	주차환경개선	국토부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집 확충	복지부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복지부
주민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복지부
	농어촌보건소 등 시설보강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여가부

가족지원센터 + 돌봄교실

- ◆ 규 모: 부지면적 3,000㎡, 연면적 1,600㎡
- ◆ 사 업 비: 5,100백만원 (국 1,550, 도 970, 군 2,580)

복합화시설	사업내용
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 센터, 다목적 소통·교류 공간, 프로그램 실 등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공간, 놀이공간, 조리실 등



□ 총복[8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단양군	윤노림 행복가족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활문화센터	7,400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옥천군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1,312
제천시	시민문화센터 '산책' 조성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50
증평군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진천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50
청주시	복합문화 어울림센터 조성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3,200
충주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주민건강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7,545

장 려	“낮에는 경로당 밤에는 청소년 돌봄시설” 강동형 생활SOC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생활SOC 운영비 절감 우수사례’
수상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추진 배경	
<p>「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어르신들의 전용공간인 경로당을 유휴시간인 야간에 청소년 돌봄센터로 공유하는 사업으로 주택 밀집지역의 돌봄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함. 대상은 청소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어디에나 있는 곳, 바로 공원이나 놀이터와 같이 있고, 저녁시간 활용도가 낮은 경로당이 최적이었다. 용도에 맞춘 리모델링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낮에는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으로 저녁에는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돌봄·자치센터로 활용되어 1·3세대가 공유하는 신개념 통합형 생활 SOC가 탄생하게 됨</p>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실적 : 2019. 10월 현재 6개소 운영 ○ 생활SOC 서비스 대상 : 만 세18세 이하 청소년(무료) ○ 운영 시간 : 평일 16:00~22:00(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특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공간에서 어르신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이루어지는 1·3세대 통합형 생활SOC 복합화 시설 - 서비스이용 등록절차가 없는 개방형 공간으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자유롭게 출입과 이용이 가능 - 시설 초기자본투입 최소화로 신속한 설치 및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높음 	
추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 2019년 누적 이용인원 : 22,264명(최근 3개월 일평균 30여 명) ○ 사업부지 매입액 미발생 및 건축비 최소화하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높음 ○ 1·3세대 통합형 생활SOC 복합화시설로 정착 ○ 우수사례로 행정혁신을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사례 지도(MAP)에 등재(2019.10월) - 다수의 언론사에서 보도 	
시사점(성공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공감대 형성 ○ 돌봄수요욕구가 높은 주거지 밀집지역에 집중 설치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에 2개소 추가 및 2022년까지 총 12개소 설치·운영 	

“낮에는 경로당 밤에는 청소년 돌봄시설” 강동형 생활SOC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기관명 (단체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성자	직위(직급) : 지방세무6급 성명 : 백맹숙 (전화 : 02-3425-5387)
--------------	-----------	-----	---

I 사업개요

- 사업명(시설명) :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 시설위치 및 규모

시 설 명	동 명	위 치	규 모	개 소
꿈미소1호	길동	명일로 224-1 구립 기리울 경로당 1층	85.00㎡	2017. 4. 공유공간
꿈미소2호	암사1동	상암로15길 38-15 구립 강암경로당 2층	54.68㎡	2018. 6. 전용공간
꿈미소3호	천호2동	구천면로13길 21 구립 천호2동 경로당 1층	78.00㎡	2018. 7. 공유공간
꿈미소4호	명일2동	동남로65길 46-8 구립 원터골경로당 2층	87.48㎡	2019. 7. 전용공간
꿈미소5호	길동	양재대로112길 52 구립 달님 경로당 1층	50.60㎡	2019. 7. 공유공간
꿈미소6호	암사1동	고덕로16길 46 구립 복지말 경로당 1층	49.75㎡	2019. 8. 공유공간

- 사업기간 : 2017.04.28. ~ 현재
- 사 업 비(2019년 기준)
 - 설치비 : 81,000천원(구비 100%)
 - * 25,000천원/개소, 인테리어공사 및 자산취득비
 - 운영비 : 282,000천원
 - * 6개소 운영용역비용

《 시설운영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식 : 운영용역(계약) ▪ 운영주체 : (사)인터넷꿈희망터 ▪ 운영인력 : 개소당 3명 (청소년지도사자격증소지자 교사 1명, 시간제교사 2인) ▪ 연간 운영비 : 28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조달방법 : 구비 ▪ 시설이용 : 22,264명(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평균 : 30여 명
---	---

○ 관내 위치도



《 지역 일반현황 》

◆ 우리구 인구 현황

(단위: km², %, 세대, 명)

행정 기관	면적		세대수		인구수		성 별		비 고
	면적	비중	세대수	비 중	계	비 중	남 자	여 자	
강동구	24.56	100.00	178,969	100.00	426,219	100.00	210,593	215,626	18개동
소 계	5.73	23.33	60,404	33.75	136,274	31.97	67,410	68,864	
길 동	2.17	8.84	20,558	11.49	46,387	10.88	22,747	23,640	
암사1동	1.02	4.15	16,169	9.03	36,651	8.60	18,198	18,453	
천호2동	1.57	6.39	17,659	9.87	35,280	8.28	17,609	17,671	
명일2동	0.97	3.95	6,018	3.36	17,956	4.21	8,856	9,100	

*** 강동구 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2019년 9월) 참고

◆ 특성 및 여건

- (지역특성) : 돌봄취약가정이 많아 돌봄서비스 수요 욕구 높음
- (지역여건) ▶ 구 평균은 17,354명/km²이나 꿈미소시설 위치 구역은 23,782명/km²으로 인구 밀도 높음
- ▶ 개별주택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

II 추진 배경

- 열악한 돌봄환경 : 지역사회 돌봄수요욕구는 높으나 공급량 부족
 - 기존의 돌봄공동체 현황

시 설 명	동 명	위 치	정원	비 고
나래지역아동센터	길동	양재대로126길 54	-	
길동지역아동센터	길동	천호대로187길 30	19명	
제일강동지역아동센터	길동	양재대로128길 53	-	
배움터지역아동센터	길동	성안로 188	23명	
암사꿈나무지역아동센터	암사1동	상암로 89	-	
숲과나무지역아동센터	암사1동	올림픽로98길 25	-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	암사1동	올림픽로98가길 28	-	2019.10월 개소
소리마을지역아동센터	천호2동	구천면로 287-1	29명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	천호2동	올림픽로89길 27-30	-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	천호2동	천중로 39	-	

- 돌봄시설에 대한 혁신적 접근 필요
 - 서울의 특성상 부지선정이 어렵고 해당 구역이 저개발 등으로 전용공간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 주거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경로당의 유휴 시간에 아동·청소년의 돌봄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자원의 효율성 증진
 - ▶ 공유공간 확보로 생활SOC 복합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창조
 -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제한적인 돌봄서비스의 한계
 - ▶ 추첨과 자격제한으로 이용인원이 제한적인 기존 돌봄체계를 보완하여 새로운 연장적 돌봄체계 구축
 - 아동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실내공간 부족
 - ▶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내 공간 마련 필요

○ 우리구의 우리마을 돌봄체계



III 추진 내용

○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4~6호 설치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03.26.(화) : 꿈미소 4호 명일동 원터골경로당 2층
 - 2019.04.12.(금) : 꿈미소 5호 길동 달님경로당 1층
 - 2019.06.24.(월) : 꿈미소 6호 암사동 복지말경로당 1층
- 참석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아동구정참여단원, 지역아동, 주민대표, 아동복지 관계자 등
- 설명회 내용
 -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운영에 대한 취지 설명
 - 공유 활용 공간구성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현장



- 도시경관총괄기획가2) 자문을 통한 전문적인 공간 설계
 - 설계 방향
 - 어르신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존중
 - 어르신과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편의 확보, 아동의 심미적 측면 충족, 돌봄·학습 공간 등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설계
 -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간·기능을 획기적 개선



-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 성덕고등학교 미술동아리 벽화 재능 기부
 - 새마을문고회 아동도서 기증

IV 성공 요인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세대 통합
 - 내용 : 사업지 선정·설치 시 운영취지를 설명하고 공간설계 및 운영내용에 관한 의견 수렴 후 실제 운영에 반영
 -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아동구정 참여단, 지역아동, 지역 내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지역주민들
 - 의견 : 가스사용과 야간이용 등 이용자의 안전확보, 보드게임 등 여가활동, 숙제도우미 등 학습활동 지원필요

○ 주거지 밀집지역에 집중 설치

2)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있는 민간 전문지식자원을 공공영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우리구의 독자적인 제도로써, 공공건축물의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자문 및 업무조율을 하는 민간 전문가

- 돌봄취약가정이 밀집한 주거지역을 우선 사업지로 선정하여 돌봄수요 충족
- 개방형 운영으로 시설 이용의 진입장벽이 낮아 자유로운 이용
 - 등록제 형식의 인원 제한적 서비스가 아닌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시설로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과 운영
 - 심층아동영향평가 등 실제 이용할 아동의 의견 반영
 - 각 개소별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이용 아동의 안전 확보
 - 아동·청소년 관련 다수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과 협치
- 시설사진 및 관련 영상 : 별도 첨부

V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 추진성과
 - 1·3세대 소통 및 나눔 공간을 통한 세대통합형 생활SOC
 - 아동·청소년은 어르신께 예절을 배우고 어르신은 아이들로부터 스마트폰 사용방법 등을 습득
 - 어르신과 아동의 교류를 통해 지역 내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
 - 아동과 어르신의 자연스러운 교류로 노인 공경문화 확산
 - 시설 리모델링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초기자본투입 예산을 최소화
 - 지역사회에 제한적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
 - 사업부지발생 방지 및 건축 투입비용 최소화
 - 지역사회 내에 촘촘한 돌봄체계 확대
 - 야간(밤 10시)까지 운영하여 돌봄취약가정 아동에게 사업효과 강화
 - 아동에게 미세먼지·폭서·한파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 제공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키움센터)와 함께 마을 내 돌봄 기능을 겸한 안전한 자치활동 공간을 마련
 - 아동의 양육이 가정 책임에서 마을공동이라는 인식 변화 견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우리 공간제공, 자원봉사자 지원 등)
 - 한부모가정 등 돌봄취약가정 아동을 포괄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상담 가능한 전문가(길잡이 교사)가 시설에 상근하며 아동에게 문제(학교, 가정문제 및 가출우려)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개입
- 외상 등의 흔적으로 학대가 의심되거나 잦은 야간이용으로 방임이 우려되는 아동 발견 시 신고 또는 상담 진행

○ 2017년 ~ 2019년 누적이용인원 : 22,264명(최근 3개월 일평균 30여 명)
(단위 : 명)

구 분	17 2/4분기	17 3/4분기	17 4/4분기	18 1/4분기	18 2/4분기	18 3/4분기	18 4/4분기	19 1/4분기	19 2/4분기	총계
1호	426	977	594	275	1,020	1,394	1,460	507	1,392	8,045
2호	-	-	-	-	581	1,565	1,242	297	1,844	5,529
3호	-	-	-	-	-	2,835	2,143	428	3,284	8,690
총 계	426	977	594	275	1,601	5,794	4,845	1,232	6,520	22,264

○ 아동자치센터 이용모습

용기종기 놀이마당



1·3세대가 함께하는 시간



할로윈 파티



요미조미 요리 프로그램



□ 우수사례로 정부혁신을 선도

-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사례 지도(map)에 등재
 - 경로당에 활짝 핀 아이들의 ‘꿈미소’(행정안전부, 2019.10.31. 현재)
- 언론보도 현황
 - “낮엔 경로당, 밤엔 청소년 시설” 강동구 ‘꿈미소’ 5곳 운영 (뉴시스 2019.08.07.)
 - 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4·5호 개소(아시아경제 2019.08.07.)
 - 경로당 변신은 계속… 강동 ‘꿈미소’ 4·5호점 열어 (서울신문 2019.08.09.)
 - 서울시 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2·3호 오픈(아시아투데이, 2018.09.10.)
 - 경로당과 아동·청소년 자치공간이 만났다(내일신문, 2018.10.01.)
 - 강동구, 전국 첫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개관 (매일일보, 2017.05.03.)

< 기타 사항> 사업에 참여하여 협조한 각 기관 담당자 목록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직책	성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아동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박수진

□ 향후계획

- 목 표
 - 2020년도에 2개소 추가 및 2022년까지 총 12개소 설치·운영
 - * 지역균형적 서비스 제공 추구: 관내 미설치 권역 구립경로당 우선 발굴
 - 연도별 설치 계획

설치 실적			설치 예정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개소	2개소	3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12개소

□ 시설 사진 (꿈미소 1호점 ~ 4호점)



꿈미소 1호점 내부시설



꿈미소 2호점 내부시설



꿈미소 3호점 내부시설



꿈미소 4호점 전면



꿈미소 4호점 공사 전



꿈미소 4호점 공사 후

□ 시설 사진 (꿈미소 5호점)



꿈미소 5호점 공사 전



꿈미소 5호점 공사 후



꿈미소 5호점 공사 전



꿈미소 5호점 공사 후



꿈미소 5호점 공사 전



꿈미소 5호점 공사 후

□ 시설 사진 (꿈미소 6호점 외)



꿈미소 6호점 전면



꿈미소 6호점 공사 전



꿈미소 6호점 공사 전



꿈미소 1호점 포스터



꿈미소 5호점 개소식



꿈미소 활동 사진

장 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조성 '생활SOC 운영비 절감 우수사례'
수상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 천안시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천안과 아산의 경계지역 생활권 내 공동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방범, 교통, 정보시스템이 통합된 공간조성을 위해 양 시 관련 부서의 협업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사업 추진 및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추진 내용(또는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간 동반성장 방안 모색 필요성 증가(행정수요 및 비용 측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 양시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복합시설 조성 추진 →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요구 증대 ○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천안아산생활권 협약체결('13.12) ○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14.9) ○ 지역발전위원회 선도사업 선정('14.7) ○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공사착공('16.9) 후 준공 및 개관('18. 10) 	
추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절감효과) 행정구역이 상이한 동일생활권에 공동으로 시민생활편의 공유시설 조성으로 상생 및 예산 절감(건축비용 110억원 및 관리·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시설 조성(U-City, 통합운영센터 이전, 도서관 통합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시에 각각 1개소 씩 총2개소를 건립해야하는 예산 부담 및 관리·운영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공동 활용(부지, 운영 인력 공유 및 지원, 운영·관리비 부담 50% 감소) ○ (지자체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 간 조합을 설립하여 센터 공동 운영 및 관리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사점(성공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내 양 시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센터 기능에 갈등관리 및 연계 협력사업 지속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 방식을 도입, 자치단체 간 협업 및 효율성을 확보한 능동적인 조직 운영이 결합된 선도 사례로 대내외적 파급효과 기대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활성화) 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확충 ○ (최소비용 최대효과) 양 시의 지역자원 공동 활용으로 주민편의 및 예산효율성 증대 ○ (상생발전방안마련) 양 기초단체 간 지속적인 업무 협업을 통한 상생 발전 ○ (지역농산물 홍보) 로컬푸드 주말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활성화 ○ (생활권 연계협력) KTX역사 내 공동홍보관 건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조성

기관명 (단체명)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작성자	직위(직급) : 주무관(행정7급) 성명 : 임준태 * 아산시 자치분권팀 (전화 : 041-540-2238)
--------------	---------------	-----	---

I 사업개요

- 사업명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조성 사업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2-1번지(대지면적 13,293㎡)
- 사업기간 : 2016. 12월 ~ 2018. 6월
- 사업비 : 25,300백만원(국 2,914, 시도 1,150, 시군구 16,736, 민간 4,500)
* (兩市 공동부담)
- 시설규모 및 주요시설

시설개요	면적(㎡)	비율(%)	층별용도
전체면적	9,457.21	100.0	건축면적 2,257㎡
지하 1층	3,884.56	41.1	도서관, 편의시설, 상생협력센터
지상 1층	2,103.97	22.2	도서관
2층	1,688.12	17.9	도시통합운영센터
3층	1,110.95	11.7	
4층	669.61	7.1	

《 시설운영 현황 》

- 운영방식 : 위탁 & 직영(도시통합관제센터 양시 직영운영)
- 운영주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인원 : 8명/공무원. 기간제 6명)
- 소요운영비 : 1,400,000천원
- 운영비 조달방법(운영수지 상황) : 시비(아산천안) + 일부 운영수익(카페 및 회의실 대어)
- 시설이용 : **누적 31만명 *1일 평균: 1,100명**



위치도



시설사진

《 지역 일반현황 》

- ◆ 행정구역 및 면적 : 1,189km²(아산시 543km², 천안시 646km²)
- ◆ 인 구 수 : 1,009,475명(아산시 332,516명, 천안시 679,595명)
- ◆ 특성 및 여건
 - (지역특성) : 아산시와 천안시의 ‘천안아산KTX역’이 있는 **접경지역** 신도시개발지역
 - (지역여건) : 최대의 **산업집적지**(사업체수 생활권 전체 약 63,498개) 서울에서 50분 거리, 수도권인접

II 추진배경(또는 추진경과)

추진배경

- 지자체 간 **동반성장 방안 모색**으로 **비용절감** 효과 기대
 - ⇒ 행정구역이 상이한 동일생활권에 양 자치단체 시민들의 중복 기능 시설 건립 요구로 **낭비 될 수 있는 예산 절감 필요성** 증대
 - ⇒ 인구가 집중 된 동일생활권 지역주민에게 양 시에서 공동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비용(관라운영비 절감)으로 시민 편의 제고 및 갈등 해소**



천안아산 상생협력 센터 건립 (2016.12.12.~ 2018. 6.15.)	연계협력사업추진을 위한 천안아산생활권 협약체결	'13.12
	↓	
	지역발전위원회 선정(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 선도사업)	'14.06
	↓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관련 지자체간 합의	'14.10
	↓	
	사업기본계획 승인(농림수산식품부)	'14.11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행정자치부)	'15.02
	↓	
공유재산관련 의회 심의 및 승인	'15.03	
↓		
건축설계용역 추진	'15.11 ~'16.6	
↓		
공사 착공(건축,전기,소방,통신)	'16.12	
↓		
신규명칭 공모 및 확정(명칭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17.07	

<p>협약체결('13.12.)</p>		<p>기공식('16.12.)</p>	

<p>천안아산 상생협력 센터 관립조합 구성 (2018.1.15.)</p>	<p>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독자성 확보 ☞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상생협력 함으로써 천안·아산 공동 발전 모색 	<p>'18.1.15.</p>
	<p>↓</p> <p>공사 준공(준공검사일/6.15)</p>	<p>'18.06</p>
	<p>↓</p> <p>상생협력센터 및 도서관 임시개관</p>	<p>'18.09.12.</p>

<p>천안아산 상생협력 센터 개관 (2018.10.30.)</p>	<p>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센터 : 천안·아산 상생협력사업 지원 ☞ 도서관 : 상생협력 정신에 기반한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 ☞ 도시통합운영센터 : 방법·교통·주정차 CCTV 연계 활용, 도시 상황 통합 제어 ☞ 문화·휴식공간 : 천안·아산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주민서비스 제고 	<p>'18.10.30.</p>
--	--	-------------------

<p>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개관식(2018.10.30.)</p>	

Ⅲ 추진내용

① 복합시설 조성을 통한 지자체 예산 절감 및 갈등 해결

구분	추진 상황	비고
도립도서관 건립요구	✓ 兩市 경계지역 신도시 주민의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도립도서관 건립” 요구 →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내 도서관 신축 추진 합의(양시와 도립도서관추진위원회)	
U-City, 통합운영센터 이전	✓ 신도시내 U-city확장이전 관련 이전입지 및 건립비용 (90억원) 문제로 천안시, 아산시, LH 간 대립 → 도서관과+U-city운영센터를 통합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로 통합이전 협의 예산 절감(90억→45억)	
지자체 예산부담 절감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신축 총사업비 253억원 中 생활권연계협력사업 선도사업 공모 국비 29억원 확보 및 도지사 지휘보고를 통한 도비 11.5억원 확보 ✓ 양 시에 각각 시설을 건립했을 경우보다 운영관리비 절감	
부지 확보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부지는 천안시 소유 근린공원을 용도 변경하여 양 시가 공동으로 무상사용하고 건축하는 협약체결 추진으로 부지매입비 절감	

【 시설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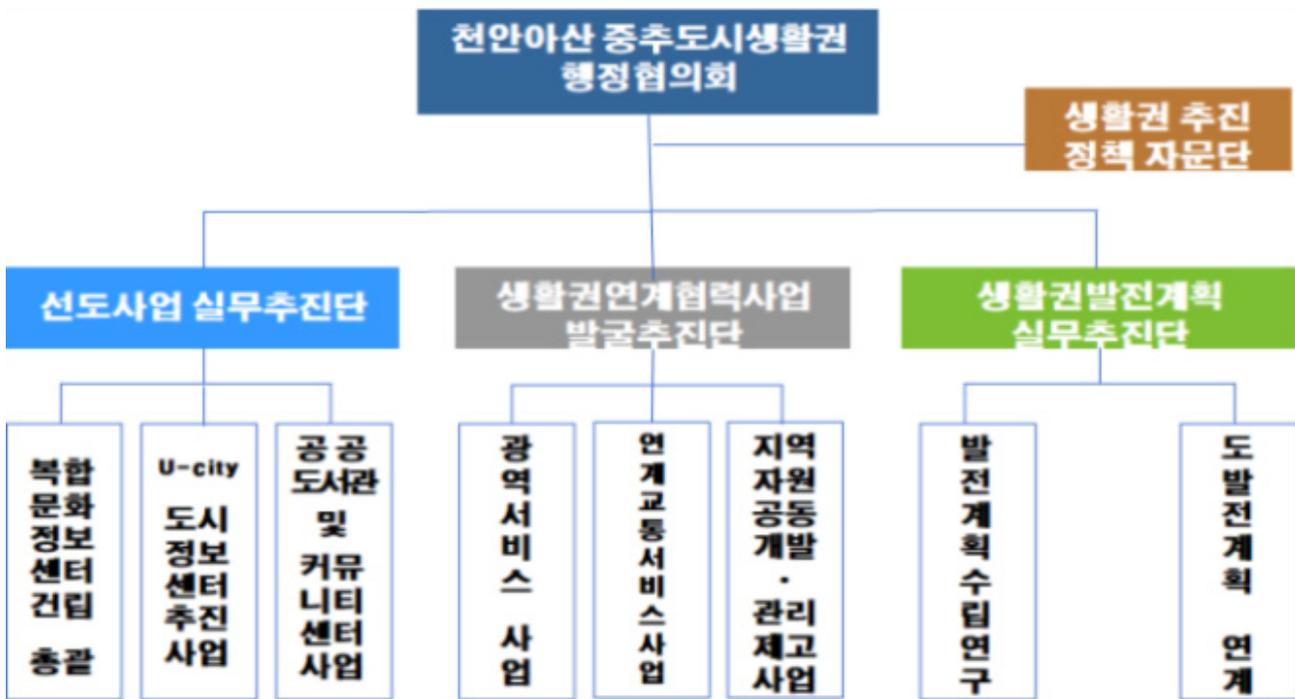
용도명	사진	용도명	사진
1층 상생협력 도서관 전경		도시통합 운영센터	

【 운영사진 】

행사명	사진	행사명	사진
하누리 장터		100일 기념 음악회	

② 지자체 간 협의회 등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구분	운영 실적	비고
상생협력센터 추진 실무협의회 운영	- 양시 14개부서 40여명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 운영('15~ 현재) 부서장 또는 실·국장 주재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 → 센터신규명칭, 건축공사, 운영계획수립, 조합설립, 예산수립 등 논의 및 합의 도출	
상생협력센터 추진 협업과제 선정 및 추진	- 분야별(도서관, 관제센터, 건물신축) 兩市 관련 부서 협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조례제정, 용역참여 등 → '14년~현재까지 수시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 中	



③ 아산과 천안 시민의 문화교류의 장 마련

- 천안·아산 상생협력 사업 및 행정협력 지원으로 천안·아산공동 발전 도모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 도서관 등 조성을 통한 시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진행 등 양시 시민들의 생활문화 허브 공간으로서의 역할 담당

④ 교통정보 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 교통주정차단속 cctv를 연계 활용해 다양한 도시상황을 통합 제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 방법cctv 모니터링, 비상벨 대응, 교통소통 안내 등 도시내 방법. 교통 정보와 기타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가공, 제공
- 긴급상황 발생시 협력적인 신속대응과 처리를 통해 상생협력 행정구현

IV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 전국 최초 기초지자체간 조합 설립 ⇨ **동일 생활권 상생협력 업무 추진**

- 충남도의 지자체간 조합 설립 승인 : 2017. 11.
- 아산, 천안시 직원 파견근무 시작(각 4명씩) : 2018. 1.
 - 운영 세부계획 수립, 내부 시스템 구축 등 개관 전 운영시스템 안정화 추진
- 개관 후 상생협력 업무 추진 : 2018. 10.

☞ 인구가 집중된 행정구역이 상이한 동일생활권에 양 시에서 공동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
 ⇨ **저비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편의 제고 및 갈등 해소**

2 단독기능 사업보다 양 시의 지역자원 공동 활용으로 예산 절감 효과
 ⇨ **110억 원 절감**

○ 예산절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도시통합센터(단독기능)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내 입지	절감
총 사업비	26,000	9,000	▼11,000
건축비	9,000	0	▼9,000
부지매입비	2,000	0	▼2,000
시스템구축비	9,000	9,000	

✓ 도서관건립비 : 당초 兩시민 요구수준(도립도서관 규모/9,037m2)의 도서관 건립비 **236억원**(토지매입비 별도, 아산시 중앙도서관 건립비 기준)소요

☞ 양 시에서 지역자원 공동 활용으로 지속적인 예산 절감 기대 ⇨ **관리.운영비**

3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운영 ⇨ 행정 효율성 증대 및 기회비용 감소

○ 연도별 행정 협의 현황

✓ 역할 : 양 시의 공동 현안업무를 함께 논의하여 처리

주 관	정기회의일	안전현황(건)			비 고
		계	합의	미합의	
계	총9회	50	48	2	
천안	[제1차] 2014.12.29.	4	4	-	
아산	[제2차] 2015.07.24.	9	8	1	
	[제3차] 2015.12.22.	6	5	1	
천안	[제4차] 2016.07.08.	5	5	-	
	[제5차] 2016.12.22.	7	7	-	
아산	[제6차] 2017.07.12.	6	6	-	
	[제7차] 2017.12.19.	5	5	-	
천안	[제8차] 2018.12.21.	4	4	-	
아산	[제9차] 2019.06.05.	4	4	-	

☞ 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양 시 간 신뢰도 증가 및 시민편의 증진 ⇨ 시간 갈등 등 기회비용의 감소



【 운영 실적 보도자료 】

2018. 10. 15. | 충청남도청(충남청사) | 충청남도청 강당(1200명 수용) | 011-1111-1111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임시개관 한 달 1만3000명 방문

2018. 10. 15. | 충청남도청(충남청사) | 충청남도청 강당(1200명 수용) | 011-1111-1111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는 지난 10월 15일 개관식을 통해 운영을 시작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가 개관 1달 만에 방문객이 1만3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1만3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센터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지난 10월 15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11월 4일 현재까지 1만3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센터를 찾았으며, 센터는 천안아산 상생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안아산 상생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안아산 상생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천안아산 상생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안아산 상생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천안아산 상생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안아산 상생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천안아산 상생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안아산 상생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임시개관 한 달 1만3000명 방문(2018.10.15.)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선

일화 2019.12.04 11:00 | 충청남도청(충남청사) | 충청남도청 강당(1200명 수용) | 011-1111-1111



충남 천안시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가 2018년 지자체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공로에 2,500만원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예산절감과 지역간의 영웅성, 주민영익 증진 등 행정 성과를 극대화한 우수시책을 응모·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천안시는 아산시와 협력해 추진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를 간접 운영해 수상했다.

센터는 천안과 아산의 경계지역에 지난 10월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 9457㎡의 규모로 두 도시의 상생협력 사업과 행정협력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센터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순환상행시설, 주차장, 복합적인 구조물과 공간인 도서관과 별의예향 및 그중정보를 통합 제어 제공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갖추고 있다.

이주홍 자치민행과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홍 기자 junho@hankookilbo.com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선정(2019.12.4.)

《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여 협조한 각 기관 담당자 목록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직책	성 명
천안시	자치민원과	주무관	한상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상생협력팀	주무관	강민정

- ✓ **(이용활성화)** 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확충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황톳길 걷기 건강교실, 하누리장터 운영 등
 - 생활체육 교류 활성화
- ✓ **(최소비용 최대효과)** 양 기초단체 지역 자원 공동 활용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예산 운영 효율성 증대
- ✓ **(상생발전)** 양 기초단체 간 지속적인 업무 협업을 통한 상생 발전방안 마련
- ✓ **(지역농산물 홍보)** 로컬푸드 주말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활성화
- ✓ **(생활권 연계협력)** KTX역사 내 공동홍보관 신설 및 운영

홍보영상 부문 수상작 소개

구 분	수상자	작 품 명 (내 용)	비 고 (형식)
최우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성덕)	◦ 내맘속에 썩(SOC)	애니메이션
		◦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개인·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밀착형 생활SOC를 모두가 살맛나고, 즐거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소개	
우 수	김재민	◦ 친절한 정책 라디오, 생활SOC편	라디오, 인포그래픽
		◦ 라디오 사연(공원·체육센터 부족, 아이 맡길 곳 없음) 소개와 고민을 해결해주는 생활SOC 정책 소개 - 사람 중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생활SOC	
	송은석	◦ 생활 속에서 누리는 복지 '생활SOC'	혼합
		◦ 공부하기 위해, 책을 읽기 위해, 머리를 식히기 위해, 멀리 갈 필요없이 가까이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한 생활SOC 이야기를 자작곡(랩)으로 표현	
장 려	오상우	◦ 내가 가진 게 더 있다!	영상에세이
		◦ 돈이 많으면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동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생활SOC가 해결책임을 나타냄	
	Winday (서영민, 박성미)	◦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생활 SOC ◦ 가장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인 생활SOC의 3년 뒤 모습을 도서관 등 주요시설 영상과 함께 수치화하여 정책 홍보	광고
	최병민	◦ 생활SOC 우리 모두의 자산 ◦ 지금부터 더 채워 나가야 하는 생활SOC를 강조하면서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중심 사회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쇠이며 자산인 생활SOC를 홍보	모션그래픽



주제발표

- 01. 생활SOC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김용수 부단장 /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 02.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정영린 교육시설과장 / 교육부
- 03.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구형수 책임연구원 / 국토연구원
- 04.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
김상봉 교수 / 고려대학교
- 05.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 방안**
김미옥 선임연구위원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SOC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김용수 부단장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SOC



Contents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배경 및 경과



생활SOC 3개년계획 수립



'19년 추진성과



향후 추진과제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배경 및 경과



SOC

추진배경

추진배경 및 경과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경제적 생활 수준과 체감 삶의 질 수준의 격차

대규모 SOC투자는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경제성장에 기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부족 등으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

“GDP 3만불 달성”



주요 생활인프라		삶의 질	
한국	미국·일본·영국	OECD 전체 35개국	
5만명당 공공 도서관 1개소	1~4만명당	스웨덴 1위	
5.3만명당 실내체육관 1개소	1~2만명당	덴마크 2위	
12.6만명당 수영장 1개소	1~4만명당	미국 15위	
		일본 25위	
		한국 29위	

*2017년 기준 5

추진배경

추진배경 및 경과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사업 추진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종래의 SOC	생활 SOC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시설 효율 증진, 이용자 편의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복합터미널 등	국민생활 편의 증진시설 기초인프라(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복지, 공원시설 등 일상생활 기본전제인 안전시설 교통안전, 지하매설물안전, 화재 및 재난안전 등



SOC

추진체계 구축

추진배경 및 경과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

생활SOC정책협의회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

-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
- 생활SOC 관련 정책, 재원확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 의장(국조실장), 위원(14개부처 차관, 3개청 차장)
- 총 4회 개최, 3개년계획(안), '19년 사업집행 등 논의

법정부적 생활SOC 정책 추진 총괄

- 생활SOC 정책협의회 지원, 생활SOC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 추진단장(국조실장), 부단장, 4개팀 19명
- 3개년계획 수립·발표, 복합화 사업추진,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 등

생활SOC추진단 (18.11월 출범)

합리적 의사결정 추진

생활SOC전문가 자문단(19.1월 출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생활SOC정책추진 타당성 제고

- 5개 분야 38명(교수 8, 연구원 21, 전문가 9) 위촉
- 전체회의 4회, 수시자문회의 17회 개최

법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 간 상시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 광역 회의 10회, 지자체 전체회의 9회 개최

생활SOC 지자체 협의체(19.1월 구축)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3개년계획 수립

Chapter



SOC

생활SOC 3개년계획의 비전과 전략

생활SOC 3개년계획 수립 II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조기 확충 및 체계적인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계획(’20~’22, 총 30조원 투자)」수립·발표(’19.4.15.)

-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보육·복지·문화·체육·안전시설)의 생활SOC 공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비전

포용 국민 누구나 **균형** 어디에서나
사람중심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목표

'22년까지 핵심 생활인프라대폭 확충
 -문화·체육, 보건의료, 육아·노인돌봄, 안전 등-



3대 전략 / 8대 핵심과제

여가활력 01

생애돌봄 02

안전·안심 03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 문화시설 확충
- 기반시설 확충

- 아이돌봄 환경조성
-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
- 공공의료·복지시설 확충

- 안전한 삶터 구축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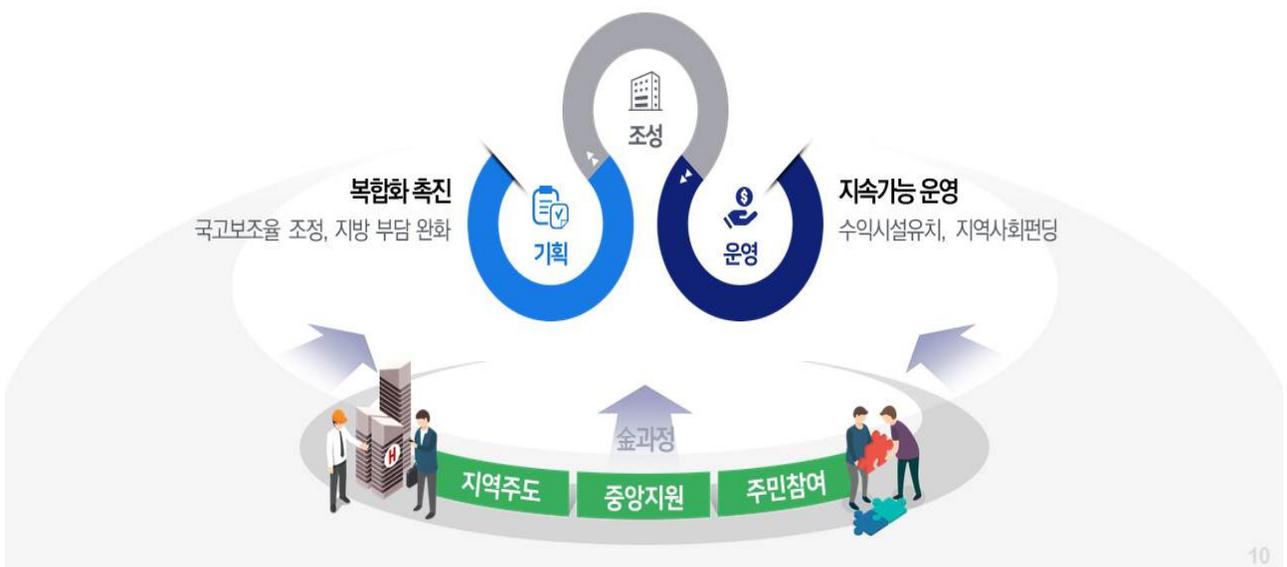
추진방식혁신

생활SOC 3개년계획 수립 II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방식 다양화

학교·공공부지 활용, 품격있는 디자인



10

SOC

생활SOC3개년계획 추진 후 삶의 변화

생활SOC 3개년계획 수립 II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목표: '22년 착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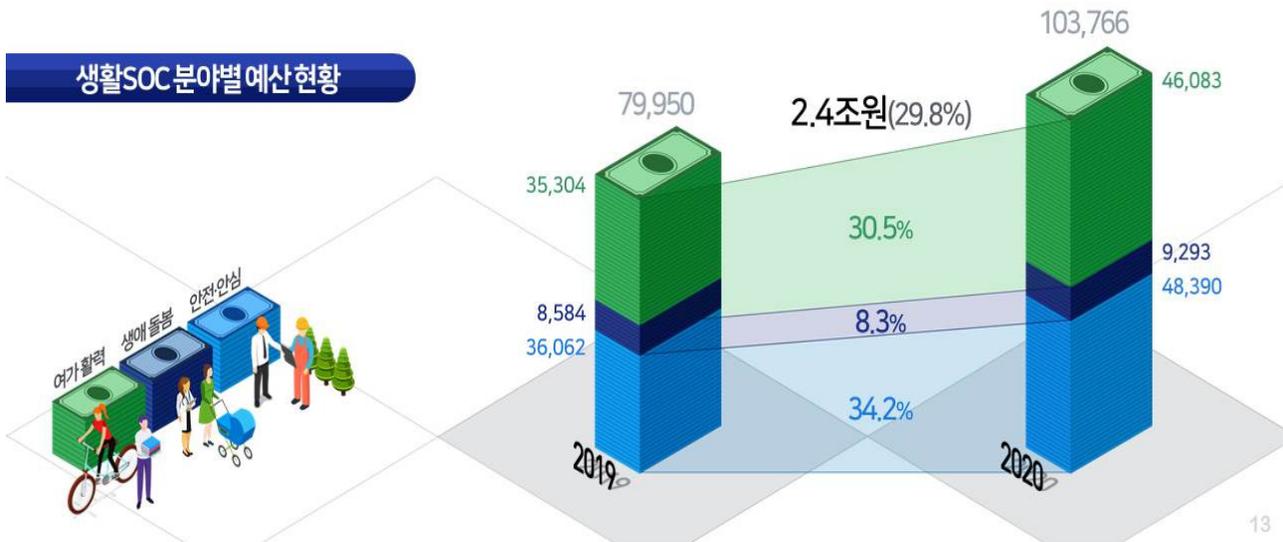
SOC

생활SOC 예산의 확대 편성

19년 추진성과 III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3개년 계획에 포함된 145개 사업(17개 시·도)에 대하여
'19년도 예산(8.0조원) 대비 2.4조원(29.8% ↑) 증가한 **10.4조원 편성**

생활SOC 분야별 예산현황



생활SOC 복합화 추진 활성화

19년 추진성과 III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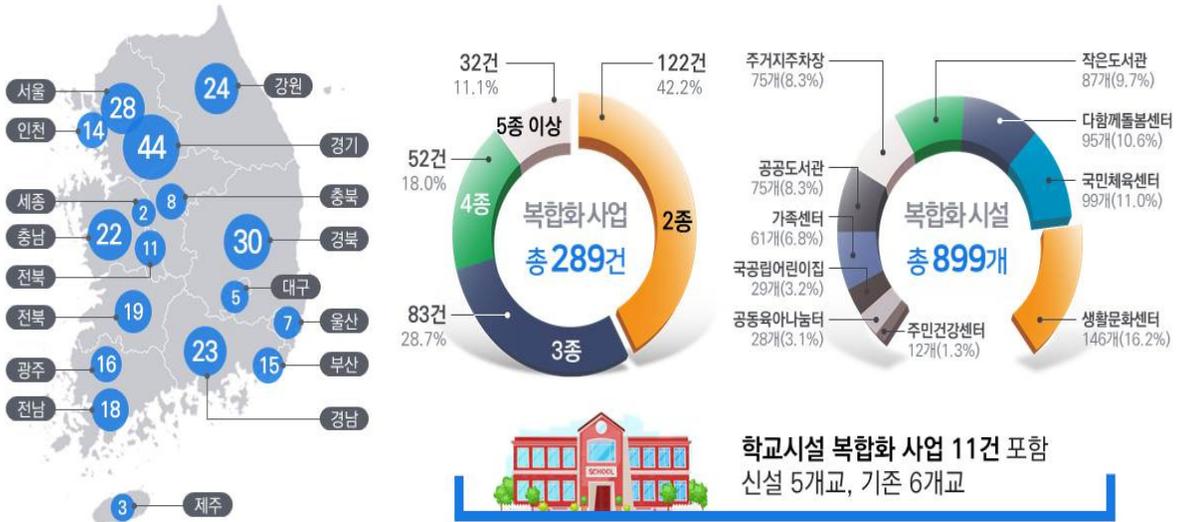
SOC

생활SOC 복합화 추진 활성화

19년 추진성과 III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조실·균형위 협업을 통해 생활SOC 10종시설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19.4월),
289개 사업(17개시·도) 선정('19.10.)



제도개선을 통한 추진방식 혁신

19년 추진성과 III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유지 활용기반 마련

지자체가 지역 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추진

- 국유지 상에 생활SOC(영구시설물) 축조 및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19.12.)



SOC

제도개선을 통한 추진방식 혁신

'19년 추진성과 III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 통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표준조례안·가이드북** 배포('19.12.)



법률안

학생안전, 소유·운영·관리책임 분담 명확화, 학습권 보장 등 포함하여 학교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활동 우선사용 등 운영원칙 제시



표준조례안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미래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19.9.)



가이드북

표준조례안에 대한 지자체·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한 수정안 및 학교시설복합화사업 행정절차 및 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작('19.12.)

17

제도개선을 통한 추진방식 혁신

'19년 추진성과 III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디자인 품격향상 추진

주변 경관과 지역 특성이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공공건축가 도입 및 추진 단계별 디자인 관련 절차 개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4.30),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7.4)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와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위촉·활용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가 하청되지 않도록 별도 발주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자 시공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 관련, 의무 적용(설계비 1억 이상) 외 대상도 실시 권장

녹색건축물 인증의무화



20년부터 공공기관 생활SOC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개선 실시

* 녹색건축법 개정('19.4.),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19.12.) → '20.1월 시행

18

SOC

제도개선을 통한 추진방식 혁신

19년 추진성과 III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복합화 집행정산 간소화



현 재정관리시스템으로는 다수(N)의 국고보조사업을 단일(1) 지자체 사업으로 합병(N:1 구조)하여 집행 불가능

- 시설별 경계 불분명하고 부처·담당자 상이하여 중앙부처-지자체간 업무 협의 및 사후 정산 곤란



부처-지자체간협의 절차간소화 및 집행·정산 방식 단순화



각 사업비는 복합건물 건축을 위한 모든 비용에 사용가능



각 개별사업은 정액보조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



집행·정산 등을 위한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향후 추진과제

SOC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방식 개선

향후 추진과제 IV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복합화 관련 추진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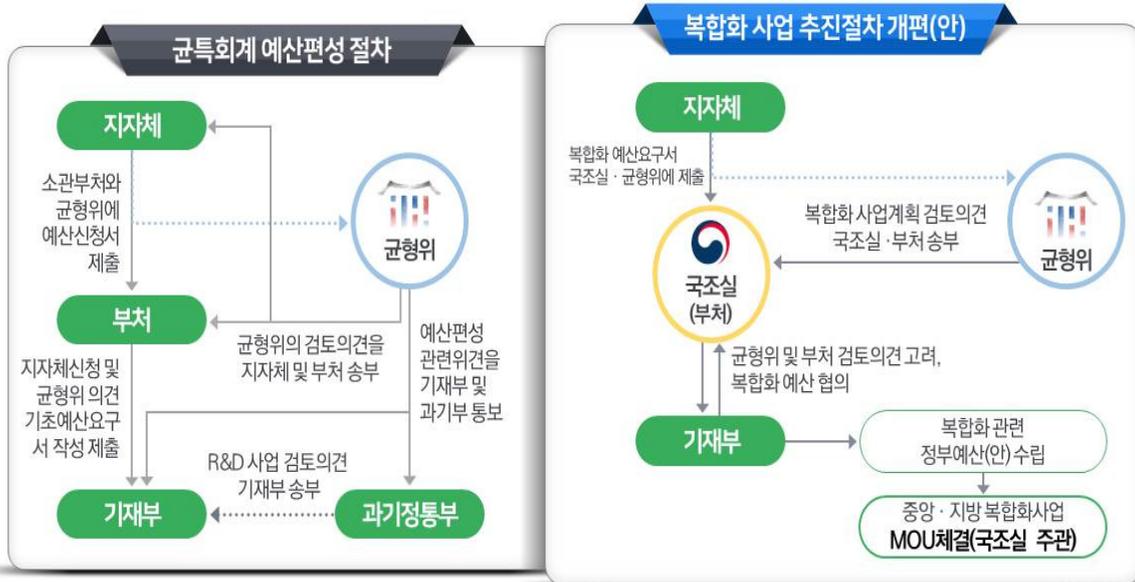
21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방식 개선

향후 추진과제 IV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조실·각부처 균형위 의견을 고려, 복합화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 복합화사업 선정 : 생활SOC정책협의회 의결 후 균형위 결과보고

22

SOC

21년사업 생활SOC 복합화 추진 일정 및 추진체계(잠정안)

향후 추진과제 IV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3

운영 지원

향후 추진과제 IV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효율적 운영 지원

- 종래 건설·운영중인 생활SOC 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이용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지원 방안 모색
-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생활SOC 사업·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공익펀드 활성화를 통한 운영부담 완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운영재원조달 문제로 지역주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SOC 이용 제약
→ 금융기관이 주민의 기부금을 적립해 생활SOC 운영에 지원하는 공익신탁상품 출시·활용 지원

공익신탁상품

주민(위탁자)의 기부금을 금융기관(수탁자)가 적립해 하나의 펀드로 운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생활SOC 운영재원으로 운영주체에 지급

생활SOC 공익신탁 펀드 운영구조



24

SOC

공공위탁개발 활용 지원

향후 추진과제 IV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생활SOC 사업 추진, 시설운영 등에 지원 필요

⇒  **공공위탁 개발제도** 공공 복합시설 건립 관련 전문인력 및 개발경험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하여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위탁개발기관이 대행개발**

사업구조 지자체가 수탁기관에 도서관, 체육관, 주차장 등 생활SOC 개발사업을 위탁

- 수탁기관이 부족한 비용을 조달하여 개발한 건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
- 지자체는 수탁기관에게 개발업무에 따른 대가(수수료)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

위탁개발 추진구조
캠코 사례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2, 제43조의3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09.04)으로 위탁개발 제도 도입

25

지역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향후 추진과제 IV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유도

사례집 발간



기획·설계·시공·운영 각 단계에서 선도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한 사례를 발굴, 지자체와 공유('20년 1월)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내 참여내용 적시하는 방안 검토



사업계획서 반영

민관 합동연구



추진단 중심으로 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20년)

26

SOC

지역주도적 공급계획 수립 지원

향후 추진과제 IV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플랫폼 구축

생활SOC 관련 정보를 집약하여 사용자, 정책수립자(부처,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등)에게 제공('20.3)

- 생활SOC 시설 정보 및 서비스 소외 지역 조회 가능
-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 의견 제시 등 생활SOC 정보 소통 창구 역할

입지분석도구 제공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입지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도구 개발·보급

- ❖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시설·인구·접근성 등 조건을 설정하여 지역내 서비스 소외인구 밀집지 파악
-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20.9월) 후 지자체 보급·교육 실시('20.12월)



27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thank you

생활SOC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김용수 부단장

I. 정책 추진배경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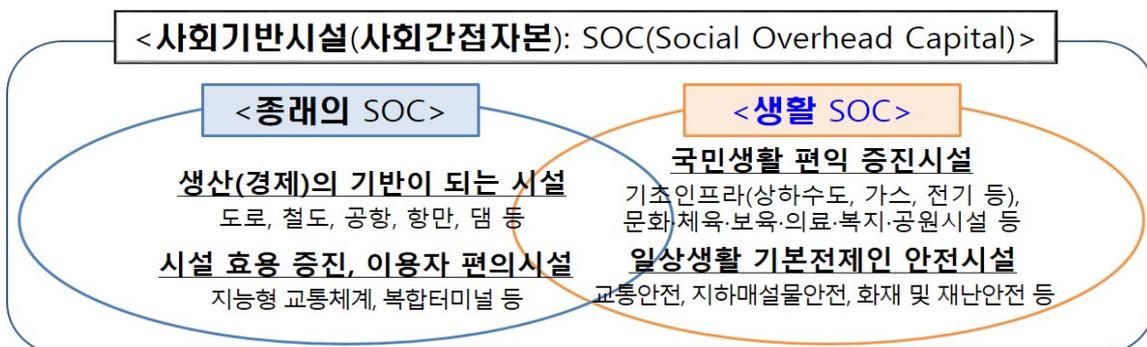
1) 추진배경

□ 경제적 생활 수준과 체감 삶의 질 수준의 격차

- 그동안 대규모 SOC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불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
-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함

□ 생활SOC 개념 도입

- 정부는 '19.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
-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



2) 추진 체계 구축 및 경과

□ 생활SOC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운영

-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조실내 범정부 차원의 '생활SOC 추진단' 및 '정책협의회' 설치·운영('18.11~)중
 - 생활SOC 정책협의회 :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
 - 생활SOC 관련 정책, 재원확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 의장(국조실장), 위원(14개부처 차관, 3개청 차장)
 - 총 4회 개최, 3개년계획(안), '19년 사업집행 등 논의
 - 생활SOC추진단('18.11월 출범) : 범정부적 생활SOC 정책 추진 총괄
 - 생활SOC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 생활SOC 정책협의회 업무 지원
 - 추진단장(국조실장), 부단장, 4개팀 19명
 - 3개년계획 수립·발표, 복합화 사업추진,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 등
- 생활SOC 전문가자문단과 지자체 협의 채널 운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추진
 - 생활SOC전문가 자문단('19.1월 출범) :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생활SOC정책추진 타당성 제고
 - 5개 분야 38명(교수 8, 연구원 21, 전문가 9) 위촉
 - 전체회의 4회, 수시자문회의 17회 개최
 - 생활SOC 지자체 협의채널('19. 1월 구축) : 범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 - 지방 간 상시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 광역 회의 10회, 지자체 전체회의 9회 개최

II. 생활SOC 3개년계획 수립

- 생활SOC 조기 확충 및 체계적인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20~'22, 총 30조원 투자)」 수립·발표('19.4.15.)
 -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보육·복지·문화·체육·안전시설)의 생활SOC 공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생활SOC 개념, 필요성, 現정부의 국정철학 등을 고려한 비전·목표를 세우고, 3대 전략-8대 과제, 추진방식 혁신 제시



- 생활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간활용 제고를 위해 시설복합화 개념을 도입, 장애요인 해소, 지원 확대 등 동시 추진
 - * 생활SOC 10종시설(국고보조율 10%p 상향조정)·학교시설 복합화, 국유지 활용, 복합화 집행·정산 간소화 및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수익구조 창출, 운영자원조달) 등

Ⅲ. '19년 추진성과

□ 생활SOC 예산의 확대 편성

- 생활SOC 3개년 계획에 포함된 **145개 사업**(17개 시·도)에 대하여 '19년도 예산(8.0조원) 대비 **2.4조원(29.8% ↑)** 증가한 **10.4조원 편성**

< 생활SOC 분야별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분 야	'19년도	'20년도	증·감	
	본예산(A)	정부안(B)	금액(B-A)	비율(B/A)
총 계	79,950	103,766	23,817	29.8%
▪ 여가 활력	35,304	46,083	10,778	30.5%
▪ 생애 돌봄	8,584	9,293	711	8.3%
▪ 안전·안심	36,062	48,390	12,328	34.2%

□ 생활SOC 복합화 추진 활성화

- (생활SOC 복합화) 복합화 10종시설 중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

* (생활SOC 10종 시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 지역간 시설 불균형 해소, 부지문제 해소, 이용의 시너지효과 제고
- 부처별 칸막이식 공급체계 개선, 집행·정산절차 간소화, 국고보조율 **10%p 상향 조정**

- 국조실·균형위 협업을 통해 생활SOC 10종시설 복합화사업 가이드 라인을 마련('19.4월), 289개 사업(17개시·도)의 대상사업 선정('19.10.)

- 2종 복합화가 **42.2%**로 가장 많으며, 3종 복합화 **28.7%**, 4종 복합화 **18%**, 5종 이상 복합화는 **11.1%**

2종	3종	4종	5종 이상
122건(42.2%)	83건(28.7%)	52건(18.0%)	32건(11.1%)

○ 복합화 시설은 총 899개, 생활문화센터가 146개(16.2%)로 가장 큰 비중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146개(16.2%)	99개(11.0%)	95개(10.6%)	87개(9.7%)	75개(8.3%)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주민건강센터
72개(8.0%)	61개(6.8%)	29개(3.2%)	28개(3.1%)	12개(1.3%)

○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11건 포함(신설 5개교, 기존 6개교)

□ 제도개선을 통한 추진방식 혁신

<국유지 활용기반 마련>

- 지자체가 지역 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추진
 - 국유지 상에 생활SOC(영구시설물) 축조 및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19.12.)

현행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기부자 등에 대하여 예외적 허용) ○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사용을 불허 (기부자 등에 대하여 예외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SOC를 건축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 지자체 등이 국유재산에 대하여 생활SOC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 허가나 대부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허가 가능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상임위 통과되었으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안**·가이드북 배포*** (‘19.12)

* (법률안) 학생안전, 소유·운영·관리책임 분담 명확화, 학습권 보장 등 포함하여 학교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활동 우선사용 등 운영원칙 제시

** (표준조례안)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미래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19.9.)

*** (가이드북) 표준조례안에 대한 지자체·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한 수정안 및 학교시설복합화사업 행정절차 및 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작(‘19.12.)

<생활soc 디자인 품격향상 추진>

- 주변 경관과 지역 특성이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공공건축가 도입 및 추진 단계별 디자인 관련 절차 개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4.30),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7.4)

- ①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와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위촉·활용
- ② 지역개발사업 內 개별 건축물 설계가 하청되지 않도록 별도 발주
- ③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자 시공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 관련, 의무 적용(설계비 1억 이상) 외 대상도 실시 권장

<녹색건축물 인증의무화>

- '20년부터 공공기관 생활SOC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개선 실시

* 녹색건축법 개정(‘19.4.),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19.12.) → ‘20년 1월 시행

<생활SOC 복합화 집행정산 간소화>

- 현 재정관리시스템으로는 다수(N)의 국고보조사업을 단일(1) 지자체 사업으로 합병(N:1 구조)하여 집행 불가능
 - 시설별 경계 불분명하고 부처·담당자 상이하여 중앙부처-지자체 간 업무 협의 및 사후 정산 곤란

- 부처-지자체간 협의 절차 간소화 및 집행·정산 방식 단순화
 - 각 사업비는 복합건물 건축을 위한 모든 비용에 사용가능
 - 각 개별사업은 정액보조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
 - 집행·정산 등을 위한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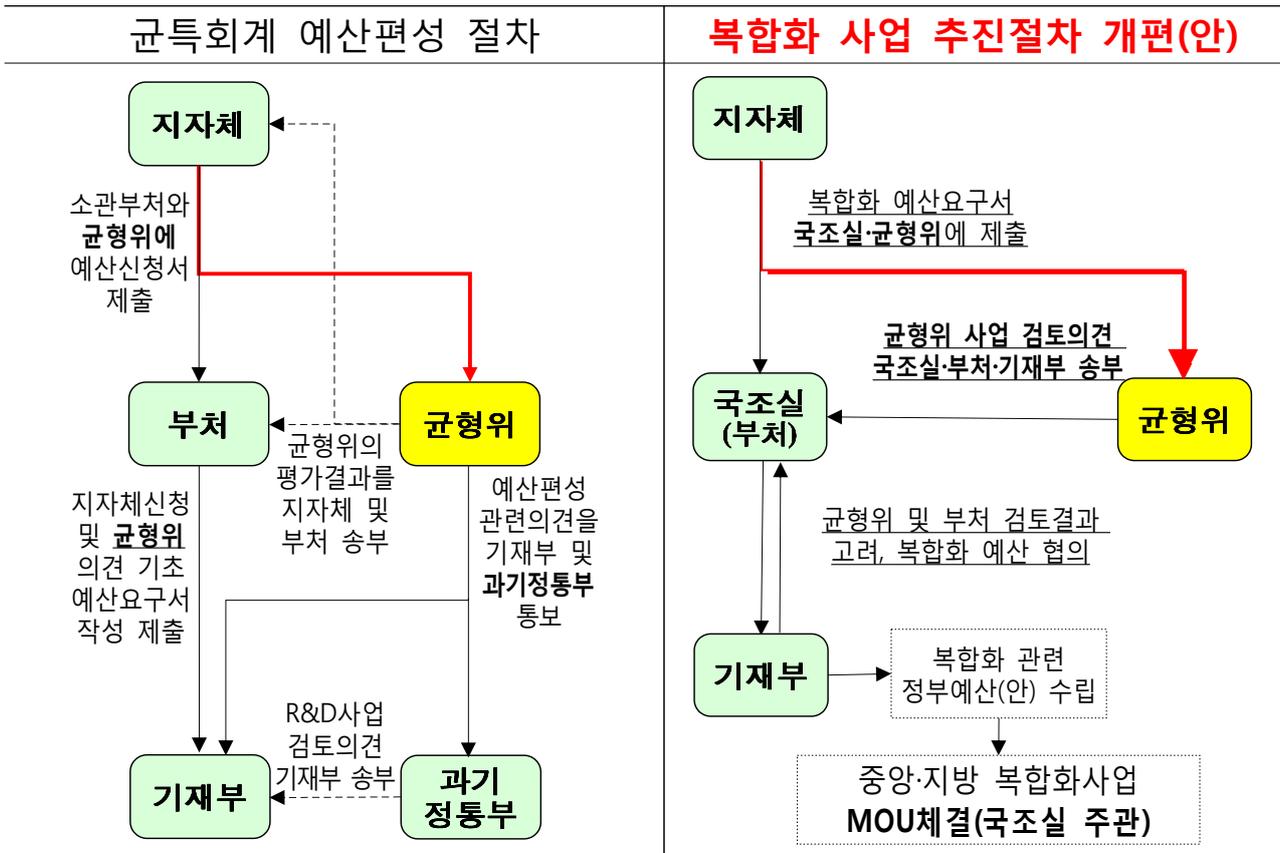
IV. 향후 추진과제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체계 정비

- (국조실) 생활SOC복합화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조정 및 추진
- (균형위) 지자체 복합화 사업계획 관련 사전 검토의견 제시 및 컨설팅 지원
 - 현행 균특회계 예산편성 시 균형위 역할과 유사
 - “복합화 전문컨설팅단”을 활용한 지자체 복합화 사업 컨설팅 지원

	① 가이드라인	② 사업계획 접수	③ 예산협의	④ 사업심사□선정
(19년)	균형위(국조실)	균형위	국조실(부처)	균형위
(20년)	국조실	국조실	국조실(부처)	국조실(부처)

- (국조실□각부처) 균형위 의견을 고려, 복합화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 복합화사업선정 : 생활SOC정책협의회 의결 후 균형위 결과보고

□ 21년 사업 생활SOC 복합화 추진 일정 및 추진체계(잠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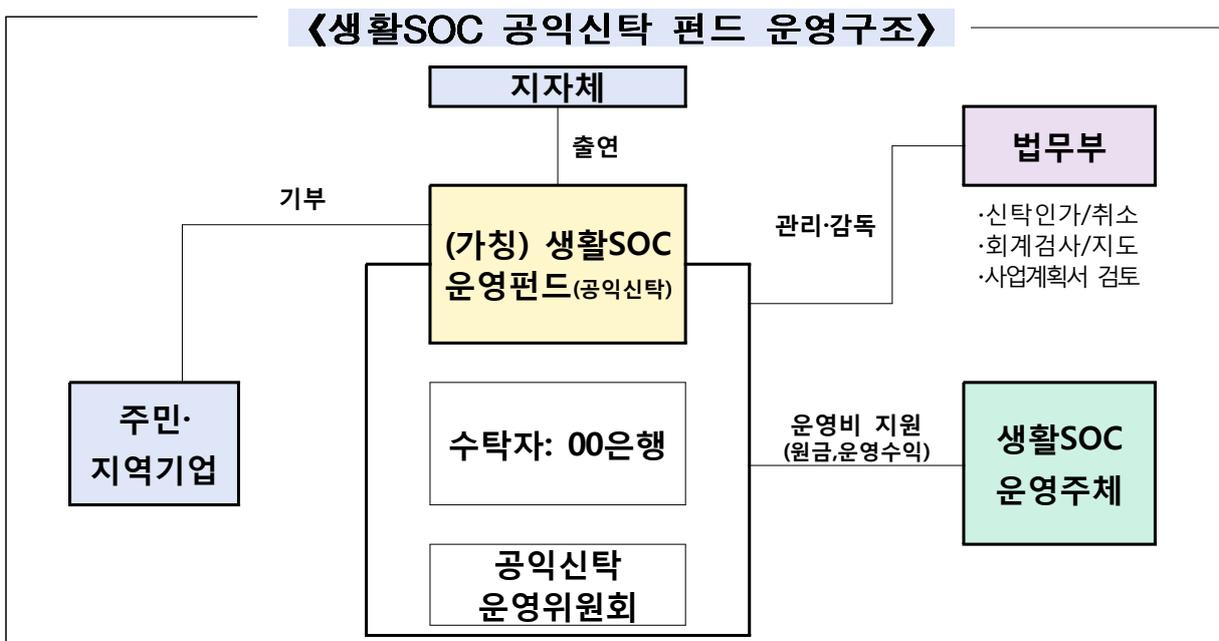
	주요내용	마감일정	추진주체(협조)
①	복합화 가이드라인 배포 (대상 사업별 별도 공모절차 생략)	'20.3월초	▪ 국조실
	↓		
②	가이드라인 설명회(국조실) 및 복합화 컨설팅(균형위)	'20.3월말~4월말	▪ 국조실·균형위
	↓		
③	사업계획서(복합·단일) 접수	'20.5월 중순	▪ 지자체 → 국조실 ▪ 국조실 → 각 부처
	↓		
④	각 부처 사업타당성 검토	'20.6월 중순	▪ 각 부처 → 국조실
	↓		
⑤	생활SOC 복합화 예산협의	'20.8월말	▪ 국조실 - 예산실
	↓		
⑥	최종 사업선정 (지자체 통보)	'20.9월 중순	▪ 국조실 → 각 부처 및 지자체
	↓		
⑦	생활SOC 복합화 협약체결	'20.12월경 (정기국회 이후)	▪ 광역 시도 - 관계부처 (국조실 주관)

□ 생활soc 효율적 운영 지원

- 종래 건설·운영중인 생활SOC 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이용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지원 방안 모색**
-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생활SOC 사업·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 공익펀드 활성화를 통한 운영부담 완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운영재원조달 문제로 지역주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SOC 이용 **제약**
- ⇒ 금융기관이 주민의 기부금을 적립해 생활SOC운영에 지원하는 공익신탁상품 출시·활용 지원
- (공익신탁상품) 주민(위탁자)의 기부금을 금융기관(수탁자)가 적립해 하나의 펀드로 운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생활SOC 운영재원으로 운영주체에 지급



□ 공공위탁개발 **활용** 지원

- 재정여건이 좋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생활SOC 사업 추진, 시설운영 등에 지원 필요

⇒ (공공위탁개발제도) 공공 복합시설 건립 관련 전문인력 및 개발 경험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하여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위탁개발기관이 대행개발

- (사업구조) 지자체가 수탁기관에 도서관, 체육관, 주차장 등 생활SOC 개발사업을 위탁
 - 수탁기관이 부족한 비용을 조달하여 개발한 건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
 - 지자체는 수탁기관에게 개발업무에 따른 대가(수수료)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

<위탁개발 추진구조(캠코 사례)>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2, 제43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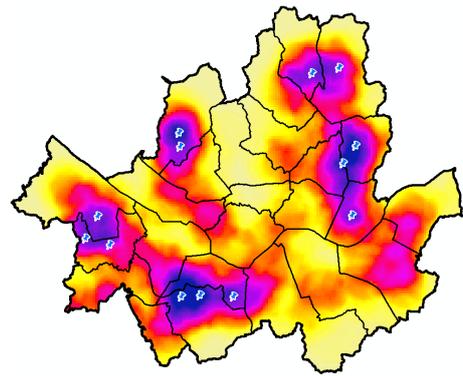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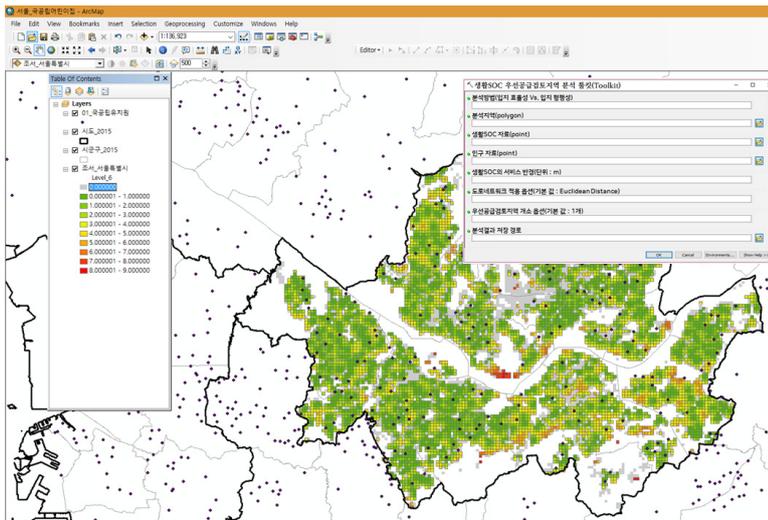
※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09.04)으로 위탁개발 제도 도입

□ 지역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유도
 - (사례집 발간) 기획·설계·시공·운영 각 단계에서 선도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한 사례를 발굴, **지자체와 공유 ('20년 1월)**
 - (사업계획서 반영)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내 참여내용 **적시하는 방안 검토**
 - ☞(예시) 복합화 대상 생활SOC 사업 신청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 결과 등
 - (민관협동연구) 추진단 중심으로 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20년)

□ 지역주도적 공급계획 수립 지원

- (생활SOC플랫폼 구축) 생활SOC 관련 정보를 집약하여 사용자, 정책수립자(중앙정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등)에게 맞춤 제공('20.3)
 - 생활SOC 시설 정보 및 서비스 소외 지역 조회가 가능
 - 모바일앱을 통한 사용자 의견 제시 등 생활SOC 정보 소통 창구 역할
- (입지분석도구 제공)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입지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도구 개발·보급
 - *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시설·인구·접근성 등 조건을 설정하여 지역내 서비스 소외인구 밀집지 파악
 -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20.9월) 후 지자체 보급·교육 실시('20.12월)



SOC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정영린 교육시설과장 / 교육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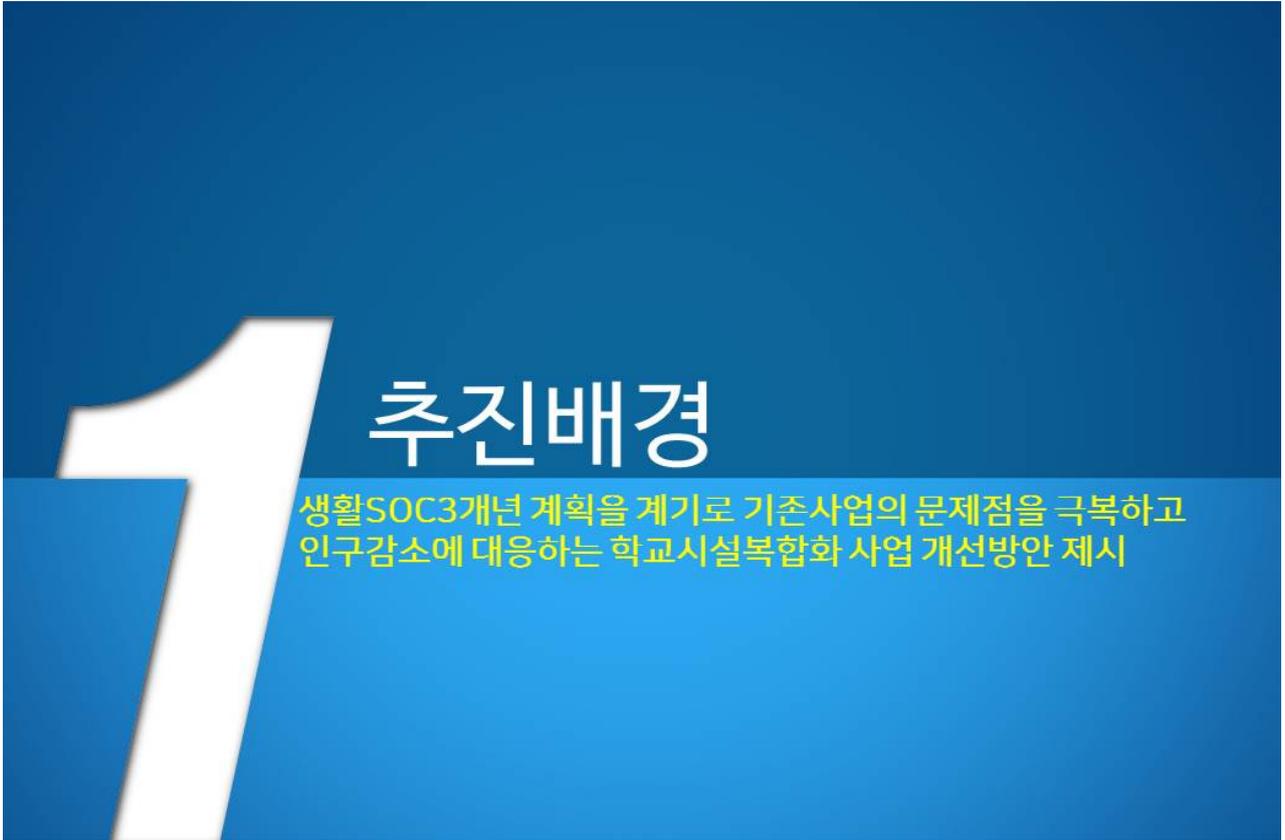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CONTENTS

- 1 추진배경
- 2 학교복합화현황 및 문제점
- 3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 4 2020 생활SOC 선정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SOC



1 추진배경

생활SOC 복합화사업 3개년 계획 추진

-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 →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양적·질적 부족
- 대도시, 중심지역 위주 SOC 집중 → 지역간 및 지역내 격차, 불균형 유발
- 부지문제 해소 및 부지이용의 시너지효과 제고 필요
- 부처별 칸막이식 공급체계 한계 개선 필요

비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활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목표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

0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 1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 2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연·예술시설)
- 3 취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서관, 문화·여가시설, 아동·노년시설)

0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 4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 5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년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 6 공공의료 시설 확충 (지역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0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 7 안전인프라 구축 (교통, 화재예방, 방재 및 재난 안전)
- 8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저감, 유해물 예방)

추진방식혁신(제도개선)

기회 >> >> 조성 >> >> 운영

시설 복합화 >> 학교·공공부지 활용 >> 지속 가능한 운영

국고 보조금 인성 >> 동계 있는 디자인 >> 수요자중심/자주-관리연계

(수과점) 지역주도-중앙지원, 주민참여

총 투자규모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시 48조원) 수준 투자



생활SOC 사업추진 방식 혁신 사례

사업 복합화 추진

생활SOC 연계 생활·여가·문화·체육 시설 연계 추진

도시권 밀적화

생활SOC 연계 생활·여가·문화·체육 시설 연계 추진

지속 가능한 운영

자신의 책임운영 원칙 아래 지역사회 참여·후원을 통한 운영체 조성(민간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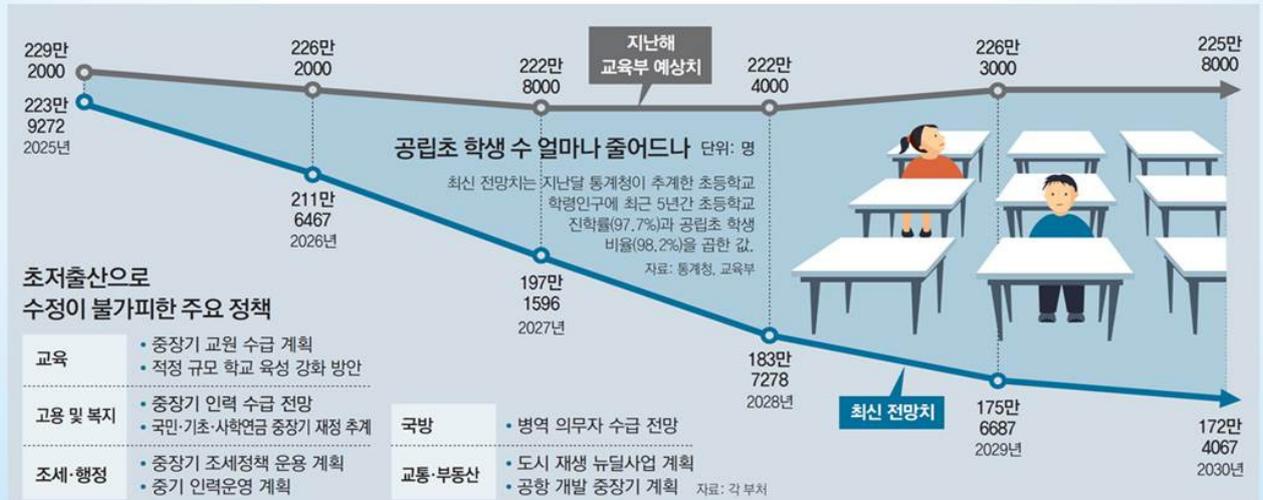
SOC

1 추진배경

5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기존 학교복합화사업 개선

- 학령인구 감소 → 학교통폐합 → 학습권 침해 및 지역사회 해체 문제
- 학교가 선도적으로 지역의 발전동력 및 주체의 역할
- 기존 복합시설의 관리 책임 한계 및 운영예산/ 관리부담 문제 해소 필요
- 학교복합시설의 수도권 집중 문제, 지자체간 협조 해소방안 필요



2 학교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SOC

2 학교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7



현황

- 1999년 서울 금호초 최초 실시
- 총 126건 학교복합시설(전체 초중고의 1%)
- 체육관(91개소)
- 주차장(26개소)
- 도서관(5개소)
- 문화센터(4개소)

분석

- 수도권 편중 (서울 99개교-77%)
- 초교 63%, 중학교 33%, 고등학교 14%
- 수영장 15개교 (서울-교육청, 기타-지자체)

추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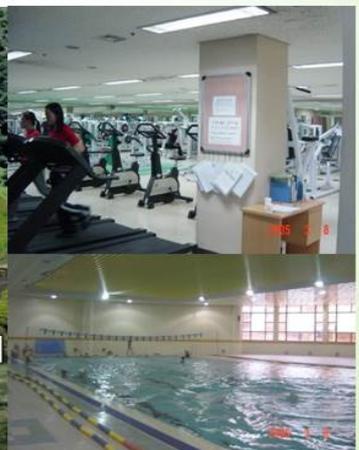
- 교육청 주도 재정투자(1999~현재)
- 기재부 주도 BTL민간투자방식(2006~2008)
- 동탄신도시 등 개발사업방식
- 생활SOC 복합화 방식(2020~2022)

2 학교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 복합화 사례

8

서울 금호초 학교복합시설 (2001년 준공)

- 사업비: 224억 (학교 110억-교육청, 문화센터 58억-구청, 주차장 56억-시청)
- 성동구청+교육청 협약
- 교육청: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교육목적 무상이용(연 60억 편익)
- 구청: 학교부지 무상사용(1,200평, 연 60억원 절감)



SOC

2 학교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 복합화 사례

9

서울 연남중고 학교복합시설 (2006년 준공)

- 사업비: 185억 (학교 33억-교육청, 도서관/체육관/수영장/주차장 152억-서초구청)
- 서초구청+교육청 협약
- 교육청: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식당, 특별교실 증대) 필요
- 구청: 지하1층,지상7층 복합시설(2~3층, 5~6층 학교 이용, 위탁 운영)

7층	어학원		
6층	소강당(연남중), 컴퓨터실		
5층	다목적실, 컴퓨터실		
4층	연남중 교사동	다목적실	연남고 교사동
3층	연남중 교사동	학교도서관 (연남고)	연남고 교사동
2층	연남중 교사동	학교식당 (연남고)	연남고 교사동
1층	연남중 교사동	어린이집	연남고 교사동
지하중층	헬스장		
지하1층	기계/전기실	수영장	지하주차장 (학교운동장 지하)






2 학교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 복합화 사례

10

창원 중리초 학교복합시설 (2009년 준공)

-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 : 교사동(경남교육청), 체육관/도서관(마산시청)
- 기존 중리초 이전, 마산시청+경남교육청 협약
- 복합시설 이용시간(학생/지역주민) 관련 민원
- BTL운영비 지급(학교-교육청, 복합시설-시청)



SOC

2 학교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 복합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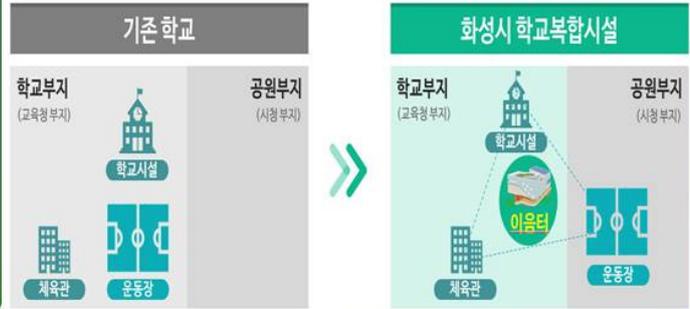
11

화성 동탄중앙초 복합시설 (동탄중앙이음터) (2015년 준공)

- 신도시 개발사업중 공원과 학교시설 복합설치를 위한 적극노력
- 도시계획시설간 효율적 활용
- 화성시청+교육지원청+LH 추진협의체 및 협약
- 동탄중앙이음터
 - 도서관,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 식당, 마을카페, 어린이집
 - 주차장, 야외놀이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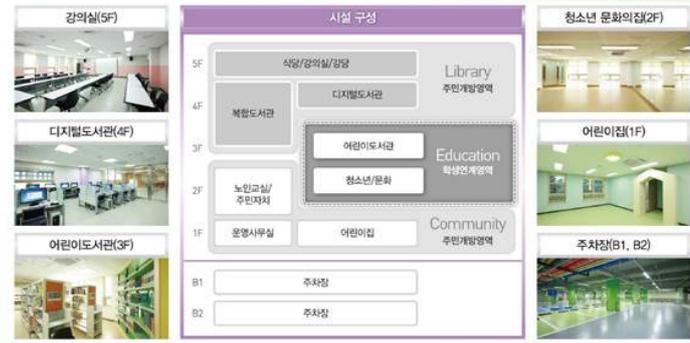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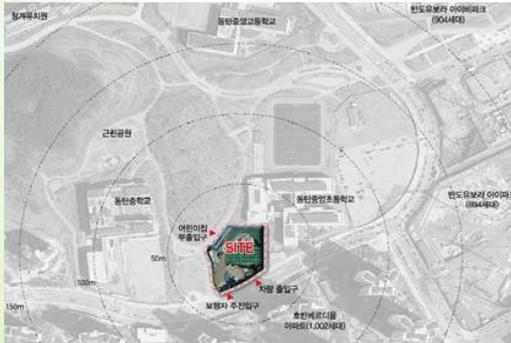
동탄이음터 복합화 개념



2 학교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 복합화 사례

12

화성 동탄중앙초 복합시설 (동탄중앙이음터) (2015년 준공)



SOC

2 학교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13

관리책임 안전책임

- 기존 복합시설 관리 책임자 대부분 학교장
 - 학교복합화 126개교중 70%가 학교장이 관리책임자
 - 운영비, 관리책임, 안전 부담에 따라 복합화사업에 대해 방어적 자세
 - 법적책임 < 사회적 책임 < 도의적 책임

학습권보호

- 학생 교육활동에서의 사용 제한 및 학습권침해 우려
 - 협소한 부지위에 복합시설 신축시 체육장 및 생태/조경, 놀이시설 침해
 - 복합시설 개방에 따라 지역주민 출입통제, 소음관리 애로
- 학교장/교육청/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

대도시 집중 (서비스 형평)

- 학교복합시설 90%이상 대도시 및 수도권 집중
 - 부지비용이 높은 대도시위주로 부지복합활용을 위한 사업 증가
 - 지방 소도시 등은 생활SOC 인프라 지원부족(매칭예산 확보 애로)
 - 때문에, 지방 소도시는 지역간 생활SOC 시설 접근성 취약, 편차 증대

2 학교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14

학교복합화사업 SWOT 분석



SOC

2 학교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15

학교복합화사업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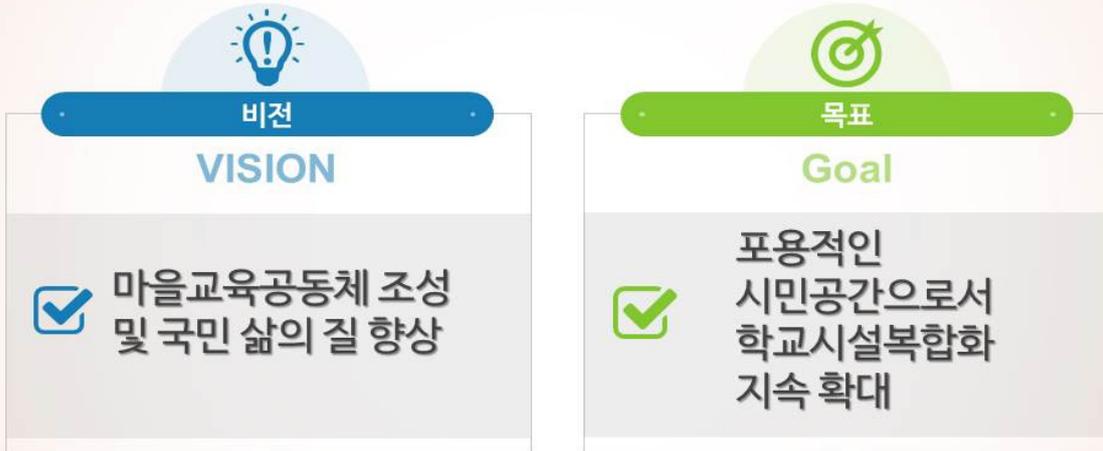
3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시설복합화 개선방안

SOC

3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17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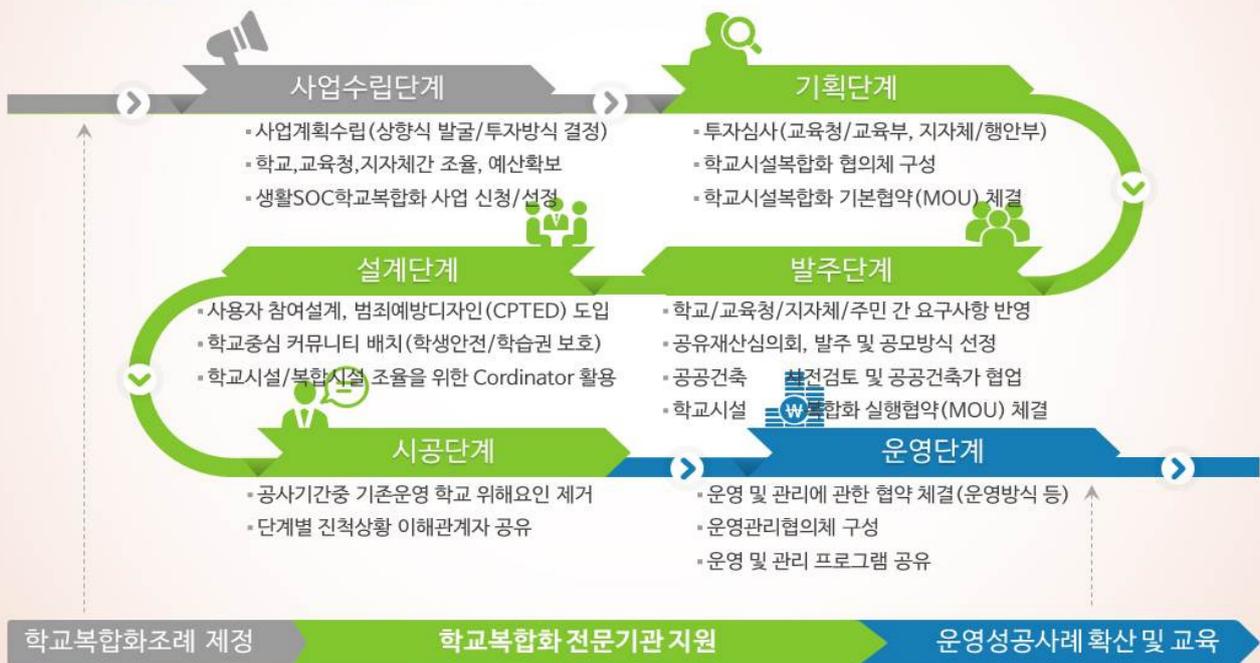


- Key note**
개선실천과제
- 사업추진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제도 개선

3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18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단계



SOC

3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19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사업수립단계 / 기획단계

- ☑ 지역주민, NGO 등 지역사회가 발굴 제안, 교육청/지자체가 검토후 부처신청
↳ **상향식 사업발굴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 지역의 각 주체들이 사업기획 등 전 단계에 걸쳐 참여
↳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복합화사업의 경우 이중 투자심사(교육부/행안부)로 추진애로
↳ **투자심사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화 (1번 심사로 의제-진행중)**
- ☑ 복합화 초기단계에서 지역사회, 학교, 교육청, 지자체, 소관부처 등 협의체 구성
↳ **다자간 기본 업무협약(MOU) 체결**
- ☑ 도시계획시설 복합 및 입체적 배치 및 규제완화 지속 추진
↳ **학교시설+도시공원 = 토지효율 및 공간시너지**

3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20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발주단계 / 설계단계

- ☑ 선도적, 혁신적 발주 및 공모방식 개선
↳ **설계작품보다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 강구**
-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학교복합 특성에 적합한 지침 작성
↳ **교육/문화/체육 및 교육청/지자체 조율이 가능한 전문가 참여**
- ☑ 일방향 설계지양, 교육공간 및 복합시설공간 공통으로 설계과정에 관계자 참여
↳ **사용자(학생,교사,지역주민,관계자) 참여설계**
- ☑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호 최우선, 범죄예방디자인계획
↳ **학교공간혁신 퍼실리테이터, 학교복합 전문기관 등 지원**
- ☑ 투자심사(자체,중투 등), 공공건물 사전검토, 공공건축가 참여
↳ **학교복합 전문기관 및 전문퍼실리테이터 참여, 시간단축**

SOC

3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21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시공단계 / 운영단계

- 기존 학교시설 증축형 학교시설복합화사업
 - ☞ 공사기간중 통학로 확보, 소음진동, 먼지 등 학생 위해요인 제거
- 설계변경 등으로 설계의도 및 복합화 취지 훼손되지 않도록
 - ☞ 학교복합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지속 관리
- 복합화시설에 대한 소유, 운영, 관리책임 분담체계 확립
 - ☞ 제도적 장치(법률, 조례, 협약 등)를 통한 학교부담 완화
- 학교복합시설 운영의 공공성, 전문성 확보
 - ☞ 운영권 지자체로 일원화, 운영방식 전문화(전문기관 위탁)
 - ☞ 운영협의체를 통해 최적의 운영방식, 운영프로그램 선택

3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22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제도 개선방안

학교시설복합화 법적 근거 마련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현재까지 복합시설 설치/운영은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약(MOU)에 근거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함
- 때문에, 법적 책임 문제에 있어 학교장 불리

- ※ 학교시설복합화법 제정 추진중
- 김한표의원/안민석의원 법률안
교육위 대안 의결

학교시설복합화법(대안) 주요 내용

- 학교복합시설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
- 학습권 보장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함

SOC

3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23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제도 개선방안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정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지자체 활용중

- 시흥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1.04)
-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05.31)
-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2010.07.01)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 개발, 제정 및 배포 예정

학교복합시설 운영 협의체 근거 마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간 협업 필요
→ 권한과 책임 명확화 필요

- 설치단계와 운영단계 구분하여 협의체 운영
 - 참여주체가 달라지고, 참여비중이 상이
- **설치단계** : 자원확보, 정책연계 목적
 -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등 지역단위 협의체 + 관련 전문가/전문기관
- **운영단계** : 현장중심의 협업 목적
 - 학교, 읍면동 차원의 학교단위 협의체 + 위탁기관
- 협의체 구성 및 역할을 법률 및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법률 및 조례에 관련 내용 반영

4

2020 생활SOC 선정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 (안)

SOC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2020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도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학교시설 복합화 전문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

한국교육개발원(국무조정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전 & 전략 Vision & Strategy

Vision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시설·환경 정책 전문기관

Strategy

01

교육시설·환경 정책의 선도하는 연구·개발 강화
미래 교육시설·환경 정책 및 현장 혁신 연구·개발 강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시설·환경 연구·개발 강화

02

교육시설·환경 연구 및 정책지원 성과 확산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성과 확산
국내 외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교류 활동 강화

03

교육시설·환경 전문 기관으로서의 사업지원
센터 성과 확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시스템 개발·관리
종합적, 체계적 교육시설·환경 전문 교육 및 연구 강화

04

센터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교육시설·환경 정책지원 사업 확보
정책 선도를 위한 조직 역량강화

센터 연혁

2006

- 교육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010

- 교육시설 민간투자 전문기관(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시설복합화사업(BTL) 전문기관(기획재정부)

2011

- 교과교실제 지원 전문기관(교육과학기술부)
- 교육환경평가 전문기관(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교육과학기술부)

2013

- 교육환경평가 전문기관 지원업무 확대(교육과학기술부)
- 교과교실제 전문기관 업무 확대 : 적정성 검토(교육과학기술부)

2014

- 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 검토 전문기관(미래창조과학부)
- 교육환경평가 전문기관 지원업무 확대 : 일조권 검토(교육과학기술부)

2015

- 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 검토 전문기관(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시설 민간투자 지원업무 확대 : Non-Stop 서비스(교육과학기술부)

2016

- CPTD 시범학교 운영 사업 지원 전문기관(교육부)
-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 학교기획재정부

2017

- 학년도 국가공공데이터 등재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EduBuil) 오픈

2018

-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전문기관(교육부)
-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교육부)

2019

-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업무 이관
-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조사 업무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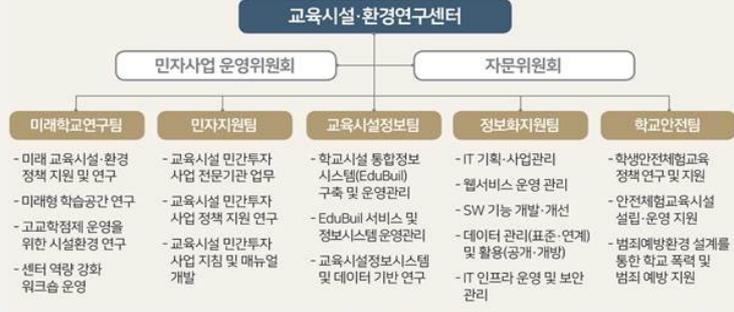
SOC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학교시설 복합화 전문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

한국교육개발원(국무조정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 센터 조직도



☑ 인력현황

- 학력 : 박사 6명, 석사 10명, 학사 16명
- 자격 : 건축사 3명
 건축시공기술사 1명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등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2020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절차도



SOC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2020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선정사업 현황 및 유형

연번	시도	시군구	학교명	사설명	소관 부처	사업비 (억원)			유형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1	서울	양천구	서울양천중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국토부 문체부	350	240	11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2	경기	광명시	광명동초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영유아 창의체험관	국토부 문체부 자체	150	60	9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3		수원시	곡반3초, 중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문체부 복지부	200	40	160	학교+복합 신설형	
4		이천시	이천제일고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복지부	310	60	25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5		화성시	서연중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문체부 문체부 복지부	80	60	2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6										동탄1초
7		여주시	여주초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문체부 문체부 여가부	80	10	70	학교+복합 신설형	
8										동탄28초
9		파주시	신산초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문체부	60	30	3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10		광주	북구	삼정초	국민체육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문체부 여가부	130	50	8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11		충남	당진시	수청초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여가부	50	30	20	학교+복합 신설형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2020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선정사업 추진단계

연번	시도	시군구	학교명	사설명	소관 부처	학교				복합시설				비고
						기획	설계	시공	운영	기획	설계	시공	운영	
1	서울	양천구	서울양천중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국토부 문체부				✓	✓				
2	경기	광명시	광명동초	주거지주차장	국토부				✓	✓				
3				수원시	곡반3초, 중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	✓		
4		이천시	이천제일고			영유아 창의체험관	자체	✓						
5				서연중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6		화성시	동탄1초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7				여주시	여주초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8		동탄28초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9			파주시	신산초	공공도서관	문체부								
10		북구			삼정초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11			당진시	수청초		동요센터, 진로체험관	자체							
						공공도서관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작은도서관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공동육아나눔터	여가부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공동육아나눔터	여가부									
				공공도서관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공동육아나눔터	여가부									

SOC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2020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선정사업별 지원방안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번	시도	시군구	학교명	사설명	소관 부처	지원유형			지원조직			비고		
						중점	일반	자문	퍼실리테이터	전문기관	기타지원			
1	서울	양천구	서울양천중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국토부 문체부	✓			✓	KEDI	공공 건축가			
2	경기	광명시	광명동초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영유아 창의체험관	국토부 문체부 자체	✓			✓	KEDI				
3		수원시	곡반3초, 중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문체부 복지부		✓			KEDI				
4		이천시	이천제일고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동요센터, 진로체험관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복지부 자체		✓			KEDI				
5		화성시	동탄1초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문체부 문체부 복지부		✓				KEDI			
6				동탄28초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문체부 문체부 여가부		✓				KEDI		
7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문체부 문체부 여가부		✓				KEDI		
8		여주시	여주초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			KEDI				
9		파주시	신산초	체육합숙실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자체 문체부 문체부		✓			KEDI				
10		광주	북구	삼정초	국민체육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문체부 여가부	✓			✓	KEDI			
11		충남	당진시	수청초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여가부		✓			KEDI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학교복합시설 퍼실리테이터(촉진자, Facilitator) POOL 및 역할

구분	회사명	직급	성명	경력	비고
전문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박성철	·공학박사, 건축사공기기술사, 연구위원	학교공간혁신
		센터장	이상민	·공학박사, 건축사, 부연구위원	학교공간혁신 사용자참여실제
		선임연구위원	조진일	·공학박사, 선임연구위원	학교공간혁신 사용자참여실제
		팀장	이윤서	·공학박사, 부연구위원	학교공간혁신
		팀장	유승호	·건축사	학교시설정보
		팀장	윤현기	·공학석사, 건축사, 책임전문원	민자/복합화
		팀원	이상신	·석사, 회계사, 세무사, 책임전문원	타당성분석
		팀원	이은보라	·석사, 변호사	법률검토
퍼실리테이터	사회적협동조합동지	이사장	유용상	·교육부 서기관, KEDI EDUMAC 소장	복합화 경험 다수
	한국교원대	교수	이재림	·서울시교육청, 중앙투자심의위원	복합화 경험 다수
	공주대	교수	최병관	·공학박사	복합화 경험 다수
	공주대	교수	고인룡	·공학박사	사용자참여실제
	전남대	교수	정주성	·공학박사	사용자참여실제
지원조직	플로건축사사무소	대표	최재원	·건축사 (구산동 도서관마을, 꿈담교실 등)	공공건축가

S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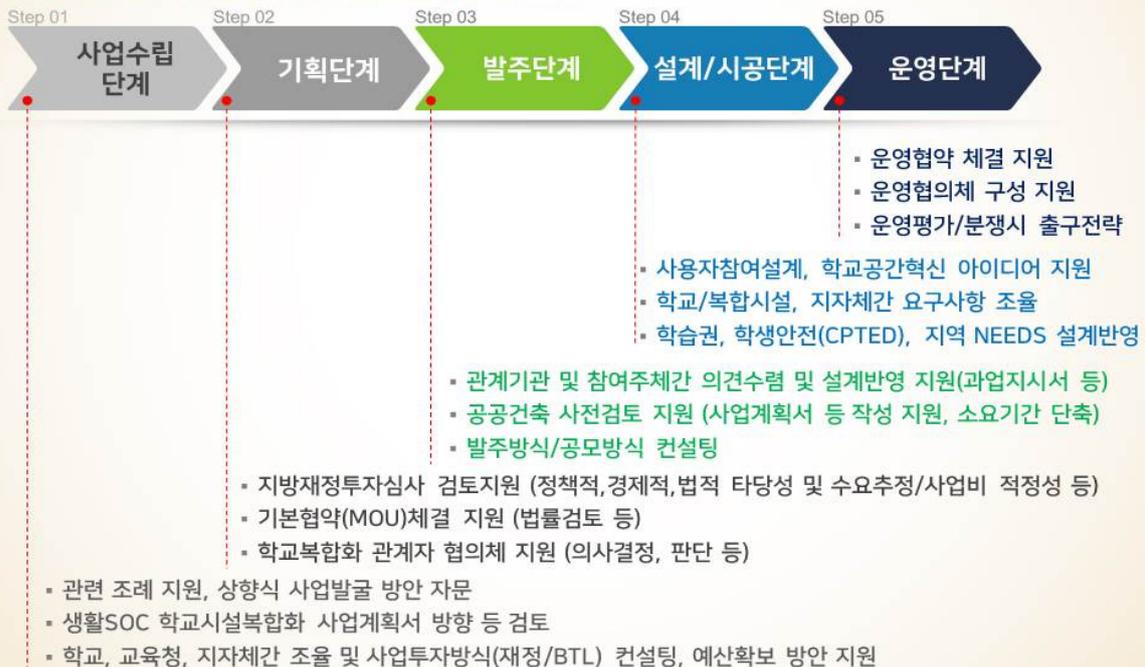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학교복합시설 퍼실리테이터(촉진자, Facilitator)의 구성 및 역할

Consul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계 : 교육적 · 정책적 · 경제적 · 지역적 타당성 검토 지원 ▪ 기획단계 : 적정 발주 및 공모방식, 지침 적정성 자문 ▪ 기획단계 : 사업발굴 및 적정안 선정, 사업계획서 등 컨설팅 ▪ 설계단계 : 학교건축, 공공건축 디자인 자문
Facilita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단계 : 사업발굴, 기획, 설계, 운영 등 추진단계별 업무 지원 ▪ 설계단계 : 사용자참여설계(구성원 의견 수렴 및 설계안 도출) ▪ 공사단계 : 설계변경 적정성, 학생환경보호 적정성 검토 ▪ 전체단계 : 지자체, 교육청 등 담당자 전문성 부족시 보완역할
Coordina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단계 : 참여주체, 설계자, 시공자, 운영자의 논의구조 및 의사결정 지원 ▪ 전체단계 : 참여주체간 또는 부서간 이견과 갈등 조정 ▪ 전체단계 : 단계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전체단계 : 참여주체 및 관계자간 교육/연수/네트워킹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사업추진단계별 전문기관 및 퍼실리테이터 지원방안



S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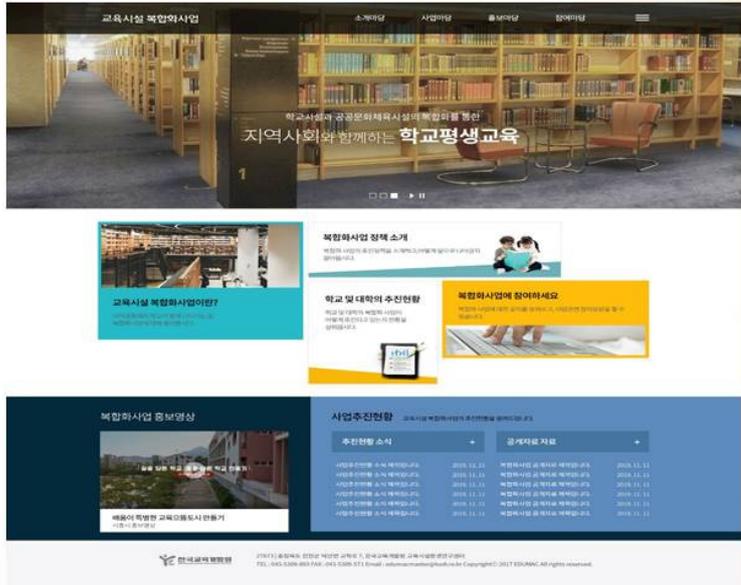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전문기관 지원 : 학교시설 복합화 포털사이트(URL : (가칭) <http://학교복합화.kr>)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복합화 관련 기초자료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 각각 관리, 참고자료 확보 애로
- 사업발굴, 기획, 설계, 운영 등 복합화 추진단계별 사례, 관련 규정, Q&A 등 기관 담당자에 대한 업무 지원 창구 부재
-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이동으로 학교복합화 관련 축적된 경험 부족 및 DB 관리 미흡

☑ 예시 이미지



☑ 포털사이트 운영

- URL : (가칭) <http://학교복합화.kr>
(2020.01월중 오픈 예정)
- 정책홍보, 관련 규정, 참고자료, 사례, Q&A 등
-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선정사업별 추진현황 및 성과관리, 소통의 장 제공

4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체계(안)

전문기관 지원 : 학교시설 복합화 실무자클럽 구성 및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복합화사업 관련 교육청/지자체 간 사업추진 노하우 및 절차 등 정보공유 필요
- 복합화사업 추진 관련 진입장벽 해소 및 관련 제도/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플랫폼 구축

☑ 구성(안) 및 운영(안)

- 구성(안) :
 - 2020 생활S 학교시설복합화 선정기관 담당자 또는 경험자
 - 교육청/교육지원청 담당자 1~2인 (학교설립 또는 시설)
 - 시군구청 문화,체육,복지,육아 등 담당 2~3인
- 운영(안) :
 - 전문가관 및 전문가풀 중심의 워크숍 개최
 - 학교복합화 단계별 매뉴얼 및 지침 참여
 - 우수사례 및 개선사례집 작성
 - 선진국 우수사례 연수 및 전파교육

전문기관 지원 : 학교시설 복합화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 (2020년 3월중 작성/배포)

☑ 지원 필요성 및 내용

- 다양한 복합화 유형별 지침 미흡
- 추진단계별, 담당자별 추진 업무, 필요서식 등 가이드라인 개발
- 추후 감사 등을 대비한 DB관리 TOOL 등

SOC

감사합니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구형수 책임연구원 / 국토연구원



I. 우리 도시의 불편한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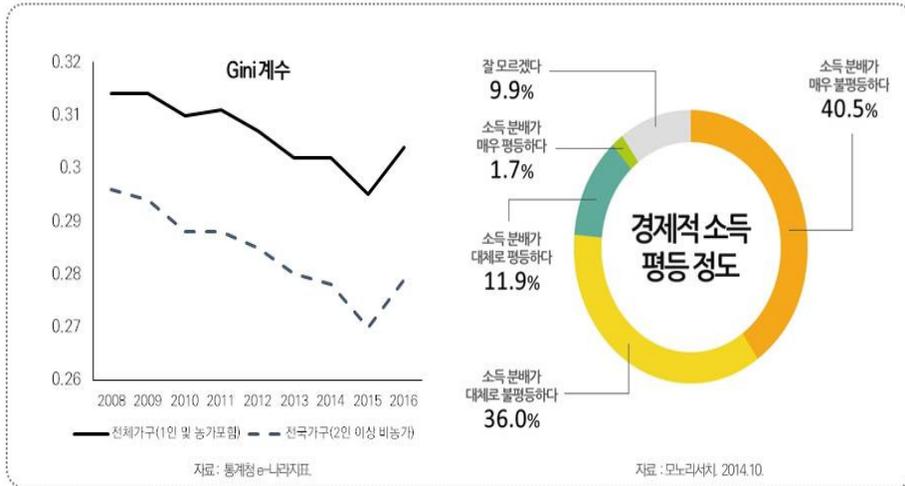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우리나라 국민 76.5%, '소득 분배 불평등' 느껴
 평등 13.6% 불과... 상대적 빈곤 인식 감안해도 높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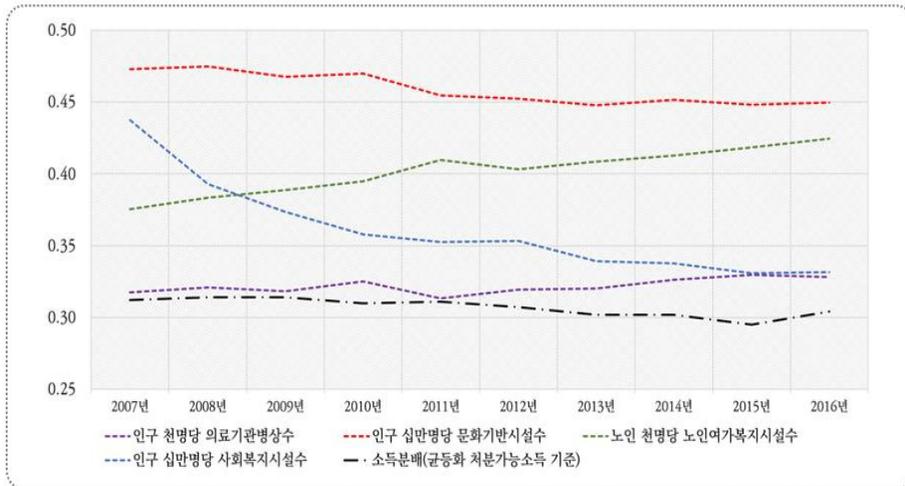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소득 분배보다 '생활SOC'의 '공간적 불평등'이 더 심각
 문화기반시설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불평등 수준은 2007년 이래 계속 증가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생활SOC 향유’에 대한 ‘사회·공간적 배제’
대도시아파트 단지과 지방(농촌) 주거지 간 생활SOC 향유 수준 양극화



여기 어디? 고품격 아파트 커뮤니티!

여기 어디? 고품격 아파트 커뮤니티!
최근 아파트 단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여기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소개한다.

도시보다 풍성한 농촌... “주변에 운동할 만한 곳 없어서”

강한 철원, 인제, 전국 비만율 1~2위
슬라주 마시고 한 숟가락 슬라한 맛
제비말 먹고 바로 잠드는 슬라도 한발
대부분 자가용 이용-걸기조차 안해
생활SOC 향유 못 있어 건강지킴이
생활SOC 향유 못 있어 건강지킴이



VS

비만은 농촌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보다 풍성한 농촌... “주변에 운동할 만한 곳 없어서”
농촌 주민들은 도시와 달리 운동할 곳이 부족하다.

자료: 동아일보 2019.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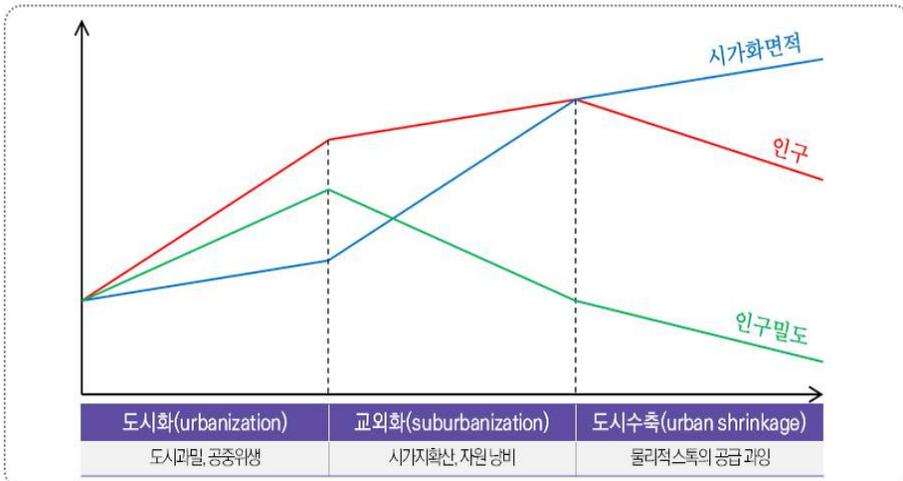
자료: 농민신문 2018.10.1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인구감소로 빈 공간이 넘쳐나는 ‘도시수축’ 현상 보편화
최근 많은 도시가 《도시화》→《교외화》→《도시수축》 단계를 거치는 중



자료: 구형수 외, 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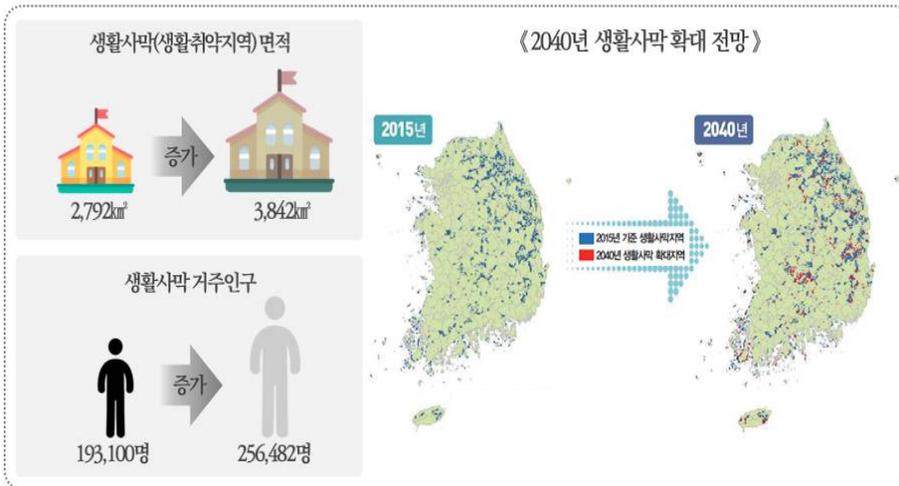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생활SOC 접근성 취약지역’ 고착화 추세

《인구 감소》→ 《시설수요 감소》→ 《시설공급 저조》→ 《인구 감소》의 악순환 지속



자료: 임은선 외, 2018.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국토정책 Brief, 제670호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생활SOC’

주민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녹지지역에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도 저조



자료: 구형수 외, 2019. 지역일체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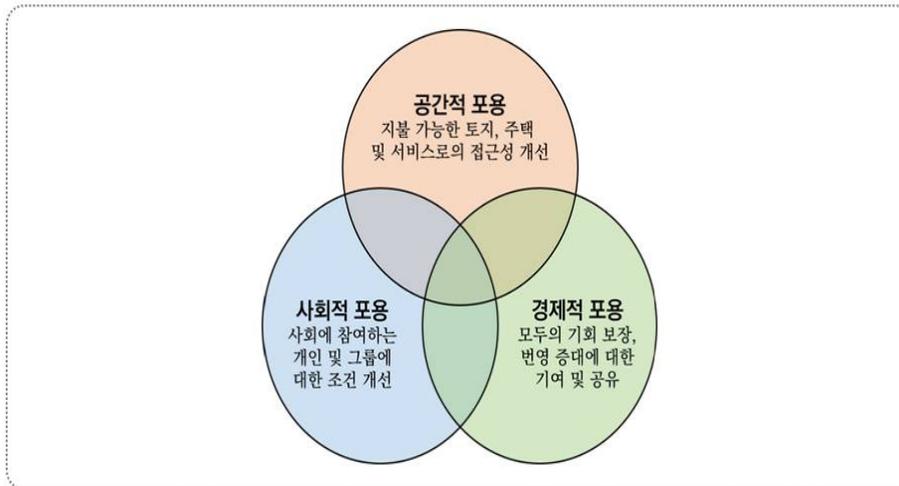
II. 생활SOC와 공간복지 실현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공간복지?’ 취약계층[사회복지]보다 ‘취약지역’에 주목
 포용도시(Inclusive Cities)의 한 축인 공간적 포용(Spatial Inclusion)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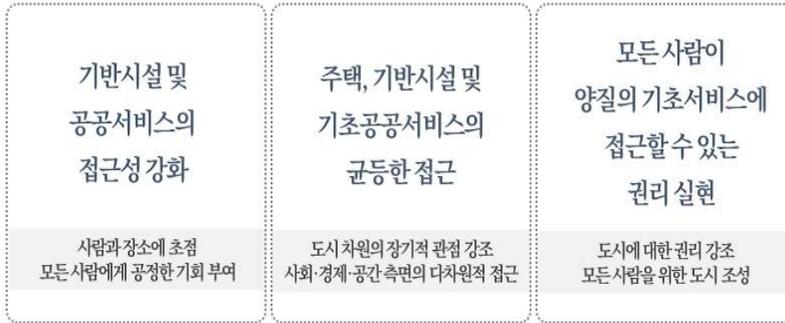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2015,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생활SOC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 포용도시(Inclusive Cities)

자료: 구형수, 2018. 포용성장을 위한 축소도시의 생활서비스 확보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Research Brief, 제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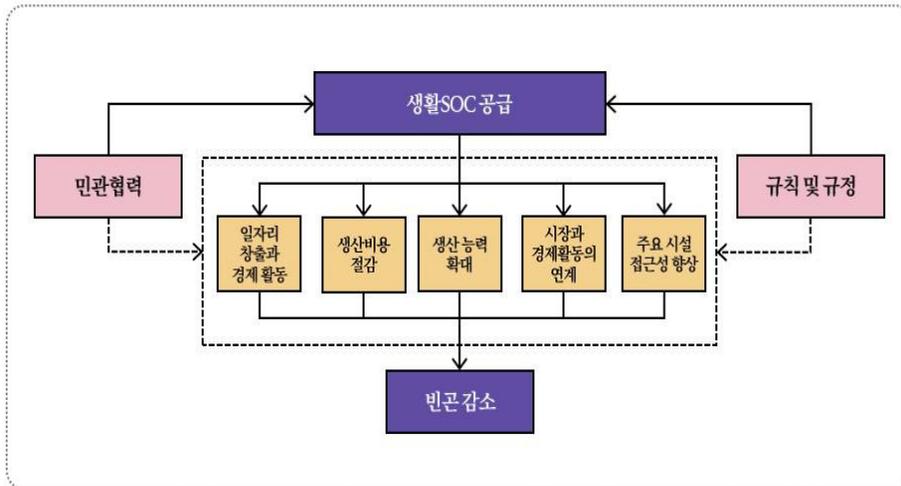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취약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통해 ‘공간복지 실현’ 가능

생활SOC에 대한 접근이 특정지역(계층)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사회적 배제도 초래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2012. Infrastructure for Supporting Inclusive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Asia.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Ⅲ. 현 정부의 생활SOC 정책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생산SOC’에서 ‘생활SOC’로 투자방향 전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SOC에서 탈피... 국민 삶과 직결되는 SOC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생활 SOC의 개념	생활 SOC의 범위				
<p>생활 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 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p> <p>→ ‘국무총리 훈령(제2조)’에서는 생활일차형 사회기반시설 (생활 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이라고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일차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p>→ 넓게 해석할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개념</p> <p>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 SOC(Social Overhead Capital)</p> <table border="0">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편익 증진시설 - 의료(의료장비, 의료, 전기 등) - 문화·체육·여가·관광·복지시설 등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효용증진, 이용자 편의시설 - 저층형 교통차량, 배리어프리 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기본전제인 안전시설 - 교통안전, 화재예방안전, 화재 및 재난안전 등 </td> </tr> </table> <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 따른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편익 증진시설 - 의료(의료장비, 의료, 전기 등) - 문화·체육·여가·관광·복지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효용증진, 이용자 편의시설 - 저층형 교통차량, 배리어프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기본전제인 안전시설 - 교통안전, 화재예방안전, 화재 및 재난안전 등 	<p>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p> <p>여가 활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체육인프라 확충(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2 문화시설 확충(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구예술타) 3 취락지역 기반시설 확충(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p>따뜻하고 건강한 삶터</p> <p>생애 돌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체계) 5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노인 요양시설, 고령자 복지주택) 6 공공의료 시설 확충(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p>안전하고 깨끗한 삶터</p> <p>안전·안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안전한 삶터 구축(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8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미세먼지 저감술, 휴양림·야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편익 증진시설 - 의료(의료장비, 의료, 전기 등) - 문화·체육·여가·관광·복지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효용증진, 이용자 편의시설 - 저층형 교통차량, 배리어프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기본전제인 안전시설 - 교통안전, 화재예방안전, 화재 및 재난안전 등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여러 부처로 분절된 생활SOC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생활 SOC 3개년 계획 수립 (19. 4. 15)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19. 6. 12~)
<p>목표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p> <p>기본원칙 지역주도 원칙, 신속성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중앙지원</p> <p>지원규모 3년 동안 재정 30조원, 지방비 투자규모는 18조 3000억원 지원</p>	<p>추진1 지자체 주도 희망시설의 복합화 촉진을 위해 사업 투자물량 사전조사부터 정산까지 범부처 공동지원</p> <p>추진2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국·공유지 활용 등 지자체 부담 완화</p>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IV. 해외의 생활SOC 정책 사례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01. 《영국》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정책 개요

- ◎ 1990년대 영국 농촌 지역의 다양한 문제 대두
 - 광우병 창궐, 농촌 양극화 및 사회적 배제, 지역서비스 공급 부족, 일자리 부족 등
- ◎ 2000년 농촌 서비스 기준이 담긴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 발간
 - 어떤 지역에서도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농촌 서비스 기준의 목적
 -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최저기준(national minimum) 표방

주요 내용

- ◎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기준 제시
 - 서비스 기능 및 시설의 폐지 방지: 학교, 우체국, 우편배달 서비스, 철도 등
 - 접근성 수준 지표: 보육, 버스, 1차 진료기관, 사회서비스, 법률서비스, 도서관, 구직센터 등
 - 반응(응답) 시간: 앰블런스서비스, 소방서비스, 경찰서비스 등
- ◎ 2007년까지 농촌 서비스 기준 범위의 지속적 간소화 추진
 - (00) 14개 부문 35개 기준 ⇒ (04) 11개 부문 33개 기준 ⇒ (06) 8개 부문 11개 기준
 - 2007년에 농촌 서비스 기준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권 지방 이양

자료: 송미령 외,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2006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항목별 달성 목표

구분	내용
교육 및 아동서비스	1. 2010년까지 모든 농촌지역 학교에 핵심적인 확대서비스 및 활동 제공
	2. 2008년 3월까지 2,400개의 'Sure Start 아동센터' 설립 (낙후지역의 40% 커버)
	3. 농촌학교 폐쇄에 대한 억제
광대역 통신	4. 2006년까지 모든 학교에 광대역 통신망 연결 (학교의 90% 커버)
사회적 돌봄	5. 노인 취약층 주민들이 가능한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과 독립성 개선 (2008년까지 해당 지원을 받는 노인층 비율 34%까지 증대)
우체국 서비스	6. 2006년까지 농촌 우체국 네트워크가 유지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폐쇄 방지
보건	7. 2005년 12월부터 모든 병원이 환자의 편의에 따라 예약
	8.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환자들이 24시간 내 1차 진료 전문가에게 48시간 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인터넷 접속	9. 2005년까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보장
긴급 서비스	10(a). 구급차 응답시간 (위급 시 8분 내 75%, 그 외 19분 내 95% 도달)
	10(b). 소방 서비스
	10(c). 경찰 서비스
교통	11. 1시간 이하 간격으로 운행되는 버스서비스에 도보로 10분 내 거리에 거주하는 농촌인구 비율을 37%에서 2010년 50%로 증대

자료: 송미령 외,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02. 《독일》 전 국토의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정책

정책 개요

- ◎ 1965년 등가치적 생활여건 개념의 근간인 「국토계획법」 제정
 - 동법 제2조에 독일 전체의 생활조건이 '최소한 동일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
- ◎ 1975년 등가치적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연방국토계획프로그램」 수립
 - 전국을 38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10만 이상 인구 중심지 1개 이상 포함 및 중심지 기능 부여

주요 내용

- ◎ 거점을 기준으로 각종 생활기반시설을 전국에 균등 배치
 - (하위중심지) 근린권 기초서비스, (중위중심지) 대중교통 60분 / 인구 2만 이상 고차서비스, (상위중심지) 자동차 60분 / 대중교통 90분 / 인구 10만 이상 광역서비스 공급
- ◎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역생존배려전략' 추진
 - 공공시설 이용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의 생활여건 악화 방지 및 등가치적 생활여건 유지
 - 적절한 교통수단을 통해 생존배려서비스(에너지, 상하수도, 통신, 대중교통, 우편, 폐기물 및 폐수 처리, 문화, 의료·보건, 보육, 교육, 노인 돌봄, 재난 구호 및 소방 등)의 접근성 보장

자료: 송인성, 2012. 독일의 전 국토의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정책, 지역과 발전: 구형수 외, 2019.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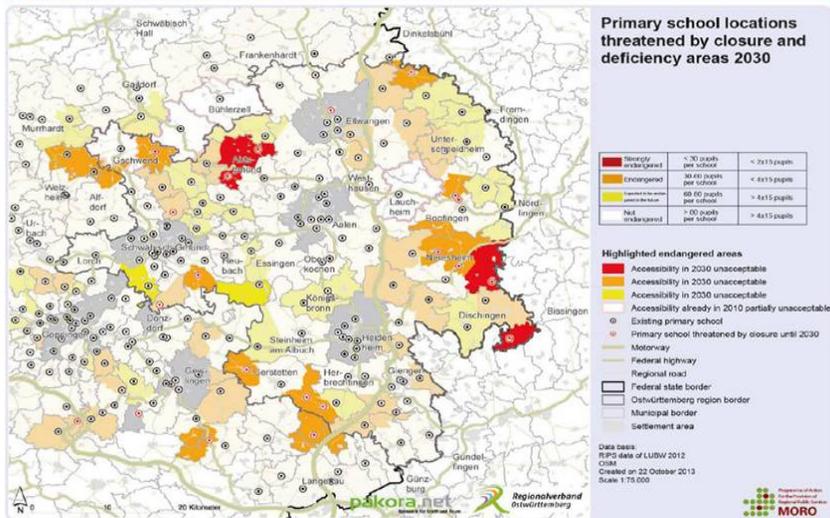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2030년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될 초등학교 위치 및 결핍지역(오스트뮈르템베르크)



자료: The 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BBSF).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03. 《일본》 입지적정화계획

정책 개요

- ◎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로 인한 생활기반시설 폐지 문제 대두
 - 2008년 이후 총 인구 감소... 도시기능 존속에 요구되는 권역 인구 확보의 필요성 제기
- ◎ 2014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입지적정화계획 제도화
 - 국토형성계획(2015.8.)의 'Compact + Network' 공간전략을 도시 차원에서 구현하고, 공공시설 통합, 재배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

주요 내용

- ◎ 거주유도구역 및 도시기능유도구역(유도시설 포함) 설정
 - (거주유도구역) 구역 내 거주 유도를 통해 인구밀도를 유지하여 생활서비스 확보
 - (도시기능유도구역) 도시거점으로 도시기능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도모
- ◎ 거점 내 도시기능 입지유도를 위한 다양한시책 추진
 - (유도) 물리적 사업에 지원(도로 정비, 버스환승시설 정비 등), 금융 인센티브(세제 감면, 민간 사업자의 유도시설 운영비용 지원 등) 제공
 - (규제) 특정용도제한지역(백지지역 내), 개발허가제도(거주유도구역 외 주택입지 규제) 등

자료: 구령수 외, 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거점별 필요시설 설정 사례

	필요시설		
	중심거점	지역거점	생활거점
행정	청사	분소	서비스센터
집회	시민회관	공민관	집회소/아동관
복지	종합복지센터	노인센터	노인안식처
육아	육아센터	보육소	보육소/아동관
교육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의료	시민병원	병원	진료소
상업	백화점	대형슈퍼	슈퍼 등
금융	은행/중앙우체국	우편국분국	현금인출기

자료: 구령수 외, 2016. 전개서.

공공시설(PRE)의 유효 활용 방안

일본성이 높은 A 학교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용처비율이 높고 이용자가 적은 노후 B 공민관 일대성이 옮겨지는 노후 C 노인복지관을 복합화하여 다세대 커뮤니티 거점으로 정비.

자료: 세계도시정보(UBIN).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01. 생활SOC '접근·이용'에 대한 '최저기준' 설정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생활SOC 유형과 공급기준 설정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
(영국 농촌서비스기준, 독일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정책)

02. '수요맞춤형' 생활SOC '공급·배치계획' 수립

“지역의 시설 수요에 기반하여 거점별 생활SOC 설치 목표 설정 및 접근성 강화전략 마련”
(독일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정책, 일본 입지적정화계획)

03. 생활SOC '복합화'를 통한 '시설 활용도' 제고

“접근성·유지비용·이용현황조사 후, 불필요한 시설을 폐지하여 생활거점에 복합시설 공급”
(일본 입지적정화계획)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V. 주요 이슈와 향후 정책과제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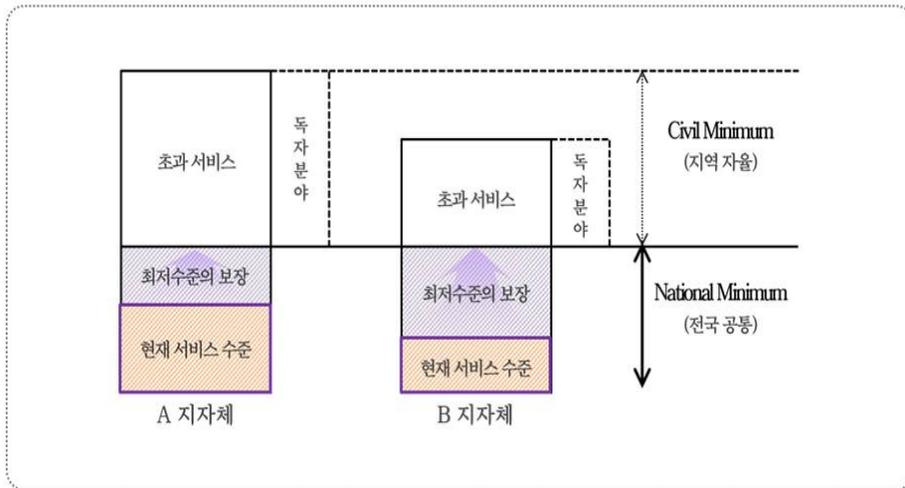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01. 생활SOC '접근·이용'에 대한 '최저기준' 설정

중앙정부는 국가최저기준(National Minimum), 지자체는 지역최저기준(Civil Minimum) 설정



자료: 구형수 외, 2018.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현재는 생활SOC에 대한 '국가최저기준'만 마련된 상태

도시[기초생활인프라]국가적 최저기준 외 농어촌[농어촌 서비스]기준에 적용되는 기준 간 통합적 운영 필요

구분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농어촌서비스기준
근거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시설범위	교육, 학습, 돌봄, 의료, 체육, 휴식, 생활편의, 교통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활용방안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포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주요특징	공간위계(마을/거점)에 따라 차별화된 시간거리(도보/차량) 기준 제시	핵심항목(농어촌 공통)과 선택항목(지자체 자율)으로 구분된 서술형 기준 제시

자료: 구형수 외, 2019. 전제서.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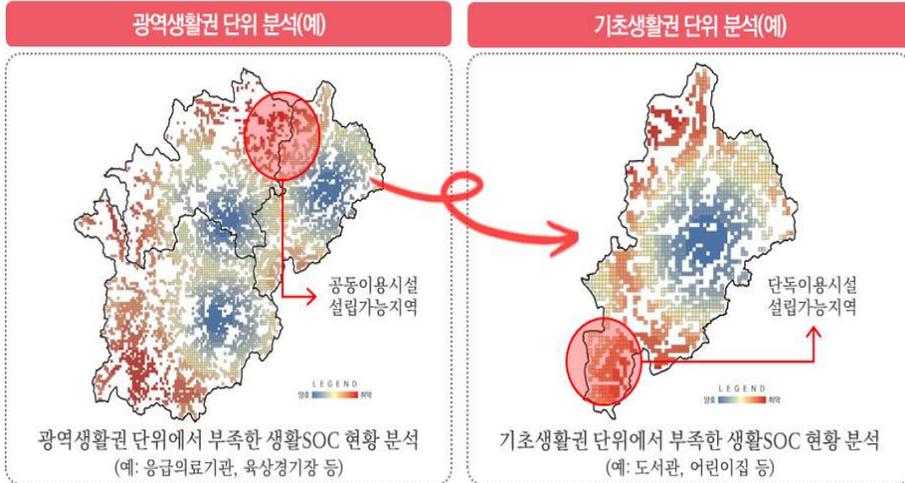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Civil Minimum'에 기초한 '생활SOC 사각지대' 분석 제도화

광역생활권에 대해서는 복수 시·군·구, 기초생활권에 대해서는 1개 시·군·구 단위로 분석



자료: 구형수 외 2019. 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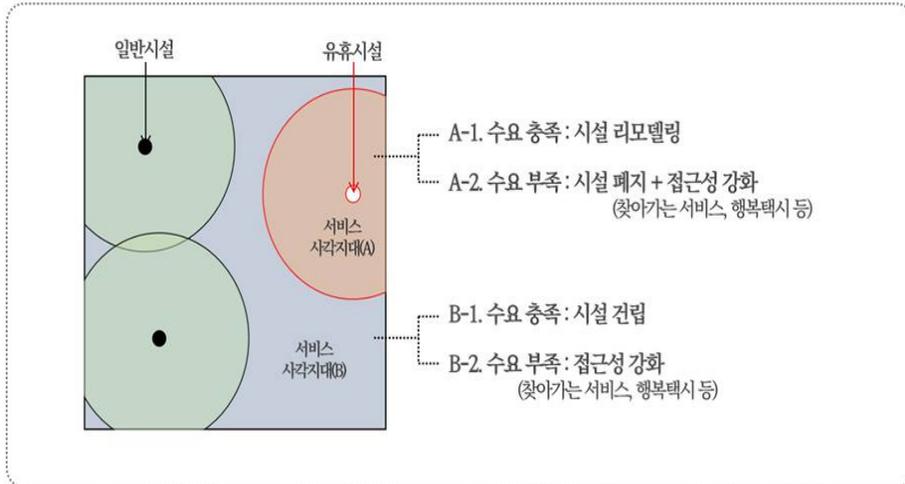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02. '수요맞춤형' 생활SOC '공급·배치계획' 수립

지역의 인구변화, 유희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SOC 사각지대 유형별 차별화된 공급방식 마련



자료: 구형수 외 2018. 전에서.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도시전체에 대한 '생활SOC 공급·배치계획' 제도의 실효성 미흡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소지역별 시설수요, 접근성, 공급현황에 대한 조사 부족

구분	도시·군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근거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도시 전체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도시 제외)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에 따라 틀 이상의 도시 가능)
시설범위	도시·군계획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수립내용	목표연도별 시설물량계획 (예: 사회복지시설, 2020년 1개 → 2025년 1개 → 2030년 1개 → 2035년 1개)	기초생활인프라 복합화 공급방안 (공급방안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

자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2018.12),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2014.9),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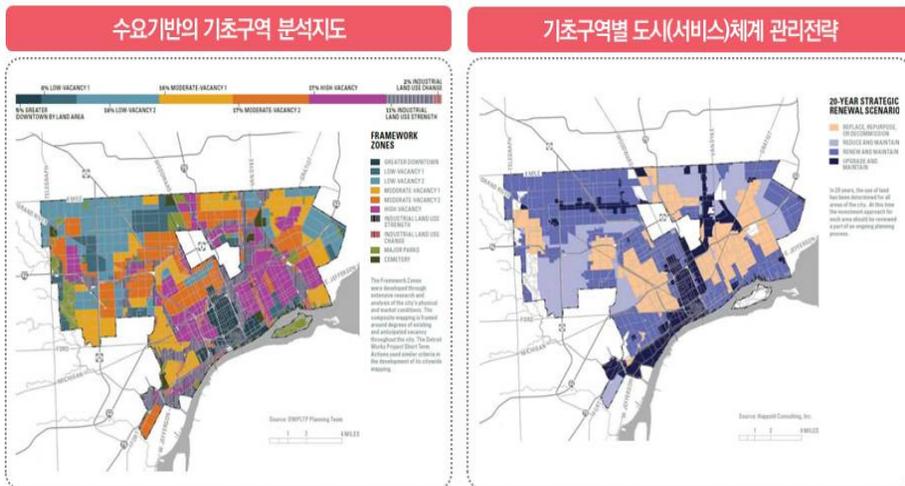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근린단위의 수요 분석에 기초한 '생활SOC 공급·배치계획' 수립
디트로이트에서는 근린단위의 공실수준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시설의 관리전략 마련



자료: Detroit Works Project, 2013, Detroit Future City.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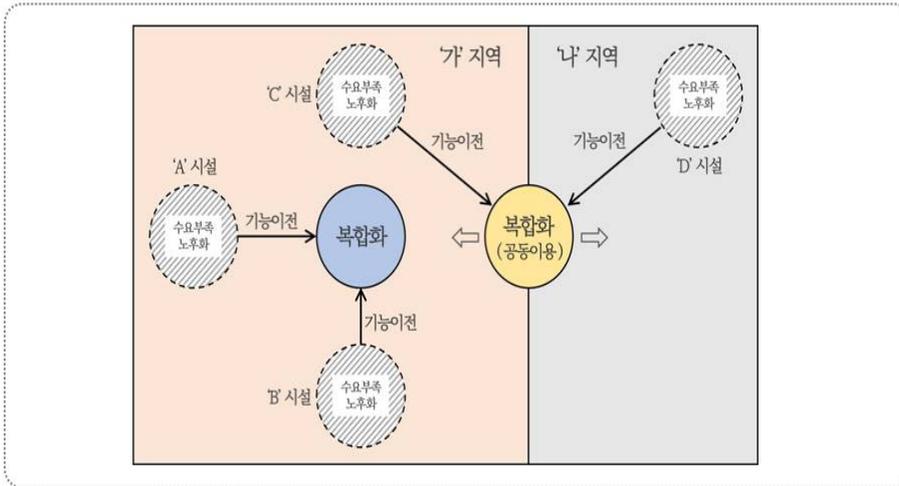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03. 생활SOC '복합화'를 통한 '시설 활용도' 제고

시설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필요시설을 한 곳에 집적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



자료: 구형수 외, 2019, 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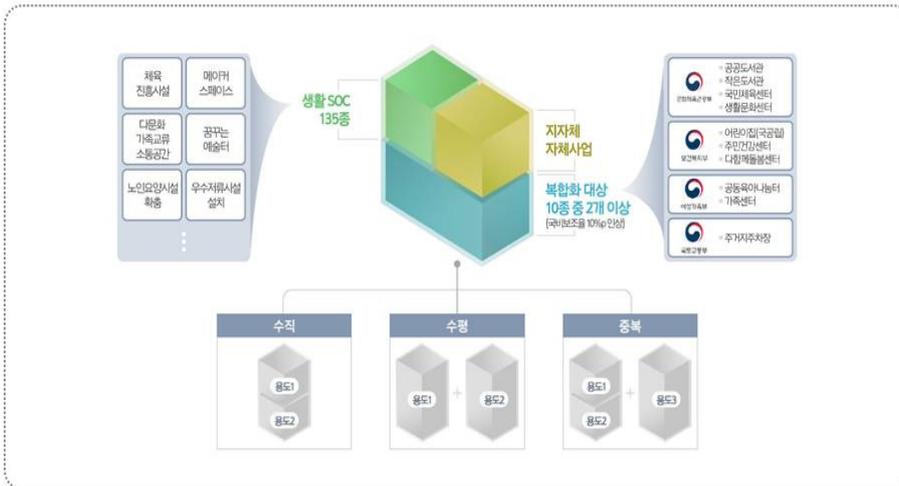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지역 주도, 중앙정부 지원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중

다양한 국고보조사업(10종)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복합화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접근성 강화’사업 연계 필요

생활SOC와 생활SOC, 이용자와 생활SOC 간 기능적·물리적 연계 강화

구분	생활SOC ↔ 생활SOC		이용자 ↔ 생활SOC	
	입체·복합 생활SOC 공급	생활SOC 간 접근도로 연계	찾아가는 생활SOC 서비스 제공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주요 내용	입체도시계획제도 등을 활용하여 상이한 기능을 가진 복수의 생활SOC(예: 도로+공원+도서관)를 입체·복합화하는 사업모델	산발적으로 분포하지만, 기능적 연계가 효과적인 복수의 생활SOC 간 도로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모델	시설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행이 곤란한 주민들을 위해 거주지와 주요 생활SOC 사이를 예약제로 운영하는 대중교통서비스
관련 사례	【Big Dig Project, Boston】 	【Exhibition Road, London】 	【Robi Rolling Library, Heilbronn】 	【Bel-Bus, Limburg】

생활SOC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 ‘공간복지(Spatial Welfare)’ 실현

자료: 구형수 외 2019. 전에서.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감사합니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¹⁾

구형수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1. 우리 도시의 불편한 현실

1) 생활수준의 불평등 문제

사람들은 소득수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의문을 가진다. 하지만,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연도별 변화(2008년~2016년)를 살펴보면,²⁾ 2016년을 제외하고선 불평등 수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사람들의 심리적 인식에 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2014년 모노리서치에서 우리나라 국민 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전체의 76.5%에 달했다. 비록 이러한 결과가 사람들의 상대적 빈곤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치상으로는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바로 생활수준의 공간적 불평등이다. 지니계수로 비교했을 때 지역 간 생활SOC 공급 수준의 불평등은 개인 간 소득분배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문화생활의 향유 측면에서 공간적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최근 10년 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의 지니계수 값이 0.448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시설 중 하나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에 대한 지니계수가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노인복지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1) 본 원고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저자의 기존 저작물의 내용을 발췌하여, 세미나 발표용으로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2) 지니계수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식이 2017년부터 가계부 기장 방식에서 조사표 방식으로 바뀐 것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의 변화만 살펴보았다.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활수준의 불평등 문제는 주거지 간의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81.2%)가 단독·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의 만족도(67.1%)보다 14.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격차는 10년 전 12.1%p였던 것에 비해 심화되었다. 실제로 대도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고품격 아파트’를 내세우면서 리조트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지방의 농촌 주거지에서는 변변한 생활체육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의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2) 도시수축에 따른 생활사막의 확산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수축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인구 2만 이상 유럽도시의 약 42%에서 수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개 지방중소도시가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인구와 시가화면적이 동시에 증가하는 ‘도시화단계’, 인구증가보다 시가화면적의 확대가 더 두드러져 인구밀도가 감소하는 ‘교외화단계’, 시가화면적이 증가 혹은 유지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수축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도시수축단계에 있는 지역에서는 건조 환경 및 기반시설의 공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게 된다. 즉, 세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공공서비스 유지·관리비용은 증가하게 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 공공서비스의 운영이 중단된다.

모든 시설은 수익이 발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가 존재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축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생활SOC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시설이 유희화되거나 폐쇄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생활SOC가 폐지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생활사막³⁾의 면적이 2015년 2,792km²에서 2040

3) 생활사막(생활SOC 접근성 취약지역)이란 생활SOC에 대한 종합 접근성을 나타내는 생활취약지수(LVI) 값이 ‘2’ 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년 3,842km²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생활 SOC 공급에 대한 공간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생활SOC를 공급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이용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시설이 많다는 게 현실이다. 2017년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 건립된 대규모(설치비 100억 이상) 공공시설의 절반 이상이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용도지역별 연간 평균 이용자수를 분석해 보면, 주거지역 191만 명, 상업지역 126만 명, 공업지역 116만 명 순으로 감소하여 녹지지역에 이르러서는 78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녹지지역에 공공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시설 건립 시 부지 가격이 저렴하고, 매입 시 재산권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곳을 입지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 생활SOC가 건립된다면 재정 투입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 생활SOC와 공간복지 실현

1) 공간복지란?

공간도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는 곧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던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직결된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제35조제1항)하고 있으며, 국토기본법에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국토계획이 달성해야 할 3대 가치 중 하나로 규정(제3조)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가 공간(이 제공하는 편익)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대부분의 생활서비스는 시장 논리에 따라 수익성이 확보되는 일부 성장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그러한 공간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외지역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간복지라

고 볼 수 있다. 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취약‘지역’에서 찾는다든 점에서 취약‘계층’에 주목하는 사회복지와 차별된다. 현재 여러 국가의 경제발전 이면에 사회적 배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기회의 공간적 배제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공간복지는 이러한 공간적 배제 문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포용도시의 한 축인 공간적 포용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제사회의 동향: 생활SOC에 대한 접근권 확보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인간정주회의(UN-HABITAT) 등의 국제기구에서 전술한 포용도시를 조성하거나, 포용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 확보이다.

우선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는 포용성장을 위해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시민들의 경제적 기회 및 장기적이면서 풍족한 삶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는 포용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사회적·경제적·공간적 측면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간적 측면에서는 주택, 기반시설 및 기초공공서비스의 균등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도 포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양질의 기초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서비스는 여러 소외집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접근 및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생활SOC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생활SOC 소외지역 혹은 취약지역에는 사회취약계층(빈곤층,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단지 이러한 취약지역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SOC에 대한 접근이 특정지역(계층)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공간적 배제를 넘어 사회적 배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계층 이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어디서 태어나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나의 미래가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어떤 지역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요즘과 같은 지식사회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얻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나 도서관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넘어 좀 더 나은 삶의 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생활SOC 접근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생활SOC와 같은 기초서비스 공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적재적소에 공급된 생활SOC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현 정부의 생활SOC 정책

1) 생활SOC의 개념과 범위

생활SOC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⁴⁾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사회기반시설이란 직접 생활 활동에 동원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정의된 사회기반시설을 지칭한다.

생활SOC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과 차별된다.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설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회기반시설은 주로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대규모 시설(철도, 항만, 댐 등)을 의미했던 반면에 생활SOC는 국민 삶의 만족도

4) 국무총리 훈령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필요한 모든 시설이 생활SOC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기반할 경우 국민생활 편의 증진시설과 안전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체육인프라(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문화시설(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취약지역 기반시설(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어린이 돌봄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체계), 취약계층 돌봄 시설(노인요양시설,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의료시설(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안전시설(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생활환경 시설(미세먼지 저감숲, 휴양림·야영장)이 있다.

2) 생활SOC 정책의 추진경과

정부는 2018년 8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18.8.27)’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도에만 8.7조원을 생활SOC 확충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발표는 과거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SOC에서 국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SOC로의 투자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후 2019년 4월에는 생활SOC 추진단(국무조정실)에서 2022년까지의 생활SOC 공급계획과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고,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창의를 적극 장려·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는 한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수요가 높은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대폭 확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고, 각종 심사과정을 거쳐 현재 172개 시·군·구의 289개 대상지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4. 해외의 생활SOC 정책사례

1) 영국 : 농촌 서비스 기준⁵⁾

영국의 농촌에서는 1990년대 들어 광우병 창궐, 농촌 양극화 및 사회적 배제, 지역서비스 공급 부족,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2000년에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를 발간하고, ‘살아 있는 농촌’, ‘일하는 농촌’, ‘보존(보호)되는 농촌’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살아 있는 농촌’ 부분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이슈로 다루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농촌 서비스 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이는 곧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생활서비스에 대한 국가최저기준을 표방한 것이었다.

영국의 농촌 서비스 기준의 특징은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우선 준립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 우체국, 우편배달 서비스, 철도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능 및 시설의 폐지 방지를 목표로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용하는 보육, 버스, 1차 진료기관, 사회서비스, 법률서비스, 도서관, 구직센터 등에 대해서는 접근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을 설정했다. 끝으로, 서비스 수요자까지의 전달체계가 중요한 앰블런스서비스, 소방서비스, 경찰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반응(응답)시간 형태의 기준을 마련했다.

영국에서 농촌 서비스 기준이 도입될 당시에는 14개 부문에 대한 35개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그 범위를 점차 간소화했다. 우선 2004년에 11개 부문의 33개 기준으로 축소되었다. 이 당시에는 교육, 통신, 교통, 도서관, 보건, 사회보호, 긴급서비스, 법률서비스, 복지, 고용, 세금 등의 부문에 대해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후 2006년에 이르러 8개 부문 11개 기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 과정에서 도

5) 영국사례의 일부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송미령 외(2009)의 연구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서관, 사회보호, 법률, 고용, 세금 등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외되어 교육 및 아동서비스, 광대역 통신, 사회적 돌봄, 우체국 서비스, 보건, 인터넷 접속, 긴급 서비스, 교통 등의 부문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의 개편 작업을 끝으로 2007년부터는 서비스 기준 설정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게 된다.

2) 독일 : 전 국토의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정책⁶⁾

독일에서는 1965년에 등가치적 생활여건 개념의 근간이 되는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제2조에 국토계획의 목표를 독일 전체의 생활조건이 ‘최소한 동일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로써 ‘등가치적 생활여건’ 개념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원래 여기에는 ‘동일한 생활여건’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199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등가치적 생활여건’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에는 ‘등가치적 생활여건’의 보장을 위한 「연방국토계획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서는 전국을 38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단위지역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갖는 중심지 하나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중심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전국에 균등하게 배치하여 거점과 그 인근지역이 동일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상위중심지는 자동차로 60분, 대중교통으로 9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 10만 이상인 지역, 중위중심지는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 2만 명 이상인 지역, 하위중심지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 5천 명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존배려지역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에너지, 상하수도, 통신, 대중교통, 우편, 폐기물 및 폐수 처리, 문화, 의료·보건, 보육, 교육, 노인 돌봄, 재난 구호 및 소방 등 생존배려서비스에 대한 이용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생활여건 악화를 방지하고, ‘등가치적 생활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적정한 교통수단을 통해 생존배려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주민들에게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

6) 독일사례의 일부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송인성(2012)의 연구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용으로 다루고 있다.

3) 일본 : 입지적정화계획

일본에서는 지방 도시의 인구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간호·복지 등 생활서비스 유지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총 인구는 2008년 1억 2천 80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1억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일본 전역에서 무거주화 지역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기능을 존속시키기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권역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2014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생활서비스 유지·확보 전략으로 입지적정화계획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의 인구를 기초로 거주기능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의 배치·유도 및 대중교통기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거주유도구역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도시기능의 효율적 입지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거주유도구역’은 생활서비스와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거주지의 입지를 유도하는 지역이며, ‘도시기능유도지역’은 의료·복지·상업 등 필수시설의 입지를 유도하여 각종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도시기능유도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는 (1) 기차역에 가까운 도시기능(업무·상업 등)이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 (2)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 (3) 도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이다. 유도시설은 주민 공동의 복지와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능유도구역에 입지를 유도할 시설로서 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성과 장래인구추계, 시설의 충족 여부 및 배치를 감안하여 정한다.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 정비, 버스 환승시설 정비 등의 물리적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유도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유도시설 운영비용 지원 등의 금융상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에 「마을 만들기를 위한 공적부동산(PRE)의 유효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여기서는 거점(중심/지역/생활)별로 필요한 시설(도시기능) 설정하고, 지자체

가 보유한 공적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재배치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 이용현황, 유지비용 등의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불필요한 시설을 하나의 복합시설에 통합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4) 해외 정책사례의 시사점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외의 생활SOC 정책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에서는 생활SOC 접근·이용에 대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였다. 독일에서도 우리가 생활SOC로 간주하는 시설 혹은 서비스의 대부분을 생존배려서비스로 분류하고,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생활여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수요맞춤형 생활SOC 공급·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지역의 인구와 시설의 분포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생활SOC의 수급상황 및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셋째, 생활SOC 복합화를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수요가 부족한 곳에 위치한 유희시설까지 유지·관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시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서로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복합화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에서는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SOC 복합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5. 주요 이슈와 향후 정책과제

1) 생활SOC 접근·이용에 대한 최저기준 설정

생활SOC 접근·이용에 대한 최저기준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가최저기준(National Minimum)’과 지방의 선택사항인 ‘지역최저기준(Civil

Minimum)')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최저기준이 국민 모두에게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최저기준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더 나은 수준의 삶을 보장하고자 노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최저기준이 전국적 단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최저기준은 개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뉴딜사업)',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같이 생활SOC와 관련된 국가최저기준만 마련된 상태이다.

우선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⁷⁾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 시설범위는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여 도보이용이 가능한 마을단위 11개 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단위 7개 시설이다.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기초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⁸⁾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비스 범위는 핵심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된다. 핵심항목은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서비스로서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7대 부문 17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선택항목은 지역 여건, 실태,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지자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기준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처럼 별도로 운영

7)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2013년에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개 부문 11개 시설에 대해서만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표현형식도 '인구 3만 명당 1개소'와 같은 원단위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단위 형식의 기준은 시설 물량을 산출하는 데에는 용이하나 시설을 어디에 입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수 없어 2018년 12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재수립하면서 원단위 형태에서 '도보 10분'과 같은 접근 소요시간 형태의 기준으로 개편하였다.

8)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법 제3조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있다. 2011년 제도 도입 당시의 서비스 범위는 8대 부문 31개 항목이었으나, 2015년부터 핵심항목과 선택항목으로 이원화되었다.

되고 있는 기준을 정비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적용·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 항목의 정합성도 높여야 하고, 동일한 척도로 각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국가최저기준을 이미 달성한 시설에 대해 지역 여건(인구구조, 이용수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최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가최저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상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광역 및 기초생활권 단위로 접근성 기반의 생활SOC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인접 시·군·구가 공동으로 건립·활용할 수 있는 생활SOC의 경우 광역생활권 단위, 단일 시·군·구 경계 내에서 이용하는 생활SOC의 경우 기초생활권 단위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광역 및 기초생활권을 소지역(집계구, 격자 등)단위로 구획한 후, 생활권별로 생활SOC 사각지대를 파악하도록 한다.

2) 수요맞춤형 생활SOC 공급·배치계획 수립

생활SOC 사각지대에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요구되는 생활SOC에 대한 공간(재)배치, 공간구조와 연계한 접근성 강화 전략, 자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때 모든 생활SOC 사각지대에 대해 시설 공급이라는 단편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소지역 단위의 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차별화된 개선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생활SOC 사각지대 중에서 배후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을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생활SOC 사각지대로 분류되더라도 인근에 유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전환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생활SOC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는 도시·군기본

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그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계획의 초점이 용도별 토지면적의 배분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데 맞추어져 있고, 소지역(집계구, 격자 등) 단위로 도시의 전반적인 시설 공급·배치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특히,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시전체 혹은 생활권 단위의 장래 인구만 추정하여 소지역 단위의 시설 수요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접근성이 강조되어야 할 생활SOC 공급에 관한 부분도 총량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디트로이트는 1980년대 이후의 자동차 산업 붕괴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근린지역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였다. 즉, 모든 근린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향상·유지, 갱신·유지, 감축·유지, 유지, 대체·용도변경·해체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적용하였는데, 우리도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처럼 도시의 공간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생활SOC를 적정 입지로 유도하는 전략을 함께 적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생활SOC 복합화를 통한 시설 활용도 제고

생활SOC 운영을 위한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시에서 각 시설을 개별적으로 공급·운영하는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을 통폐합하여 한 곳으로 모으고, 서로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복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생활SOC 공급의 비효율성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경우 모든 도시에서 중복되는 공공서비스를 각자 유지하기보다는 도시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은 시설 건립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뿐 아니라 신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 여기서는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도 현행대비 10%p 인상해준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첫째, 복합화 대상 10종 시설 간 복합화를 추진하거나, 둘째, 복합화 10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간 복합화를 추진하는 경우이다. 이는 그동안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각종 생활SOC 관련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앞서 언급한 일본의 생활SOC 복합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도시 전체 차원의 공공시설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유지 혹은 이전할 기능을 정하고, 복합화 시설 건립 시 이를 고려한다. 만약 우리도 생활SOC에 대한 입지·배치계획제도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복합화 시설을 재배치하거나 건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보스턴(Boston)의 ‘Big Dig Project’처럼 도로 부지의 상·하부공간에 입체도시계획제도를 활용하여 복합시설을 건립하거나, 영국 런던(London)의 ‘Exhibition Road’처럼 하나의 건물이 아닌 분산되어 입지한 생활SOC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도시와 같이 생활SOC를 건립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입체도시계획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화 시설이 입지하는 곳은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지역이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복합화 시설을 공급하기보다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SOC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생활SOC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독일 하일브론(Heilbronn)의 ‘Robi Rolling Library’처럼 찾아가는 생활SOC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네덜란드 림버그(Limburg)의 ‘Bel-Bus’처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존재하므로 이를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국고 보조나 기금 용자와 같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형수. 2018. “생활 SOC 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도시문제」, 제600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구형수. 2018. “포용성장을 위한 축소도시의 생활서비스 확보방안”. 「Research Brief」, 제8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구형수. 2018. “생활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 「국토정책 Brief」, 제696호. 국토연구원.
- 구형수. 2019. “생활 SOC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과 정책과제”. 「국토」, 제449호: 6-13.
- 구형수 외. 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구형수 외. 2018.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 구형수 외. 2019.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송미령 외.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인성. 2012. “독일의 전 국토의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정책”. 「지역과 발전」, 제9호: 29-31.

SOC

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체계 개선방안

김상봉 교수 / 고려대학교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1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관하여
- 2 다부처 복합사업 집행에 관한 이론적 접근
- 3 다부처 복합사업 지원체계에 관한 해외사례분석
- 4 다부처 복합사업 조정 및 효율적 집행체계 논의
- 5 다부처 복합사업 효율적 재정집행 지원체계 방안



1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관하여

생활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1. 생활 SOC 복합화사업의 기본현황 및 주요내용

- 2020년 예산안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 2020년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시행계획
- 생활SOC 복합화 사업목적
 - 지역간 시설 불균형 해소하고, 지역간 형평성 유지
 - 원활한 부지확보 및 이용의 시너지 효과 제고
- 정부는 2019년 6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발표
 - 복합화 사업이란: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시설들로 건립하는 사업의미
 - 대상시설 :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린이 집, 주민건강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 10종 시설
 - 복합화 사업: 한시적으로 3년간(2020~2022년) 국고 보조를 현행대비 10%p 인상 지원예정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표1]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지자체 부지문제 해소, 이용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위해 1개 건물에 여러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복합화 선호 현행 공급방식은 지역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부처별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역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
복합화 사업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2개 이상)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문체부) 국공립 어린이 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복지부)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센터(여가부), 주거지 주차장(국토부) 등 10종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현행대비 10%p 인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 「생활SOC 복합화 선정 가이드라인」, 2019.6.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생활권형, 장애인형, 개방형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문화시설 및 확충(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지원), 주차환경개선(주거지주차장) 등 14개 사업

○ 사업선정 및 사업비: 17개 광역 지자체 총289개 사업선정,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8,504억(2020년 3,417억), 건당 평균 총사업비 29.4억

○ 지역별분포: 경기도 44건(1,756억) 가장 많고, 경북30건(945억), 서울28건(571억), 강원 24건(651억) 순

○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총86개 2,629억 사업선정, 전체 사업의 약30%에 해당

- 건당 총 사업비 30.6억, 전체 평균(29.4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수도권에 다소 많은 비중 사업 선정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표2]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현황

시설명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체육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생활권영, 장애인영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근린생활영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공공 도서관	문체부	균특회계 (지역자율)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건립지원
작은 도서관	문체부	균특회계 (지역자율)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건립지원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균특회계 (지역자율)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생활문화센터조성지원
주거지 주차장	국토부	균특회계 (지역자율)	주차환경개선	주거지 주차장
다함께 돌봄센터	복지부	일반회계	다함께 돌봄 사업	돌봄센터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복지부	일반회계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동육아 나눔터	여가부	양평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주민건강센터	복지부	건강기금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주민건강센터)
		농특회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농어촌보건소 등 시설 보강(주민건강센터)
가족센터	여가부	균특회계 (지역자율)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건립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표3]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 [단위: 건, 억원]

지역명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사업수	28	14	44	15	5	16	11	7	2	24	8	22	19	18	30	23	3	289
총사업비	571	302	1,756	403	189	494	357	223	43	651	236	671	475	465	945	600	123	8,504
건당 총사업비	20.4	21.6	39.9	26.9	37.8	30.9	32.5	31.9	21.5	27.2	29.5	30.5	25	25.8	31.5	26.1	41	29.4

주: 총사업비는 2020~2022년 3년간 총사업비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2. 생활SOC사업의 추진체계

-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 사업 총괄
-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예산편성 관련 총괄 업무 수행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생활SOC 복합화 추진단):** 복합화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복합화 사업계획 접수 및 사업선정 등 복합화 관련 업무 수행
- **중앙부처:** 각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 **지자체:** 실질적 사업수행자,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예산집행 수행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그림1] 생활SOC 사업추진체계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다양한 주체별 참여에 의해 균형위, 국조실, 중앙부처,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 필요

- **균형위:** 군특법 규정(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협약절차 이행(관계부처 결정 등), 각 지자체 별 사업계획 취합, 협의·조정, 중재 및 컨설팅 등, 사업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컨설팅 체계구축, 지자체 사업접수, 협약안 심의·의결 등
- **관계부처:**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지자체 사업기획 컨설팅(요청시),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조정, 지자체와 협약체결, 예산배정 등
- **지자체:** 복합화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부처들과 사업계획서 협의·조정, 투자협약 체결, 사업시행 및 정산 등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3.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대한 기본 문제의식

- 사업실행부서인 지자체가 각 부처 사업별 공모를 통해 개별시설 설치하거나 이후 타 부처 사업에 추가 공모하여 시설을 복합화하고 있음
- 사업 공급체계에서 중앙부처 사업별 조건이 다양하고 1개과 1개 시설을 담당하는 칸막이 방식. 다수 시설 복합화 지원에 한계
- **다양한 사업별 조건에 의해 효율적 사업 집행에 어려움**
 - * **재원 다양성:** 재원에 있어 특별회계, 기금 등 다양함
 - * **보조율 다양성:** 사업별 기관별 국고 보조율 30-70%로 차별, 다양한 지원
 - * **사업공모 및 절차의 다양성:** 사업공모시기 부처별 상이함
 - * **사업집행 및 정산 다양성:** 소관부처 사업마다 예산배정 후 총 사업액을 나눠 정산해야 함
- **사업추진 방식에서, 각 사업별로 연도별 들랑을 설정하여 매년 사업대상 지자체를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 복합화시 집행, 정산 등 애로사항**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표4] '20년 생활SOC사업 중 복합화 사업대상 시설

부처	시설(사업)명	회계	국고보조율(현황)	사업추진 방식
문체부	공공도서관	군특(지역자율)	40%	시도 자율편성
	작은도서관	군특(지역자율)	70%	시도 자율편성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30억원	공모 선정
	생활문화센터	군특(지역자율)	40%	시도 자율편성
복지부	어린이집(국공립)	일반회계	50%	공모 선정
	주민건강센터	농특회계	66.7%	공모 선정
		건강기금	66.7%	공모 선정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회계	50%	공모 선정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양평기금	50%(운영비)	공모 선정
	가족센터	군특(지역자원)	-	공모선정
국토부	주거지주자장	군특(지역자율)	50%	시도 자율편성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2

다부처 복합사업 진행에 관한
이론적 접근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1. 다부처 복합사업 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다부처 복합사업과제
- **수행주체로서 다부처 재정지원체계 하에서 다 조직간 집행특징**
- 조직론적 시각, 조직간 집행(inter organizational implementation)에서 필연적으로 조정(coordination)의 문제가 제기
 - **다부처 재정지원체계의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문제)**
 -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 수행 주체 간 조정을 할 것인지(문제)**
 - **결과, 집행조직간 행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성과 차이가 발생**
- 조직간 정책집행: 조직간 관계의 다양성과 환경과의 동태성 그리고 다원주의적 특성에서 단일조직에 의한 정책집행과 구분
- ✓ 조직간 정책집행은 상이한 이해와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다수 행위자들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이해 필요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위임(mandate), 상위계획에 의해 집행할 때, 공공조직의 관료적 속성은 하위집행조직의 자발성과 집행 능력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음
- 제약의 정도는 관료질서 및 계층구조 하에서 거부권(veto point)에 의해 더욱 커짐
- 집행을 유도하는 상위정부의 기관 능력은 집행기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s) 수, 결정점 마다의 참여자수(Participants) 및 참여자들 선호강도(Preferred strength)는 집행 지연가능성과 비례 (Pressman & Wildavsky 「Implementation」)**
- But, 집행성공확률이 관련된 기관의 수와 역상관 관계 형성하게 되는 예외적인 사항**
 - **복수 조직의 집행결과는 조직 간 상호의존 유형(the type of interdependence)에 의해 달라짐**
 - **조직은 행위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예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상호의존적 관계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봄**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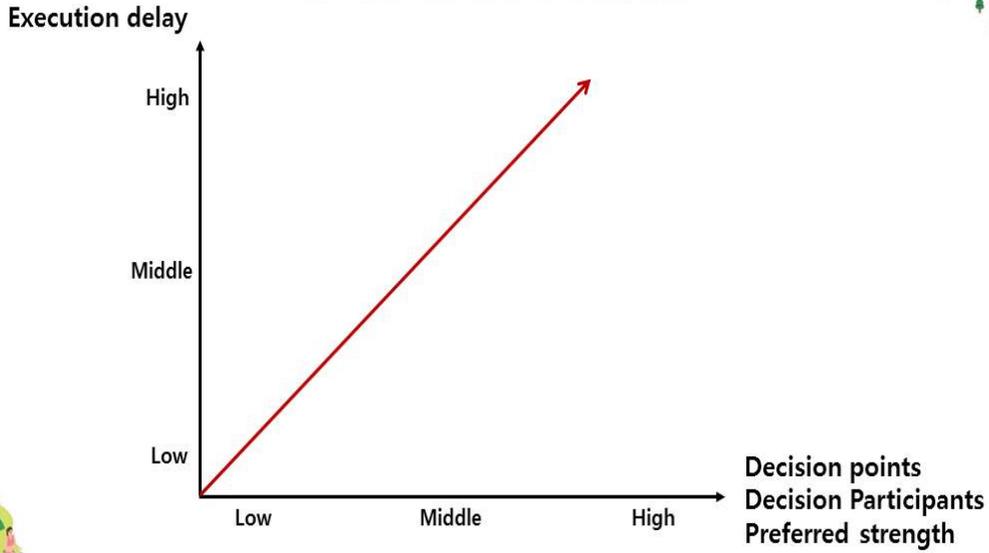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그림2] 집행지원가능성과 비례관계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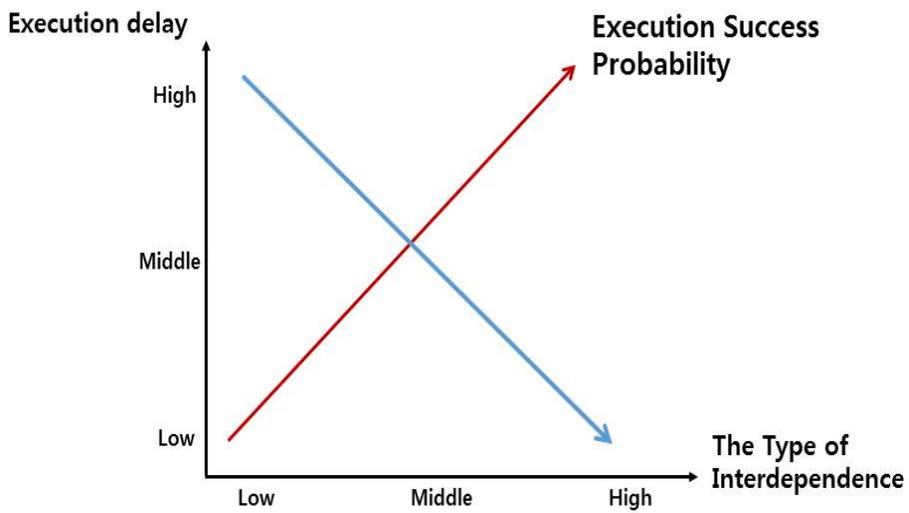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그림3] 조직간 상호의존도와 집행 성공확률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상호작용패턴: 공동적, 순차적, 호혜적 상호의존 세 모형 구분

(Thompson(1967)상호작용 패턴)

- ① **공동적 상호의존(pooled interdependence):** 집행기관이 그들 자신의 집행노력을 요구하지만 조직간 상호거래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집행기관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요구 받지만, 각각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이 있을 뿐 협조를 위한 제약이나 상호작용은 요구되지 않는 유형
- ② **순차적 상호의존(sequential interdependence):** 일련 유관 조직들이 연합된 계통을 형성하고 배열되어 있어, 한 조직단위 산출은 다른 조직 단위에 재차 투입되어 업무실행에 상호연계 되어 있음
- ③ **호혜적 상호의존(reciprocal interdependence)**
 - 각각 조직이 서로 다른 상대조직에 의한 제약과 연계 망에 상호 묶여 있는 경우. A와 B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상호조정 과정에 적용해야 하는 유형
 - 협력을 위한 조율의 부담이 가장 크고 불확실성 높게 나타나지만, 잘 조율된 형태로 집행이 이루어 진다면 이상적인 성과에 근접가능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조직간 상호의존 수준은 공동적 상호의존에서 호혜적 상호의존에 이르는 일련 스펙트럼 구성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을 위해서는 정교하고 조정된 형태의 조직설계(Organization Design)가 요구됨
- ✓ 다부처 및 다양한 의사결정자 등이 관여하는 복합형 정책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직설계 필요성 제기함
- **순차적 상호의존모형 세분화(Montjoy & O'Toole)**
 - 단순선형적(simple linear), 경쟁적(competitive), 순차·호혜적(sequential reciprocal) 상호의존유형
 - 순차적 상호의존은 한 조직 결과물이 다른 조직 투입물이 되는 경우로서 이런 유형은 하나 의사결정지점(decision point)에서 지연이나 중단이 연쇄적으로 하위단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순차적 상호의존모형 주요내용

- 1. 단순선형적 상호의존:** 예산배정 무조건부 교부금 지급과 같이 A단위가 B단위에 대해 유인을 제공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B단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을 때 별도의 조정 없이 자발적 협동이 일어나는 유형
- 2. 경쟁적 상호의존:** A가 책임과 유인을 가지고 B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B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유형. 단순한 연계와 후보자가 많은 경쟁적 상황으로 나뉘며 정책집행을 위한 상호의존 형성단계에서는 실제로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움
- 3. 순차·호혜적 상호의존:** 예산편성과정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관계처럼 정책형성기부터 A제안에 B가 대응하기 위한 조건을 협의해 나가는 유형. 집행과정에서 상위조직은 하위조직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책임과 유인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 상호의존관계가 정착된 모습은 순차적 연계형태라 할지라도 정책형성(formative) 단계에서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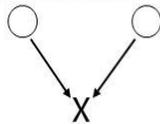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1. 공동적 상호의존 (POO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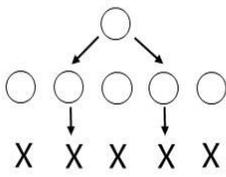
[그림4] 조직간 상호의존 및 작용패턴

2. 순차적 상호의존 (SEQUENTIAL)

(1) 단순선형적 (Simple lin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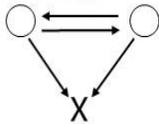
(2) 경쟁적 상호의존 (Competitive)



(3) 순차 - 호혜적 상호의존 (sequential - reciprocal)



3. 호혜적 상호의존 (RECIPROCAL)



범례:
 O = 개별 조직(agency)
 X = 사업수행 대상(target)
 → = 운영적 상호의존(operating interdependence)
 ← = 형성적 상호의존(formative interdependence)
 출처: O'Toole & Montjoy(1984)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조직행동 특성과 조직간 상호의존 유형에 대한 논의에 의거, 조직간 집행과 관련한 기본가정 제시(Montjoy & O'Toole, 1984)

- * 첫째: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조직간 정책집행이 조직내 정책집행보다 어렵다.** 협조에 대한 추가적 제약과 유인결여는 조직간 집행의 어려움을 의미함
 - * 둘째: **지시나 명령 구체성은 집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라진다.** 집행이 진행될수록 지침 구체성과 감독(monitoring)은 모호해지고 약화됨 → 집행이전 단계에서 조직간 정책과 사업의 통합적 조직설계가 요구됨을 시사
 - * 셋째: 자원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그 정책 목표가 집행자의 기존 목표와 일치하지 않으면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음
 - * 넷째: 조직간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집행의 성과는 달라짐
 - 공통적 상호의존과 순차적 모형에서 경쟁적 상호의존유형 경우, 조직단위 숫자가 많을수록 집행 성공 가능성 높음
 - 그 외, 조직 단위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점과 거부권(veto point)이 많아져 지연과 거부의 가능성이 증가
- 다부처 복합사업 집행성공가능성 제고관점에서 공통적 상호의존, 경쟁적 상호의존 유형에 관한 논의와 방안검토 필요성 제기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논의결과 및 정리

- 집행의 진행과정은 관련 조직들 간의 상호의존 유형과 이러한 유형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집행의 주도 집단이 발휘하는 나머지 조직들과의 협상 능력에 의해 좌우
 - **집행조직간 상호의존이 공통적이거나 경쟁적 형태인 경우 :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관련조직의 수와 정(正)의 관계를 갖는 반면**
 - **호혜적(reciprocal), 단순 선형적, 순차-호혜적 상호의존인 경우 : 관련조직의 수가 많아질수록 집행의 지연과 거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짐**
- **상호의존의 구조 및 형태가 집행 성공여부와 집행속도를 좌우하는 중요요인:**
- * 집행이 이루어지는 자체를 성공으로 보는 경우 → 공통적 상호의존 형태가 가장 성공 가능성 높음
 - * **원활한 조정이나 협조를 집행과정에서 전제조건으로 충족: 정책집행의 성공확률**
- 호혜적 상호의존 → 순차적 상호의존 → 공통적 상호의존 순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표5] 관련조직 수와 상호의존 유형 조정 용이성

상호의존 유형		관련조직 수와 조정 용이성
1. 공동적 상호의존 (Pooled)		관련 조직의 수가 많을수록 성공적 집행의 가능성이 높아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조정 체계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
2. 순차적 상호의존 (Sequential)	경쟁적 상호의존	
	순차 - 호혜적 상호의존	
3. 호혜적 상호의존 (Reciprocal)		

자료: O' Tooled & Montjoy (1984)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2. 다부처 조직간 집행 유형별 조정수단

- 정책현상에서 조정(Coordination): **과정(process) 또는 그 산출물(output)**로서 이해
- **조정을 하나의 과정(process)**보는 경우: 정부 정책과정이 갖는 **정치적 특성** 초점. 관련 부처사이 **이해관계가 타협되고 절충되는** 정치적 과정 이해. 조정의 산출이나 결과보다는 협의과정과 교류 중요
- 조정을 **행정 및 관리적 과정** 이해: 구체적인 예산배분 결과, 산출물로서 의미. 집권화된 기구에 의한 사업세부내용 평가, 예산외계적인 자원배분 효율성 강조
- **정책조정**의 수단 및 양태(modality) (Kaufmann at al., 1986)
 - ① **위계**: 행정행위에 대한 외재적인 법적 규제 및 계층적 관료조직에 대한 내재적 통제기제
 - ② **시장(market)적 조정 기제**: 참여자들의 사익(self-interest)추구과정에서 자원 교환행위를 통한 조정방식,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기능을 활용
 - ③ **네트워크적 조정 기제**: 참여자들 간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 신뢰(trust), 연대(solidarity), 컨센서스 등에 기인한 자발적인(voluntary)행동활용, 이해관계자 간 이익갈등을 협상 등을 통해 해결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조직간 집행의 조정수단 중심. 다 조직간 집행유형별 다부처 사업 재정집행체계 분류 (Montjoy와 O'Toole, 1984)

- 다부처 재정사업을 조정하는 상위기관이 존재하는 **순차적(sequential)상호의존형**, 별도 상위조정 기구 없이 부처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적(pooled)**, **호혜적(reciprocal)** 상호의존형 구분

□ 정책조정기제와 순차적 상호의존형

- ① **단순 선형적(simple linear)상호의존** 유형: 최상위 조정 기구가 위계적 조정 수단을 활용하여 소관 부처들의 집행을 유도하는 형태
- ② **경쟁적(competitive)상호의존형**: 시장적 기제, 집행기관 간 경쟁을 도입하고 각 기관들에게 사업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태
- ③ **순차·호혜적(sequential reciprocal)상호의존형**: 집행체계에서는 조직간 갈등 발생가능성 전제되며, 이해관계에 따른 부처 간 권력게임 상황에서 네트워크적 조정을 통한 협력 필수적인 유형

➢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조실 등 위계에 의한 조정과 기재부 등에 의한 시장적 기제 및 집행기관간 경쟁성,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간의 가치 공유와 연대 등에 의한 네트워크적 기제가 충분히 동원될 필요가 있음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3. 다부처 사업추진 및 수행체계에 관한 기본 함의

- ✓ **위계적 조정수단**이 효과적인 사업은 비교적 명확한 목표설정 가능. 구체적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사업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정 사업분야에서 단일부처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다 효과적
- ✓ **조직단위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점과 거부권(veto-point) 많아져 지연과 거부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참여부처 수가 많아질수록 사업 성공확률은 감소할 수 있음
- ✓ **단순 선형적 집행체계**는 부처 간의 장벽에 가로막혀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저해할 위험성. **부처 할거주의(sectionalism)**, 조직, 인력, 예산, 사업 권한을 강화하려는 **자부처 중심적 행태가 조정 저해요인**으로 작용 가능함
- ✓ **조정수단 측면에서 볼 때, 단순 선형적 상호의존형 집행을 조정하는 제반 규제(regulation)수단의 미비** 역시 연행 다부처 복합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등 전 과정에 걸쳐 다부처 사업수행에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3

다부처 복합사업 지원체계에 관한 해외사례분석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1. 미국: 국가나노계획과 부처간 조정 통합

- 미국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와 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간 협력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연구투자우선 순위 배정 등 종합조정이 강화되는 추세
- 사례 : 나노기술 범부처연구사업(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이하 NNI)
- 사업출범 초기부터 다 학문적, 다 부처적인 성격, 2000년 연방정부 차원의 범부처 연구개발 체계에 포함, 국가우선사업 중의 하나로 현재까지 추진
- NNI 사업은 하나의 독립된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독립된 나노기술 연구 개발 사업들을 조정, 통합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점
- 개별 연구자나 조직에 대한 연구자금지원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들이 상호보완적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최고위 차원에서 조정·통합하는 운영구조를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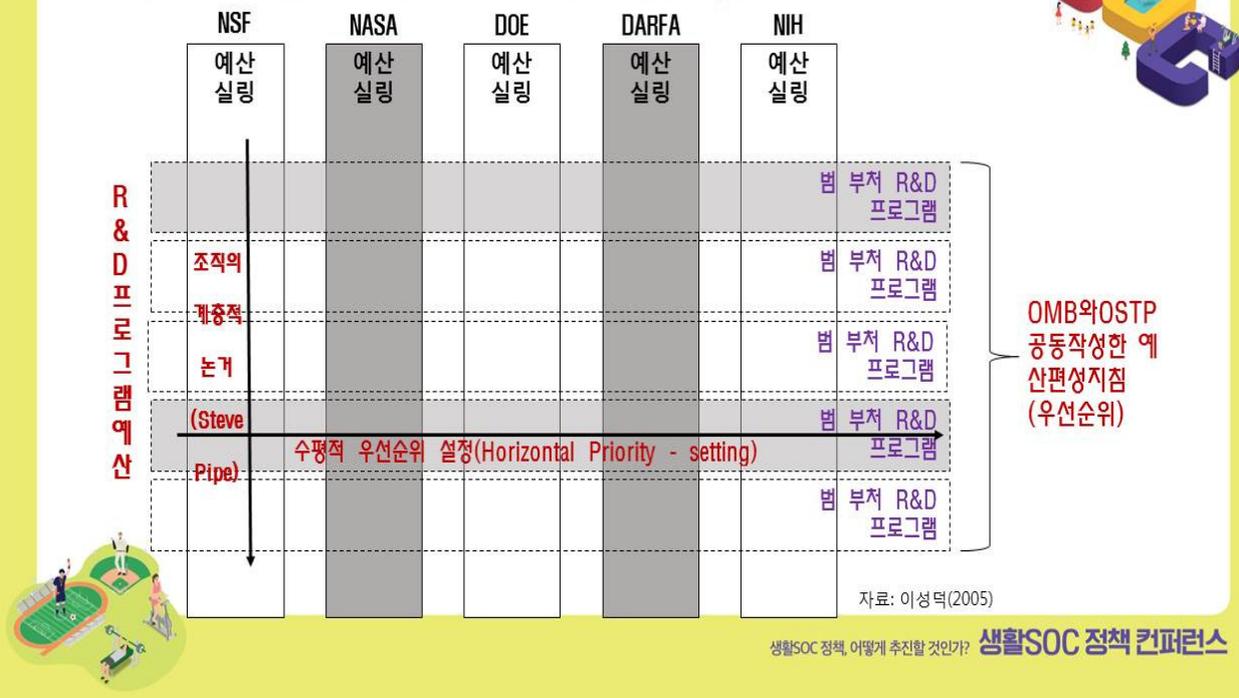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그림5] 미국 R&D배분 체계와 범부처 R&D프로그램 부처간 협력강화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기본 합의사항

 - 기관내부의 조정과 부처간 소통 및 조정 협력을 제도화함과 동시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 설치된 NSET(나노기술 사무국 자금조정), 나노기술사무국(NNCO) 등이 조정을 위한 다양한 역할 수행
 - 다부처 사업 중 참여부처 수가 많고 사업규모가 큰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위해 상설기구 **국가조정 사무국(NCO)**을 활용
 - 다부처 사업의 조정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배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연구투자 우선순 위 배정 등 **조정기관들의 조정권의 효율적 행사 및 다양한 주체들의 실질적인 협력도모**
-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2. 독일: 첨단기술전략과 자율분권형

- 독일 첨단기술전략 2006년, 국가과학기술력 및 경쟁력 극대화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한 **범부처 혁신프로그램**
- 첨단기술개발 자체보다 이를 통한 성과활용 및 확산 강조, 독일정부 공동의 혁신정책 목표 하에 부처별 개발 프로그램을 재조정함 특징
- ✓ 경제와 과학의 연계 강화를 위한 **연구연합(Forschungsunion)** 중요역할
- ✓ 연구연합은 연구기관과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결과 원활한 제품화 실천을 적극 지원
- 첨단기술전략 사업 프로그램: **5개 범 기술적 횡적 연계 강조, 부처장벽을 넘은 유연한 협력, 조정을 구조화**
- 독일 첨단기술전략 사업구조: 17개 중점분야 기술개발 종적 구조와 5가지 테마별 세부프로그램 운영
- ✓ 횡적으로 통합, 조정에 허브가 되는 **핵심주관부서가 명시적으로 없으며 연방교육연구부가 역할수행, 기본적 부처자율 참여시스템**
- ✓ **자율분권화의 형태를 취하면서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조정역할 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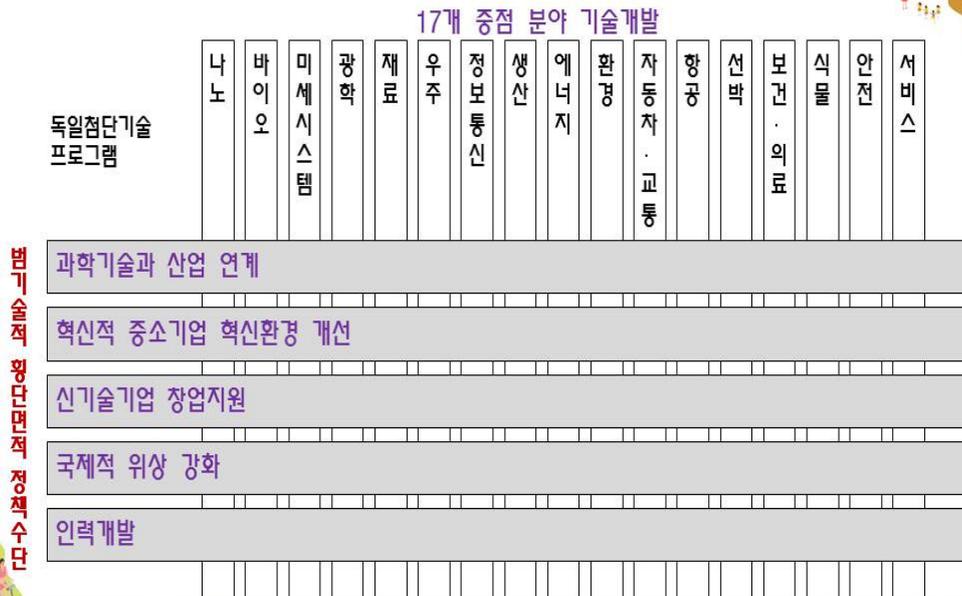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그림6] 독일 첨단기술전략 사업의 구조



범기술적·횡단면적·정책수단

자료: 안승구 외 (2009)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3. 주요 함의(국역사례)

- A. R&D사업 수행목표 및 방식 등 각 부처들 간에 상이한 제도적 특징, 상충되는 이해관계, 이질적 조직 문화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으로, 수직적 수평적 제도를 마련하여 부처간 협력과 연계 강화
- B. 부처간 소동, 조정, 협력을 기반으로 각 프로그램들을 조정, 통합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위원회와 실무자그룹을 통해 소동을 강화, 지식과 전문가의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조정과 협력을 유도해 내고 있음
- C. 범부처 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혁신주체 간 활발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부처간 연계, 통합을 넘어 사업주체간 긴밀한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 및 연구성과 활용을 높이는 연계 및 인프라 구축을 강조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4

다부처 복합사업 조정 및 효율적 집행체계를 위한 논의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1. 다부처 복합사업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

- 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상태(Desirable Social State)
- 정책목표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을 선택하는 기준,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집행지침이 되고, 집행 후에는 평가기준 → 정책목표는 명확하고 구체화되고 상호 모순없이 설정
- 다부처 복합형 사업의 경우, **사업목표에 관한 모호성 심화**. 사업의 복합화에 따른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복합이라는 개념자체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 성과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정의가 애매한 특성**
- 모호한 정책목표로 인해 다부처 사업의 추진주체들에 의해 **해석권(interpreted) 정책목표들 간 개념적 차이** 발생, 결국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 속에 **포섭·변용되어 조직목표간 상충 및 상위 하위목표간 모순 등 조직간 정치(inter organizational politics) 상황으로 귀결될 위험성 높음**. 이는 사업의 실패 또는 저조한 성과(performance)의 주요요인으로 작용
- 정책목표 자체를 **다부처 복합화 사업집행으로 설정**, 성과평가기준도 **다부처 복합사업의 집행에 의한 재정효율성으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함**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2. 호혜적 상호의존형 집행체계로의 논의

- 우리나라 다부처 사업의 집행체계는 주로 **단순 선형적 상호의존형**에 기반하여 **위계적 조정기제를** 활용한 법적 규제, 명령 및 통제 방식의 운영이 강세 및 지속
- 총괄기관의 위상조정 및 정립과 의사결정자의 권위나 리더십에 의존하여 정책조정 및 강화 시도
- 집행체계 지속적 개선에도 **부처 간의 업무중복 혹은 정책조정**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 상위 조정 기구가 잘 설계한(well design) 정책을 집행기구들이 따를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불응(non compliance)**에 대비한 여러 종류의 규제(regulation)를 병행하는 접근에 한계
- **다부처 복합형 정책조정**에 있어서 **호혜적 내지 순차·호혜적(sequential reciprocal)상호의존형 다부처 사업집행체계**가 새로운 지향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있음
- 별도 상위조정기구 없이 **부처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호혜적(reciprocal)상호의존형 재정지원체계**를 활성화, 타 부처들의 전문지식과 특화된 역량을 활용한 **공동집행**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제도화가 요구됨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3. 효과적인 조정수단 및 사업 전 과정 연계체계 구축

- 다부처 정책조정 핵심적인 수단은 집행체계 구조적 재설계나 계층적 권위에 근거한 조정만이 아니라 기획, 평가, 예산배분의 연계와 같은 소프트한 정책정보(intelligence), 즉 정책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요구
- 부처간 공동기획수준을 넘어 다부처 복합사업 전 과정에 걸친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 전략수립, 기획, 선정, 예산배분, 관리, 평가, 환류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부처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역량 강화, 정부기간과 역할분담, 정보공유 및 업무연계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특히, 평가 포함.
- 다 조직간 집행상황에서 조정을 담당하는 행위자 또는 기관이 적절한 권한이나 자원을 보유할 때 조정자 역할이 가능
- 다부처 사업의 특성상 여러 기관의 입장이 상충되는 경우, 의견수렴 및 의사소통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운영, 조직간 자발적 협력의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위 및 국무조정실 등 역할과 위상강화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5

다부처 복합사업 효율적 재정집행 지원체계방안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1. 재정집행 관리운영체계의 전환

- 복잡 다원화된 다부처사업의 미시적 재정집행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통합 및 단일화 전환
- 예산집행 및 통합된 정산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제공

1)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① 사업의 예측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운용체제 확립

- 현재, 각 사업별로 연도별 물량을 설정, 매년 지원대상(지자체)을 선정하는 결과, 각 지자체는 중장기 국고 지원여부 불투명으로 중장기 복합화 계획수립에 애로사항

② 복합화 사업 추진 지원체제 확립

- 생활SOC복합화시 대부분 사업이 지방투융자심사 대상에 해당됨. 투자심사 횟수의 확대, 절차의 간소화로 원활한 복합화 추진 지원체제의 구축 필요함

③ 예산집행 및 정산의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예산의 집행, 정산에 있어 부처별 업무협의 및 사업별 정확한 구분이 곤란함. 업무협의 과정 단순화 및 통합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집행, 정산 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④ 국고보조율의 안정적 제시와 상향조정

- 생활SOC 복합화 추진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매칭 사업에 해당됨. 부처별 국고보조율이 다양하고, 다수 시설에 대한 보조율은 타 사업에 비해 낮거나 용지매입비 지원 불가로 지자체 부담이 높음
- 생활SOC 구축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신속,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 안정적 제시와 상향조정이 필요

⑤ 재정관리시스템 단일화

- 다수의 국고보조사업(N)으로 단일 복합건을 건축시 일괄 단일계정을 설정토록 하고, 사업비 비율(1/N)로 일괄 정산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표6] '20년 생활SOC 복합화 시설 보조율

중점시설명	관련사업명	부처명	보조율	
			단일건축 시	복합화 시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문체부	정액 30억	정액 40억
도서관(공공, 작은)	공공도서관 건립	문체부	40%	50%
	작은도서관 조성	문체부	70%	80%
생활문화센터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문체부	40%	50%
주거지주차장	주차환경개선	국토부	50%	60%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집 확충	복지부	50%	60%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 사업	복지부	서울 30%	서울 40%
			지방 50%	지방 60%
주민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복지부	66.7%	75%
	농어촌보건소 등 시설보강	복지부	66.7%	75%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여가부	건축비 지원없음(운영비만 지원)	
가족센터	가족센터 건립	여가부	해당없음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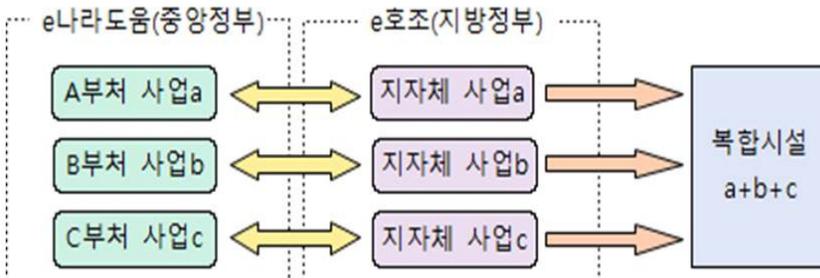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2) 다부처 복합사업 재정집행 및 관리시스템 개선(안)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지방자치단체 재정업무지원시스템 e호조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보조금 관리지침 개정 등 추진노력 필요
-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상 현재 N(다부처):1(지자체 생활SOC시설) 구조로 사업관리 수행 어려움. 자치단체는 N개 사업을 생성하고 수행하는 시스템이며, 지자체는 1개 사업 및 거래에 최대 N번 집행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 각 사업을 시스템상에서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발생

[그림7] 현행 다부처 통합사업 처리 현황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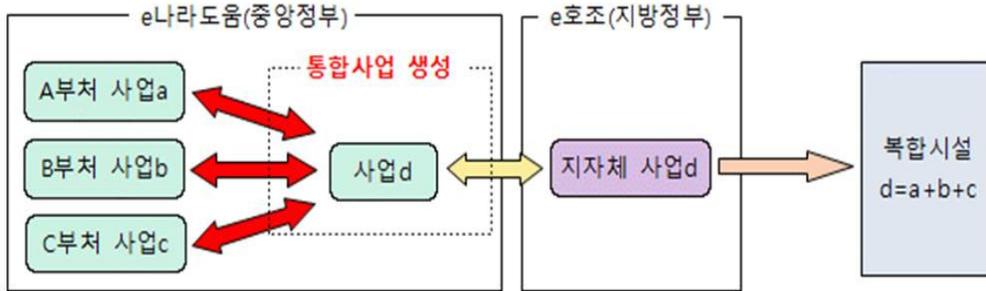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① 다부처 N개 사업을 e나라도움 내, 하나 사업으로 통합 후, 지자체에 1개 사업으로 교부, 지자체는 1개 사업으로 집행 및 정산하는 시스템

[그림8] 재정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방안 (예1) e나라도움 ↔ e호조 = N : 1 ↔ 1 : 1



- 중앙부처의 다부처 사업 N개에 자치단체 세부사업 1개를 매핑하는(d) 사업구조
- 자치단체는 1개 사업으로 예산편성, 1개 사업으로 교부신청, 보조금수령, 지출품의, 집행 및 정산하는 절차 수행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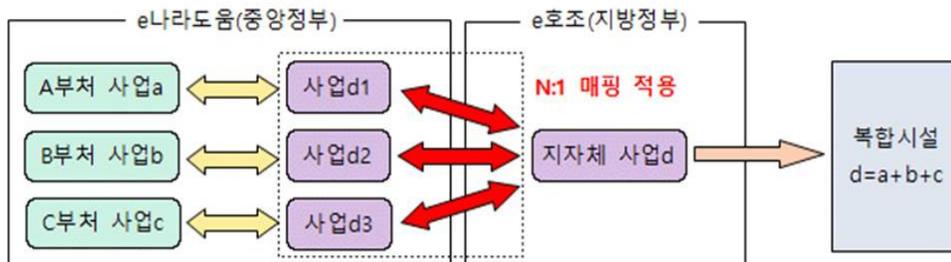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② 다부처 N개 사업을 지자체에 교부, N개 사업을 자치단체 재정업무지원시스템 e호조내, 1개 사업 매핑(e나라도움 N개 내역생성) 사업구조. 지자체 1개 사업집행 및 정산시스템

[그림9] 재정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방안 (예2) e나라도움 ↔ e호조 = N : N ↔ 1 : 1



- 각 부처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치단체에 복합화 시설사업 A, B, C로 예산통보
- 자치단체는 복합화사업 A, B, C를 자치단체 사업으로(d) 매핑하고 사업을 진행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업무지원시스템인 e-호조 매핑정보를 받아 상세 복합화사업을 부처별로 N개 생성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2. 책임기관에 의한 사업수행체계 통합운영 및 일원화: 순차적 호혜적 상호의존 모형

- 생활SOC총괄부서인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생활SOC지역별·시설별 공급 및 배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각 부처에서 시설별 운영현황 관리
- 정부차원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과 재정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안 필요함



1) 지자체 공공시설의 통합운영 및 관리 필요성

① 인력관리 효율성제고

- 최근4년간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수 대비 관리인력 비효율성
- 공공시설수 2014년619개→2017년 737개 증가, 관리인력 같은 기간 1만3,513명→1만6,758명증가. 개소당 관리인력도 21.8명에서 22.7명으로 증가
- 개소당 연간 이용인원은 2014년 30만9천명→2016년 34만1천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 31만1천명으로 감소, 정체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② 재정관리의 효율성제고

- 운영비용(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에서 수익(입장료, 임대료, 위탁료 등)을 차감한 순수익은 2017년 기준 $\Delta 7,655$ 억원 적자, 연도별 적자규모 2014년4,904억원→2017년7,655억원으로 계속 증가
- 개소당 순수익 규모, 같은 기간 7억9,200만원에서 10억3,900만원으로 증가 추세
- 공공시설 확대공급에 따른 운영적자 규모 증가 뚜렷함

③ 현행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한계극복

- 지자체 공공시설 자체 수익구조의 부재와 낮은 수준 이용료 설정 등에 따른 만성적자로 인한 생활SOC 시설 운영기반 약화우려
-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자체에서는 생활SOC를 운영하는데 있어 적자운영과 재정부담 심각화 우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2) 다부처 생활SOC사업 통합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 국무조정실에 미국 **국가조정사무국**과 같은 **상설책임부서** 설치, 생활SOC복합사업Ownership부여 및 관리 필요성
- 사업조정 및 지원기능 부여, 사업계획수립 지원 및 예산배정, 예산집행과 집행 후 정산,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복합사업 전 과정운영, **그 자체를 정책목표로 설정**,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유도하는 체제구축
- **다부처 복합사업 조정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배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사업배정 등 조정권 효율적 행사**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도모

① 사전협의 및 조정체제

- 생활SOC복합화 시설의 원활한 복합화 추진을 위해 **사업별·지자체별 전체사업 및 투자들량에 관한 면밀한 사전협의 및 조정과정**

② 사업계획 지원체계확립

- 사업계획에 있어 복합화 대상 시설별, 지자체별 투자계획을 사전 협의하여 지자체 사업기간 복합화 계획수립을 **종합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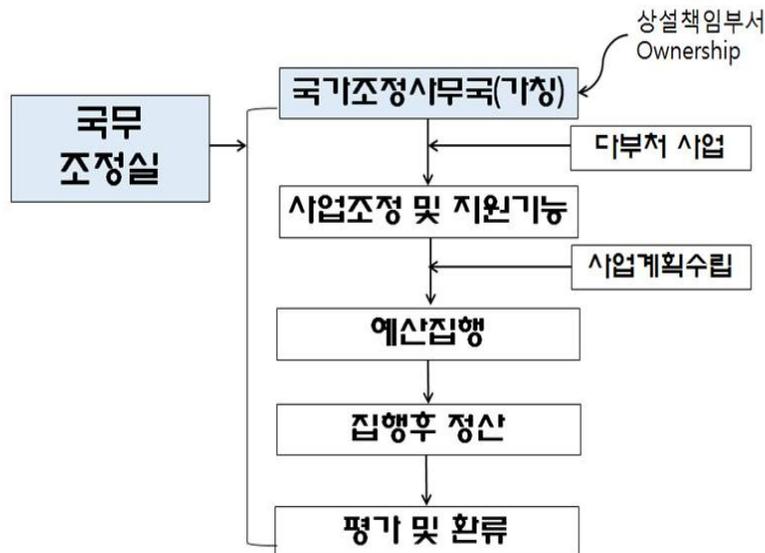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그림10] 복합화 사업수행체계 통합조정, 일원화모형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3. 자기책임 원칙에 의한 지자체 자율성과 분권화 운영체제: 재정분권화

1) 주요논거

- 생활SOC사업의 특성상 지역밀착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공급과정에서 지역창의와 참여 촉진
- 지역주민 생활서비스로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 사업기획, 관리, 운영 필요, 생활SOC중심의 자립적 지역공동체 형성
- 지자체 **재정분권화 추진방향과 일치**, 균형발전과 재정격차의 완화
- **지역중심 및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국가재정지원의 실효성과 합리성 확보**

2) 주요문제제기

A. SOC사업이지만 소프트웨어적 사업비 포함

- 생활SOC사업에는 일반 SOC사업비목(건설공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외에 운영비(인건비, 교육비 등) 및 **소프트웨어적인 관련 사업비를 포함하는 등 사업예산 비목 및 집행 다양성**
- 정부사업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특성에 밀착된 사업비 설정과 집행관리가 요구됨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B. 부처별 예산집행 부진사유(사례)

- **국토교통부(예산규모 기준 높은 비중)**
 - 대부분 사업계획 수립 지연, 행정절차 및 공사지연 등에 기인
- **문화체육관광부(사업수 기준 높은 비중)**
 -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체육진흥 시설지원, 복합문화관 건립, 국립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 등 사업, 행정절차 및 공사지연 등
- **그 외 다른 기관**
 -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행정안전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사지연 등
- **정부의 생활SOC 사업을 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관리의 중요성 제기**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3) 재정집행의 효율화 방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예정. 3.5조원 내외 중앙정부기능 이양예정
- 「재정분권추진방안」 과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이 주도**한다는 원칙하에 사업내역 조정
- 생활SOC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추진될 필요. **사업 수혜자인 지자체 책임성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사업
-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생활SOC 추진계획과 맞추어, **생활 SOC추진단 구성**(17 광역자치단체, 226 기초자치단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생활SOC사업 추진예정
- 생활SOC사업 중 **일상생활에 밀접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에 재정집행을 이양**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하에 사업집행 효율성** 추구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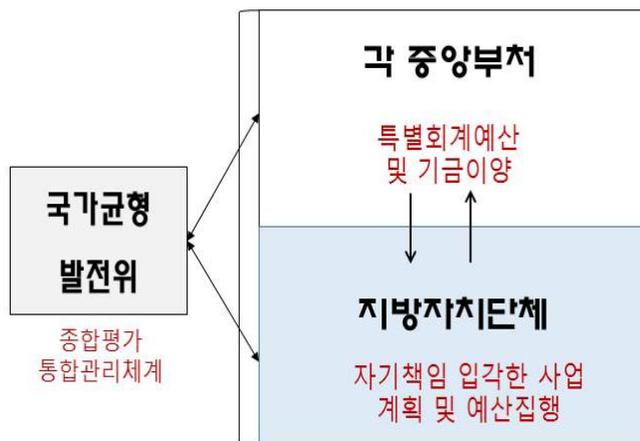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그림11] 지자체 자율성분권화와 통합관리체계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SOC

가

생활SOC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4) 종합평가통합적 관리체계운영

- 국가균형위에 의한 자율적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 운영
- 범 정부차원 **복합화 사업 종합관리**를 위한 **표준관리체계 마련**: 통합개발계획과 통합정보관리 체계의 구축
- 지역개발포괄보조금(미국): 사업프로그램 목표의 구체화, 다부처 사업 집행실적평가, 타 프로그램 및 사업과의 조정과 협력강화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감사합니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김미옥 선임연구위원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Contents

01. 생활SOC(체육시설) 운영 실태와 문제점	03
02. 지역 참여 활성화 필요성 및 선진 사례	10
03.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 환경 진단	20
04. 지역참여 활성화 방안	27



1. 생활SOC(체육시설) 운영 실태와 문제점

- 01 체육시설의 개념 및 유형
- 02 체육시설의 가치와 역할
- 03 체육시설 현황 및 문제점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1 체육시설의 개념 및 유형



“체육시설은 대표적 국민 여가 시설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

공공체육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장의 장이 설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간이운동장,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영장, 물러스케이 트장, 사격장, 국궁장, 양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빙상장, 설상경기장, 기타 시설

민간체육시설

개인 또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 설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2 체육시설의 가치와 역할



“적극적 사회복지 기능과 도시기능 완성 등 다양한 가치 창출”

적극적 사회복지시대 전환

국민의 정서적 욕구 충족 및 건강 등 후생 수준 증대



- 스포츠는 국민의 정서적 욕구, 삶의 질 증진
- 연간 2조 8천원 억 의료비 절감
- 사회적 편익의 배분을 위해 공공 역할 필요

커뮤니티 회복 및 사회자본 형성

‘접촉’과 ‘통합’의 장으로서 커뮤니티 기능 회복 역할 담당



- 지역사회 주민간 상호교류 및 유대 도모
-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참여 유도
- 스포츠 이외 문화 및 사고 공간으로 활용

지역에 사회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제고

쾌적성 및 건강성 등 도시민의 고차원적 수요 충족



- 주거, 노동, 교통, 여가 기능은 도시 핵심기능
- 최근 여가기능에 대한 수요 및 중요성 강조
- 여가공간은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역할



5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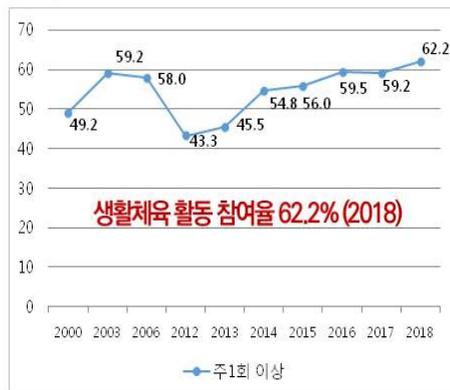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3 체육시설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지속적 확충”

생활체육 참여실태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 각년도

체육시설 공급 추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현황, 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각년도



6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가 SOC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3 체육시설 현황 및 문제점



“체육활동 참여 인구 대비 공급 부족으로 생활SOC를 통한 공급 필요”

실적

공급목표 대비 74.6%

- 2022년 생활체육참여율 70% 가정 (OECD 10위 수준)
- 참여인구 수용을 위한 적정 수준 5.73㎡/인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중장기계획)

기본 체육시설 부족

- 체육관 5.1만 명당 / 1개
- 수영장 12.7만 명당 / 1개

- 체육관 1.5만 명 / 1개소
- 수영장 2.9만 명 / 1개소

※ 공공체육시설 기준(문무과혁신, 체육스포츠시설 현황조사 자료)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22
실적	2.54㎡	2.88㎡	3.12㎡	3.29㎡	3.31㎡	3.57㎡	3.81㎡	3.89㎡	4.05㎡	4.28㎡	5.73㎡
증감률	44.3%	50.3%	54.5%	57.4%	57.8%	62.3%	66.5%	67.9%	70.7%	74.6%	100.0%

【주요 공공체육시설 공급 현황(2017년 말 기준)】

구분	공급 현황 (2017년 말)	지자체당 평균 개소 수	개소당 인구
체육관	1,010	4.4개	51,265명
수영장	406	1.7개	127,533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17년 말 기준

7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3 체육시설 현황 및 문제점



“기존 시설의 한정적·소극적 운영,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필요”

프로그램·운영종목 한정

배드민턴 헬스 수영 중심(33.0%)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및 가능종목

체육행사 개최수	문화행사 개최수	운영프로그램 개소수	가능종목
57 (79.2%)	15 (20.8%)	84	6

국민체육센터 운영종목

순위	항목	비중
1	배드민턴	11.7%
2	헬스	10.9%
3	수영	10.4%
4	농구	8.1%
5	탁구	7.7%

운영수지 개선 필요

개소당 평균 -177억 원 적자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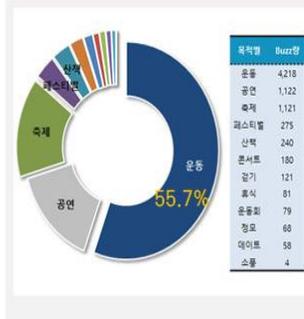
2012		2013		2014		평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지
807	923	815	904	796	959	-177

국민체육센터 평균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시설 관리비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기타	계
345.7 (29.8%)	403 (34.8%)	73 (6.3%)	335.7 (29.0%)	1,157 (100%)

다목적 활용 부족

운동목적 55.7%



자료: 기금지원 체육시설 이용실태 및 향후 추진방안, 2016, 김미숙

8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3 체육시설 현황 및 문제점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89.6%, 국민체육센터 80.8% 공공부문 운영”

■ 주요 공공체육시설 운영 주체 현황

유형	운영 주체	시설수	비율
육상경기장	직영	125	73.5%
	공공위탁	41	24.1%
	민간위탁	4	2.4%
	합계	170	100.0%
구기체육관	직영	159	59.3%
	공공위탁	93	34.7%
	민간위탁	16	6.0%
	합계	268	100.0%
생활체육관	직영	153	45.7%
	공공위탁	122	36.4%
	민간위탁	60	17.9%
	합계	335	100.0%
전 체	직영	437	56.5%
	공공위탁	256	33.1%
	민간위탁	80	10.3%
	합계	773	100.0%

■ 국민체육센터 운영 주체 현황

유형	운영 주체	시설수	비율
국민체육센터	직영	96	52.8%
	공공위탁	51	28.0%
	민간위탁	35	19.2%
	합계	182	100.0%

자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2018. 김미옥

공공체육시설 운영주체

국민체육센터 운영주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7

9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II. 지역 참여 활성화 및 선진 사례

- 01 공공시설 운영 환경 변화
- 02 공공시설 운영 시장 개방 필요성
- 03 선진국 체육시설 운영 사례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이 공공시설 운영 환경 변화



“공유경제를 통한 협업소비, 지역 참여 확대 등 운영 환경 변화”



11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이 공공시설 운영 환경 변화



“공공 중심 획일적 운영시스템을 지역 참여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12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가 SOC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2 공공시설 운영 시장 개방 필요성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

	장점	단점
공공부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성 확보 용이 직접적 통제 용이 시민 복지서비스 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 자금조달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보직제도 준수에 따른 전문성과 지속성 결여 인사이드으로 운영기술 축적 곤란 경영마인드 결여로 기술개발과 서비스 품질향상 어려움 연중무휴 근무체계에 따른 탄력적인 교대근무 한계
민간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축적된 전문성 운영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관리 운영관리 인력의 탄력적 효율적인 배치 가능 운영관리, 고용의 탄력성, 신속한 수요 대응 서비스 비용 절감 및 결과 중심적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자원 확보 불투명 낮은 이용 요금, 다양한 할인제 등 이윤 창출 한계 위탁 기간이 한정되어 안정적 운영 환경 확보 필요 운영/감독 기능 분리로 자체 감독 기능 필요 위탁기관 선정, 성과 평가 투명성 보장



13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3 선진국 체육시설 운영 사례



“(영국) 스포츠 사회적 기업을 전문 운영주체로 활용”

■ 영국 스포츠 사회적 기업

스포츠 + 사회적 + 기업

컨텐츠: 스포츠 + 비즈니스모델
 목적: 공익 + 공공서비스
 본질: 이윤창출 + 생존경쟁 + 전문인력

순위	하위부문	사회적 기업(%)
1	회원제 조직	53.6
2	음식 서비스	36.2
3	스포츠와 레저	35.8 (약 4,400여개)
4	돌봄서비스	34.7
5	사회복지	33.8
	평균	14.6

자료: 김성훈,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연구, 2014



■ 스포츠 시설 운영 전문 사회적기업(GLL)

- GLL(Greenwich Leisure Limited)
- 1993년 런던, 7개의 레저센터가 파크너십 체결
- 매출액 : 3,333억원(2015년)
- 종사자 수 : 약 6,000명
- 250개 이상의 스포츠, 레저, 문화시설 운영
- 30개 이상의 지자체와 파트너십, 스포츠서비스 공급
- 런던올림픽수영경기장, 종합경기장 외 다수
- 이벤트, 청소년, 노인,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로빈훅 모델】

14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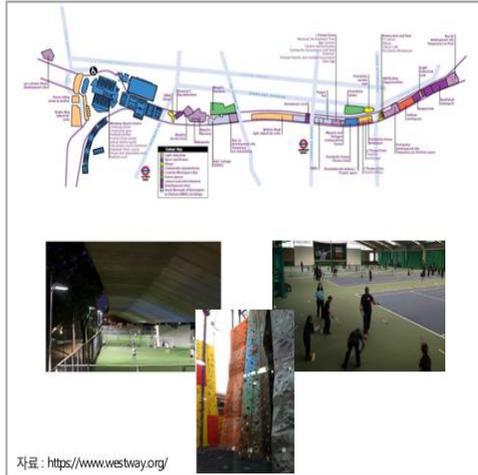
03 선진국 체육시설 운영 사례



“(영국) 지방정부가 시설 조성 후 시민단체가 운영”

■ 런던 Westway

- Westway는 런던 교외의 캔싱턴과 첼시 지역을 가르는 A40 고가도로로 하부공간 1.4km(93,000㎡)를 1975년 공공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민단체(Westway Trust)가 조성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발
-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에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스포츠, 교육, 문화예술, 직업 학교 조성
- 스포츠 시설은 인공암벽, 풋볼장, 테니스장, 수영장, 핸드볼장, 농구장,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 조성
- 어린이와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 독려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방문객 60만명 방문
- 시민단체 모금, 후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재원 확보



자료: 김미옥,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조성 방안, 2015

15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3 선진국 체육시설 운영 사례



“(네덜란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스포츠 여가공간 조성 및 운영”

■ 네덜란드 A8emA publicspace

- 암스테르담 코흐안드잔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 A8 하부공간(폭40m, 길이400m)은 도심을 가로질러 지역을 단절시키고 30년 동안 주차장으로 이용
- 2003년 주민이 접근을 꺼리는 우범 지역을 시의회 주도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계획
- 선형의 하천 인접 부지 장점을 살리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Dry square, Marina, Kid zone으로 구성
- 시장, 시의회, 주변 상인, 주민들이 계획 과정에 참여하여 이해당사자들의 목적과 요구가 조성 과정뿐 아니라 최종 설계와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



자료: 김미옥,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조성 방안, 2015

16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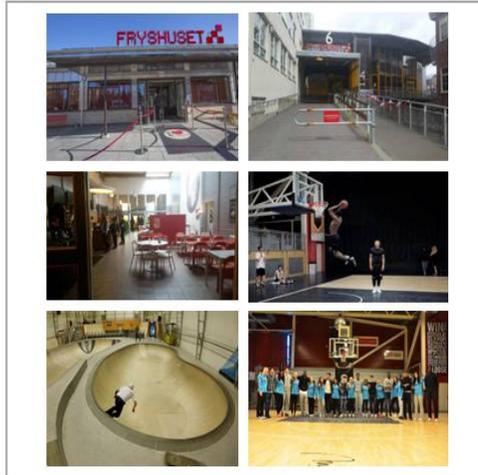
03 선진국 체육시설 운영 사례



“(스웨덴) 폐산업시설을 활용, 민간이 교육·스포츠·문화시설 운영”

■ 스웨덴 Fryshuset

- 프리스푸셋은 스톡홀름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센터로 조성
- 학교, 청소년 복합체육공간을 기반으로 민간단체인 YMCA가 청소년 복지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
- 농구장, 헬스, 보드 경기장, 댄스홀 등 다양한 스포츠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 방과 후 지역 청소년들에게 개방
-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사회속에서 융화될 수 있도록 운영
- 운영비는 시 35%, 정부가 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NGO가 조달



17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3 선진국 체육시설 운영 사례



“(프랑스) 유휴공간을 민간에게 무상 임대하고 공공 기여 유도”

■ 스포츠 경기장(Paris, Terrain de Jeux) 사업 추진

- 파리시에서 일시적인 행사 등에 사용되는 상점,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공공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2016년 기준 14개 대상지 선정)
- 시에서 유휴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사업자는 시설투자 및 사업시행
- 시와 사업자 협약을 통해 일정시간은 학교, 문화센터가 활용, 그 외 시간은 수익사업 가능
- 주요시설 : 익스트림 스포츠(교량), 실내축구장(낙하산 하강장), 전기카트장(지하주차장), padel 경기장(주변학교 공동운동장), 실내인공암벽장(실외 농구장), 권투 및 서킷트레이닝 연습장(초등학교, 탁아소), 골프연습장(공원 잔디밭, 정원)



18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3 선진국 체육시설 운영 사례



“(일본) 유희공간을 민간에게 무상 임대하고 공공 기여 유도”

공공시설 지정관리자 제도 운영

- 지정관리자제도: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법인, 공공단체, 공공적 단체'라는 조건이 철폐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자(지정관리자)가 관리를 대행하는 제도
- 공공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 도쿄도의 경우 1,920개 공공시설 중 1,774개의 시설(92.4%)이 지정관리자에 의해 운영(2015년)
- 레크레이션 스포츠시설의 경우 주식회사 32.3%, 법인 30.3% 운영
- 공공체육시설이 지정관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조성의 역할과 관리운영의 역할 분담

자료: 김성훈,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연구, 2014

도쿄도 동경체육관 운영 사례



- 공익법인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
- 시설관리(주) 오엔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동경도 스포츠 문화사업단) 등 관련 전문 조직 참여



19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Ⅲ. 사회적경제주체 참여 환경 진단

- 01 사회적경제주체 현황
- 02 국내 사회적경제주체 운영 사례
- 03 사회적경제주체 참여 환경 문제점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1 사회적경제주체 현황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적경제주체 부족”

■ 사회적경제주체 현황

- 사회적경제주체는 약 21,0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10.7% 수준으로 비중이 낮음
-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제공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의 83.3%를 차지하여 주로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 수행
- 체육분야는 16개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에서도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이 시급

【사회적경제조직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황】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2018)	예비사회적기업 (2018. 12)	협동조합 (2018. 12)	자활기업 (2018. 12)	마을기업 (2018. 03)	합계
전체	2,123	1,566	14,550	1,214	1,514	20,967
문화체육 관광분야	293 (13.8%)	344 (22.0%)	1,312 (9.0%)	15 (1.2%)	269 (17.8%)	2,233 (10.7%)
체육분야	14	0	미확인	1	0	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 2019

21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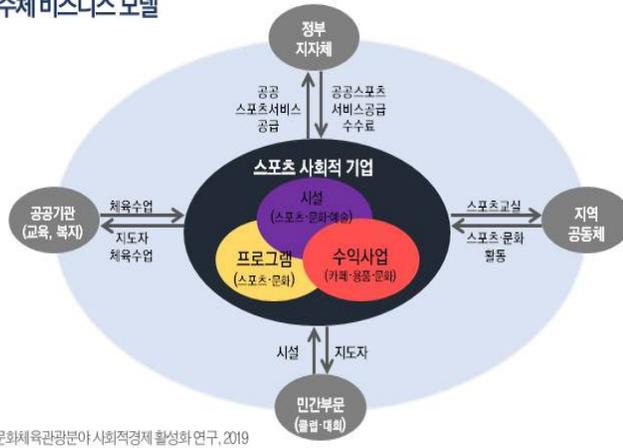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1 사회적경제주체 현황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서비스제공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창출 가능”

■ 사회적경제주체 비즈니스 모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 2019

22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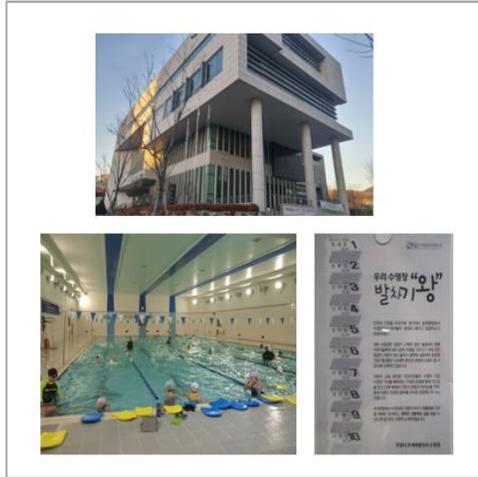
02 국내 사회적경제주체 운영 사례



“(안양시) 공공체육시설을 사회적경제조직이 위탁 운영”

■ 한국생활체육사회적협동조합

- 2013년 협동조합 설립,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협동조합 승인
- 지자체단체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스키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시설형 사회적경제조직
-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 생존수영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교육 실시
- 장애인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 (운영성과) 2018년 기준 등록회원 1,210명, 연간 이용자수 150,000명, 운영수지 10,091천원
- 지자체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미운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 2019

23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2 국내 사회적경제주체 운영 사례



“(부산시)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사회적기업이 위탁 운영”

■ (사)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 2009년 법인 인가, 2014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정, 201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사회적기업 리스타트 사업 선정
- 부산 진구 제1호 스포츠 교육사업으로 등록, 인력 및 프로그램을 스포츠 시설 및 지도자에게 보급
- 부산 진구 국민체육센터 등 다수 공공체육시설 운영
- 스포츠 시설 교육서비스 제공(위탁), 스포츠 캠프, 클럽, 선수단 운영, 스포츠과학연구 서비스 등 제공
- 스포츠 시설의 사업분야(프로그램 운영, 인력운영, 회원관리, 매출증대 방안 등)를 선별하여 관리 위탁 - 동의과학대학교 스포츠센터,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스포츠클럽,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 2019

24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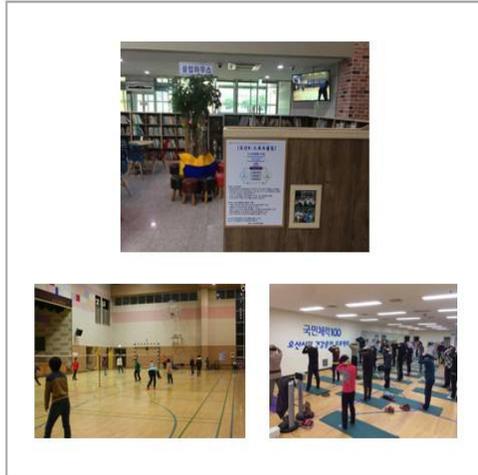
02 국내 사회적경제주체 운영사례



“(오산시)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스포츠클럽이 위탁운영”

■ 오산스포츠클럽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형스포츠클럽으로 선정, 2016년부터 오산시 공공체육시설 다수 위탁운영
-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오산체력인증센터,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위탁운영, 12개 종목 44개 프로그램 운영
- 42명 인력(정규직 12명, 비정규직 27명, 공익근무요원 3명) 종사, 체육전공 공익근무요원이 프로그램 지도자로 근무
- 지자체 운영 시 보다 프로그램 증가 및 이용자 증가, 운영수익 약 1억원 증가
- (운영성과) 2016년 1,172명, 2017년 1,321명, 2018년 1,223명으로 지속적 증가, 운영수입 1.0억원 (지방보조금 포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 2019

25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3 사회적경제주체 참여환경 문제점



“사회적경제주체의 역할 대비 경영환경은 열악한 수준”

■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을 위한 체계



“보조금 없이 위탁운영중인데, 메르스와 수질관리를 위한 사용인원 제한 등으로 적자운영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지자체는 이를 내세워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한다.”

“지역 체육회가 인맥을 활용해 경험없이 사업을 따가고 예산을 독점하여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등 민간이 성장하는 기회를 뺏고 있다.”

26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IV. 지역 참여 활성화 방안

- 01 사회적경제주체 육성 정책 확대
- 02 관련 법제도 개선
- 03 운영 실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1 사회적경제주체 육성 정책 확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2019) 확대”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1 사회적경제주체 육성 정책 확대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특성 반영 맞춤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전문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200만원 ~ 250만원 한도 일부 수혜 기관 자부담 자부담률: (1차년도) 10% → (2차년도) 20% 지원인원/기간: 1명(고령자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2년
인자리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당해 년 최저임금 기준 (사업주 부담률 사회보험료 포함) * 1~2년차 각 50%(최약계축 20%p 추가지원) 지원인원/기간: 최대 50인/2년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연 1천만원 이내 자부담률: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사업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연간 5천만, 최대 3억원 자부담률: 1회 차 10% → 2회 차 20% → 3회 차 30%
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 (5개 조합, 290억원 규모)

구분	지원 내용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스포츠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 (예비) 아이디어 발굴, 현장실습, 창업 준비 → (3년 미만) 창업 보육을 통한 시제품 제작, 사업화, 마케팅 등(15~40백만원 차등)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인사노무·법률·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수시 경영상담 지원 (판로) ▲ 문화예술 기업·단체 대상 단계별 판로지원 상담(공공시장 진출 준비, 아이템 발굴·시장 분석, 제안서 작성, 사업매칭 등 지원), ▲ 한국관광공사 납품 및 계약 체결 맞춤 상담
문화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프로그램) ▲ 생활문화동호회·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사업, ▲ 문화가있는날 '청춘마이크' 운영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제품(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배포, 공공구매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문화체육관광청 예비사회적기업 활동 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등
공공 기관 연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저작권위원회) 스포츠 사회적기업 교육프로그램 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경영학 및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보도자료, 2019

29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2 관련 법제도 정비 지원



“(법제도 정비) 지자체 공공시설 위탁 운영 제약 사항 조례 개정”

서울시	인천시 강화군
<p>제16조(운영의 위탁)</p> <p>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 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점심종합운동장 중 제1수영장, 제2수영장, 야구장, 풋살구장, 2. 정동체육관, 3. 목동운동장 중 야구장, 실내빙상장, 다목적구장, 4. 목성심미훈련원, 5. 서울월드컵경기장, 6. (신설 2009.01.08), 7. 효창운동장노외주차장 포함, 8. 구의야구공원, 9. 신림야구공원</p> <p>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단계, 계단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 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6.07.19, 2009.01.09)</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경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의 능력면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p> <p>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지 하는 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8)</p> <p>⑥ 제2항제5호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다.(신설 2001.09.29)</p>	<p>제11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p> <p>① 군수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간·단체(체육회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u>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종교시설, 공공부지 등에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자제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 탁할 수 있다.</p> <p>④ 군수는 체육시설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 금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자료: 김미옥,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개선방안, 2015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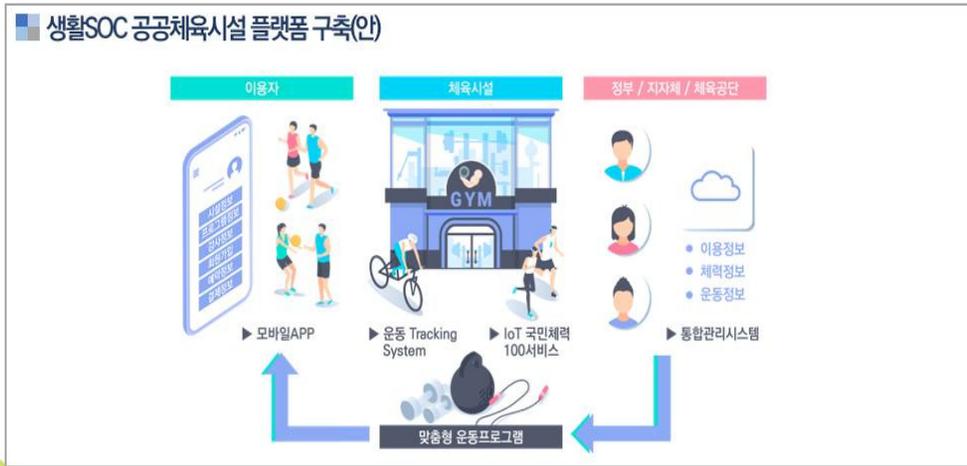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3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



“생활SOC시설 운영 실태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플랫폼 구축”



31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03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



“수준 높은 서비스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와 지속적 컨설팅 제공”



■ 영국 스포츠시설 가이드 (예)

Two guidebooks from Sport England are shown: **Swimming Pools** (Updated Guidance for 2013) and **Accessible Sports Facilities** (Essential Information to Access for Disabled People Guideline 2010 guidance).

이용자 친화적 시설 조성과 운영을 위한 상세 가이드 제공

■ 컨설팅 제공

The consulting support flow diagram show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시군구 운영기관 (Local Government Operation Agency)** through a **컨설팅 지원단 (Consulting Support Team)**.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ovides '성과관리 (Performance Management)' and '의견수렴 (Opinion Collection)'. It also supports '생활체육활성화 지원대책 마련 (Development of Support Measures for Revitalizing Leisure Sports)'. It is linked to '문화체육관광부'.
- 시군구 운영기관 (Local Government Operation Agency):** Provides '지원요청 (Request for Support)' and '조성 및 운영지원 (Construction and Operation Support)'. It is linked to '시군구 운영기관'.
- 컨설팅 지원단 (Consulting Support Team):** Provides '운영 컨설팅 (Operational Consulting)' and '이용자친화시설조성 (User-friendly Facility Construction)'. It is linked to '컨설팅 지원단'.

Additional support includes '이용 활성화 운영노하우증진 (Improvement of Operational Know-how for Utilization)'. Below the diagram, a list of services is provided:

- 분야별(스포츠, 건축, 도시계획, 마케팅 등) 전문가 풀구성
- 생활SOC선정 지역 우선 지원
- 조성단계부터 운영지원까지 단계별 제공
- 이용자 친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2018

32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SOC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지역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활SOC 운영 방안

김 미옥(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1. 생활SOC(체육시설) 운영 실태와 문제점

□ 체육시설의 개념 및 유형

- 체육시설은 대표적 국민 여가 시설로 공공과 민간에서 시설이 공급
- 공공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이 조성하는 시설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의해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
 - 문화체육관광부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간이운동장,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팅장, 사격장, 국궁장, 양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빙상장, 설상경기장, 기타 시설로 구분
- 민간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의해 개인 또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
 -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업 분류기준에 의하면 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구분

[표 3] 체육시설 현황(2017년 말 기준)

구 분	개 소 수	비 고
공공체육시설	26,927개	간이체육시설 포함
등록신고체육시설업	58,884개	

□ 체육시설의 가치와 역할

- 스포츠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과 스포츠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시키며, 사회적으로는 지역주민과 국민의 사회통합, 국가 이미지 제고, 평화 구현 및 사회적 자본을 증진 시키는 역할을 수행

- 경제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절감, 노동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기능
 - 스포츠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저성장 기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2016년 기준 매출액 68조 4,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증가하며 성장세를 지속
- 스포츠 활동의 토대가 되는 스포츠시설은 국민의 정서적 욕구 충족 및 건강 등 후생 수준을 증대시켜 적극적 사회복지 시대로의 전환에 기여
- 사회적으로 커뮤니티의 유대가 약해지고 있는 시점에 접착과 통합의 장이 됨으로써 상호교류와 유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적 기능 수행
- 도시환경적 측면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성과 건강성 등 도시민의 고차원적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기능 완성 역할 수행

□ 체육시설 현황 및 공급 필요성

-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2000년 49.2%에서 2018년 62.2%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공급해 왔으며, 향후 스포츠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체육활동 참여율 기준은 주 1회 이상,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체육활동 참여실태 조사 실시
-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공급 추이를 분석해보면 민간시설은 2000년 40,488개에서 2015년 55,857개로 약 138%가 증가하였으나, 공공체육시설은 2000년 5,371개에서 2015년 22,662개로 약 422%가 증가
 -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노력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 1인당 5.73㎡의 체육시설 면적을 확충하겠다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
- 2017년 기준 목표치의 74.6% 지속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기본체육시설인 체육관은 5.1만 명, 수영장의 경우 12.7만 명 당 1개소가 공급되어 있어 일본 대비 열악한 수준
 - 일본은 체육관 1.5만 명, 수영장 2.9만 명 당 1개소가 공급
- 특히,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은 조성비용이 높고 수익 창출이 어려워 민간에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의 지원이 필요

[표 5]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년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	22
실적(m ²)	2.54	2.88	3.12	3.29	3.31	3.57	3.81	3.89	4.05	4.28		5.73
보급률(%)	44.3	50.3	54.5	57.4	57.8	62.3	66.5	67.9	70.7	74.6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표 6] 기본체육시설 공급 현황 및 비교(공공체육시설 기준)

구분	공급개소수 (2017년 말)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보유 개소수	1개소 당 인구 (한국)	1개소 당 인구 (일본)
체육관	1,010개	4.4개	51,265명	15,000명
수영장	406개	1.7개	127,533명	29,000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현황, 일본 문부과학성 공공체육시설 현황

□ 체육시설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을 지원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는 전국체전시설,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조성을 지원
- 현재까지 추진한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 정책 중 핵심적 정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 국민체육센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수영장을 포함한 거점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해 도시·농촌간 차별 없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균형 있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시작
 - 1997년부터 시·군·구별로 1개소(인구 50만 이상 도시 1개소 추가 지원), 개소 당 30억 원을 지원을 원칙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2017년 말 기준 229개소가 공급되어 전국 생활체육관 467개소 중 47.9%가 국민체육센터
-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체육센터는 연평균 3,277만 명, 개소 당 평균 182,184명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핵심 거점 생활체육시설이며, 기본체육서비스의 균형적 공급에 기여
 - 수영장이 있는 수영장형과 복합형 시설의 경우 연이용자가 각 14,306,923명과 15,009,492명으로 체육관만 있는 시설보다 다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어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많음

- 국민체육센터가 거점 기본인프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기 운영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실태를 분석해보면 이용자 중심 운영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
- 프로그램측면에서 배드민턴, 헬스, 수영 종목이 전체 33.0%로 특정 종목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종목 운영 등 활성화가 필요
- 높은 유지관리비와 낮은 요금으로 운영수지 창출에 한계가 있으나 개소 당 평균 1.77억 원이 적자로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스포츠시설이 주기능이나 55.7%는 스포츠시설로만 이용되고 있고 문화 등 타 용도와의 복합 활용도가 떨어짐
- 운영주체는 80.8%가 공공 직영 및 공공부문 위탁으로 주로 공공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국민체육센터 이외 대규모 시설인 육상경기장, 구기체육관, 생활체육관도 전체 시설의 89.6%가 공공부문에서 운영

[표 7] 주요 공공체육시설 운영주체 현황

유형	운영주체 유형	시설 수	비율
육상경기장	직영	125	73.5%
	공공위탁	41	24.1%
	민간위탁	4	2.4%
	합계	170	100.0%
구기체육관	직영	159	59.3%
	공공위탁	93	34.7%
	민간위탁	16	6.0%
	합계	268	100.0%
생활체육관	직영	153	45.7%
	공공위탁	122	36.4%
	민간위탁	60	17.9%
	합계	335	100.0%
전체	직영	437	56.5%
	공공위탁	256	33.1%
	민간위탁	80	10.3%
	합계	773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현황, 일본 문부과학성 공공체육시설 현황

2. 지역 참여 활성화 및 선진 사례

□ 공공시설 운영 환경 변화

- ‘공유경제’ 라는 용어는 1984년 마틴 와이츠먼에 의하여 최초로 창안되었으나,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 개념은 로렌스 레식이 재화와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화폐가 교환되는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
 - 레식이 정립한 현대적 공유경제 개념의 특징은 1)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2) 화폐를 교환의 매개로 하지 않으며 3) 교환의 동인은 자기만족감이거나, 복잡한 형태를 띤 이타성임
 - 우버, 에어비앤비 등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알선 서비스가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사례
- ‘공유경제’ 의 개념은 소유자와 이용자가 같은 소유 중심의 경제와 반대로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는 개념으로도 인식
- 최근 도시재생에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복지적측면에서 주민 참여가 활발히 진행
 - 주민에 의해 사업제안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위원회 참여를 통해 의견을 제시
 - 도시재생 아카데미, 도시재생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에 참여하여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사회적기업 등 공공서비스 역할 및 공공성을 담보한 기업활동의 주체로 활동

□ 공공시설 운영 시장 개방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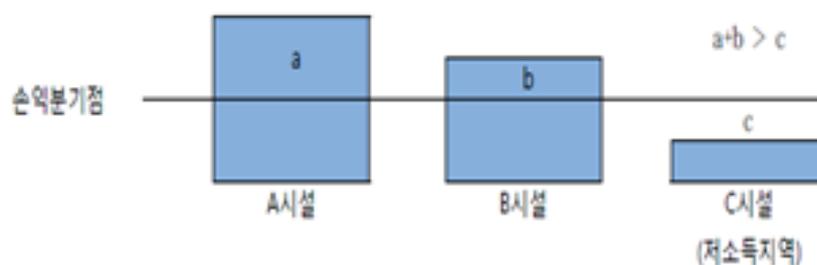
- 공공시설을 공공부문에서 운영시 직접적 통제가 용이하고 자금조달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운영 인력의 순환보직, 경영마인드 결여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의 단점이 있음
- 민간에게 개방 시 민간의 축적된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서비스 비용 절감 및 결과 중심적 성과 관리가 가능
- 반면 운영 재원 확보가 공공 부문에서 운영시보다 불투명하고, 낮은 이용요금, 다양한 할인제 등 공공성을 유지 시 이윤 창출에 한계가 있어 경영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
 - 민간 위탁 시 위탁 운영 기간도 제한적이므로 안정적 경영활동 추구에 한계가 있음
 - 위탁 기관 선정과 성과 평가에 대한 투명성도 담보되어 있지 않아 현재 운영환경을 민간 위탁을 저해 하는 요인들이 많음

□ 선진국 체육시설 운영 사례

① 영국의 스포츠 사회적기업

- 스포츠 사회적기업은 스포츠를 콘텐츠로 공익 목적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나 본질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구조를 가진 조직
-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나 스포츠와 레저부문에는 전체 기업의 약 35.8%가 사회적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약 4,400여개의 기업이 있음
- GLL(Greenwich Leisure Limited)는 1993년 런던 지역의 그리니치 의회가 지자체 재정지출을 삭감함에 따라 지역의 7개 레저스포츠센터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설립한 영국에서 스포츠 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
- 자선단체 성격의 스포츠사회적기업이며, 스포츠 분야 최초로 사회적기업 인증마크를 획득(2010년), 스포츠 분야 최초 영국 정부 빅소사이어티상 수상
- GLL은 30개 이상 지자체와 파트너십 체결를 통해 250개 이상 공공 스포츠시설 위탁운영, 57개 도서관 위탁 운영
 - 2015년 기준 연간 매출 3,333억원, 영업이익 65억원, 인건비는 전체 영업비용의 52% 수준
 - 회원 650,000명, 연간 방문객 4,0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학생 60,000명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실을 운영
- GLL은 스포츠 참여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으로 여학생 스포츠교실 11,000개, 7,000개 장애인 스포츠교실, 60세 이상 노인 스포츠클럽을 운영
 - 60개 종목의 2,000명의 꿈나무 선수들에게 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450개 이상의 지역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
- GLL의 로빈훅모델은 다수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소득수준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 스포츠시설에서 달성한 초과수익으로 저소득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적자를 보전하여 전체적으로는 흑자운영이 가능

[그림 1] 영국 스포츠 사회적기업 GLL의 로빈훅모델



자료 : 김상훈,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연구, 2014

③ 네덜란드 A8ernA public space

-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과 코흐안드잔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 A8 하부에 공간에 2003년에 A8ernA public space를 조성
 - 이 지역은 공간은 30년 동안 폭 40m, 길이 400m의 공간이 어두운 주차장과 작은 사격장으로만 사용되어 혐오 환경으로 인식되었으나 2003년 시의회가 지역 커뮤니티 공공공간 개선을 위해 재개발 계획을 수립
- A8ernA public space는 Dry square, Marina, Kid zone으로 구성하고 주변 부지를 Church square, Park로 연계 조성하여 모든 세대가 사용
- A8ernA public space는 큰 물리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두 도시공간을 단절시킨 활동의 장애물이었던 고가를 특정 사용자가 아닌 모든 연령층의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성을 제고
- 시장, 시의회, 주변 상인, 주민들이 계획 과정에 참여하여 이해당사자들의 목적과 요구가 조성 과정뿐 아니라 최종 설계와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

[그림 2] A8ernA public space 조성계획 및 조성 현황



자료 : <http://www.publicspace.org/en/works/d046-a8erna>

④ 스웨덴 Fryshuset(푸리스푸셋)

- 푸리스푸셋은 스톡홀름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센터로 조성
- 학교, 청소년 복합체육공간을 기반으로 민간단체인 YMCA가 청소년 복지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
- 농구장, 헬스, 보드 경기장, 댄스홀 등 다양한 스포츠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 방과 후 지역 청소년들에게 개방
-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사회속에서 융화될 수 있도록 운영
- 운영비는 시 35%, 정부가 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NGO가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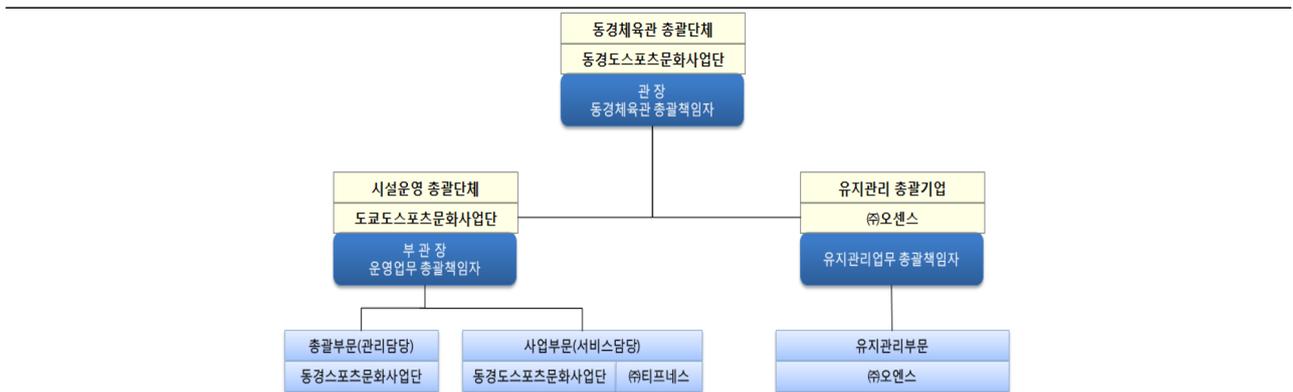
⑤ 프랑스 파리 스포츠 경기장(Paris, Terrain de Jeux)

- 파리시에서 일시적인 행사 등에 사용되는 상점,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공공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2016년 기준 14개 대상지 선정)
- 시에서 유휴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사업자는 시설투자 및 사업시행
- 시와 사업자 협약을 통해 일정시간은 학교, 문화센터가 활용, 그 외 시간은 수익사업 가능
- 주요 스포츠시설은 익스트림 스포츠(교량), 실내축구장(낙하산 하강장), 전기카트장(지하주차장), padel 경기장(주변학교 공동운동장), 실내인공암벽장(실외 농구장), 권투 및 서킷트레이닝 연습장(초등학교, 탁아소) 등

⑥ 일본 지정관리자 제도

-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는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법인, 공공단체, 공공적 단체’라는 조건이 철폐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재(지정관리자)가 관리를 대행하는 제도
- 공공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제도 추진
- 도쿄도의 경우 2015년 기준 1,920개 공공시설 중 1,774개의 시설(92.4%)이 지정관리자에 의해 운영
- 레크레이션 스포츠시설의 경우 주식회사 32.3%, 법인 30.3% 운영
- 공공체육시설은 지정관리자 제도 운영을 통해 조성과 관리운영 역할이 분담
- 도쿄도 동경체육관의 경우 공익법인 동경도 스포츠문화사업단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 시설관리는 (주) 오엔스가 담당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동경도 스포츠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등 관련 전문 조직이 참여

[그림 2] 도쿄도 동경체육관 운영 구조



자료 : <http://www.publicspace.org/en/works/d046-a8erna>

3. 사회적경제주체 참여 환경 진단

□ 사회적경제주체 현황

- 체육시설 운영에 지역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나 개인의 참여는 제한적이므로 사회적경제주체와 같은 조직 형태가 적합
-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안금융조직, 공정무역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포함
-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4개 형태의 조직을 들 수 있으며, 약 21,000여개가 운영
- 이중 문화체육관광분야는 10.7%로 비중이 낮고 주로 사회서비스제공 기업이 83.3%로 가장 많음
- 체육분야는 16개소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회적경제주체 육성 노력이 필요

[표 12] 사회적경제조직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황

구 분	인증 사회적기업 (2018)	예비 사회적기업 (2018. 12)	협동조합 (2018. 12)	자활기업 (2018. 12)	마을기업 (2018. 03)	합계
전체	2,123	1,566	14,550	1,214	1,514	20,967
문화체육관 광분야	293 (13.8%)	344 (22.0%)	1,312 (9.0%)	15 (1.2%)	269 (17.8%)	2,233 (10.7%)
체육분야	14	0	미확인	1	0	1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현황, 일본 문부과학성 공공체육시설 현황

□ 사회적경제주체 비즈니스 모델

-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은 스포츠 시설 설립 및 운영, 스포츠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에 있어 공공부문이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운영적자가 발생
- 지방정부가 직접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스포츠 사회적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스포츠 사회적 기업을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입을 서비스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사회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
-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은 기업은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공 스포츠 시

설을 운영·관리할뿐 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매출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

- 영국의 스포츠 사회적기업들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카페, 레스토랑, 웨딩홀,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
-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은 스포츠 시설을 활용하여 연령별·성별·계층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으며,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기업을 운영
-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역의 스포츠 인재를 지도자 및 관리자로 채용하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

□ 국내 사회적경제주체 운영 사례

① 한국생활체육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생활체육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에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협동조합 승인을 받아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시설형 사회적경제조직
- 수영 종목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안양시의 공공 수영장과 스쿼시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국민안전처로부터 LSK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선정
- 운영 프로그램은 연령별 수영 프로그램과 스쿼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생존수영 캠프, 생존수영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교육 실시
- 2018년 기준 등록회원 1,210명, 연간 이용자수 150,000명, 운영수지 10,091천원으로 2015년 대비 운영수입이 13% 증가하고 지출이 감소하여 흑자 운영
- 메르스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휴관 등에 의한 손실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등 안정적 운영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양시 시설은 현재 미운영

② (사)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 2009년 법인 인가, 2014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정, 201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사회적기업 리스타트 사업 선정
- 부산 진구 제1호 스포츠 교육사업으로 등록, 인력 및 프로그램을 스포츠 시설

및 지도자에게 보급

- 부산 진구 국민체육센터 등 다수 공공체육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 시설 교육서비스 제공(위탁), 스포츠 캠프, 클럽, 선수단 운영, 스포츠과학연구 서비스 등 제공
- 스포츠 시설의 사업분야(프로그램 운영, 인력운영, 회원관리, 매출증대 방안 등)를 선별하여 관리 위탁
 - 동의과학대학교 스포츠센터,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스포츠클럽,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③ (사)오산스포츠클럽

- 오산스포츠클럽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성격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오산시 공공체육시설 다수 위탁운영
- 2019년 오산시로부터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오산체력인증센터,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2개 종목 44개 프로그램 운영
- 총 42명의 인력이 있으며, 정규직 12명, 비정규직 27명, 공익근무요원 3명이 종사(병무청으로부터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공익근무 할 수 있도록 지정)
- 이용자 수는 2016년 1,172명에서 2017년 1,321명, 2018년 1,223명으로 증가
- 오산스포츠클럽의 회원은 2016년 826명에서 2018년 99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운영수입은 16.7억 원, 지출은 15.7억 원으로 운영수지 흑자
- 2016년 지자체 위탁 운영 전후 효과를 비교해 보면 2016년 3월 기준 위탁운영 전 프로그램 및 이용자 수는 전체 프로그램 41개, 전체 이용자 413명에서 2018년 12월 기준 프로그램 45개, 전체 이용자 695명으로 증가
- 위탁운영 전후 운영수지 변화를 비교해 보면, 2016년 이전 연간 매출액이 2.6억 원에서 위탁운영 후 2018년 연간 매출액이 3.5억 원으로 증가

□ 국내 사회적경제주체 경영환경

-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경제조직이 분담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권을 이양하여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 개선 필요
- 불공정 계약, 무리한 요구, 재계약 제한 등으로 사회적경제주체의 역할 대비 경영환경을 열악한 수준

4. 지역 참여 활성화 방안

□ 사회적경제주체 육성 정책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을 창출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사업을 추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 요건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
 - 특히 문화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
- 문화체육관광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
 - 창업준비, 경영상담 지원, 판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홍보 지원, 공공기관 연계 교육(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사회적기업 프로그램 등)
- 2020년부터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분야별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 예정
 - 지원센터는 분야별로 문화예술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사회가치창출팀, 스포츠는 스포츠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2020년), 관광은 관광두레 전담 중간지원조직(2020년) 활용 예정

□ 관련 법제도 개선

- 체육시설은 시설-프로그램-지도자의 적극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수요자 중심 운영체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가 요구
- 영국의 경우 GLL(Greenwich Leisure Limited)과 같이 비영리 형태의 스포츠사회적기업은 30개 이상의 지자체 130개 이상의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학교와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체육과 연계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위탁자의 범위를 특정기관이나 체육단체로 제한하거나 특정시설만 위탁운영이 가능하게 명시한 경우도 있고, 위탁기간을 제한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이 불가능
 - 서울시의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조례에서 위탁 가능 시설을 특정 시설로 한정하고 있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번 만 갱신이 가능하도록 명시
 -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 운영 하도록 명시
 - 인천시 강화군의 경우, 체육시설의 위탁 기관은 체육회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중심으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안정적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위탁자 범위를 특정기관이나 체육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일정수준의 위탁기간을 제도적으로 설정
- 이용자 및 관리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개정 유도

[표 13]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관리운영 표준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자료 : 김미옥,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방안, 2015

□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증진 및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정보제공 및 통합예약운영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곳 중 시스템 미구축 자치단체는 11곳에 이르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8곳만 구축되어 시스템 구축률은 평균 18%에 불과
- 현재 구축된 시스템도 홈페이지는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예약이 가능하지 않은 홈페이지도 많고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제공과 예약이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증대
-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를 구축하고 있다. SFMS는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련 콘텐츠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개별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 구축과 더불어 체육시설별 이용실태 및 운영 현황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확장
 -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의 관리, 가공, 공유가 가능하도록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
- 신규로 대규모 확충이 이루어지는 생활SOC시설을 중심으로 이용자와 시설, 정부와 지자체 등 주요 관리기관이 연계되고 체육시설 및 이용자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는 국민의 스포츠 서비스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
- 시설 조성 단계부터 이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디자인 및 운영 가이드를 제공
 - 영국의 경우 스포츠잉글랜드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디자인 및 운영 가이드를 제공하여 균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스포츠시설 운영 경험이 부족한 관리운영자에게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선정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기초자치단체 및 관리운영자 요청시 컨설팅 지원단이 시설 조성부터 운영까지 컨설팅을 지원
 -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관리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SOC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